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연구



2023. 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제 출 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연구기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원장 이 남 호

연구진

연구책임 **황 영 모**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배 균 기**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송 원 규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초빙연구위원)
정 호 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 오 현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5
제2장 지역먹거리계획 정책내용 검토	9
1.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	12
2.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현황	16
3.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원영역	18
4. 지역먹거리지수의 주요내용	23
제3장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방법 논의	29
1. 먹거리 전략 진단에 관한 주요배경	32
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검토	36
3.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진단 틀 검토	42
4. 먹거리 전략 모니터링 지표 적용사례	47
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추진체계 검토	62
6. 국제사회 실천사례의 시사점과 논의	72
제4장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틀 설정	77
1. 효과분석 틀의 사전검토	79
2. 효과분석 틀의 방향검토	82
3. 효과분석 틀의 구조설정	84
4. 효과분석 사례지역 선정	87

제5장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분석 89

- 1. 지역생산 영역, 수준과 변화 93
- 2. 지역가공 영역, 수준과 변화 99
- 3. 지역유통 영역, 수준과 변화 102
- 4. 안전관리 영역, 수준과 변화 106
- 5. 지역소비 영역, 수준과 변화 110
- 6. 폐기순환 영역, 수준과 변화 115

제6장 지역먹거리계획의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 119

- 1. 지역주민 인식·태도 향상 122
-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영향 142
- 3. 추진체계 및 실행기반 확대 165

제7장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과 과제 177

- 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향상이 대응방향 179
- 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의 검토 181
- 3.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183

참고자료 192

부 록 195

- 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틀 방향과 영향 197
- 2.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별 주요도-만족도 비교 201
- 3.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만족도-중요도 특성분석 205
- 4. 먹거리의 취약성 개선효과 분석 211
- 5.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222

표 차 례

제1장

〈표 1-1〉 연구 구성과 연구내용(요약)	8
-------------------------------	---

제2장

〈표 2-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근거 자치법규(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현황	21
〈표 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지표 구성 현황(농촌형+도농복합형, 도시형 비교)	24

제3장

〈표 3-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특징	36
〈표 3-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구조와 내용	39
〈표 3-3〉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 특징	42
〈표 3-4〉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	43
〈표 3-5〉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의 먹거리 정책 실행 프레임	45
〈표 3-6〉 ‘유럽 문제 해결형 리빙랩(FUSILLI) 사례’ 성과지표	54
〈표 3-7〉 FUSILLI 핵심 성과 지표	56
〈표 3-8〉 뉴욕시 먹거리 정책 목표와 평가지표	59
〈표 3-9〉 뉴욕시 먹거리 계획, 5대 목표와 중점과제	60
〈표 3-10〉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태스크포스의 정책 권고	66
〈표 3-11〉 브리스톨 먹거리 정책 발전 과정	69
〈표 3-12〉 외국 먹거리 전략 진단 사례의 지표 영역 구분	72

제4장

〈표 4-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영역과 세부지표 설정	86
〈표 4-2〉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사례지역 개요	88

제5장

〈표 5-1〉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생산자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93
〈표 5-2〉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 정책 여부(‘21년)	94
〈표 5-3〉 기획생산 조직화 교육 여부 비교(‘21년)	94
〈표 5-4〉 생산자-소비자 소통·교류 노력 여부 비교(‘21년)	95
〈표 5-5〉 활성화 사례지역 건강 농산물(친환경+GAP) 인증 농가 변화 추이	95
〈표 5-6〉 활성화 사례지역과 전국 평균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변화 추이 비교	96
〈표 5-7〉 지역가공 생산 농업인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99

〈표 5-8〉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사업 변화 추이 비교	100
〈표 5-9〉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102
〈표 5-10〉 직거래 장터 운영 유무(‘21년)	102
〈표 5-11〉 민간영역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 여부(‘21년)	103
〈표 5-12〉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 판매처(로컬푸드 직매장) 변화 추이	104
〈표 5-13〉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23년)	105
〈표 5-14〉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106
〈표 5-15〉 활성화 사례지역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비교	107
〈표 5-16〉 활성화 사례지역 식생활 영양관리(영양표시 인지율) 변화 추이 비교	108
〈표 5-17〉 지역소비 관련 지역먹거리지수 지표 실적(‘21년)	110
〈표 5-18〉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 소비력(직매장 매출액) 변화 추이	111
〈표 5-19〉 활성화 사례지역 청소년 건강 먹거리 소비수준(학교급식) 변화 추이	112
〈표 5-20〉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노력 여부(‘21년)	115
〈표 5-21〉 활성화 사례지역 별 먹거리 자원낭비 절감 변화 추이	116

제6장

〈표 6-1〉 응답자의 성별(좌) 및 결혼 유무(우)	123
〈표 6-2〉 연령(좌)과 직업(우)	124
〈표 6-3〉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진단	125
〈표 6-4〉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영역별 세부항목의 ‘현재 수준’ 진단	126
〈표 6-5〉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과제의 ‘향후 중요도’ 진단	128
〈표 6-6〉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세부항목’ 비교	129
〈표 6-7〉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종합	131
〈표 6-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133
〈표 6-9〉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134
〈표 6-10〉 지역먹거리계획 ‘목적 인지’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134
〈표 6-11〉 지역먹거리계획 ‘목적 동의’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135
〈표 6-12〉 지역먹거리계획 ‘지역계획 인지’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135
〈표 6-13〉 지역먹거리계획 ‘지역계획 참여의향’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136
〈표 6-14〉 지역먹거리계획 ‘지역사회 우호적 여건 인지’ 세분 집단별 비교	137
〈표 6-1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 세부항목별 비교	139
〈표 6-16〉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	139
〈표 6-17〉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 금액	140
〈표 6-1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미지출의사(의향) 주된 이유	141
〈표 6-19〉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42

〈표 6-20〉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43
〈표 6-21〉 화성시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45
〈표 6-22〉 화성시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46
〈표 6-23〉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47
〈표 6-24〉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47
〈표 6-25〉 세종시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48
〈표 6-26〉 세종시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49
〈표 6-27〉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50
〈표 6-28〉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50
〈표 6-29〉 완주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1
〈표 6-30〉 완주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2
〈표 6-31〉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53
〈표 6-32〉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53
〈표 6-33〉 청양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5
〈표 6-34〉 청양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6
〈표 6-35〉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56
〈표 6-36〉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57
〈표 6-37〉 해남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8
〈표 6-38〉 해남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59
〈표 6-39〉 유성구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59
〈표 6-40〉 유성구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60
〈표 6-41〉 유성구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60
〈표 6-42〉 유성구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61
〈표 6-43〉 광산구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162
〈표 6-44〉 광산구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162
〈표 6-45〉 광산구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63
〈표 6-46〉 광산구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164
〈표 6-47〉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전담부서 설치 여부 비교(‘21년)	165
〈표 6-48〉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농가 조직화 기능 여부 비교(‘21년)	165
〈표 6-49〉 지역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구성 여부 비교(‘21년)	166
〈표 6-50〉 지역먹거리계획의 자치단체장 공약 반영 여부(‘21년)	167
〈표 6-51〉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먹거리 지원활동 사례 여부 비교 (2021)	169
〈표 6-52〉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 여부 비교 (‘21년)	169
〈표 6-53〉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의 연관어 구조	172

〈표 6-54〉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영역별 제정 현황 (전국)	172
〈표 6-55〉 사례지역(7개 시·군·구)의 먹거리 계획 관련 자치법규 현황	174
〈표 6-56〉 사례지역(7개 시·군·구)의 먹거리 계획 관련 자치법규 목록	174

부록

〈부표-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의 지향 방향과 영향 결과	197
〈부표-2〉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만족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1	201
〈부표-3〉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만족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2	202
〈부표-4〉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중요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1	203
〈부표-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중요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2	204
〈부표-6〉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205
〈부표-7〉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207
〈부표-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208
〈부표-9〉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208
〈부표-10〉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판별분석	209
〈부표-1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판별분석	210
〈부표-12〉 1일 1회 이상 결식 유무 -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관계분석 결과	216
〈부표-13〉 영양섭취 부족 유무 -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관계분석 결과	217
〈부표-14〉 통계청, 「사회조사」 먹거리 관련 통계 추가 제안(안)	220
〈부표-15〉 전주시 ‘사회조사’ 질문항목 검토(안)(예시)	221
〈부표-16〉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질의 항목 검토	221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주요내용의 추진 흐름에 따른 구성	7
--------------------------------------	---

제2장

〈그림 2-1〉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먹거리 순환 구조	12
〈그림 2-2〉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의 구조	13
〈그림 2-3〉 ‘도농복합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H시)	14
〈그림 2-4〉 ‘농촌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S시)	15
〈그림 2-5〉 ‘농촌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W시)	15
〈그림 2-6〉 지역먹거리계획의 전국적 수립 현황(‘22.12.31. 현재)	17
〈그림 2-7〉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정책 흐름 (개괄)	18
〈그림 2-8〉 지역먹거리계획 단계별 맞춤 지원 구조	20
〈그림 2-9〉 2022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지역별 수준)	26

제3장

〈그림 3-1〉 ‘CRFS 지표 틀’과 ‘MUFPP 모니터링 틀’ 보고서	34
〈그림 3-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틀킷	39
〈그림 3-3〉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평가와 계획 추진 시간 틀	48
〈그림 3-4〉 키토 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 선정	50
〈그림 3-5〉 키토 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 자료의 활용	51
〈그림 3-6〉 키토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를 활용한 이벤트와 주요활동	52
〈그림 3-7〉 FUSILLI 리빙랩 실행 대상 12개 도시 분포	53
〈그림 3-8〉 리빙랩의 유형 구분	53
〈그림 3-9〉 FUSILLI 정책 개입과 성과지표의 연계	55
〈그림 3-10〉 초 지역먹거리 정책 그룹의 확산 추이	64
〈그림 3-11〉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의 추진경과(타임라인)	67
〈그림 3-12〉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 : 조직 구조	67
〈그림 3-13〉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연결망의 국가적-지구적 확장	68
〈그림 3-14〉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 행동계획의 주요 부문	70

제4장

〈그림 4-1〉 정책의 추진과정과 정책효과 측정·평가의 구조	81
〈그림 4-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경로’와 ‘시행효과’ 구조 설정	84

제5장

〈그림 5-1〉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생산자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93
〈그림 5-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농가조직화+생산자·소비자교류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	95
〈그림 5-3〉 활성화 사례지역 건강 농산물(친환경+GAP) 인증 농가 변화 추이	96
〈그림 5-4〉 활성화 사례지역과 전국 평균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변화 추이 비교	97
〈그림 5-5〉 생산자 농업소득 증대 수준(체감) 비교(계획 시행 이전-이후)	98
〈그림 5-6〉 가공 농업인(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99
〈그림 5-7〉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사업 변화 추이 비교	100
〈그림 5-8〉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증대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01
〈그림 5-9〉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102
〈그림 5-10〉 직거래 장터 운영+민간영역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	103
〈그림 5-11〉 지역먹거리 판매처(로컬푸드 직매장) 변화 추이(활성화 사례지역, '21년~'22년)	104
〈그림 5-12〉 지역먹거리 제공·판매처 확대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05
〈그림 5-13〉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106
〈그림 5-14〉 활성화 사례지역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비교	107
〈그림 5-15〉 식생활 영양관리(영양표시 인지율) 변화 추이 비교(활성화 사례지역)	108
〈그림 5-16〉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식별 강화(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09
〈그림 5-17〉 학교·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공급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110
〈그림 5-18〉 지역먹거리 소비력(직매장 매출액) 변화 추이 비교(활성화 지역-전국 평균)	111
〈그림 5-19〉 활성화 사례지역 청소년 건강 먹거리 소비수준(학교급식) 변화 추이	112
〈그림 5-20〉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13
〈그림 5-21〉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13
〈그림 5-22〉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114	
〈그림 5-23〉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노력 여부 비교(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	115
〈그림 5-24〉 먹거리 자원낭비 절감(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생활시설) 변화 추이(활성화 지역-전국 평균) ..	116
〈그림 5-25〉 남기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17
〈그림 5-26〉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117

제6장

〈그림 6-1〉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125
〈그림 6-2〉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세부항목' 비교	130
〈그림 6-3〉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수정 IPA)	132
〈그림 6-4〉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이후'의 세부항목별 수준진단 비교	137
〈그림 6-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의 주된 이유 ·	140

〈그림 6-6〉 지역먹거리계획 전담부서+통합지원센터+거버넌스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21년) …	166
〈그림 6-7〉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확대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	167
〈그림 6-8〉 먹거리 정책의 민간참여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계획시행 이전-이후) ……	168
〈그림 6-9〉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 여부 비교(‘21년) ……	179

제7장

〈그림 7-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에 따른 정책추진의 근거와 대응방향 ……	182
〈그림 7-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제안 (총괄) ……	183
〈그림 7-3〉 계획관리 :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안정화·고도화 촉진 ……	184
〈그림 7-4〉 정책지원 : 계획실행을 위한 실효적 정책·예산 결합 방안 강구 ……	185
〈그림 7-5〉 정책지원 : 계획 관계주체(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 역할 방안 ……	187

부록

〈부도-1〉 먹거리 취약성 개선 효과에 대한 영역 구성(검토) ……	214
〈부도-2〉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의 먹거리 취약성 개선효과 시사점 ……	219
〈부도-3〉 화성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	222
〈부도-4〉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성 ……	223
〈부도-5〉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	225
〈부도-6〉 청양군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지원체계 ……	226
〈부도-9〉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향후 과제 ……	228
〈부도-8〉 화성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	229
〈부도-9〉 화성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전략 ……	224
〈부도-10〉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	230
〈부도-11〉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내용 ……	231

요약 Summary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 지역먹거리계획의 가치와 목적은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 도출에 일정 기간이 걸리며, 지역사회 먹거리 구조를 재구조화하여 시민적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 결과로 현실화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 간과된 측면이 큼
- 이 연구는 지역먹거리계획이 지자체 수준에서 보편화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먹거리계획의 현황을 정리하고, 계획이 목적으로 한 시행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마다 여건과 수준이 달라 일관된 수준에서 현황을 정리하고 계획의 시행효과를 검토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①계획현황 정리, ②시행효과 진단, ③개선과제 제안’을 하고자 함

□ 지역먹거리계획 정책내용 검토

- 계획의 수립 현황
 - 2017년 12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8년부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마련,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본격적으로 지원 시작
 -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지원 노력의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기초+광역시) 중 139개 지자체(57.2%)가 계획을 수립·실행(‘22년 12월)
- 정책의 추진 영역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지원해온 정책은 크게 ‘실행역량 강화, 실행기반 확충, 제도기반 강화’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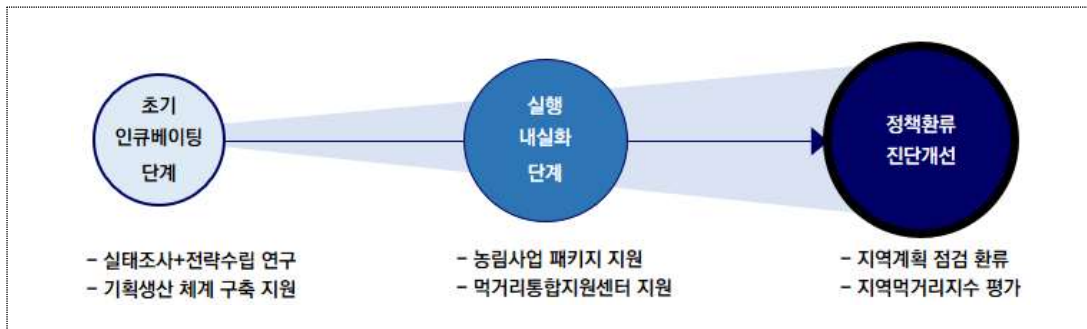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정책 흐름 (개괄)〉



○ 정책의 지원구조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촉진과 실행지원은 정책은 ‘기반조성 지원정책, 다양성·확장성 확보 지원사업’ 등으로 대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기 인큐베이팅 단계 → 계획 실행의 내실화 단계 → 계획 추진 정책의 환류’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

〈지역먹거리계획 단계별 맞춤 지원 구조〉



○ 계획수립 법률근거의 마련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2022.1.4.신설)
- 지역먹거리계획에 필요한 근거로 ‘먹거리 기본조례’를 광역 지자체는 82.4%(전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기초 지자체는 37.2%(226개 중 80개 시·군·구)가 제정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제도 도입

-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 지자체 대상 지역의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추진정도와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를 적용

□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방법 논의

○ 주요배경

- 국제사회는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과 체계’를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실행의 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 실험을 통해 변화를 포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먹거리 전략 ‘공통 기준과 지표’ 사례

- ①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Indicator Framework, 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 Framework) (2017)
- ② 밀라노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onitoring Framework) (2021)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체계 검토

- (1축)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수직 축(다층적 거버넌스의 맥락) 지역먹거리계획은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가 협력으로 국가 정책 공백을 메워나가는 과정
- (2축)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수평 축(먹거리 거버넌스) 지역 내 이슈를 스스로 진단, 여건에 맞는 정책발굴과 우선순위 결정, 단계적 먹거리 체계 전환 추진체계
- 지역 내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 국가 내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 지구적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등 다층적 연결망을 통해 평가와 모니터링 도구 공유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틀 설정

○ 효과분석 틀의 전제

- 국제적으로는 지역먹거리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현실화되는지 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유용한 지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수준인데, 정책 시행의 과정에서 기록되지 못해 정보로 수집·구축이 충분하지 않아 정성적 측정을 결합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에서 먹거리 전략 시행에 따른 개선 등 변화를 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
- 정책 효과는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일반적 과정을 통해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변화라는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중점 두어 고려

○ 효과분석 틀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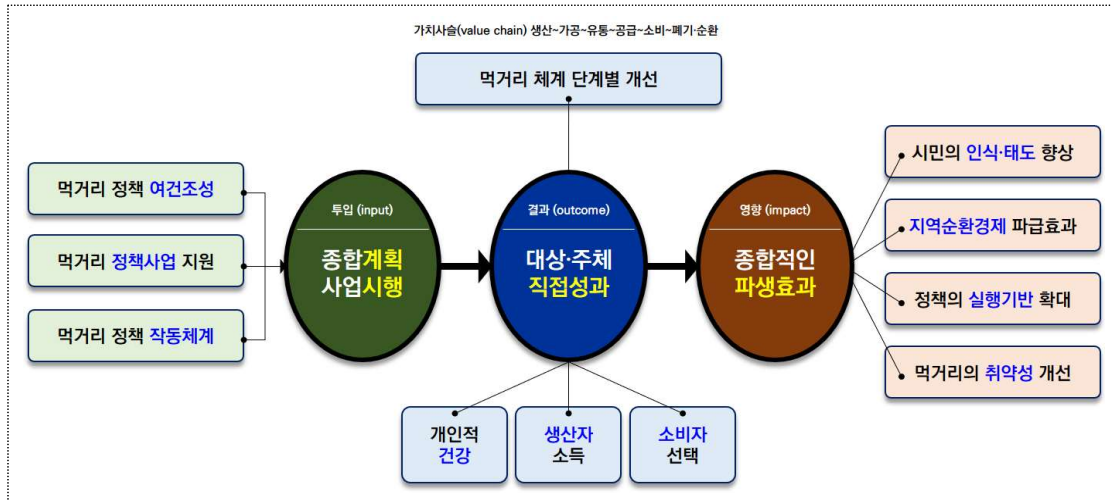
- (정책의 목적이 중심) 지역먹거리 정책의 시행 목적은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에 있으므로 ‘목적’을 효과분석의 기초로 함
- (가치사슬 단계 고려) 지역먹거리 체계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계획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고려함
- (변화와 개선의 종합)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파생되는 효과를 고려함

○ 효과분석 틀의 구조

- (효과분석 틀 구조 설정) 먹거리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영역에서 다루는 ‘투입-결과-영향’의 단계를 고려하는 체계로 설정
- (계획시행의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 시행을 통해 먹거리 계획이 목적하는 ‘가치사슬’의 개선과 ‘대상자’의 편익으로 현실화(결과)되는 구조임

- (종합적인 파생효과)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의 범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파생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지역먹거리계획, ‘실행경로’와 ‘시행효과’ 구조 설정〉



○ 효과분석 사례지역

- 전반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전국단위 수준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제약을 고려하여 사례지역 분석 방법을 채택 (7개 시·군·구)

□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분석

○ 분석방법

- 지역먹거리 체계 실행전략 구성요소는 ‘지역생산, 지역가공, 지역유통, 안전관리, 지역소비, 폐기순환, 추진체계’로 구분, 항목을 설정(자료분석 가능 지표로 구체화)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 유무에 따른 ‘수준비교’(수립-미수립 지역), 계획 활성화에 따른 ‘변화비교’(사례지역-전국평균), 계획 시행에 따른 주체 ‘체감비교’(계획 이전-이후) 등 시행효과(결과) 수준을 비교 검토

○ ‘지역생산’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는 ‘로컬푸드 기획생산자(801명), 직매장 출하자(746명), 학교급식 출하자(72명)’ 등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461명, 435명, 46명)보다 1.57~1.74배 높음
- 지역먹거리 연중 생산 공급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88.2%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수립 지역(58.0%)보다 1.52배 높음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19년 이후로 ‘21년까지 연

평균 86.3%(36.6%~191.1%)로 전체적으로 상향세(전국 평균 46.6%)

-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교육’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85.3%가 실행하고 있어 미수립 지역(40.6%)보다 2배 이상 높음
- 지역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소비자의 소통과 교류’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76.5%가 노력(미수립 지자체 42.0%)
- ‘생산자 농업소득 수준’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20)’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1)’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

○ ‘지역가공’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 농업인 수’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40명)가 계획 미수립 지역(20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지역 농식품 가공 정책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에 포함된 지역가공 기반 확대 정책사업 예산이 시기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
-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수준’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25)’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3.99)’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

○ ‘지역유통’ 영역의 ‘수준과 변화’

-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유통액’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92.6억원)가 계획 미수립 지역(56.9억원)에 비해 1.6배 이상 높음
- ‘지역거래 장터’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85.2%가 운영하고 있어 미수립 지역(62.3%)보다 다소 높음
- ‘지역먹거리 민간영역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55.9%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계획 미수립 지역(26.1%)보다 2.14배 높음
-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20년 대비 ‘21년 33.3%~250%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
- ‘지역먹거리 제공·구매처 수준’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18)’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1)’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

○ ‘안전관리’ 영역의 ‘수준과 변화’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가 연간 508건 하고 있어 계획 미수립 지역(167건)에 비해 1.8배 이상 높음
- ‘안전성 검사 건수’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20년 대비 ‘21년 922% 증가(전국 80.7% 증가)

- ‘영양표시 활용율’은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19년 이후 ‘21년까지 상향세(연평균 4.1~7.4%)로 전국 평균(2.2%)보다 2배 이상 높음
 -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식별 역량’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31)’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10)’으로 올라간 것으로 평가
- ‘지역소비’ 영역의 ‘수준과 변화’
-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23.9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9.8억원)보다 2.43배 높음
 -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9.1천만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6.4천만원)보다 1.43배 높음
 - ‘로컬푸드 구매’ 수준은 직매장 매출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계획 수립 지역이 92.6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56.9억원)보다 1.63배 높음
 - ‘취약인구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3.5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1.3억원)보다 2.59배 높음
 -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향세(‘20년 대비 ‘21년 19.5%~135.8%)(전국 평균 65.9%에 견줘 높은 수준)
 - ‘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액’은 학생수 감소로 전국 평균 연평균 6.5%가 감소하지만, 활성화 사례지역은 연평균 35.7% 증가
 -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2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0)’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낮음(2.62)’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보통(3.37)’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지역생산-지역소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2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3)’으로 개선 평가
- ‘폐기순환’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 61.8%가 노력하고 있어, 미수립 지자체(30.4%)보다 2배 이상 높음
 -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전국은 연평균 3.2% 감소하는데, 활성화 사례지역은 14.7%~43.8%가 감소하여 환경을 배려하는 것으로 확인
 -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부족(2.94)’한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보통 이상(3.72)’으로 평가

-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 수준’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24)’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2)’으로 평가

□ 지역먹거리계획의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

○ 분석개요

- 지역먹거리계획 전략적 중요 요소를 ‘시민의 인식·태도, 지역경제 순환구조, 먹거리 취약성’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하되 자료 획득 및 분석 가능한 세부지표로 구체화하고, ‘계획 실행 조건이 되는 자치법규’ 마련의 변화 수준을 추가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사례지역 대상으로 지역주민 인식변화(계획시행 이전-이후), 정책사업(재정투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국 수준에서 먹거리 취약성 영향요인 파악, 계획 실행 결과 자치법규 변화 등으로 시행효과 추정 분석

<지역주민의 먹거리 ‘인식·태도’ 변화> (5점 리커트 척도 평균값 비교)

○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취지·목적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52점, 계획 시행의 취지·목적에 대한 ‘동의도’는 평균 3.95점
- 거주 지역 지자체 시행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45점, 해당 지역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참여도’는 평균 3.74점
- 거주 지역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대한 여건과 인식의 수준은 평균 3.91점

○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비교

- 21개 항목 모두 만족도보다 중요도가 높음, 만족도-중요도 평균값 차이는 항목 모두 지역먹거리계획 ‘현재 만족 수준’보다 ‘향후 중요도’가 더 높게 평가

○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수정 IPA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21개 세부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를 4개의 사분면에 위치하여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
- 우선시정 영역 : 사회분야 ‘배려와 포용 등 지속가능성’, 환경 분야 ‘음식폐기물 절감, 자원 순환’, 돌봄 분야 ‘먹거리 매개 지역사회 돌봄’, 경제 분야 ‘먹거리 제공 주체 확대’, 추진체계 분야 ‘다양한 주체의 정책 참여, 제도마련 기여’ 등
- 지속관리 영역 : 사회분야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 경제 분야 ‘지역먹거리 생산 증대, 지역먹거리 소비 증대’ 등
- 과잉노력 지양영역 : 건강분야 ‘건강한 식습관,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 사회분야 ‘농업·농촌·먹거리 의미·가치 이해, 지역사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경제분야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확대’ 등

- 후순위 약점영역 : 환경분야 ‘환경을 고려하는 식습관 형성’, 돌봄분야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추진체계 분야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 다양한 정보 제공’ 등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이후’ 수준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 세부항목에 대해 계획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수준을 각각 진단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
- 비교 결과, 전 항목 평균이 시행이전 3.17에서 시행 이후 3.96으로 증가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충분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
-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항목 : 먹거리 정책의 민간 참여(0.882),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0.877), 지역먹거리 제공 및 구매처 확대(0.839),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0.818), 농업·농촌·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이해(0.816),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0.807) 등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 세부항목별 비교〉

세부항목	시행 이전(a)	시행 이후(b)	(b-a)	순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3.231	3.942	0.711	15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식별 능력	3.315	4.099	0.785	8
농업·농촌·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이해	3.262	4.078	0.816	5
학교와 지역사회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3.270	4.045	0.774	12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와 순환 강화	3.240	4.017	0.777	10
남기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감축	2.945	3.723	0.778	9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와 돌봄 확대	3.128	3.887	0.758	13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	3.204	4.023	0.818	4
다양한 지역 먹거리 품목(신선+가공) 증가	3.253	4.003	0.750	14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확대	3.235	4.010	0.775	11
지역먹거리 제공 및 구매처 확대	3.178	4.017	0.839	3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	3.229	4.037	0.807	6
먹거리 정책의 민간 참여 강화	3.031	3.913	0.882	1
먹거리 정책, 예산, 제도 확대	3.013	3.800	0.787	7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	3.018	3.896	0.877	2
전체평균	3.170	3.966	0.796	

○ 지역먹거리계획 필요 자원 지불의향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지불(지출)하겠다’는 응답은 55.6%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 ‘지불(지출)하겠다’로 주된 이유 : 먹거리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므로(18.4%), 소비자가 좋은 먹거리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18.1%),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므로(17.7%) 등 순
- 필요 재원 지불 응답(55.6%) 지불의사 금액 : 월 1만원(46.6%), 월 3만원(20%), 월 2만원(17.1%) 등 순, 1인당 평균 지불의사 금액 월 2.2만원
- 비 지불(지출) 응답(44.4%)자 이유 : 지불(지출)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43.5%),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0.9%), 지불(지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서(9.1%), 지역먹거리계획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8.7%) 등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영향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전제와 개요

- 시·군·구가 시행한 지역먹거리계획 정책 사업은 해당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 시·도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
- 산업연관표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기초(시·군·구) 단위까지 내려가는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분석 (다지역 산업연관표 방식·방법 적용)
-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발생
 -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비 집행으로 해당 산업 분야 신규 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후방산업의 연쇄적인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
 - 지역먹거리계획 사업 실행 전담조직(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인건비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 전후방산업 연쇄적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사례지역(7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추진체계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먹거리계획’은 계획 수립 지역 81.8%가 ‘단체장 선거 공약’인 반면, 계획 미수립 지역의 절반 이상은 단체장 공약과 무관하여 단체장 의지가 중요함을 확인
- ‘전담부서’(과, 팀)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역의 85.3%가 설치한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61.8%가 설치·운영하고 있어 미수립 지역(27.5%)보다 2.3배 높음
-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67.7%가 운영
-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로서 조례’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대부분인 97.1%가 제정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먹거리 지원활동이 있는 비중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64.7%로 미수립 지역(24.6%)보다 2.6배 높음
- ‘관련 정책에 민간의 참여’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0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3.91)’으로 상향
-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확대 수준’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보통(3.01)’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는 ‘보통 이상(3.80)’으로 상향하여 평가

○ 계획 및 정책 실행기반 마련

- 자치법규 의미,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정책실행 기반으로 성격을 가짐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의 법률적 근거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맞춰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자치법규(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로 삼음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관련 종합계획으로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계획에서 다루는 영역은 ‘생산~가공~급식~유통~소비~폐기’ 등 범위가 매우 넓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먹거리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면서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으로 이어짐
- 자치법규 영역, 지역먹거리계획이 담고 있는 정책 분야를 반영하여 연계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의 분야를 토대로 자치법규 검색 연관어는 ‘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거래, 식생활, 음식품 폐기, 농산물 안전, 농식품·식품 기부·가공, 영양관리, 도시농업’ 등으로 정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에서 전국 지자체 먹거리 계획 관련 조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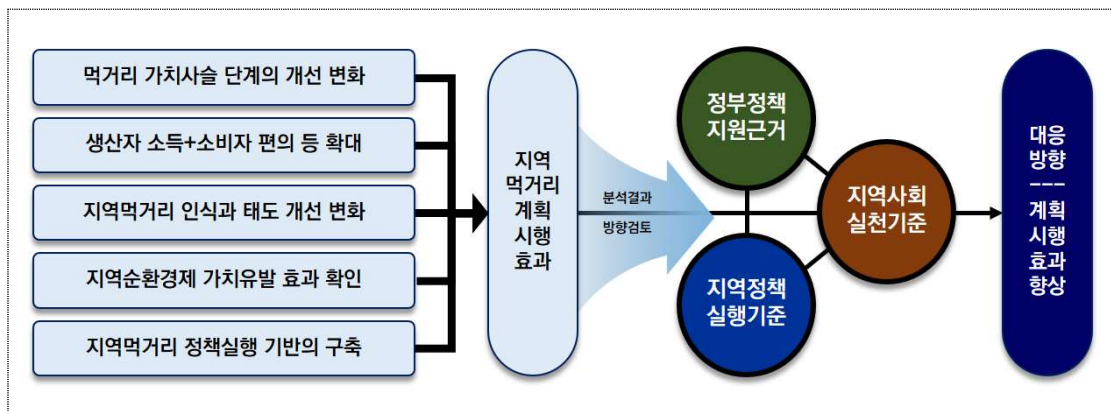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과 과제

○ 시행효과 분석결과, 계획 시행효과 수준 제시와 핵심주체 역할 검토의 근거

-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은 우선 ‘①먹거리 체계 가치사슬 단계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점, ②정책 대상자인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의 편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더 나아가 ‘지역먹거리계획’은 ‘①주민 개개인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높였다는 점, ②정책실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등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③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①정부 지원정책 지속 유지 근거, ②지자체 정책실행 판단 기준, ③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되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검토 근거가 될 것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의 방향, 계획의 시행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검토
 - 지역먹거리계획이 ‘①충실하게 수립(마련)되고(수립단계), ②현실적으로 실행되며(집행단계), ③성과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변화단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중층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미 국제사회 수준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먹거리 전략과 계획’에서 다룰 영역은 ‘1축(가로축)-실행목적에 관한 사항(6개), 2축(세로축)-먹거리 가치사슬별 과제(7개)’로 중점과제는 이러한 내용이 교차하는 수만큼 많음(매트릭스)
 - 이 연구는 일반적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방향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시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에 따른 정책추진의 근거와 대응방향〉



- 계획관리 : 단계별 맞춤지원 체계의 안정화·고도화 촉진
 -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견지해온 계획의 ‘①수립단계, ②실행단계, ③개선단계’ 등 ‘단계별 맞춤지원 체계’에 따라 동원 가능한 자원(재정+인적+물적)을 활용하여 내실화하는 구조를 정립해 나가야 함
 - 수립단계 : 지자체의 먹거리 실태조사, 먹거리 전략 연구, 먹거리 계획 수립 지원 등
 - 실행단계 : 계획실행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정책실행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
 - 개선단계 : 지역단위 계획의 중점사업 점검 및 환류(지원사업 중심),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한 진단과 평가 등
- 정책지원 : 계획실행을 위한 실효적 정책·예산 결함 방안 강구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담당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계획관리, 정책지원, 재정투입’을 적절한 방법으로 실효적으로 구사가 필요

- ① 계획관리 : 계획연구, 전문가 지원, 자원조사, 문제정의, 시민참여, 실행진단 등
- ② 정책지원 : 필수 정책의 집행, 연계 정책의 결합, 관련 정책의 활용 등
- ③ 재정투입 : 기존 정책사업 예산 활용, 신규 정책사업 예산 확보, 관련 부처사업 활용 등

○ 주체역할 : 계획 관계주체(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 역할 방안

- 중앙정부 : 계획수립 지원 및 관리, 필요 정책사업 및 재정 지원
 - ①계획수립·관리체계 유지(현행유지), ②필수 정책사업 유지(사업부서), ③연계 정책사업 결합(부서협력), ④관련 정책사업 활용(부처협력), ⑤선도 정책사업 촉진(지방정부), ⑥관련정보 작성관리(통계자료), ⑦관련 규제요건 개선(제도개선) 등
- 지방정부 : 계획수립 확정 및 실행, 정책사업 활용 및 역량 구축
 - ①계획실행·평가 개선(관리강화), ②종합계획으로 확대(계획연계), ③사업조직 지정·설립(지원조직), ④핵심거점 기반확대(물적거점), ⑤먹거리시민 육성(교육·홍보), ⑥거버넌스·조직 강화(추진체계), ⑦선도특화 정책추진(시범사업) 등
- 지역사회 : 계획 수립·실행 참여, 사업·활동 및 프로그램 주체
 - ①소비조직 활동 강화, ②생산조직 역할 강화, ③시민사회 참여 강화, ④미래세대 중점 고려, ⑤취약계층 우선 배려, ⑥지역경제 소비 확대, ⑦지역사회 규범 정립 등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제언 (총괄)〉



제1장

연구개요

- 연구배경과 필요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다수의 지자체가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food plan)은 ‘일정한 지역(지자체 범위)에서 먹거리 이슈를 검토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시정·보완하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인 실행전략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음 (황영모 외, 2020)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먹거리 체계(community food system)를 구축하는 ‘생산~가공~유통~소비’의 로컬푸드 구조를 기본으로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돌봄, 식생활 교육, 폐기·순환, 사회적 인식, 통합체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성격을 가짐
- 지역먹거리계획은 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 중심의 기존 식품계획과 구별되면서, 얼굴 있는 먹거리의 ‘지역생산-지역소비’라는 직매장 중심의 로컬푸드 계획을 넘어 먹거리 체계 전반을 혁신해 나가는 사회정책임
 - 우리나라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은 2014년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계기로 지자체가 먹거리 전략을 수립 실행하면서 전면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초지자체에서는 전주시의 ‘전주푸드플랜’(2015년~)을 꼽을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서울먹거리 전략’(2014년~) 등이 있음
- 국제적으로 지역먹거리 전략이 강조되고, 지역적으로는 지자체의 먹거리 전략 선도적 추진을 배경으로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화하였음

-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사업(재정)을 지원해 왔는데, 그 결과 현재 전국 139개의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수 지자체가 실행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은 기존 농림정책과는 다른 거버넌스 추진 방식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선진 사례의 실천적 경험이 정책실행의 기준으로 자리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①가치사슬 체계의 개선’(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순환), ‘②정책목적’의 추구(건강-보장-환경-사회-경제), 정책실행을 위한 ‘③추진체계’ 등이 고려해야 할 조건이자 핵심내용으로 강조되고 있음
- 양적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기존 농림사업 경로의 답습, 정책으로서의 로컬푸드 사업 범위 제약, 계획마련과 정책실행의 괴리, 관련 정책부서 간의 협업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가치와 목적은 자원 투입에 따른 결과 도출에 일정 기간이 걸리며, 지역사회 먹거리 구조를 재구조화하여 시민적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 결과¹⁾로 현실화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 간과된 측면이 큼
- 재정투자에 따른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사업으로 먹거리 계획을 이해하는 (지방)행정과 의회의 투입-산출 기대 관성의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곧 ‘정책추진 방식’의 전환과 ‘정책효과 진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근거임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성과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가’라는 목적에 근거하여 계획의 실행을 안착화해 나가는 과제가 요구됨
- 우호적인 사회여건이 마련되었고,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저마다의 지역에서 갖춰가고 있지만 지역먹거리계획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각기 다른 시각과 시선을 감안하여 계획 실행의 효과를 진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양적인 확산과 질적인 성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현실적 방안임

1 기대효과는 가축농 소득향상, 유통비용 절감, 건강한 식습관 형성, 먹거리 취약계층 감소, 먹거리 접근성 개선 등을 꼽음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역먹거리계획이 지자체 수준에서 보편화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먹거리계획의 현황을 정리하고, 계획이 목적으로 한 시행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마다 여건과 수준이 달라 일관된 수준에서 현황을 정리하고 계획의 시행효과를 검토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①현황 정리, ②시행효과 진단, ③개선과제 제안’을 하고자 함
- 특히 먹거리 계획에 관계하는 핵심 관계자가 체감하며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진단하고 성과 있는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지역먹거리 계획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제안하고자 함
- 요컨대 이 연구는 국가적으로 추진해온 ‘지역먹거리계획’의 ‘①내용정리 → ②현황진단 → ③효과분석 → ④과제제안’의 과정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정책의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정리하여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행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이상과 같이 설정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내용으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 정리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전국적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현황을 개괄하여 살펴봄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역량 강화, 실행기반 확충, 제도기반 강화’ 등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지원 구조와 세부내용을 정리함
 - 정부가 정책에서 안내하는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을 개괄하고, 먹거리 계획 촉진 방안으로 평가되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세부내용을 개괄함
- ② 지역먹거리계획의 ‘진단방법’ 논의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전략·계획에 대한 주요한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먹거리 체계에 대한 진단·분석의 틀의 방안을 정리함
- 구체적으로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 도시지역 수준에서의 적용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③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틀’ 설정

- 국제사회 수준에서 논의되고 적용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분석의 틀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틀을 설정함
- 지역먹거리 전략 시행의 진단·평가가 국제사회 수준에서 갖는 시사점과 현실적 한계점 등을 정리하여 이 연구에서 적용할 효과분석 틀의 방향으로 제안함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정책과정인 점에 주목하여 계획의 시행효과 분석의 틀 구조를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구득과 이용 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할 세부지표를 설정함

④ 시행효과 분석 1.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은 직접 성과로 가시화되는데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를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지역과 활성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함
-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를 ‘지역생산, 지역가공, 지역유통, 안전관리, 지역소비, 폐기·순환’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역-미수립 지역, 활성화 지역-전국 평균’ 수준을 비교하고, ‘계획 시행 이전-이후’ 변화를 비교 검토함
- 가치사슬 단계별로 이용·분석 가능한 통계자료 제약으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제출 자료와 활성화 지역 대상의 주민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수준과 추이’를 비교함

⑤ 시행효과 분석 2.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 지역먹거리계획은 계획이 실행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영역에서 ‘종합적인 파생효과’로 현실화되는 점에 주목해 그 효과를 분석함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전략과 관련한 주요내용의 ‘중요도-만족도’, 계획 실행 ‘이전과 이후’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분석함
- 활성화 지역(지자체)이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 등을 분석함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관련 종합계획이므로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구

축, 자치법규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정책 실행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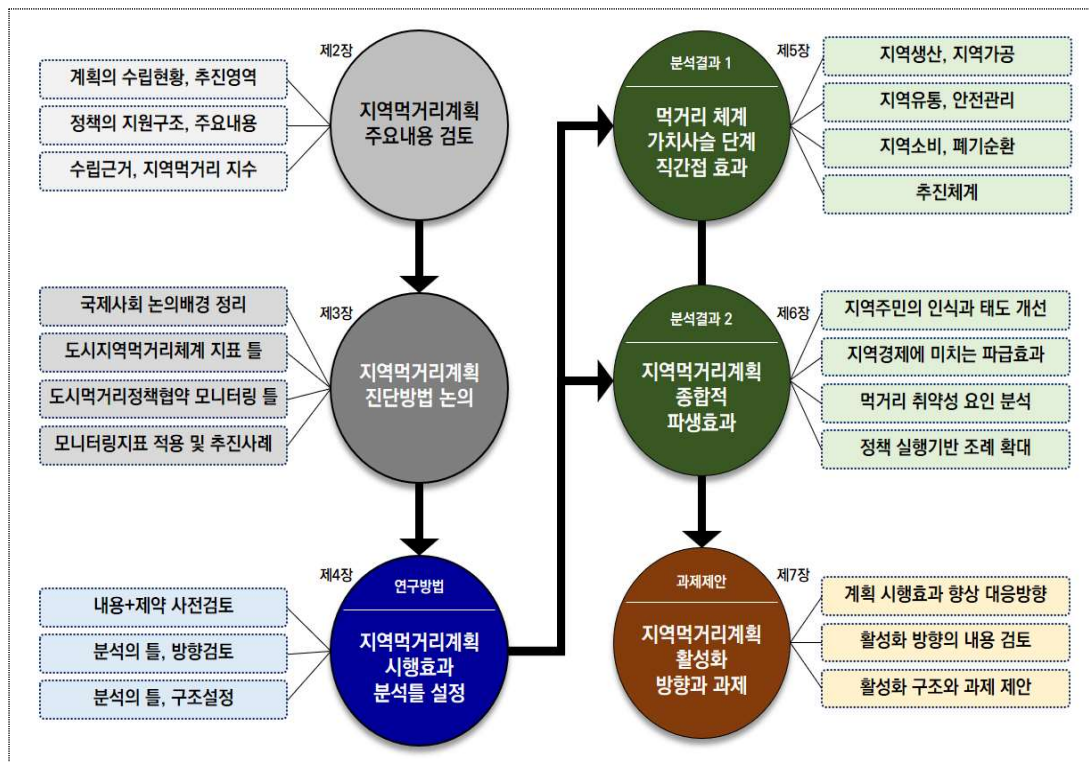
⑥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과 과제’ 제안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는 지역먹거리 체계의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므로 국제사회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진단 지표 논의 및 적용사례의 시사점을 개괄하여 정리함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를 위한 구조와 과제를 정리하고, 주체별 수행할 주요한 역할 방안 등을 제안함

□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조사, 자료분석, 설문조사, 통계분석,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 문헌조사 : 지역먹거리 체계·전략·계획 등에 관한 외국의 주요 문헌과 국제기구의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 등을 분석
- 자료분석 : 지역먹거리계획에 관한 정부 정책자료, 지원조직 안내자료, 지자체 행정자료 등을 조사하여 내용 등을 분석
- 설문조사 : 계획 활성화 사례지역(7개 시·군·구)을 정하고 해당 지역먹거리계획 이

그림 1-1 연구 주요내용의 추진 흐름에 따른 구성



해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분석

- 통계분석 :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
- 인터뷰 조사 : 계획 활성화 사례지역(7개 시·군·구)의 지역먹거리계획 담당자(행정+사업·지원조직) 대상의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황파악 및 과제제안 등에 활용

표 1-1 연구 구성과 연구내용 (요약)

연구영역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① 주요내용 정리	·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과 지역먹거리계획 현황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
	·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 실행수준	자료 및 데이터 분석
① 진단방법 논의	· 국제적 먹거리 체계·전략·계획의 주요논의 동향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
	· 먹거리 계획 진단·분석 틀 적용 외국 주요사례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
③ 시행효과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틀 설정	자료조사 및 문헌연구
	· 지역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분석	통계분석, 설문조사
	· 지역사회 수준 계획의 종합적인 파생효과 분석	통계분석, 설문조사
④ 실행과제 제안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의 검토	인터뷰 조사, 자료분석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인터뷰 조사, 자료분석

제2장

지역먹거리계획 정책내용 검토

1.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
2.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현황
3.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원영역
4. 지역먹거리지수의 주요내용

지역먹거리계획 정책내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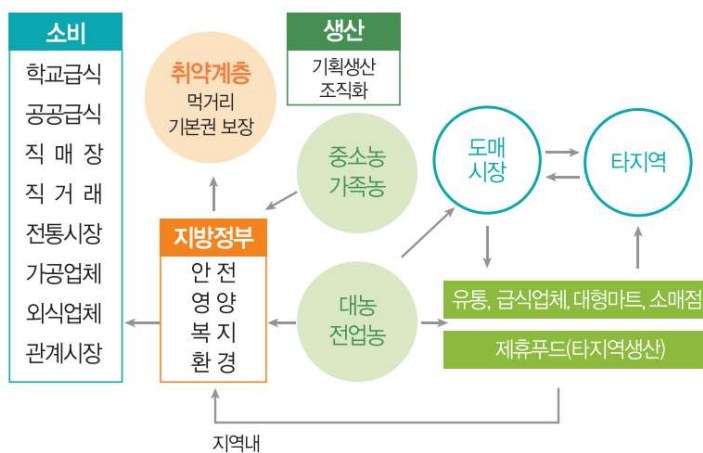
-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은 계획의 수립과 실행여건이 많이 발전하여 정책적·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지원을 시행한지 일정 기간(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획의 시행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포착하고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임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과 핵심요소를 정리하여 계획 시행효과를 진단할 때 고려해야 할 영역을 검토하고자 함
- 지역먹거리계획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을 지원해온 정책인데, 현재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계획 수립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계획 수립 지원정책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추진과정을 고려해 세부내용을 대별하여 살펴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요구되는 실행역량 지원, 계획에서 다루는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등 실행기반 등을 지원해 왔음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정책적·지역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은 초기 인큐베이팅 지원, 실행과정에서의 역량과 자원 지원, 지역먹거리지수를 활용한 진단 및 정책 환류 등 단계적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 정책의 추진과정, 계획의 수립현황,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수립근거, 진단 및 정책환류 수단(지역먹거리지수)의 주요내용을 정리 함

1.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내용²

□ 지역먹거리계획의 개념과 요소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외부에서 조달해오던 기존 먹거리의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으로 ‘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식품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 2017)

그림 2-1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먹거리 순환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홍보 리플렛'

-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정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핵심요소는 ‘기획생산, 생산-소비 순환, 품질·안전성, 운영조직’ 등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① 기획생산 : 지역 수요에 맞는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또는 중개를 통해 지역 생산자(또는 가공업체)에게 역할 부여
- ② 생산-소비 순환 :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 주요 수요처에 우선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 ③ 품질·안전성 :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저온 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GAP·HACCP 적용(인증) 및 안전성 검사 등)
- ④ 운영조직 :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운영조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배, 안전성 관리 등을 총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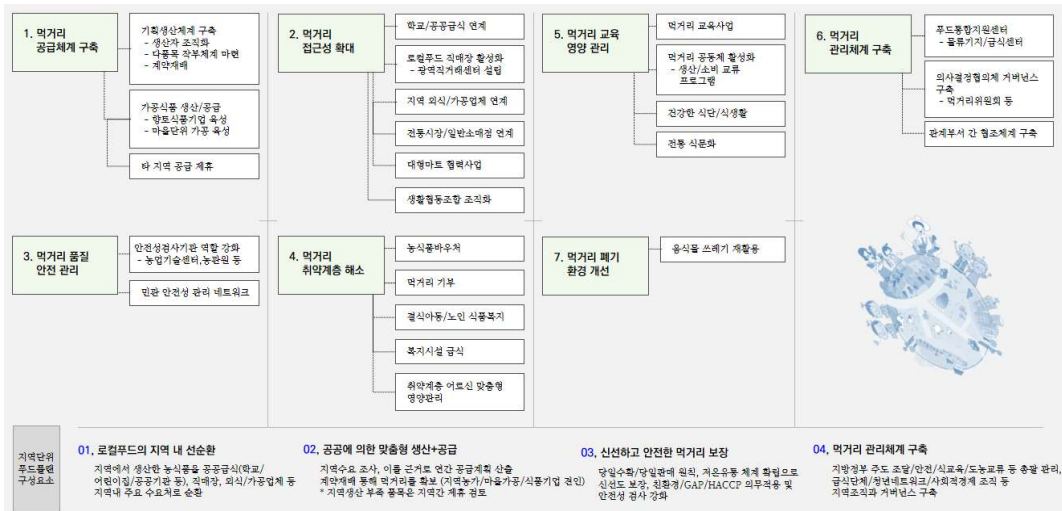
2) 이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현황 조사결과'(2023.2.)에서 작성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전략과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전략을 ‘①로컬푸드 지역 내 선순환, ②공공의 맞춤형 생산·공급, ③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④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① 로컬푸드 지역 내 선순환 :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 직매장, 외식·가공업체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 ② 공공의 맞춤형 생산·공급 : 지역수요 조사, 이를 근거로 연간 공급계획 산출, 계약재배 통해 먹거리를 확보 (지역농가·마을가공·식품기업 견인), 지역생산 부족 품목은 지역 간 제휴 검토
- ③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 당일수확·당일판매 원칙, 저온 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GAP/HACCP 의무적용 및 안전성 검사 강화
- ④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 주도의 조달·안전·식생활교육·도농교류 등 총괄 관리, 급식단체·청년네트워크·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축

그림 2-2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의 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러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전략은 다시 7개 중점과제로 구체화되는데, ‘①먹거리 공급체계, ②접근성 확대, ③품질·안전 관리, ④취약계층 해소, ⑤교육·영양관리, ⑥관리체계 구축, ⑦폐기·환경 개선’ 등이 그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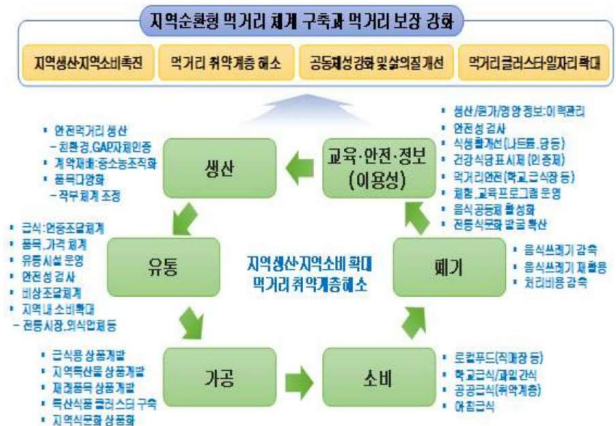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의 유형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단위 현실에 입각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계획에서 다루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유형을 ‘①도농복합형, ②농촌형, ③도시형’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음

① 도농복합형 먹거리 계획

-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소비지)와 농촌(산지)이 공존하는데, 먹거리 보장 수준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생활영역에서 지역주민의 먹거리 격차가 구조화되는 것이 지역 사회 문제로 진단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도시지역 소비자와 농촌지역 생산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 먹거리 보장 수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략임
- 도농복합형 먹거리 계획은 지역 내의 도농상생에 기초하여,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공동체를 갖추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방향임

그림 2-3 ‘도농복합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 (H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② 농촌형 먹거리 계획

- 농촌지역은 농산물 등 식재료의 생산 비중이 높는데, 전업농과 중소농 등으로 생산 구조가 양극화되고, 구조적으로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전형적인 문제이자 현안으로 진단됨
- 이러한 지역농업의 생산구조 불안과 소비구조의 한계를 전략적인 먹거리 소비자 발굴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먹거리 생산-소비의 불균형(미스매치)을 도시 지역과 생산-소비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점 과제임

- 농촌형 먹거리 계획은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중소농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소비력의 제약을 도시 소비처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는 것이 주된 과제임

그림 2-4 '농촌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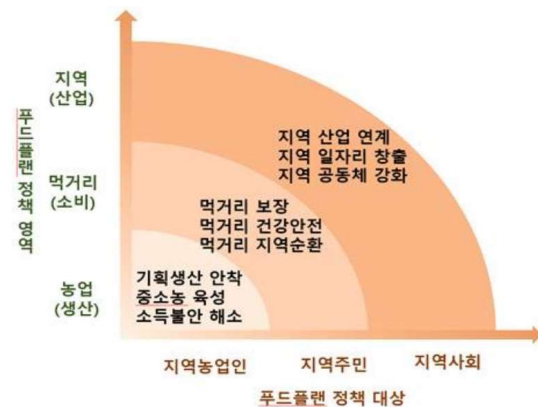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③ 도시형 먹거리 계획

- 도시지역은 먹거리(식재료+농산물 등)의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구조로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식재료 공급이 이뤄져 안전하고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임
- 소비지 특성을 고려해 먹거리의 생산·가공보다는 유통·소비가 중심이 되면서 주로 소비와 관련 먹거리 정의 및 복지, 건강, 안전 등이 도시 지역사회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 도시형 먹거리 계획은 자체적인 먹거리 생산기반이 약하므로 농촌지역과 유기적 연계 통해 사회적·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보편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갖춰 나가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그림 2-5 '농촌형' 지역먹거리계획 사례 (W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현황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인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의 국제적 배경으로는 2014년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MUFPP)³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⁴는 선도적으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본격화하였음
- 지자체의 선도적 먹거리 계획 실행 사례 등 지역적 실천이슈 강조와 국제적 정책여건을 계기로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7년 12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부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정책시행 초기에는 ‘선도 지자체’⁵를 정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지원하거나 촉진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2018)
- 특히 민관이 공동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단(TF)’를 구성하여 군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확대, 푸드플랜 매뉴얼 제작, 우수사례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등을 도모해 나갔음
- 이러한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지원 노력의 결과, 전국의 243개 지자체(기초+광역시) 중 139개 지자체(57.2%)가 계획을 수립 또는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2022년 12월 기준)⁶
- 지역먹거리계획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이를 매개로 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결합되어 양적으로 수립·실행 지역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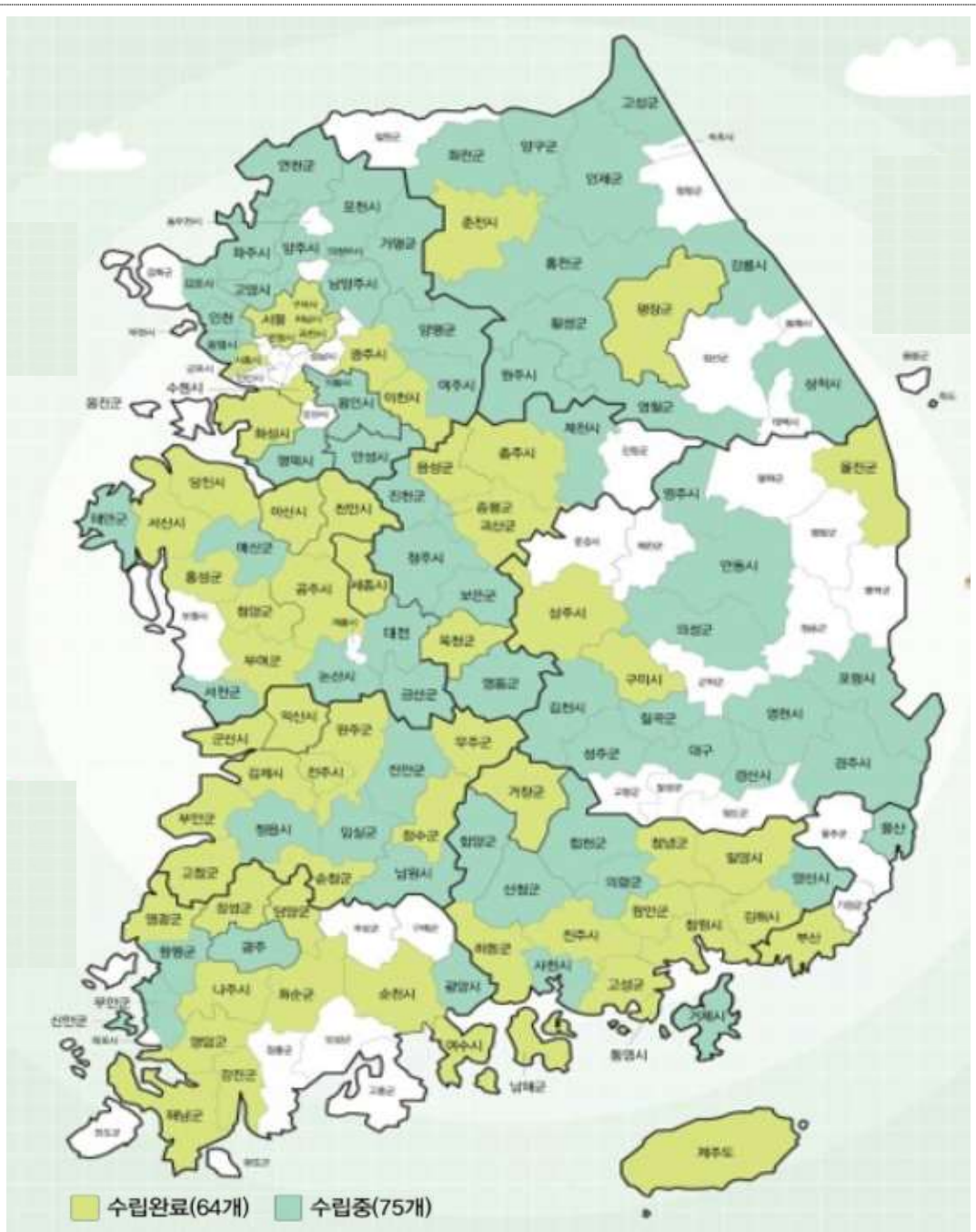
3 밀라노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4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주시의 ‘전주푸드플랜’(2015~)과 서울시의 ‘서울 먹거리 전략’(2014~) 등을 꼽을 수 있음

5 선도 지자체는 도농복합형(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강원 춘천시), 농촌형(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도시형(서울시 서대문구, 대전시 유성구) 등

6 이 내용은 김유리(2023), ‘지역먹거리계획 정책현황’, 서울시+MUFPP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에서 작성하였음

그림 2-6 지역먹거리계획의 전국적 수립 현황 ('22.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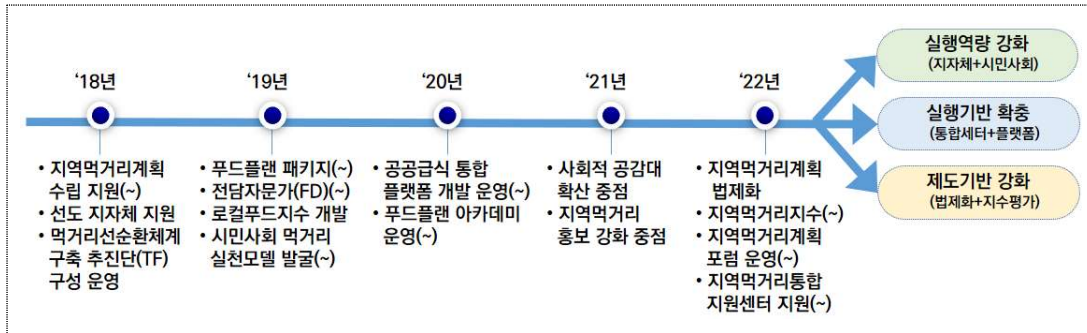
수립현황 : 총 139개 지자체 계획 수립+수립중 : 수립완료(64개), 수립중(75개)
 광역현황 : (완료)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진행)인천, 세종, 전북, 강원, 경북, 대구, 광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현황', '23년 상반기 지역먹거리계획 협의회 발표자료.

3.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영역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지원해온 정책은 크게 ‘실행역량 강화, 실행 기반 확충, 제도기반 강화’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그림 2-7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정책 흐름 (개괄)



* 자료 : 연구진 작성

□ 제도기반 강화

- 2018년부터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22.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신설('22.7.5. 시행)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⁷
 -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제시('22.6.)

- 7 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행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 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기타 사항 : 지역먹거리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이행 전반에 대한 추진 정도를 가늠하고 지역먹거리 정책의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있음
 - 2022년 159개 시·군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상위 등급(S-A등급)⁸ 지자체가 지속 증가하였고, 자치구(69개)를 대상으로 시범 측정을 실시 중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 평가의 신규 지표로 반영하여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임⁹

□ 실행기반 조성

- 2018년부터 지자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실증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음¹⁰
- 특히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먹거리 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¹¹
-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음
 -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농림축산식품 주관 11개 사업¹², 농촌진흥청 2개 사업, 지자체 2개 등 16개 사업이 포함됨
 -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 자문가(FD)를 배정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상황점검 등 현장 중심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음¹³
- 2022년에는 공공급식에서 식단 편성 및 수발주 등 관리체계 일원화로 공공급식 분야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음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은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사용가능 하도록 확대한 온라인 플랫폼
 - 이를 통해 공공급식 수요처와 생산자 연결로 지역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확대함(‘22년 거래액 3조 1천억원,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 비율의 78.5% 수준)

8 지역먹거리지수 측정 결과 상위등급(S-A) 지자체수는 (‘20)3개소 → (‘21)10개소 → (‘22)15개소로 증가

9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100점)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률(60점) + 지역먹거리지수 상위 등급률(40점)

10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시·도 최대 100백만원, 시·군 50백만원을 국비(50%)와 지방비(50%)로 지원함

11 2023년에 2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15백만원을 지원

12 일반APC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등이며, 지원내역은 (‘19)404억원 → (‘20)8,431 → (‘21)10,280 → (‘22)10,295 → (‘23)8,136 등임

13 FD(Family Doctor)는 지역에 대한 밀접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자문가로 ‘23년 18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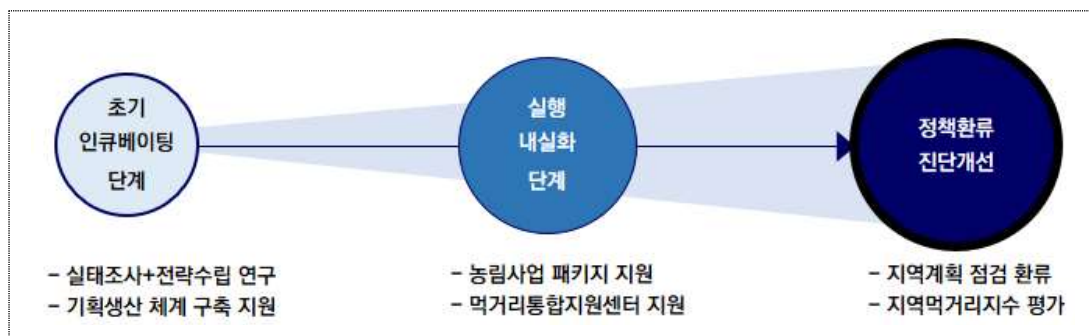
□ 실행역량 강화

- 지역먹거리계획의 이행을 담당할 시민사회, 지자체 공무원, 실행조직 등을 대상으로 소통·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체별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전략 과정, 신규 보직자·관리자 과정 등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aT교육원, 4~12월)
- 지역먹거리 가치 확산 : 지자체-민간-aT 협력¹⁴, 지역먹거리 사용 확대 홍보, 광역형 지역먹거리 공급모델¹⁵ 공공기관 대상 로컬푸드 데이 운영 등

□ 지역먹거리계획의 단계별 맞춤 지원

- 지역먹거리계획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기 인큐베이팅 단계 → 계획 실행의 내실화 단계 → 계획 추진 정책의 환류’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림 2-8 지역먹거리계획 단계별 맞춤 지원 구조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에서 연구진 작성

- ① ‘초기 인큐베이팅’ 단계 : 지자체가 지역먹거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② ‘계획 실행 내실화’ 단계 :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해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실행 및 지원조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③ ‘계획 추진 정책 환류’ 단계 :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정책을 환류하고 있는데,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로 추진현황을 종합 측정·평가하고 있음

14 이케아부산과 경남 로컬푸드 활성화 팝업스토어 운영

15 대전푸드통합지원센터와 청양지역활성화재단을 통해 로컬푸드 공급(19개 공공기관)

□ 계획수립 자치법규의 제정 (2023.8.31. 현재)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자체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계획 수립과 정책·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의 근거인 자치법규는 대체적으로 ‘먹거리 기본조례’ 등의 명칭을 채택하고 있음
- 지역별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필요한 근거로 ‘먹거리 기본조례’를 광역 지자체는 82.4%(전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기초 지자체는 37.2%(226개 중 80개 시·군·구)가 제정하였음¹⁶

표 2-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근거 자치법규(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광역 수립 여부	‘17.7.	‘21.1.	-	‘22.2.	-	-	‘21.9.	‘21.7.	‘17.8.
기초 수립 개소	1	-	1	-	2	2	-		
(기초 시군구 수)	25	16	9	10	5	5	5	-	-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전체
광역 수립 여부	‘19.1.	‘21.9.	‘21.5.	‘19.12.	‘21.12.	‘20.4.	‘21.7.	‘20.2.	14
기초 수립 개소	20	4	7	8	12	11	3	9	80
(기초 시군구 수)	31	18	11	15	14	22	22	18	226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 지자체에 미포함

- 지자체별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정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먹거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의 규정,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민의 참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정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16 경기도(20) :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 강원도(4) : 동해시,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 충북도(7) : 보은군,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 충청남도(8) :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전북도(12) :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 전남도(11) :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도(3) :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 경남도(9) :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창원시, 통영시, 함양군, 합천군 / 서울시(1) : 서대문구 / 대전시(2) : 대덕구, 유성구 / 대구시(1) : 달성군 / 광주시(2) : 광산구, 동구

- 먹거리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및 핵심과제,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

4. 지역먹거리지수 주요내용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과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추진정도와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를 적용하고 있음
- 2019년 ‘로컬푸드지수’ 지표를 개발하여 2020년~2021년 시범 평가를 하였고, 2022년부터는 ‘지역먹거리지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농복합시 및 농촌 지자체를 진단하고 있음
 - 2020년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측정하였는데, 총 100개 지자체가 참여, 평가지표는 로컬푸드 관련 10개 지표로 구성
 - 2021년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측정하였는데, 총 101개 지자체가 참여, 평가지표는 로컬푸드 관련 17개 지표로 구성
 - 2021년 2차 측정 이후 명칭을 ‘지역먹거리지수’로 확대 개편하였고, 도시지역 지표 신설 필요에 따라 도시형 지표를 추가 개발
 - 2022년부터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로 변경하여 농촌 및 도농복합형 지자체 159개 시·군과 도시형 69개 자치구로 구분하여 측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추진 목적을 ‘먹거리 정책 추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도입 초기 지자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지수는 지자체의 지역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추진 정도와 지역먹거리정책 활성화 노력을 계량하여 측정한 지수임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지표

- 지역먹거리지수는 7개의 관점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①시민권, ②정책통합, ③공공정책, ④가족소농, ⑤일자리, ⑥거버넌스, ⑦지역연대 등이 그것임
 - 시민권 : 시민 기본권으로서의 계층별 건강 먹거리 보장의 관점
 - 정책통합 : 지역단위 통합적 먹거리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의 관점

- 공공정책 : 공동정책으로서의 지역먹거리 정책의 도입과 확산의 관점
 - 가족소농 : 지역사회 유지의 핵심요소인 가족소농의 유지와 재생산의 관점
 - 일자리 : 먹거리 관련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촉진의 관점
 - 거버넌스 : 생산자-소비자 공동 참여 및 통합적인 거버넌스 활성화의 관점
 - 지역연대 :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대 지역으로 대등한 교류와 상생의 관점
- 지역먹거리지수는 시범 평가, 2차 평가 등으로 수정·보완되어 2023년에는 농촌·도농복합형과 도시형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계획임
- 농촌형+도농복합형은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157개 시·군+세종시·제주도 포함)이며, 도시형은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함
- 평가는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안전하고 환경적인 지역먹거리 생산,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소비,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 먹거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개 평가과제와 과제별 하위 평가지표로 구성됨

표 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지표 구성 현황(농촌형+도농복합형, 도시형 비교)

농촌형+도농복합형			도시형		
평가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1.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①지역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체계 구축	①-1.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1.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①지역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체계 구축	①-1.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①-2. 먹거리 관련 조례 운영			①-2. 먹거리 관련 조례 운영
		①-3.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①-3.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①-4. 먹거리 전담부서			①-4. 먹거리 전담부서
	②지역먹거리 위원회 운영	②-1.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②지역먹거리 위원회 운영	②-1.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②-2.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②-2.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2. 안전 환경적 지역 먹거리 생산	③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	③-1. 안전성 검사	2. 안전 환경적 지역 먹거리 확보	③지역먹거리 안전성 관리	③-1.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
		③-2. GAP 인증 면적 비율			③-2. 지자체의 안전성 관리
		(가) 지역먹거리 인증제 운영			
	④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④-1.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비율		④도시농업 확대 노력	④-1. 도시농업 추진실적
	⑤농가 조직	⑤-1.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 지원			④-2. 도시농업 활성화 활동 사례
		⑤-2. 농가 조직화 교육			
	⑥지역 가공품 생산 활성화	⑥-1. 지역 가공품 생산농업인 비율			
	⑦지역먹거리 소비기반 (학교급식, 공공·민간)	⑦-1.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실적	3. 먹거리 소비 체계	⑤지역먹거리 소비기반 (학교급식, 공공·민간)	⑤-1.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실적
		⑦-2. 공공영역 로컬푸드 공급실적			⑤-2. 공공영역 로컬푸드 공급실적

농촌형+도농복합형			도시형		
평가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과제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우선 소비	공급실적	(가) 로컬푸드 광역형 공급모델 구축실적	구축	공급실적	(가) 로컬푸드 광역형 공급모델 구축실적
		⑦-3. 민간영역 로컬푸드 확대노력			⑤-3. 민간영역 로컬푸드 확대노력
	⑧먹거리 소비 가점 접근성	⑧-1. 직매장 평균 매출			
	⑨중간지원 조직 운영	⑨-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⑥중간지원 조직 운영	⑥-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			(가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
	⑩지역공동체 기반강화	⑩-1. 사회적경제 조직 로컬푸드 활성화		⑦지역공동체 기반강화	⑦-1.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사례 ⑦-2. 먹거리 사회적경제 조직 수
4.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	⑪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⑪-1. 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공급실적	4.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	⑧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⑧-1. 취약계층 로컬푸드 공급실적 ⑧-2. 먹거리취약자 자원활동 사례
	⑫도농상생 협력강화	⑫-1.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협약 등 추진		⑨도농상생 협력강화	⑨-1. 생산자-소비자간 소통활동 현황
		(가) 도농상생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⑨-2. 직거래 장터 운영
	⑬중소농가 소득안정	⑬-1.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		⑩먹거리 시민교육 강화	⑩-1. 먹거리 시민교육 실적
		⑬-2. 직거래 장터 운영 현			
5. 먹거리 지속가능	⑭탄소감축 실천 노력	⑭-1.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	5. 먹거리 지속가능	⑪탄소감축 실천 노력	⑪-1.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
14개 지표			11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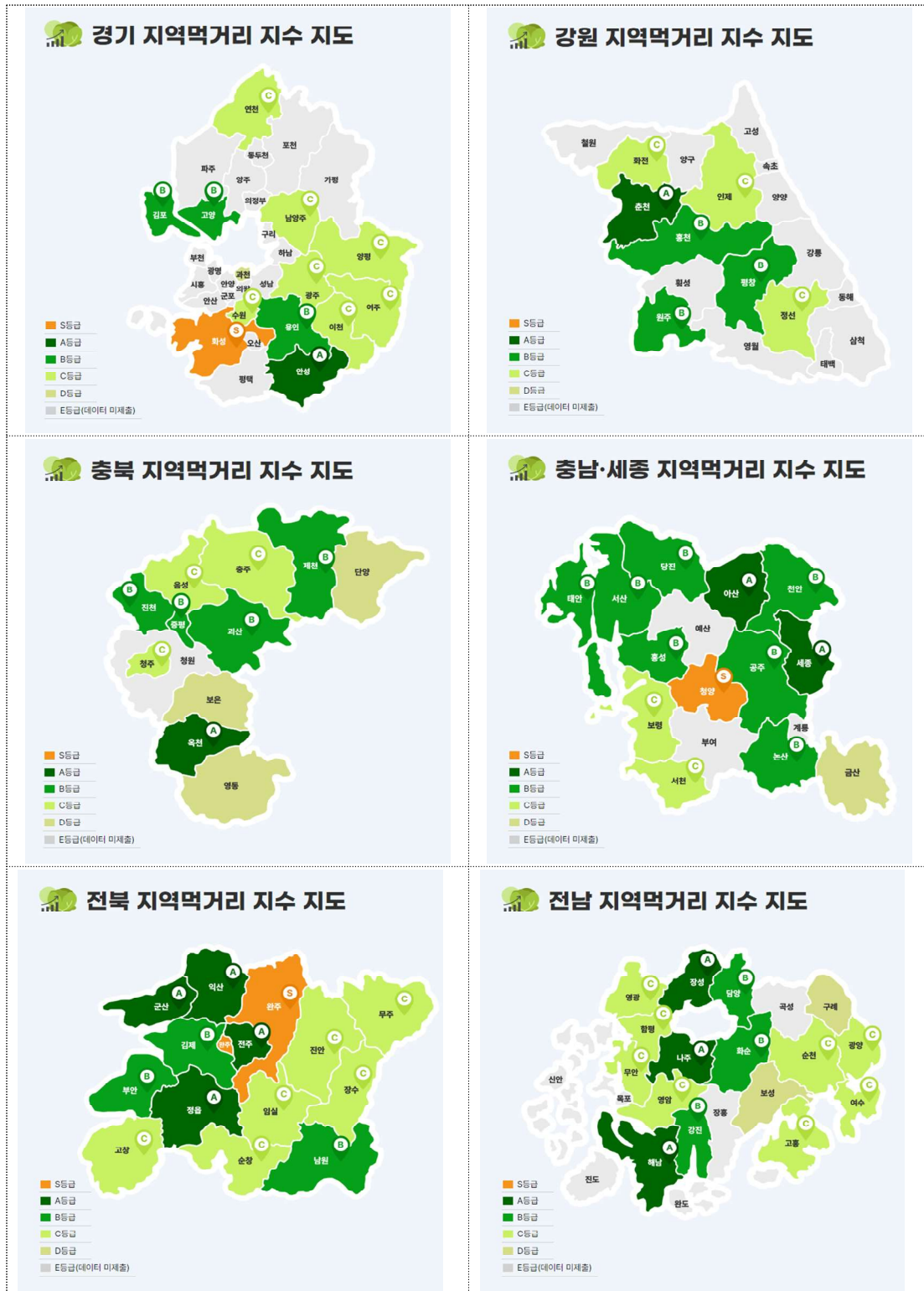
* 자료 : 소비자시민모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3), '2023 지역먹거리지수(농촌·도농복합형) 매뉴얼'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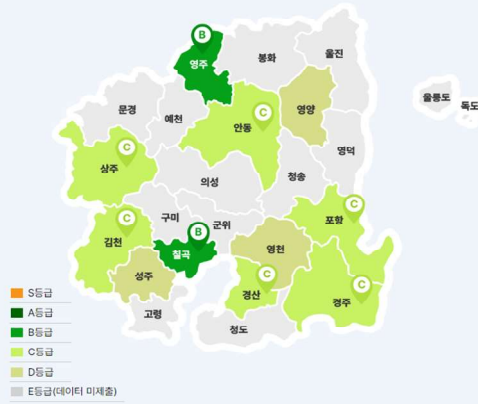
- 2022년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5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6가지 등급(S-A-B-C-D-E)을 부여하였음
- 2021년 기준 평가 : S등급 3개소(완주군, 청양군, 화성시) A등급 11개소(춘천시, 안성시, 세종시, 옥천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장성군, 나주시, 해남군), B등급 28개소(김포시, 고양시, 용인시, 평창군, 홍천군, 원주시, 제천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남원시, 부안군, 김제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영주시, 칠곡군,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 2020년 기준 평가 : S등급 1개소(완주군) A등급 9개소(화성시, 춘천시, 옥천군, 아산시, 청양군, 군산시, 전주시, 장성군, 나주시), B등급 21개소(용인시, 안성시, 원주시, 평창군, 제천시, 괴산군, 증평군, 당진시, 공주시, 세종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강진군, 화순군, 순천시, 광양시, 거창군, 진주시, 김해시, 남해시)

- 2019년 기준 평가 : S등급 1개소(완주군) A등급 2개소(옥천군, 나주시), B등급 10개소(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음성군,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군산시, 장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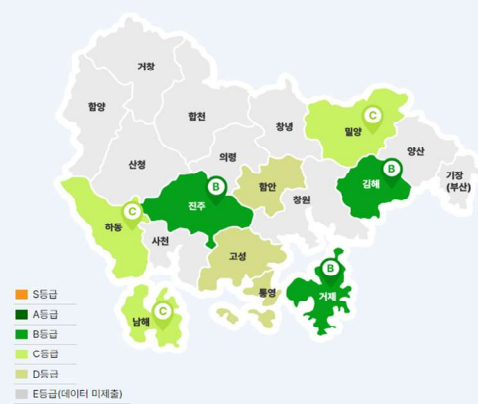
그림 2-9 2022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 (지역별 수준)



경북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부산·경남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인천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대구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울산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제주도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



* 자료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작성

제3장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방법 논의

1. 먹거리 전략 진단에 관한 주요배경
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검토
3. ‘도시먹거리정책협약’ 진단 틀 검토
4. 먹거리전략 모니터링 지표 적용사례
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추진체계 검토
6. 국제사회 실천사례의 시사점과 논의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방법 논의

- 이 연구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통해 먹거리 전략·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정책 시행효과’의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먹거리계획은 정부 정책을 매개로(배경), 지자체가(주체), 지역사회에서(공간), 먹거리 관련 구조를(내용) 개선해 나가는 정책계획으로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책계획의 시행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먹거리 전략’ 실행의 모니터링과 진단에 관한 주요내용을 논의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전략과 정책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2015년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계기로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 실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권장사항 등)이 마련되어 정책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과 체계’를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실행의 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 실험을 통해 변화를 포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국제사회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먹거리 전략 실행 모니터링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틀’ 설정과 마련에 필요한 주요 근거로 삼고자 함
- 구체적으로 지역먹거리 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실행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과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함
- 특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행 진단(모니터링) 기준이 지역단위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외국 도시지역 실험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먹거리 전략 진단에 관한 주요배경

□ 지구적 먹거리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 국제적 중요 의제로 부상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적 먹거리 체계’(global food system)는 현재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높으며, 이러한 ‘지속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 있음 (Blay-Palmer et al., 2019)
- 2009년 ‘IAASTD’(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 국제평가)¹⁷의 보고서는 ‘기로에 선 농업’(agriculture at a crossroads)의 현실을 평가하며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제적 조달 방식을 받침하고 지지하는 수출 농업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생태농업의 강화’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유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UN CF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음
-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적절한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food and nutrition)의 재조명, 비아캄페시나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의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에 대한 제기 등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먹거리 전략 실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sustainable food system)로의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먹거리 전략의 ‘실행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2015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 패널’(IPES-Food, The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on Sustainable Food Systems)의 보고서에서는 먹거리 체계 내의 ‘권력관계’와 ‘정치경제’, 먹거리 체계의 개혁을 위한 ‘다중 범위(규모)’ 및 ‘통합적 이해와 평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음

17 IAASTD :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for Development

-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먹거리 전략에 대한 평가는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데, ‘정책 입안자, 연구자, 자금 제공자(재정 기부자)’ 등 모두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
- 특히 특정한 지역(도시 수준 등)에서부터 지구적 규모(범위)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
- **먹거리 체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먹거리 전략 평가지표’ 등이 마련됨**
 -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논리 구조를 토대로 대응해 나가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산업적 규모+수출농업’ 방식의 관행적 먹거리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업의 다기능성과 생태농업의 강화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방향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사회적 분배의 왜곡으로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는 ‘기본적 인권’이며 모두가 ‘적절한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셋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은 다중 이해관계자로 인해 조정과 수정이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권력관계, 정치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 넷째, 먹거리 체계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변환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데, 이로 인해 먹거리 체계 개혁은 ‘다중 규모, 통합적 이해와 평가’가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다섯째, 먹거리 체계 전환은 현실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먹거리 전략을 평가하여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음
 - 여섯째, 먹거리 체계는 지역-국가-세계 등 다층적이어서 진단과 평가에 제약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지구적 규모에 이르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일곱째, 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세부 내용은 정보가 분산적이거나 격차가 크기 때문

에 정책관계자,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공유할 수준의 자료 작성과 평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그동안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의 ‘공통 기준과 지표’에 근거를 둔 진단과 평가를 위한 공동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시도(trial)의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음
 - ①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Indicator Framework, 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 Framework) (2017)
 - 도시 지역이 먹거리 체계를 갖춰가기 위한 실행을 돕기 위해 설계된 실용적인 평가 및 계획 도구
 - 전체 시스템 접근 방식에 따라 '도시지역먹거리체계'의 현황 및 성능 평가를 목적
 -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조치의 우선순위 영역 식별
 - 기준선을 설정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 구현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 ② 밀라노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 Milan

그림 3-1 ‘CRFS 지표 틀’과 ‘MUFPP 모니터링 틀’ 보고서



Urban Food Policy Pact Monitoring Framework) (2021)

-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MUFPP 권장 사항을 반영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단계, 간단한 도구, 주요 팁 및 방법론을 제공
- 지역의 먹거리 정책 입안자에게 제안할 다양한 먹거리 체계 활동을 식별여 변화를 주도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데 도움
- 정보(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먹거리 체계의 다른 주체와 협업을 하는 기반을 제공
- 3개 도시(Antananarivo-Madagascar, Nairobi-Kenya, Quito-Ecuador) 시범 프로젝트로 제안

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Indicator Framework)¹⁸

□ (배경·과정)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에 따라 개발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21개의 핵심적이고 바람직한 전환(이동)의 방향을 중심으로 210개의 지표와 측정 세트로 구성된 내용을 개발하였음 (FAO와 RUAF 등의 지원을 받음)
- ‘도시지역먹거리 체계 지표 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회의에서 초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준 데이터를 만들고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의 전환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210개의 지표·측정 세트를 구성함¹⁹

□ (개발목적) 지역먹거리 체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변화를 측정하여 모니터링

표 3-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Indicator Framework) 특징

특징	설명
1. 지역먹거리 체계의 현재 상태 평가와 변화를 측정하여 모니터링할 근거로 마련	· 지역마다 먹거리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전략에서 다루는 행동(실천, 사업·활동)의 우선순위에 관한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전략 및 조치를 지원 · 지역먹거리 체계를 통해 실현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과 실행 등으로 결과 되어 나타나는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2. 지역먹거리 체계 지향과 가치사슬 모두 접근, 매트릭스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	· 지역먹거리 체계의 다기능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영역을 우선 설정(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농촌의 통합(융합), 먹거리 거버넌스, 취약성 감소와 회복력 증가 등 6개 영역) · 먹거리 체계 이루는 가치사슬별(생산~폐기, 먹거리 체계 정책·계획) 구성 요소 배치 (투입 공급 및 먹거리 생산, 먹거리 저장·가공·제조, 먹거리 도매·유통, 먹거리 판매·음식서비스·소매, 먹거리 소비, 음식·유기폐기물 관리, 지역먹거리 체계 정책 계획)
3. 지표 틀을 사용에서 ‘유사성, 복잡성, SDGs 연계, 데이터 소스’ 등 유의점 명시	· 몇몇 지표가 매우 유사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유사한 지표가 서로 다른 영향 영역에 연결(유사성) · 여러 지표는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최종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그 자체 섹션으로 구분 필요(복잡성) · 상황에 맞게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 지표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각각의 지표를 SDGs 목표 지표와 연결 · 지표의 정보를 추출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1차 자료, 2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생성, 추출, 정리, 분석 등으로 사용

* 자료 : Carey and Dubbeling (2017)에서 정리 작성

18 이 내용은 Carey and Dubbeling (2017)에서 정리 작성하였음

19 로마에서 2회의 전문가 회의 개최(2015.3./2016.4.), 이 틀은 7개 도시에서 적용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였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먹거리 체계라는 구조를 상징하는 ‘시스템 접근 방식’에 따라 지역먹거리 체계의 현재 상태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
- 지역마다 먹거리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먹거리 전략에서 다루는 행동(실천, 사업·활동)의 우선순위에 관한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전략 및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
- 지역먹거리 체계를 통해 실현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과 실행 등으로 결과 되어 나타나는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함

□ (지표구성) 지역먹거리 체계의 지향과 가치사슬 모두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매트릭스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

- 지역먹거리 체계의 다기능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영역을 우선 설정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농촌의 통합(융합), 먹거리 거버넌스, 취약성 감소와 회복력 증가 등 6개 영역
- 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가치사슬별(생산~폐기, 먹거리 체계 정책·계획)로 구성 요소를 배치
 - 투입 공급 및 먹거리 생산, 먹거리 저장·가공·제조, 먹거리 도매·유통, 먹거리 판매·음식서비스·소매, 먹거리 소비, 음식·유기폐기물 관리, 지역먹거리 체계의 정책과 계획(교차 편집)

□ (지표성격) 지역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탄력성 질문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가짐

- 누가 생산하고, 소비되는 먹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 현재 먹거리 체계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인가?
- 먹거리 체계가 장기적 충격과 예상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가?
- 어느 지역, 먹거리 가치사슬의 어떤 부분, 어떤 주민 계층과 이해관계자 그룹이 먹거리 체계의 취약성에 의해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인가?
- 미래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먹거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영역은 무엇인가? (먹거리 체계 영역 및 차원 관련)

○ 의사결정자와 핵심 이해관계자가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는가?

○ 먹거리 체계의 의사결정 관련 역할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가?

□ (관심·초점) 지역먹거리와 관련한 현장(지역 및 주체)에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초점

○ 먹거리의 생산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화

○ 먹거리의 가공 능력 최적화(먹거리 안전표준 충족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지역의 먹거리 경제(local food dollar)를 더 많이 유지하고 지역과 농식품 부문이 지역 경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배치

○ 먹거리 체계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진

○ 개선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정책·전략을 개발·구현하고 모니터링

□ (유의사항)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을 사용하는데 있어 '유사성, 복잡성, SDGs 연계, 데이터 소스' 등의 유의점을 명시

○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 : 대부분의 지표는 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촌과 도시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를 사용함²⁰

○ 유사성 : 몇몇 지표가 매우 유사하거나 다른 섹션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지표가 서로 다른 영향 영역에 연결되기 때문임

○ 복잡성 : 여러 지표는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최종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그 자체 섹션으로 구분 필요함²¹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결 : 상황에 맞게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 지표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각각의 지표를 SDGs 목표 지표와 연결하여 설정함²²

○ 데이터 소스 : 지표의 정보를 추출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1차 자료, 2차 자료 등의 데이터 소스를 적절한 방식으로 생성, 추출, 정리, 분석 등으로 사용함

20 지표는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이므로, 지리적 위치, 소득계층, 연령 범주, 성별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더 세분화 가능함

21 긴급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수와 유형, 음식물 손실·폐기 등과 같이 최종 수치 설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 데이터가 누락된 위치식별이 중요함

22 먹거리 종합전략 및 지역먹거리계획 등에서 SDGs를 활용하는 경우 국제적 규범과 부합하는 것이며, 범용성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비교가 가능함

개선
건강, 웰빙,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가
경제적 성장, 일자리,
농업적 생존력

개선
자원 및 토지 기반
관리에 대한 지킴이

농업 투입과 생산

저장, 가공 및 제조

도매 및 유통

**마케팅, 케이터링
및 소매**

소비

유기 폐기물 관리

먹거리 및 농업정책

민주적 참여

교육

모두에게 건강하고,
가능한 지역적으로 공급되며,
가능한 지속가능하게
생산, 가공, 포장 및 유통

지속가능 먹거리
포스트
생산지 속력

지역별,
상품별
공급량
대신

유기농
생산비율(%)

식품별
공급량
재판성(%)

병해충통합관리
(IPM)
비율(%)

먹거리
영양가량
(%)

수입 대체율(%)

새로운 혁신적
먹거리 생산

무드허브
숙차

독립식물성
식품 분배율
(%)

로컬푸드
공공급식
정책

무드랜드
온타리오
제품수 증가

온타리오 식품
로컬푸드
증가

가정에서의
로컬푸드
소비 증가

공공영역의
로컬푸드
급식

지역시장으로
전환지원
프로그램

농업
신규 진입자
지원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영양순환 증가
(퇴비 사용)

에너지 포집 및
효율성

공급사슬에서의
자구적 수준의
음식 폐기물
감소

도시-농촌
연결
지역 협력회

먹거리 정책
협의체(위원장)
지역연합

먹거리
재활용
정책 홍보

학교급식
정식
프로그램

건강 먹거리
직무교육

먹거리
이해력 교육
(OAFE)

연간
수입
보장

먹거리
네트워크

아동주인
먹거리
자산

사회적
행동성
증가

최적의
식단으로
전환

어린이 대상
마케팅 비용
절감

다이어트로 인한
안전질환
감소

먹거리
취약성
표시

아동주인
먹거리
네트워크

포장
감소

기초 교육
재해, 요리,
보존 등

□ (수정·진화) 코로나19를 겪으며 양적·질적 조사를 동반하는 등 지표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감

- 표 3-2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CRFS Indicator Framework) 구조와 내용

제3장 지역먹거리계획 진단방법 논의 | 39

먹거리 체계 구성요소 (연구질문)	지속 가능성 영역	사회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농촌 통합(융합)	먹거리 거버넌스	취약성 감소 회복력 증가
		건강·웰빙 개선	지역경제 발전 양질의 일자리	환경자원 관리향상	지역먹거리 공급 개선	먹거리 거버넌스 개선	
	력을 강화하고 개발 · 지역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시민을 먹일 충분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 지역생산 먹거리 양이 지역 소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지역먹거리의 재편 잠재력은 무엇인가? · 지역먹거리 생산, 투입·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먹거리 저장, 가공 및 제조〉 (목표) 지역먹거리 가공능력 최적화(먹거리 안전표준 충족, 주민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제공) · 가공·제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 지역의 먹거리 저장·가공·제조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먹거리 도매 및 유통〉 (목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도매·유통 개발과 강화(시장, 공급허브 등) · 도매상과 유통업체가 지역먹거리와 연결하고 있는가? · 지역먹거리 도매 및 유통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먹거리 판매, 음식서비스 및 소매〉 (목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매장의 개발과 강화(상점, 식당, 시장 등) · 시민은 적정하고 건강한 먹거리 판매(공급)처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지역먹거리 판매, 음식 서비스, 소매 지속가능성·회복력 높일 수 있는가?						
	〈먹거리 소비〉 (목표) 모든 주민이 건강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 ·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고 안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 지역먹거리 소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음식 및 유기 폐기물 관리〉 (목표) 먹거리 사슬 전체에 걸쳐 음식물 폐기·손실을 줄이고 지역먹거리의 생산						

먹거리 체계 구성요소 (연구질문)	지속 가능성 영역	사회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농촌 통합(융합)	먹거리 거버넌스	취약성 감소 회복력 증가
		건강·웰빙 개선	지역경제 발전 양질의 일자리	환경자원 관리향상	지역먹거리 공급 개선	먹거리 거버넌스 개선	
을 위한 양분·물·에너지의 재활용을 최적화 · 음식물 폐기와 손실을 적극적으로 줄 어두고 있는가? ·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유기 폐기물 (수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 음식·유기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교차 편집〉 지역먹거리 체계의 정책과 계획 (목표) 개선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정 책 및 전략 개발, 실행·모니터링 · 먹거리 체계의 변화(전환)를 구현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있는가? · 먹거리 체계와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 자료 : Joy Carey & Marielle Dubbeling (2017), '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 Framework: City Region Food System Toolkit', RUAF Foundation; 황영모 외(2020)에서 재인용

3.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²³⁾

□ (배경·과정) 지속가능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도시(지역)정부 수준의 실행기준 구체화 필요에 따라 마련

- 2015년 채택한 밀라노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은 도시지역 수준에서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위한 공통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큼 (6개 부문의 37개 실행과제로 구성)
- 2016년 MUFPP 사무국과 FAO는 RUAF의 지원을 통해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실천지침 수준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실행과제의 모니터링 지표와 이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의 개발을 시작함
- 2018년 MUFPP 사무국은 40여개 도시가 참여한 의견교류 및 상담 과정과 16개 도시지역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44개 지표로 구성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을 발표하였음

표 3-3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 특징

특징	설명
1.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위한 국제사회 도시정부 수준 실행기준 구체화 필요로 마련	· 2016년 MUFPP 사무국+FAO는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지침을 실천지침 수준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실행과제 모니터링 지표와 방법론적 지침의 개발을 시작 · 2018년 MUFPP 사무국은 40여개 도시 의견 교류와 16개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44개 지표로 구성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을 발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4개 영향 영역과 44개 세부지표로 내용을 구성	· 4개의 영향 영역 : ①먹거리 정책의 수립에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 ②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맞물려 형평성을 증진, ③건강과 영양, 식량안보의 개선, ④환경적인 영향 및 탄소 발자국의 감소 · 6개 실행 부문 : ①먹거리 거버넌스, ②지속가능 식단과 영양, ③사회자본과 경제자본, ④먹거리의 생산, ⑤먹거리의 공급과 분배, ⑥음식물 폐기물 감축 · 44개 세부 지표 : 6개의 실행 부문은 지역단위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용 가능한 지표로 구성 ·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연계되어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 도구로도 활용
3. 도시지역 수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실행수준의 모니터링 틀로 활용	·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 지표를 활용하는 도시는 4가지의 핵심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5년 사이에 원하는 결과의 도출을 위한 행동, 선택한 우선사항의 진전(변화)을 모니터링하기 한 유용한 지표

* 자료 : Carey and Cook (2021)의 예서 정리 작성

23) Carey and Cook (2021)의 내용을 발췌, 요약

□ (지표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4개의 영향 영역과 44개 세부 지표로 내용을 구성

- 4개의 영향영역 : ①먹거리 정책의 수립에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 ②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맞물려 형평성을 증진, ③건강과 영양, 식량안보의 개선, ④환경적인 영향 및 탄소 발자국의 감소
- 6개 실행부문 : ①먹거리 거버넌스, ②지속가능 식단과 영양, ③사회자본과 경제자본, ④먹거리의 생산, ⑤먹거리의 공급과 분배, ⑥음식물 폐기물 감축 등
- 44개 세부지표 : 6개의 실행 부문은 지역단위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용 가능한 지표로 구성
 - 지역먹거리 체계 등의 유무를 살펴보는 자체 평가(바이너리) 항목과 양적 평가 항목으로 나뉨
-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연계되어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

□ (활용·이용) 도시 지역 수준에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수준의 모니터링 틀로 활용

-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 지표를 활용하는 도시는 4가지의 핵심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 모니터링 지표의 6개 실행부문 각각에서 지역먹거리 체계의 우선사항은 무엇인가?
-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5년 사이에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5년 사이에 원하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5년 사이에 원하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 선택한 우선사항의 진전(변화)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지표가 가장 유용한가?

표 3-4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

실행부문	세부지표		비고
먹거리 거버넌스	1	먹거리 정책/프로그램 자문/의사결정 활동적 지방정부 기관 여부	○
	2	적극적인 다자간 먹거리 정책 및 계획의 존재 여부	○
	3	도시의 식량정책또는 전략, 실천계획 존재 여부	○

실행부문	세부지표		비고
	4	먹거리 정책/프로그램 개발·확대 안내 주도층과 관행적 목록 여부	○
	5	먹거리 정책 데이터 모니터링·평가/정보제공의 수집/분석기반여부	○
	6	생산/유통/접근, 사회·경제적 충격 등 먹거리 취약성 진단/관리 계획	○
지속가능 식단 영양	7	가임기연령의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다양성 확보 여부	○
	8	먹거리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	취약인구 관리
	9	지역사회 내 영양 풍부 로컬푸드기반 Food Basket제공 비용	예산규모
	10	육류의 1일 섭취량	○
	11	당뇨병 환자 수	○
	12	5세 미만 어린이의 기절(stunting) 위험	개념재정의
	13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의 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	○
	14	지속가능한식단을 장려하기 위해 실행하는 지원 활동 건수	○
	15	특정 그룹의 설탕/소금/지방 소비 다루는 정책/프로그램 존재 여부	○
	16	공공시설의 영양 풍부 다양한 먹거리 이용촉진 프로그램/정책 여부	○
	17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
사회자본 경제자본	18	먹거리 불안정 경험 척도(FIES)에 근거한 식량 불안정 가구의 비율	○
	19	식량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의 비율	○
	20	학교급식 프로그램 혜택 받는 아동 및 청소년(18세 미만)의 비율	○
	21	최저 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먹거리 관련 일자리의 수	○
	22	도시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자산의 수	○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정책 및 목표의 존재 여부	○
	24	푸드시스템/영양프로그램 등 분야의 취업훈련/기술개발 기회 수준	○
먹거리 생산	25	(도시)농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의 수	○
	26	지역에서 농업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는 정책과 규정의 존재 여부	○
	27	지역 내 잠재적인 농업 공간의 면적	○
	28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농촌 인구의 수	×
	29	지속가능한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비율	×
	30	지난 12개월 간 기술훈련 및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먹거리 생산자 수	○
	31	지역먹거리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가공/유통기반 시설 수	×
	32	지역의 공공시장에서 먹거리는 판매하는 지역 내 생산자의 비율	×
	33	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업생산에 재사용되는 유기 폐기물의 비율(연간)	△
먹거리 공급 분배	34	먹거리 공급체계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한 정책/프로그램 여부	단계적 적용
	35	지역먹거리 공급물류탄력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계획 존재 여부	○
	36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민 1,000명 당 신선한 과일 및 채소 공급량	○
	37	도시 거주자 신선음식제공 농식품시장/소매점 연간 재정투자 비율	○
	38	근거리 유통의 먹거리에 대한 공공 기관의 식품 조달 지출 비율	개념 재정의

실행부문	세부지표		비고
	39	식품 안전 법규 및 시행 절차의 존재 여부	○
	40	먹거리 사업계획/재정투자 민간지원서비스(푸드통합지원센터)개념	○
음식물 폐기물	41	연간 총 음식물 손실 및 낭비량	○
	42	먹거리 손실 및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캠페인 건수(연간)	○
	43	음식물 쓰레기 절감, 자원화를 다루는 정책 또는 규정의 존재 여부	○
	44	회수되고 재분배되는 잉여 식품의 연간 총량	○

* 자료 :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onitoring Framework (2018).

표 3-5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의 먹거리 정책 실행 프레임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효과적인 실행가능 여건보장 (거버넌스) (6개항)	지방정부 내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을 촉진	추진 체계
	2. 지역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	
	3. 지역정책과 시민사회 푸드계획 수립 및 평가 확인	
	4. 지역 푸드정책 · 계획의 개발수정과 전략적 역량 구축	
	5. 푸드시스템 자료변환 위한 다중정보시스템 개발 증진	
	6. 푸드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재해위험 감소전략 개발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7개항)	7. 지속가능한 식생활(건강, 안전, 환경, 문화, 권리)의 홍보	식생활 영양
	8. 불량한 식생활 및 비만관련 비전염질환 해결 착수	
	9. 푸드관련 주체를 위한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	
	10. 지속가능 식생활 안전식수 위한 기준과 규정 적용	
	11. 캠페인 수행 자발적이고 규제력 있는 기구의 검토	
	12. 사람중심 전략 시행 건강 · 푸드분야 공동행동 장려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6개항)	13. 안전식수 공중위생의 보편적 접근 위한 적절한 투자	접근성
	14. 취약계층 건강푸드 접근을 위한 현금지원과 푸드 공급	
	15. 학교급식 프로그램 단체급식 서비스의 방향 전환	
	16. 푸드 · 농업부문 노동환경 개선, 양질 일자리 촉진	
	17. 소외계층, 도시농촌 푸드관련 사회적 연대활동 장려	
	18. 푸드 네트워크 촉진과 풀뿌리 사업과 활동의 지원	
먹거리 생산 (7개항)	19. 지역활동 강화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조사 촉진	생산 가공
	20. 도시재생계획 통해 도시와 근교지역 농업을 통합	
	21. 도시와 인근 농촌의 푸드생산 · 가공·유통 추구	
	22.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관리 위한 생태계접근법 지원	
먹거리 생산	23. 지속가능 푸드생산 위해 토지접근과 사용권 안정 보호	생산 가공
	24. 도시주변 생산자에게 실행가능한 서비스 제공 지원	
	25. 도시-농촌 짧은 체인,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등 지원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7개항)	26. 물(폐기물) 관리개선으로 농업 · 푸드식품생산 재사용	
먹거리 공급과 유통 (7개항)	27. 적절한 푸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푸드의 흐름을 평가	공급 유통
	28. 푸드의 저장 · 가공 · 수송 · 유통의 개선된 기술 지원	
	29. 지역푸드 법률 · 규정에 의해 푸드제어시스템 평가 강화	
	30. 모든 푸드의 권리실현 위해 공공조달 가능성 활용	
	31. 지자체 공공시장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제공	
	32. 지속가능 생계보장 시장 인프라의 지원 확대 · 개선	
	33. 비공식 부문의 기여를 인정 적절한 지원 교육제공	
먹거리 폐기물 (4개항)	34. 푸드손실 폐기물 감소 평가 · 모니터 활동가의 소집	재활용
	35. 특정대상 목표의 푸드손실과 낭비 인식 제고 활동	
	36. 연구조사 · 교육 · 커뮤니티 조직 등 민간부문과 협력	
	37. 안전 · 영양 푸드소비의 회복과 재분배 용이 푸드 보전	

* 자료 :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2015); 황영모 외(2015)에서 재인용

4. 먹거리 전략 모니터링 지표 틀 적용사례

(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Indicator Framework) 적용 사례²⁴⁾

□ 7개 지역(도시) 시범 적용, 대상과 단계

- FAO와 RUAF Foundation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과 민간재단(다니엘과 니나 카라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7개 도시에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함
 - 7개 도시 :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 잠비아 루사카와 키웨(Lusaka and Kitwe), 콜롬비아 메들린(Medellín), 에콰도르 키토(Quito), 캐나다 토론토(Toronto), 네덜란드 유트레흐트(Utrecht)
- 지역먹거리 체계 지표 틀(CRFS) 평가와 계획은 시작 단계부터 정책 검토와 계획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며, 평가를 통한 진단을 거쳐 새로운 먹거리 정책, 전략과 기획, 네트워크 및 먹거리 거버넌스 형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였음
- 지역먹거리 체계 지표 틀(CRFS) 평가계획의 추진단계
 - ① 준비 단계(Getting Prepared) : CRFS 기획 팀과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 태스크포스가 함께 논의하여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을 수립하며, 베이스라인 정보의 가능 출처 등을 확인
 - ② CRFS 정의 단계(Defining the CRFS) : 폭넓은 범위의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해 도시 지역의 범위와 먹거리 체계를 규정하는 단계. 자연 및 행정 구역의 범위와 먹거리의 생산 및 공급 범위 등을 정함
 - ③ 비전 설정 단계(Visioning)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지역먹거리 체계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설정
 - ④ CRFS 확인 단계(CRFS Scan) : 현행 먹거리 체계의 구조, 특징과 기능 등을 분석하고 자료의 부족과 격차를 확인하며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식별

24) Dubbeling and Santini (2018)을 발췌, 요약

- ⑤ CRFS 평가 단계(CRFS Assessment) : 스캔 단계에서 식별된 자료 격차, 혁신 제약 및 도전 과제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 영역의 선별, 심층 평가를 진행. CRFS 지표 틀 활용
- ⑥ 정책 지원 및 계획 단계(Policy Support and Planning) : CRFS 과정의 최종 목표인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의 고도화·진전 또는 전략 계획의 수립 단계
- ⑦ 거버넌스(Governance) :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굴하거나 먹거리 체계 행위자의 새로운 참여 촉진은 정책의 효과를 위한 우선순위

그림 3-3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CRFS) 평가와 계획 추진단계



* 자료 : Carey and Dubbeling (2017),

□ 7개 지역(도시) 시범 적용, 결과와 성과

- (정책권고)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과 실행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개선할 점에 대해 정책적 권고를 작성함
 - 시범 사업 적용 각 지역별 분석에 기반 하여 서로 다른 정책 수단 등의 권고를 작성
 - 토론토 : CRFS 과정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단일하고 일관된 먹거리 정책 활동을 작성하지는 못했으나, 먹거리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무분별한 성장 계획을 억제하고 농지와 녹지 공간 보호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급 보장 방향을 제시함
 - 키토 : 영역 기반 먹거리 전략(territorial food strategy)의 설계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안)이 작성되었고, 먹거리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음
 - 메들린 : 농촌 지역으로부터 먹거리 생산 증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농민시장을 ‘먹거리 거점(food hub)’으로 개조하여 건립할 것

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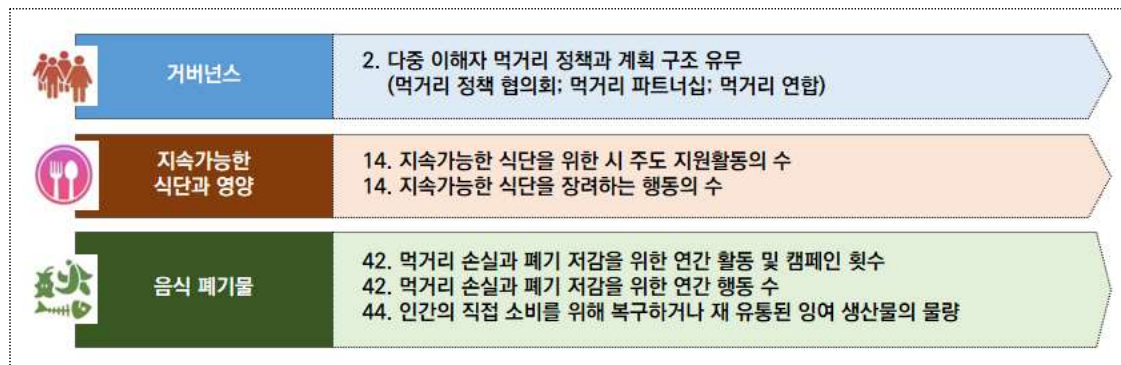
- (정책통합)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연계해 나갈 정책수단을 실제로 통합하여 추진함
 - 키웨, 루사카 : CRFS 과정을 통해 잠비아 국가 도시 정책(National Zambia Urban Policy)에 먹거리 정책을 통합할 것을 추진하기로 함
 - 유트레흐트 : 건강한 도시 생활 정책(Healthy Urban Living Policy)에 먹거리를 포함하기로 함
 - 콜롬보 : CRFS 팀에서 새롭게 구성된 메가폴리스와 서부 개발부(Ministry of Megapolis and Western Development)의 추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도시 정책 과정에 통합할 것을 권고함
- (추진체계) 지역단위 먹거리 정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마련함
 - 메들린 : CRFS 평가에 따라 먹거리 공급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논의함
 - 유트레흐트 : 시 당국, 유트레흐트 대학, 경제위원회, 지역 라보은행 등이 참여하는 지역먹거리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되었음
- (시범사업 시사점) 지역사회의 먹거리 관련 제 주체가 먹거리에 관한 수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도시 이해관계자가 먹거리와 교통(도시 교통의 대부분이 먹거리와 관련됨), 건강(영양실조, 비만, 학교급식), 농업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다양한 기타 부문 정책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CRFS 접근 방식은 도시의 먹거리 보장이 농촌 생산 지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먹거리 체계가 도시 지역의 도시 및 농촌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해는 지방정부(시 정부)가 먹거리를 다른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의 동인(動因)으로 보는 데 기여하였음

(2)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MUFPP Monitoring Framework) 적용 사례

□ 사례지역(키토市)에서 먹거리 전략 ‘우선 지표’를 선정한 이유

- 키토(Quito)시는 농식품 및 먹거리 전략의 이행에 사회적 가치와 실행력을 더하기 위해 먹거리 전략 실행에 필요한 ‘우선 지표’를 선정하고자 모니터링틀을 적용하였음
- MUFPP는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의제들이며, 그동안 키토시가 다뤄보지 않은 먹거리 문제 개선을 위한 이슈들의 시작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다른 지표들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의 건강과 먹거리를 연계하는 민감한 성격과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거버넌스 참여 대상이 다중이해자 플랫폼(키토 농식품 협약, PAQ)의 민감한 주제이므로 이미 여러 행위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또는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수행된 작업을 강화하고 가시적으로 만들

그림 3-4 키토 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 선정



* 자료 : MUFPP Monitoring Framework Pilot Cities Project : Quito Case Study Presentatio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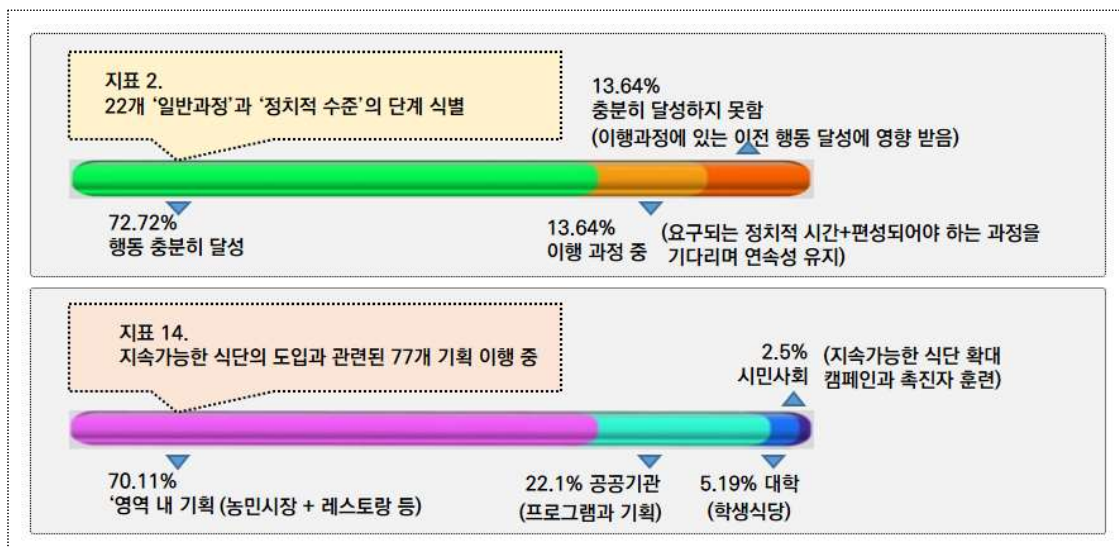
□ 키토시의 지역먹거리 전략 ‘우선 지표’에 관련한 자료 활용

- 키토시에서 MUFPP 모니터링 틀의 적용은 자료를 획득하면서 지표의 개념적 정의 과정이 병행되었음
- ‘지속가능 식단’과 연관한 용어(개념)인 ‘먹거리 환경 또는 폐기’의 정치 윤리적인 이해가 있었으며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키토시의 지리적 여건(맥락)에 맞게 조정함
- MUFPP 모니터링 틀 지표의 시범 대상지로서 변화의 궤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를 통해 지식의 생성과 실천의 변화가 나타났음

- 양적 지표를 위해 ‘하위 지표 또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다양한 규모에서 따라야 할 기준 또는 단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등’ 범주를 설정함
-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단과 음식폐기물에 관련한 국가 및 지자체의 개입이 충분치 않음을 확인함
-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매일 어떻게 실천(대응)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주체들의 지식과 우선과제, 자각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도출함
- 모니터링 틀을 적용하는데 있어 ‘정책(사업)’으로 실행되었으나 기록되지 않은 기획들로 인해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한계와 제약이 있음을 확인함
- 항상 이용 가능한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유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료의 격차(공백)에 집중하여 자료를 생성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확인함

그림 3-5 키토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 자료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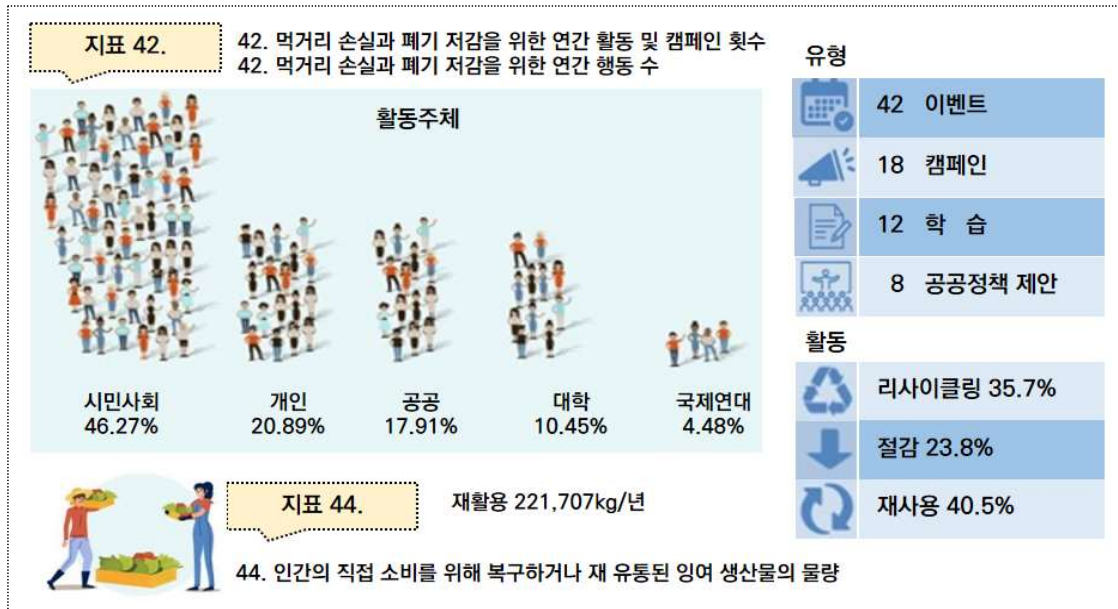
* 자료 : MUFPP Monitoring Framework Pilot Cities Project : Quito Case Study Presentation (2019).

□ 키토시의 지역먹거리 전략 ‘우선 지표’를 활용한 이벤트와 주요활동

- 키토시는 MUFPP 모니터링 틀 중 ‘우선 지표’를 정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의 주요 주체(시민사회·개인·공공·대학 등)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들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조직하였음

- 이벤트, 캠페인, 학습, 공공정책 수립 등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였는데, 음식 폐기물을 재활용, 저감, 재사용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도 활동의 결과로 도출·마련하였음

그림 3-6 키토시의 MUFPP 모니터링 틀 우선 지표를 활용한 이벤트와 주요활동



* 자료 : MUFPP Monitoring Framework Pilot Cities Project : Quito Case Study Presentation (2019).

(3) 유럽문제 해결형 리빙랩 FUSILLI²⁵⁾ 사례

- 유럽은 혁신적인 리빙랩²⁶⁾ 방식으로 도시 수준에서 먹거리 체계 전환을 촉진하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음
- (배경·과정) 지속가능한 도시 수준의 먹거리 체계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사회혁신 실험 프로그램을 기획
 - EU 최대 규모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Horizon 2020)의 재원으로 도시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함
 - Horizon 2020은 ‘먹거리,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을 주요 부문으로 정하

25) Fostering the Urban Food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Innovative Living Labs Implementation

26) 리빙랩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과학, 정책, 산업, 사회 등 서로 다른 부문이 협력할 때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 리빙랩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의 장소임. 그러나 그들은 멸균되고 고립된 연구실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가 살아있는 연구실의 주제와 상호 작용하는 실제 세계에 존재, 예를 들어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시설/기관에 리빙랩을 설치

고 있는데,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먹거리 체계의 실험 연구를 진행함

- 지역먹거리 전략에 대한 실험연구는 12개 도시에서 12개의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실행 중임 (주요도시 : Oslo, Tampere, Koloing, Kharkiv, Nilufer-Bursa, Athens, Rome, Rijeka, Turin, Differdange, San Sebastian, Castelo Branco)

그림 3-7 FUSILLI 리빙랩 실행 대상 12개 도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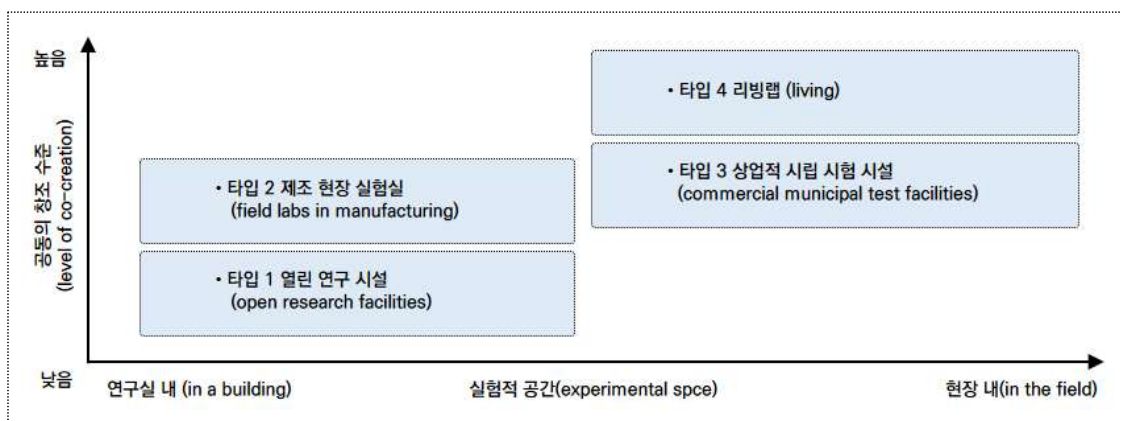


* 자료 : FUSILLI Evaluation Research Innovation Action (2021).

- (추진목적) 실행 및 복제 가능한 수준에서 도시 먹거리 계획을 개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먹거리 체계를 위한

그림 3-8 리빙랩의 유형 구분



* 자료 : FUSILLI Evaluation Research Innovation Action (2021).

통합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먹거리 계획을 개발함

- 리빙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시는 EU ‘FOOD 2030’ 정책의 4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먹거리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서 개선을 추구하며, 실행 가능하고 복제 가능한 혁신적인 도시 정책을 구현하는 다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FOOD 2030’의 4가지 우선순위 : ①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단과 영양, ②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③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먹거리 체계, ④지역사회(커뮤니티의) 혁신과 권한 부여 등

□ (지표구성) MUFPP 실행전략 지표 기반으로 6개 부문, 69개 핵심 성과지표 작성

- ① 먹거리 거버넌스(6개) : 거버넌스 혁신행동에 관한 영역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연계, 먹거리 정책 수립, 다 부문 접근-에너지·도시계획·건강’ 등이 세부내용
- ② 지속가능한 식단·영양(13개) : 소비자의 혁신행동에 관한 영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인식 제고, 소비자 행동 변화 촉진, 사회적 포용 증진, 먹거리 접근 개선’ 등이 세부내용
- ③ 사회·경제자본(12개) :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세부내용
- ④ 먹거리 생산(13개) : 생산 및 가공의 혁신행동에 관한 영역으로 ‘도시농업 및 영농활동, 지역먹거리 확대, 취약계층의 통합’ 등이 세부내용
- ⑤ 먹거리 공급·분배(15개) : 분배의 혁신행동에 관한 영역으로 ‘새로운 짧은 먹거리 가치사슬, 관행 유통경로에 대한 새로운 대안, 공공조달(공공급식+먹거리 접근성 등)’

표 3-6 ‘유럽 문제 해결형 리빙랩(FUSILLI) 사례’ 성과지표

성과지표	키워드	주요내용
먹거리 거버넌스 (6개)	거버넌스 혁신행동	· 먹거리 거버넌스 연계, 먹거리 정책 수립, 다부문 접근-에너지·도시계획·건강 등
지속가능한 식단·영양 (13개)	소비자 혁신행동	·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인식 제고, 소비자 행동 변화 촉진, 사회적 포용 증진, 먹거리 접근 개선 등
사회·경제자본 (12개)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	
먹거리 생산 (13개)	생산 +가공 혁신 행동	· 도시농업 및 영농활동, 지역먹거리의 확대, 취약한 집단의 통합과 융합
먹거리 공급·분배 (15개)	분배 혁신 행동	· 새로운 짧은 먹거리 가치사슬, 관행 유통경로에 대한 새로운 대안, 공공조달(공공급식+먹거리 접근성 등)
음식폐기물 (4개)	폐기 혁신 행동	· 음식 폐기물 저감(감축), 버려지는 먹거리의 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지원

* 자료 : FUSILLI Evaluation Research Innovation Actio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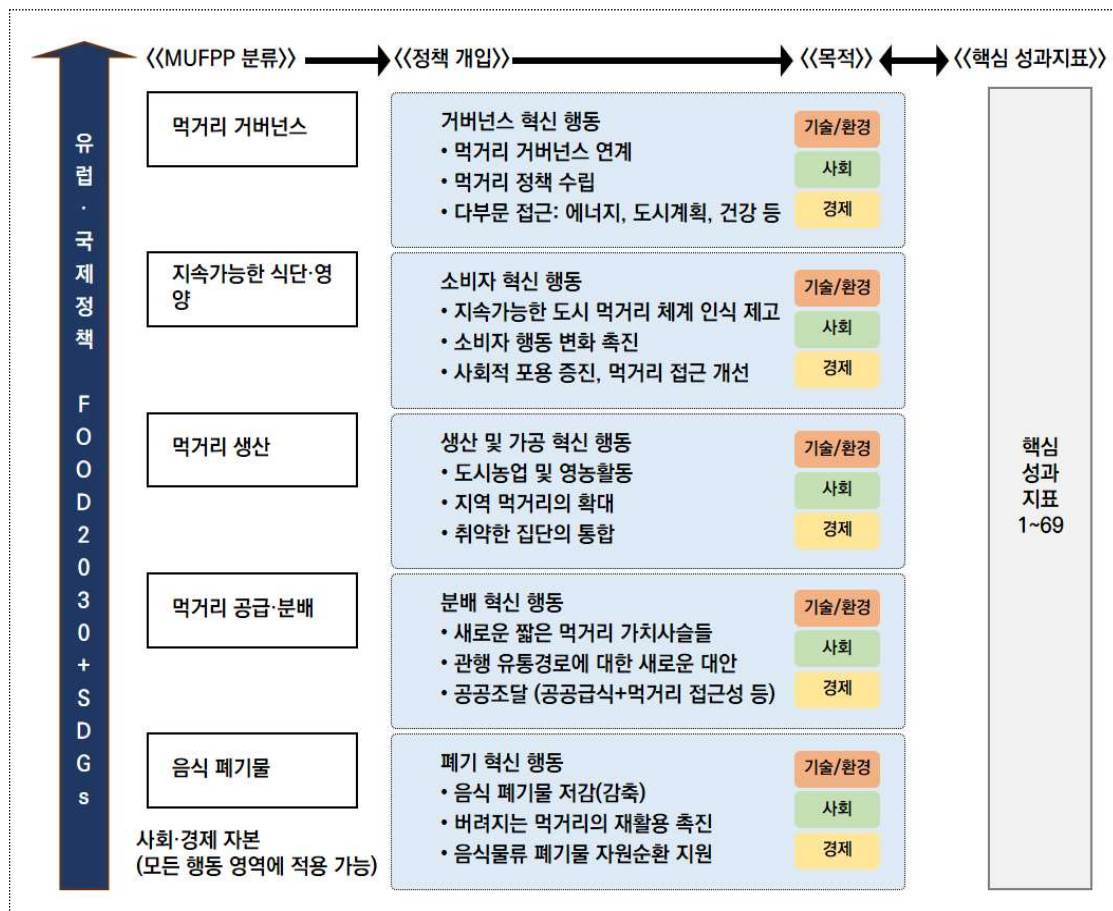
등이 세부내용

- ⑥ 음식폐기물(4개) : 음식물류 폐기 혁신행동에 관한 영역으로 ‘음식 폐기물 저감·감축, 버려지는 먹거리 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지원’ 등이 세부내용

□ (연계구조) FOOD 2030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연계한 정책 개입과 핵심 성과지표 관리

- 먹거리 체계 혁신 리빙랩을 통해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동시에 유럽 차원의 ‘FOOD 2030 전략’은 물론 국제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
- MUFPP의 6개 영역과 연계한 5개의 정책 개입 영역(거버넌스 혁신 행동, 소비자 혁신 행동, 생산 및 가공 혁신 행동, 분배 혁신행동, 폐기 혁신 행동, 모든 행동 영역에 적용 가능한 사회·경제 자본의 활성화)별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함

그림 3-9 FUSILLI 정책 개입과 성과지표의 연계



* 자료 : FUSILLI Evaluation Framework (2021).

표 3-7 FUSILLI 핵심 성과 지표

부문	핵심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s)	
먹거리 거버넌스	1	먹거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자문과 결정을 위해 활동 중인 시 당국 기구의 존재 여부
	2	활동 중인 다중 이해관계자 먹거리 정책 및 계획 체계(구조)의 존재 여부
	3	도시 먹거리 정책 혹은 전략 또는/혹은 실행계획의 존재 여부
	4	도시 먹거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확장 지도 지역먹거리 이니셔티브와 실행 목록의 존재 여부
	5	시 먹거리 정책의 수립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정보제공을 위한 도시 먹거리 체계 자료를 조합하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6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 준수 여부
지속가능 식단/영양	7	가임기 연령의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다양성 확보 여부
	8	가구 식단 다양성 점수 (Household Dietary Diversity Score; HDDS)*
	9	먹거리 사막 (food deserts)에 거주하는 가구 수
	10	도시/공동체 수준에서 영양가 있는 장바구니를 채우는 데 드는 비용
	11	성인, 청소년, 아동 중 과체중 혹은 비만 유병률
	12	지속가능한 식단을 장려하는 시 주도 혹은 시 지원 활동의 수
	13	공동체 기반 먹거리 활동(교육, 캠페인, 재배 등)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
	14	특정 그룹의 설탕/소금/지방 소비 다루는 정책/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15	공공시설의 영양 풍부 다양한 먹거리 이용촉진 프로그램/정책 여부
	16	서로 다른 연령과 소득 집단을 위한 건강한 식단 소비자 지식
	17	(1)고등교육, (2)직업훈련 내 건강+지속가능성 포함 종합 먹거리 체계 측면 먹거리 교육과정 수
	18	다양한 집단에서 건강한 식단/안전한 먹거리/먹거리 소비의 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19	건강한 식생활 지수 (Healthy eating index; HEI)**
사회경제적 형평성	20	먹거리 미보장 경험 척도(FIES)***상 먹거리 미보장가구 비율(%)
	21	먹거리 또는/혹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인구의 비율(%)
	22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아동 혹은 청소년(18세 미만) 비율(%)
	23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도시 먹거리 체계 관련 공식 일자리의 수
	24	지역먹거리 체계의 성장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일자리 수
	25	도시 지역먹거리 체계에 존재하는 일자리 수(부문별 수와 성평등 측면 고려)
	26	도시 체계의 모든 일자리 대비 도시 먹거리 체계 일자리 비중(인구 10만명 당)
	27	도시 내의 공동체 기반 먹거리 시설(food assets)의 수
	28	특별히 사회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 관련 정책의 존재 여부
	29	(1)먹거리 및 영양 이해력, (2)고용 교육, (3)리더십 등 관련 먹거리 체계 관련 배움/기술개발 기회
	30	지역먹거리와 비지역먹거리 생산물 혹은 상품의 가격 격차
	31	도시 지역먹거리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지불의사
먹거리 생산	32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 텃밭(정원)에 접근 가능한 시민의 수
	33	시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 생산 및 가공의 허용, 촉진과 관련된 지자체 정책·제도의 존재 여부

부문	핵심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s)	
	34	시 행정구역 내에 (잠재적) 농업 공간의 표면적
	35	시 행정구역 내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천되는 면적의 비율
	36	지난 12개월 동안 기술 훈련·지원의 혜택을 받은 도시/도시근교 생산자의 수
	37	시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자들이 이용 가능한 먹거리 가공 및 분배 시설(인프라)의 수
	38	도시 공공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한 먹거리 생산자의 비율
	39	시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생산에 재활용된 유기 폐기물의 연간 비율
	40	도시 지역 내의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수; 저소득 거주지역의 수
	41	도시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의 물량과 시장 가치
	42	시장 유형(예를 들면 농민시장, 공공시장 등)별로 도시 내에서 연간 판매된 로컬푸드물량
	43	도시 지역먹거리 생산자가 이용 가능한 시장의 유형(예를 들면 농민시장, 공공시장 등)
	44	도시 지역에서 추진되는 농업보전/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의 수
먹거리 분배	45	먹거리 공급 사슬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정책/프로그램 수
	46	지역먹거리 공급 사슬 물류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획의 존재 여부
	47	지자체가 지원하는 신선 과일·채소 매장의 수(주민 1천명 당)
	48	(시장/소매/케이터링 통해)도시에서 소비자 직거래(CSA, 꾸러미 등) 참여 농장의 수/비중(%)
	49	도시거주자에게 신선 먹거리 제공 시장/소매점 대상 연간 지자체 예산 투자 비중(전체 예산 대비)
	50	지속가능한/윤리적 생산자 및 짧은공급사슬 생산자부터 먹거리 구매하는 공공조달 지출의 비중
	51	식품안전 제도 및 기준의 적용/강제 과정의 존재 여부
	52	소비자 재배·가공·판매 먹거리 정보 제공받을 투명하고 이력추적 가능 체계(친환경 라벨 등) 수
	53	비공식 식품 부문에 대해 사업 계획, 금융 및 개발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의 존재 여부
	54	도시 지역먹거리 체계 내의 먹거리 기업 수(인구 10만명 당)
	55	도시 지역먹거리 체계 내의 먹거리 기업 유형의 수
	56	소득 경로 다양성 증진 기여 먹거리 기업 수(농촌/먹거리 관광, 먹거리 가치 부가, 교육, 훈련 등)
	57	도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브랜드 및 라벨의 수(예를 들면 로컬푸드브랜드/라벨)
	58	도시 지역먹거리 공급 사슬을 지원하는 시설(인프라)(예를 들면 도매시장, 창고형 매장, 새로운 식료품 매장 등)의 존재 여부
	59	도시 지역먹거리 공급 사슬 개발 지원 서비스 여부(생산발전,운송/물류,마케팅지원,인증제등)
음식 폐기물	60	연간 먹거리 손실 및 폐기(loss & waste) 물량
	61	먹거리의손실 및 폐기 저감을 위한 연간 행사 및 캠페인 수
	62	음식 폐기 방지, 재활용 및 재분배를 위한 정책 혹은 제도의 존재 여부
	63	사람의 직접 소비를 위해 연간 재활용 혹은 재분배된 잉여 농산물(먹거리) 물량
추가 지표	64	먹거리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시당국(지자체)의 먹거리 공급 비상사태/먹거리 회복력 관리 계획의 존재 여부(재난, 먹거리 생산/운송/접근의 불안정, 사회경제적 쇼크 등에 대응하는)
	65	1일 1인당 육류 소비의 양
	66	제2형 당뇨 성인의 수
	67	5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 유병률

부문	핵심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s)	
	68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69	시 행정구역 내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 농업인구의 비율(남녀 구분)

주(*) : 가구 식단 다양성 점수(HDDS)는 다양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 이 지표의 데이터는 지난 24시간 동안 소비한 12가지 식품군에 대한 가정의 자체 보고를 기반으로 한다. Food and Nutrition Technical Assistance (FANTA)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다.

(**) : 건강한 식생활 지수(HEI)는 1995년 미국 농무부(USDA)에서 개발한 지표로 식단과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들의 질을 평가함. 가장 최근의 지표는 2020년 수정된 지표.

(***) : 먹거리 미보장 경험 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는 가구 혹은 개인의 먹거리 보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8개의 먹거리 접근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된 모듈은 여러 인구 조사에 포함할 수 있음.

* 자료 : FUSILLI Evaluation Framework (2021).

(4) 지방정부 계획과 모니터링 지표 사례 (뉴욕시)

□ 뉴욕시 지역먹거리계획과 먹거리 지표 개요

- (배경과 과정) 뉴욕의 먹거리 정책은 2005년 이후 시작되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지표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2011년 의회의 Food Works에서 시작됨
 - 의회는 관련 부서(건강정신위생부, 도시계획부, 교육부)의 먹거리 통계 등 지표를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을 평가하도록 입법
- (전략구성) 19개 카테고리 37개 지표로 구성된 Food Metrics에 따라 뉴욕시는 매년 먹거리 지표 보고서(Food Metrics Report) 발간하고 있음
 - 5개 부문(영양 웰빙, 식량안보, 지역경제 발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먹거리 노동자)의 37개 세부지표로 구성
 - 2012년~2017년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영양 웰빙과 식량안보는 뚜렷한 개선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지표 개수 중 19개 51% 개선)
- (전략개편) 뉴욕시의 먹거리 정책을 ‘식량안보, 공공조달,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체계’ 등 4개 부문으로 수정 조정하여 개편함
 - 최근에는 먹거리 미보장(불안정 인구, SNAP 지원 인구 등), 먹거리 조달 및 서비스(학교 및 공공급식 등), 먹거리 접근(과일·채소 소비, 식생활교육 등), 먹거리 체계(생태적 생산, 학교·공동체 텃밭, 식품제조업, 음식폐기물 등) 4개 부문으로 개편
 - 뉴욕시 먹거리 정책의 추진 과정
 - 2007년 당시 시장(블룸버그)에 의해 먹거리 정책 부서(Office of Food Policy) 신설
 - 2010년 시정부 보고서 FoodNYC: A Blueprint for a Sustainable Food System 발간
 - 2011년 시의회 보고서 FoodWorks: A Vision to Improve NYC’s Food System 발간

표 3-8 뉴욕시 먹거리 정책 목표와 평가지표 (2012~2017)

정책목표		전체 지표	개선 지표	악화 지표	변화없는 지표	자료없는 지표
1. 영양과 웰빙 개선 : 건강 증진, 식인성 질병 저감 정책		21	10	8	1	2
2. 먹거리 보장 : 먹거리의 양적·질적인 개선을 통한 굶주림과 먹거리 미보장 개선 정책		4	4	0	0	0
3. 지역경제와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먹거리 체계 구축 : 먹거리와 먹거리의 생산·분배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3	1	2	0	0
4.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보장 : 음식 폐기물 및 먹거리 관련된 오염과 탄소배출 저감, 농지 보전 정책		8	3	5	0	0
5. 먹거리 노동자 지원 : 먹거리 노동자의 적정 임금·혜택, 안전한 노동 환경, 조직화의 권리 보장		1	1	0	0	0
합계	n(%)	37	19(51%)	15(40%)	1(3%)	2(5%)

* 자료 : Freudenberg, Willingham and Cohen (2018)

- 2012년부터 매년 Food Metrics Report 발간 (2011년 통과된 Local Law 52에 근거)
- 2021년 첫번째 10년 계획 Food Forward NYC: A 10-Year Food Policy Plan 발간
- 2023년 10년 계획 2년 중간점검 보고서 Food Forward NYC: 2-Year Progress Report 발간

□ 뉴욕시 먹거리 거버넌스의 변천

- 2007년 뉴욕시²⁷⁾ 시장실 산하에 먹거리 정책 조정관(Food Policy Coordinator) 신설하였고, 같은 해 뉴욕주(州)도 먹거리 정책 협의회(Food Policy Council)를 설치함
- 뉴욕시 자체의 먹거리 거버넌스 부재에 대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 (2018년 뉴욕시립대 도시 먹거리 정책 연구소)
- 2021년 Food Forward NYC 보고서에 뉴욕시 지역먹거리 작업반(NYC Regional Food Working Group) 공식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보장을 권고함
 - Food Forward NYC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이와 같은 작업반의 형태로 전문가와 시민 사회가 참여

□ 뉴욕시 먹거리 정책의 모니터링

27) 뉴욕시는 뉴욕주 내의 5개 도시 구역, 맨해튼/브루클린/퀸스/브롱스/스태튼 아일랜드)을 포괄하는 행정구역

- Food Forward NYC(2022~2031)의 전략 중 ‘먹거리 체계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체계화하였음
- 아직 현실과 (수집·분석 가능한)자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Food Metrics Report를 통해 수집 가능한 새로운 지표(특히 먹거리 미보장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자료 격차 문제를 개선하며 이에 근거한 먹거리 정책을 발굴 하고 있음

□ 먹거리 계획의 평가와 개선

- Food Metrics Report는 매년 지표를 통해 먹거리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역할로 기능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10년 장기 계획인 Food Forward NYC의 평가와 개선을 위해 2년 단위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그 첫 번째 중간평가 보고서가 2023년 7월 발행된 ‘2-Year Progress Report’ 임
- 정책 과제별로 진전의 정도를 3단계(눈에 띄는 진전-약간의 진전-진전 없음)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음

표 3-9 뉴욕시 먹거리 계획(Food Forward NYC), 5대 목표와 중점과제

구분	5대 목표와 목표별과제	
목표 1	모든 뉴욕 주민들은 건강하고, 적정가격의,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거의 160만 명의 뉴욕 주민(5명 중 1명)이 먹거리 미보장에 직면해 있다. 모든 뉴욕 주민은 학교, 지역 식료품점, 잡화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온라인 음식 배달 등 건강에 좋고 저렴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혜택 확대
	B	먹거리를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
	C	뉴욕시가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재구성
목표 2	뉴욕시의 먹거리 경제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뉴욕시의 다양한 먹거리 체계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의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 시키려면 먹거리 노동자와 사업체 모두 더 나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먹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과 복리후생을 강화하며, 노동자 소유를 지원한다.
	B	규제 및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을 지원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지원한다.
	C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 다음 세대 먹거리 노동자를 양성한다.
목표 3	뉴욕시의 먹거리 공급망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회복력이 있다. 먹거리 정책 계획 성공의 기본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먹거리 유통 뿐 아니라 농업을 포함한 도시 자체의 먹거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적 연결/협력을 인정하고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도시의 먹거리 인프라 강화
	B	지역 내의 조율과 공급을 개선
	C	도시 농업의 확대 지원
목표 4	뉴욕시의 먹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유통, 폐기된다. 도시의 방대한 먹거리 체계는 지역 및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동물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계획이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려면 먹거리 생애주기(lifecycle)의 전 단계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단계에서 개입할 전략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략은 뉴욕시의 유색인종 공동체에 먹거리 체계가 가하는 불평등한 환경 영향을 다룬다. 이를 위한 전	

목표 5	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를 도시 먹거리 프로그램에 통합
	B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도시내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C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혁신을 촉진
목표 5	10개년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지식을 지원한다. 현 시점에서 시 정부의 내외에서 포괄적인 먹거리 정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은 일부분에만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먹거리 정책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부문 간 조정을 강화
	B	먹거리 체계에 관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

* 자료 : The City of New York Mayor Eric Adams (2021).

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추진체계 검토

(1) 먹거리 계획 시행에 있어 추진체계의 특성

□ (1축)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수직 축 : 다층적 거버넌스의 맥락

- 지역먹거리계획과 로컬푸드는 산업적 먹거리의 국제 공급망으로 발생해온 부작용에 대응한 대안적 활동으로 시작하였다고 평가되는데,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²⁸⁾으로 시작되어 광역 및 기초 행정단위의 정책과 제도로 나아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은 국가 수준에서의 식량안보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먹거리 정책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
- ‘국가적 식량안보’ 접근은 농산물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의 국민이 필요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급률 하락의 추세에 있는 식량 순수입국들의 수입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음
- 전문가들은 기존의 생산주의(증산 중심)와 공급망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주류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로 인해 시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에는 정책적·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Lawrence et al., 2013)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가 협력을 통해 국가의 정책 공백을 메워나가는 과정이며, 이런 측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밖에 없음 (Sonnino and Beynon, 2015)
-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함께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단체급식, 먹거리 돌봄 등의 시행을 위한 국가 정책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한 예로 꼽을 수 있음
-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는 국제 관계가 중심인 여건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방식으로 지구적 수준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었음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 등)

28) 느슨한 대안 먹거리 운동의 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 AFNs),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short food supply chain, SFSC) 등 다양한 정의 시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업적 먹거리 공급사슬을 지역 중심의 생산-소비를 민간 주체 또는 민간-행정의 협력으로 확대하려는 운동, 정책을 의미함

□ (2축)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수평 축 : 먹거리 거버넌스

- 지역에서의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순환적 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예산 수립의 주체인 지방정부뿐 아니라 먹거리 체계의 각 단계와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됨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체계의 핵심은 지역 내의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임
-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는 지역 내의 먹거리 이슈를 스스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주체이자 추진체계임

(2) 지역먹거리 정책 그룹의 부상

□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 주체로서 지역 정책 그룹과 지방정부의 부상

- 역내(region) 또는 국가별로 조건과 맥락이 다르지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먹거리 정책 그룹(local food policy groups, LFPGs)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 미국에서는 2014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주 수준(state level) 또는 그 하위의 지방정부의 먹거리(로컬푸드) 정책 관련 자율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형성됨
 - 영국에서도 중앙 정부의 정책 공백으로 나타나는 시민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이 형성됨
- 지방정부의 먹거리 정책 기획은 종종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물질적 접근성 증진, 음식폐기물 감소, 도시농업의 육성, 공적 먹거리 공급(특히 학교급식)과 먹거리 사업 지원을 포함함 (Filippini et al., 2019; Morley and Morgan, 2021)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지역)는 시민사회, 민간 행위자, 그리고 지방정부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먹거리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 (Moragues-Faus, 2020)
-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긴축의 시기 주변화된 자신의 주도성을 회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속에 지역먹거리계획 또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먹거리 정책 그룹의 형성은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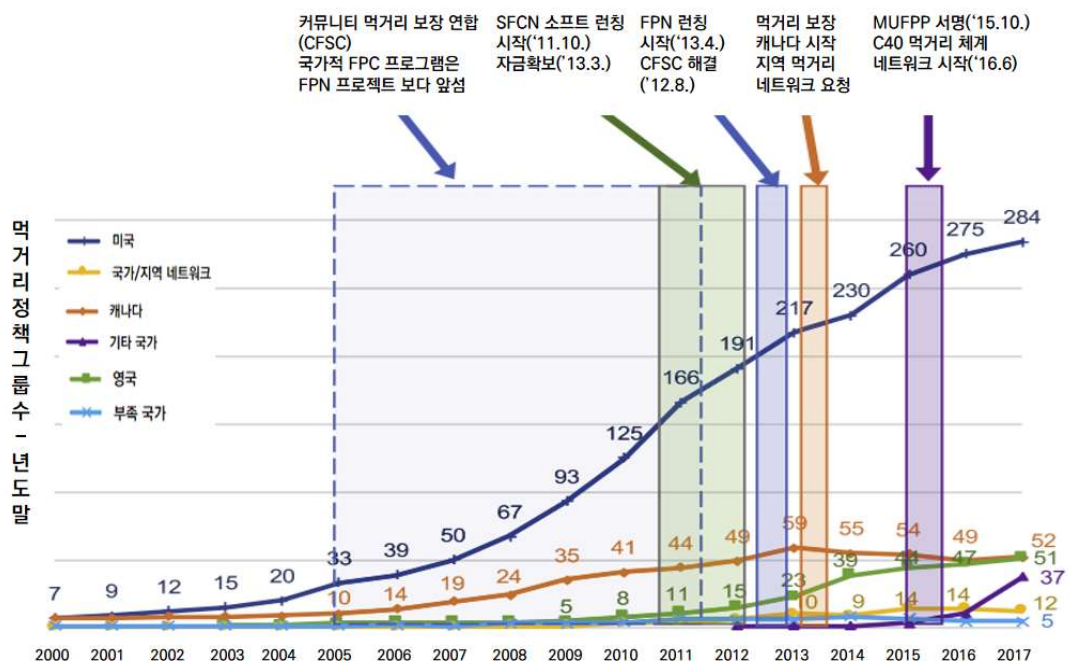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자 축이 되고 있음

- 지방정부(지자체와 지방의회)부터 시민사회(NGO, 지역주민 등), 민간 주체(지역기업과 농민 등)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체계의 주요 구성원을 결합해 먹거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음
-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미국의 ‘먹거리 정책협의회’(Food Policy Councils, FPCs)가 대표적인 사례임

□ 초지역(trans-local)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로의 확장

- 지역단위의 지역먹거리 정책 그룹은 다른 지역과 연계와 연대 등을 통해 연결망을 형성하는 흐름임 (Morgan and Santo, 2018)
 - 시(municipal) 또는 주 단위의 먹거리정책협의회 등 정책 그룹의 활동은 이후 이들 협의회들의 연결망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Food Policy Networks, FPN)가 추진되었고, 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Sustainable Food Cities Network, SFCN)가 2012년 시작되었음
 - 이들 정책 네트워크는 정보 교류, DB 구축,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이슈들에 대한 공동

그림 3-10 초지역먹거리 정책 그룹의 확산 추이



* 자료 : Santo and Moragues-Faus (2018).

세미나 조사·연구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음

- 먹거리 정책 그룹의 연결망 형성은 개별 국가 내부의 연결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범위의 연결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Santo and Moragues-Faus, 2019)
- 세계도시먹거리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UFPP)이나 C40 먹거리 체계 네트워크(C40 Food Systems Network), ICLEI-RUAF 도시먹거리 네트워크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지자체의 협력 연결망이 다수 형성됨
- ‘지역 내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 국가 내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 지구적 먹거리 정책 그룹 네트워크’ 등 다층적 연결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교류, 유사한 지향성의 확인, 정책의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 도구의 공유 등 다양한 협력 확대 등이 그것임

(3) 미국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과 추진체계 사례

□ 볼티모어市 먹거리 정책 구상(Baltimore Food Policy Initiative) 추진 과정

- 기존 지역 정책의 시행과 개별 부서의 노력 (2000~2009년)
 - 볼티모어 지역의 먹거리 문제에 관련된 분산적 시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 식료품점 유치(2000년 당시 시장의 2.5년 동안 17개 식료품점 유치 계획), 시의회 어린이 비만 TF 구성(2007년), 민간·자선단체 연합 어린이 비만 TF 구성 (2008년)
 - 볼티모어 시 개별 부서 차원에서 먹거리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 2000년대 들어 먹거리 미보장, 건강 불평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2009년 보건국은 영양정보에 관한 상(賞) 신설, 도시계획국은 2008년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농업 등의 정보가 담긴 지역코드 작성을 시작 (2013년 완료)
 - 공립학교 텃밭 교육 시작, 농부시장의 활성화, 푸드뱅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이어짐
- 시 먹거리 정책의 수요 조사 및 부서간 협력의 시작 (2007~2009년)
 - 2007년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존스 홉킨스 센터’ 등이 볼티모어 남서 지역사회 연합(community associations)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실태조사 실시
 - 이 조사를 통해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함(조사 식료품점 중 75%는 과일류 미판매, 68%는 채소류 미판매)
 - 이후 건강국과 도시계획국이 이해관계자 집단, 전문가 등과 함께 먹거리 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2008년 11월)하였고, 2009년 TF 보고서에 정책 권고가 담겨

발표됨

표 3-10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태스크포스의 정책 권고(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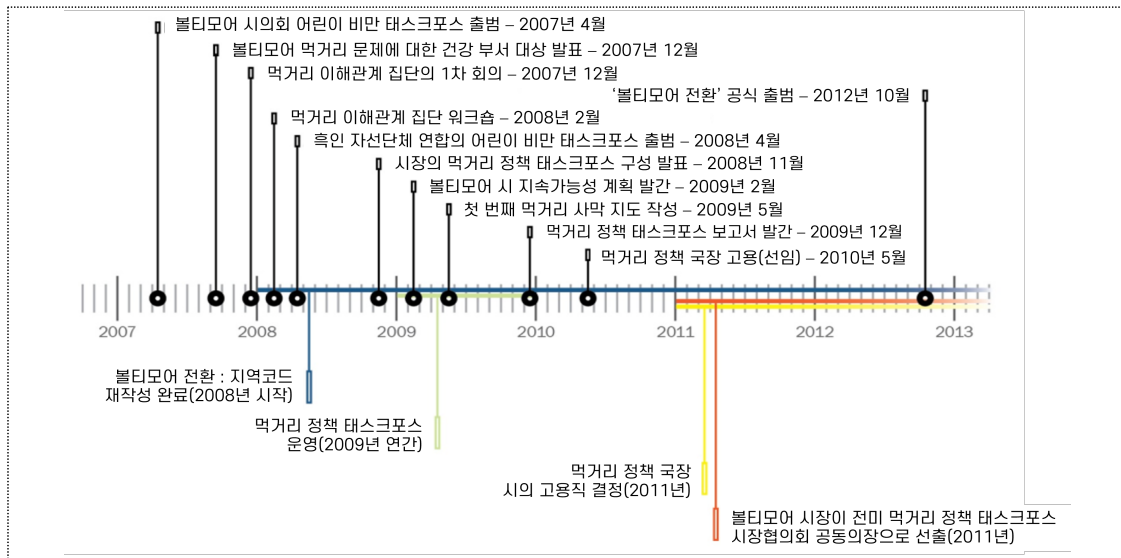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태스크포스의 정책 권고
1.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홍보하고 확대한다. 2. 지역사회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장려하고 확대한다. 3. 정책입안자와 함께 먹거리 사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위한 센트럴키친 모델을 지원한다. 5. 공동체 텃밭과 도시 농업을 지원한다. 6. 슈퍼마켓 배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7. 학교와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변의 먹거리 환경을 개선한다. 8. 건강한 먹거리의 길거리 판매를 지원한다. 9. 건강한 먹거리 구역의 요건이나 인센티브를 만든다. 10. 모든 볼티모어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타겟 마케팅 캠페인을 개발한다.

* 자료 : Baltimore City Food Policy Task Force(2009).

□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의 추진체계 구축 (2009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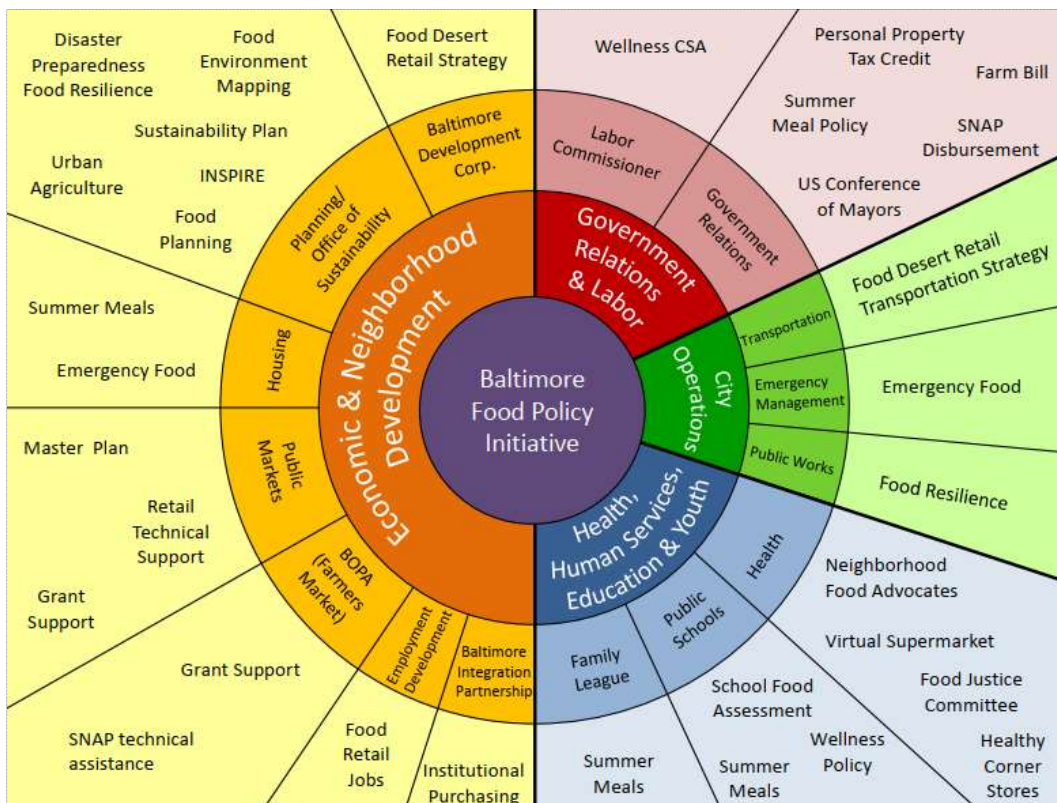
- 먹거리 정책국장 : 계약직(파트타임) 신분에서 고용직으로 전환
 -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의 변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먹거리 체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또 이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
 - 처음에는 TF의 모금을 통해 주 15시간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파트타임으로 시작(2010년)하였으나, 이후 시가 직접 고용하는 직위가 되었음
-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 (Baltimore Food Policy Initiative, BFPI)
 - 2010년 먹거리 정책국장이 도시계획국, 지속가능성 사무국, 볼티모어 발전공사, 건강국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내 협력기구 성격의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 추진
 - 목표는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접근을 통해 볼티모어 먹거리 사막 지역에 건강하고 적정 가격 수준의 먹거리 접근(거점)을 확대하는 것이었음
-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Baltimore Food Policy Advisory Committee, Food PAC)
 - 정책국장이 BFPI 내에 60개 이상의 조직을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였음
 - 이들은 영양, 굶주림, 먹거리 접근, 학교, 텃밭, 지속가능성, 도시농업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에 관련된 지역먹거리 체계 프로젝트를 추진함
 - 위원회의 목적은 다양한 먹거리 이슈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조직들 간의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그림 3-11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의 추진경과(타임라인)



* 자료 : Santo, Yong and Palmer (2014).

그림 3-12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 :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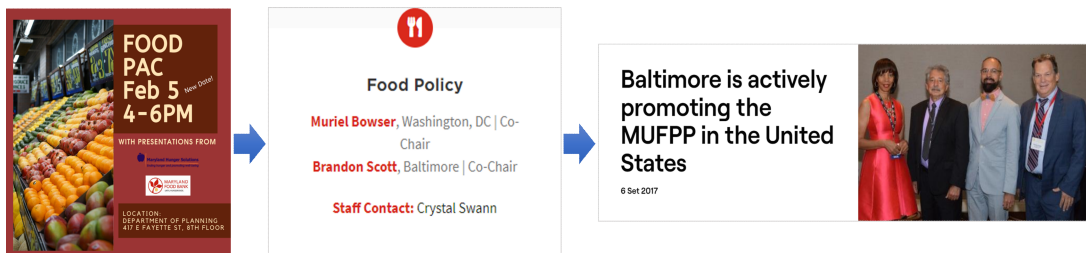


* 자료 : Baltimore Food Policy Director (2016).

□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구상의 초지역 네트워크 연계

- 지역먹거리 체계 이해관계자 집단의 연결망 : Baltimore Food PAC
 - BFPI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 이슈에 대응하는 자문위원회는 시 지역 내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 중요한 먹거리 이슈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먹거리 정책 경험의 국가적 연결망 : 전미(全美) 시장 컨퍼런스 먹거리 정책 TF
 - BFPI 사례는 전미 시장 컨퍼런스 내 먹거리 정책 TF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먹거리 정책 경험의 지구적 연결망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MUFPP)
 - BFPI의 다양한 사례가 MUFPP를 통해 공유되었지만 특히 먹거리 정책의 추진체계 측면에서 부각되었음
 - ‘개선된 영양을 위한 도시 먹거리 환경 형성을 위한 행동 메뉴에 ‘집단과 위원회’, 부서간(협력)위원회 사례로 볼티모어의 사례가 소개
 - 도시계획국, 건강국, 지속가능성 사무국, 볼티모어 발전 공사 등의 부서간+조직간 협력을 통해 먹거리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

그림 3-13 볼티모어 먹거리 정책 연결망의 국가적-지구적 확장



(4) 영국 ‘브리스톨’ 먹거리정책협의회 추진사례

□ 브리스톨 먹거리 정책 형성과 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 과정

-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먹거리 운동의 성장
 - 인구 약 46만명(2019년 기준) 도시인 브리스톨은 대영제국 주요 무역 거점으로 식민지와의 무역 관계가 중심이었다가 근래에는 항공우주 산업, IT 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로 기능하고 있음

- 역사적 배경에 따라 지구적 먹거리 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로서 200여개 이상의 시민 먹거리 활동,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음
- 2009년 브리스톨 먹거리 네트워크(Bristol Food Network, BFN)²⁹⁾이 창립되며 본격적인 아래로부터의 먹거리 정책 요구가 형성되기 시작했음
- 브리스톨 먹거리 네트워크(BFN)은 주요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활동함
 -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리하고, 스스로 재배하고, 더 신선하고 계절에 맞는 지역 유기농 먹거리를 먹도록 장려한다.
 - 지역의 독립 식품점 이용을 옹호한다.
 - 도시 내외의 양질의 토지를 먹거리 생산에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 음식물 쓰레기의 재분배, 재활용 및 퇴비화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 영양 교육 및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킨다.
 - 지역사회 주도의 먹거리 무역 촉진한다.

○ 먹거리 전략 및 행동계획의 구체화와 먹거리정책협의회의 구성

- 2009년 BFN에서 ‘브리스톨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작성(비공식 문서이지만 공공부문 먹거리 조달 지원 전략 제시)
- 2010년 시 의회에서 ‘먹거리 헌장’(Food Charter)을 채택하면서 의회와 먹거리 운동,

표 3-11 브리스톨 먹거리 정책 발전 과정

연도	먹거리 정책 진전 내용
2010	브리스톨 시 의회 먹거리 헌장(Food Charter) 채택
2011	먹거리정책협의회 『누가 브리스톨의 먹거리를 생산하나?』(Who Feeds Bristol?) 발행
2013	『좋은 먹거리 계획』 발간
2015	지속가능한 먹거리 장소(Sustainable Food Places) 은상 수상
2018	브리스톨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 선언
2019	『하나의 도시 계획』(One City Plan) 수립
2020	기후 전략(Climate Strategy) 및 생태 비상 전략(Ecological Emergency Strategy) 수립
2021	지속가능한 먹거리 장소(Sustainable Food Places) 금상 수상
2022	먹거리 평등 전략(Food Equality Strategy) 수립
2022-2030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 수립

* 자료 : King and Sanderson-Bellamy (2023).

29) 2014년에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등록하였음. 2004년 영국 정부가 도입한 법인 형태로 자금조달 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자산동결로 인하여 이윤이 사내에 유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법적 조직 (강정혜, 2014).

정책 집단의 소통에 중대한 진전을 이룸

- 2011년 지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의뢰를 받은 먹거리 활동가가 집필한 ‘누가 브리스톨의 먹거리를 생산하는가?’(Who Feeds Bristol?)가 발간되면서 먹거리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었음
- 2011년 ‘브리스톨 먹거리정책협의회’(Bristol Food Policy Council, BFPC)가 구성되면서 네트워크 내의 소통이 강화되었음
- 이후 BFPC를 중심으로 좋은 먹거리 및 기후 등과 관련된 전략 수립이 추진되었음

□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의 접근: 거버넌스, 좋은 실천, 모니터링과 평가

- BFPC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로 첫째 장기 계획인 ‘브리스톨을 위한 하나의 도시 먹거리 평등 전략 2022-2032’ 수립(Bristol One City, 2022)
- 2023년에는 ‘브리스톨을 위한 하나의 도시 먹거리 평등 행동계획 2023-2026’을 수립하고(Bristol One City, 2023),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 먹거리에 관한 행동을 위한 틀’을 발간하며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음

그림 3-14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 행동계획의 주요 부문



* 자료 : Bristol Good Food 2030 홈페이지. <https://bristolgoodfood.org/action-plans/>

- 단계적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의 주요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참여 : 아래로부터의 계획 수립이라는 지향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 주요 테마(부문)별 워킹그룹과 운영 그룹 운영 (브리스톨 좋은 먹거리 2030 파트너십)
 - 다양성과 포용 : 좋은 먹거리 전략과 행동계획을 통해 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포용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 노력
 - 먹거리 체계 기반 좋은 실천 : MUFPP의 틀(framework)을 활용하여 변화와 성과에 대해 지표를 만들고 평가

- 모니터링과 평가 : MUFPP의 틀을 활용하면서 브리스톨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를 위해 지표를 만들고 있으며 2024년부터 지표별 주기(최소 1개월~ 최대 1년)에 따른 자료를 취합하고 평가할 예정

6. 국제사회 논의·실험의 시사점

(1) 먹거리 전략 진단 목적, 진단·개선 파악과 우선순위 도출

-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진단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로 전환을 지향하며 그 진단 또는 개선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진단에 관한 주요 사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이를 향해 ‘①나아가기 위한 정책의 수립, ②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관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을 통해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수준의 현상이 개선되어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고 실행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함

표 3-12 외국 먹거리 전략 진단 사례의 지표 영역 구분

진단 수단	성과지표의 영역 구분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CRFS Indicator Framework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먹거리 거버넌스	· 경제적 지속가능성 · 도시·농촌의 통합(융합) · 취약성 감소와 회복력 증진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 MUFPF Monitoring Framework	4개 영향 영역	6개 실행 부문
	· 먹거리 정책의 수립에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 · 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맞물려 형평성을 증진 · 건강과 영양, 식량안보의 개선 · 환경적인 영향 및 탄소발자국의 감소	· 먹거리 거버넌스 · 지속가능 식단과 영양 · 사회자본과 경제자본 · 먹거리의 생산 · 먹거리의 공급과 분배 · 음식물 폐기물 감축
EU FUSILLI 리빙랩	· MUFPF의 6개 실행 부문별 정책 개입 수단과 목적 · 6개 부문 : 먹거리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단과 영양, 사회자본과 경제자본, 먹거리의 생산, 먹거리의 공급과 분배, 음식물 폐기물 감축	
뉴욕시 먹거리 계획 Food Forward NYC	·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먹거리 접근성(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경로) · 도시 먹거리 체계의 노동자와 사업체를 위한 지원 체계 · 현대적·효율적·회복력 있는 먹거리 공급망의 구축 ·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 유통, 폐기(먹거리 전 생애주기 접근) ·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지식의 생산·공유	

* 자료 : 연구진 작성

-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먹거리계획(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의 개념과 유형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정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개념을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지역먹거리계획(전략)은 ‘로컬푸드 유형과 먹거리 보장 유형’이 결합된 방식으로 수립되어 시행되는 수준으로 각 지역적 수준에서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개선하고 재구조화하여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인식함

□ **먹거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기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이나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과 같이 먹거리 가치사슬 전반과 전략의 실행체계를 진단하는 종합적인 수단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표·모니터링 틀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 이는 지역별로 먹거리 체계가 가진 문제점과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거리 전략의 실행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비록 뉴욕시와 같은 개별 도시 사례(Food Metrics Reports)에서는 목표 혹은 영역별로 많은 지표를 취합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성과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표와 관련하여 최대의 통계를 수집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통계·지표 고도화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2) 먹거리 전략 진단 적용, 단계적 접근과 추진체계·인식제고 기대

-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진단의 틀은 지역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실천기준에 따라 먹거리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수단으로서 지표를 구성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먹거리 전략 진단 지표 적용 사례를 보면, 지역여건(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를 선별·적용하고 점차 확대해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음

- 다만 국가 단위 수준에서 먹거리 전략 실행의 효과를 평균적으로 비교하고,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밀라노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회원 도시(지역)간 협력과 점검을 위해 공통 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실용적 연구조사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먹거리지수’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의 실행수준을 평균적으로 비교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단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 적용의 단계적 접근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은 ‘추진체계 구축’(거버넌스와 부서간 협업)과 먹거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제고’임**

- 국제사회의 진단지표를 적용한 외국의 도시지역 사례에서 ‘지역먹거리 체계를 진단하고, 우선순위 과제(문제)를 선정하여, 해당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단계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강조하는 공통점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① **지역먹거리 전략 진단 지표의 적용에 있어 ‘추진체계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음**

-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 민간과 행정, 먹거리 가치사슬의 주요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는 연결망 형성과 참여 축진이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먹거리정책협의회’와 같은 핵심 집단이 형성됨
- 추진체계 구축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며 강조되는 것은 먹거리 전략을 담당하는 행정의 부서가 독립적 프로그램 실행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한 실행과 관리(지표 포함)로 나아간다는 점임

② **먹거리 전략의 진단 지표 적용 과정에서 먹거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변화와 제고’가 나타남**

- 지역사회의 먹거리 체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행정구역의 범위에 매몰되지 않고 소비지(도시)와 산지(농촌) 간의 협력과 상생 차원에서 먹거리 전략을 구상하고 연결해 나가고 있음
- 먹거리 전략의 지역적 연계 과정에서 비록 일회성 먹거리 전략 수립으로 시작하더라도 장기(5~10년) 전략 수립으로 나아가고, 장기 계획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진단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요약한 ‘추진체계 구축과 종합적 인식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적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 지역(도시)의 다른 계획에 먹거리 체계 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전략(계획) 통합’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함

(3) 단기 성과평가 아닌 장기적 실행 지원하는 진단지표로 활용이 적절

- 지역먹거리계획의 단기적 ‘성과 평가’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 실행을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시행효과 진단·평가의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먹거리 체계의 전환이라는 지향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정량적 평가가 중심이 되는 성과 평가는 체계의 개선과 전환이라는 먹거리 전략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양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우선할 경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과 문제해결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투입-산출의 정책모델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빠른 성과(결과)를 산출하는 사업과 지표(예, 학교급식 등)에 집중하게 되면, 먹거리 전략의 다른 과제는 비중이 낮아지고 결국 체계 전환이라는 궁극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먹거리지수’와 같은 종합적인 지수를 일괄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집중하려는 진단 지표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진단 과정은 지역단위 먹거리 전략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강화’와 먹거리 체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관련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함
 - 전략계획·실행계획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당초 ‘설정한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기반으로서 역량을 갖추는 ‘과정적 의미’가 동시에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계획의 진단 과정’은 먹거리 전략 실행에 요구되는 우선과제가 실행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인식제고’에 주목하는 이유임
 - 우리나라의 ‘지역먹거리지수’에서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를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지자체 수준에서 실효적인 프로그램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과 명목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진단 지표’의 적용 과정은 먹거리 전략 주요 관계자가 현실적 수준의 정보와 인식

을 공유하는 공간(장)이 되는데, 이 과정은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
실효적인 토대가 될 것임

-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거버넌스 기구(먹거리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의제의 질적 수
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 체계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인식 제고를 통해 행정구역(기초 중심) 중심
계획의 제약과 한계를 도시-농촌 협력으로 보완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보완을 향
후 과제로 검토해야 함

제4장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틀 설정

1. 효과분석 틀의 사전검토
2. 효과분석 틀의 방향검토
3. 효과분석 틀의 구조설정
4. 효과분석 사례지역 선정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틀 설정

1. 효과분석 틀의 ‘사전검토’

- 첫째, 지역먹거리 전략 시행에 관한 국제적 모니터링 진단평가 사례를 고려할 때, ‘시행효과 분석’에 대한 ‘전제와 제약’을 우선 검토해야 함
 - 지역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적절하게 검토 또는 분석하는 국내 논의와 선행연구³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 분석의 틀’ 설정에 적용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는 지역먹거리 정책을 ‘지역먹거리 체계’(community food system)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수단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책을 통해 먹거리 관련 주요한 지표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먹거리 정책수단(도구)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지역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시행효과를 측정 또는 적용하면서 모니터링의 유용한 지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수준임
 - 지역별로 직면하거나 처한 먹거리 체계와 관련한 ‘환경, 수준의 차이와 다름’을 전제로 먹거리 전략(정책)의 ‘영역, 수단, 지표’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단위 수준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리빙랩 방식)을 실험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 분석’에 있어 ‘제약요인’이라는 점이며, 이를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30) 국내에서는 주로 로컬푸드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와 식재료 공급 등의 직접 성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연구개요의 선행연구 검토를 참조

□ 둘째, 지역먹거리 전략의 실행을 통한 ‘변화’라는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임

- 지역먹거리계획 정책(수단)이 실행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기록되지 못해 정보(데이터)로 수집되거나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여 정성적 측정을 결합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함
- 외국에서는 정보(데이터)의 이용과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량적 지표(하위 카테고리 포함)를 정하고, 정성적 지표(주체의 의식·행동 변화, 우선과제 판단 등)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임
- 더 나아가 유럽 등 지역먹거리 전략의 모니터링 리빙랩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항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 외국의 사례에서는 먹거리 전략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의 격차를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의 주체가 모든 행동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역량(자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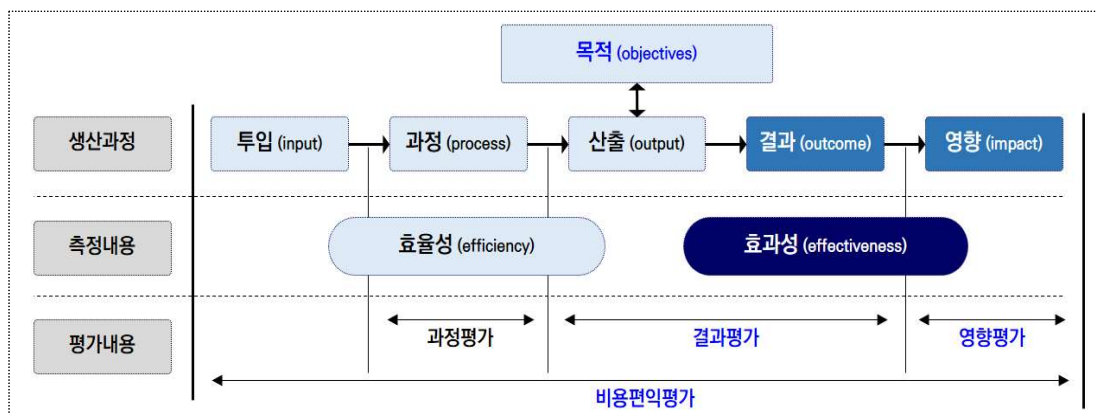
□ 셋째,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단위 수준에서 진단한 먹거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므로 국가단위 수준에서 평균적인 효과 검토에 제약이 있음

- 먹거리 전략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과 ‘지역먹거리 체계 지표 틀’은 지역단위 수준에서의 수집·이용·분석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음
- 지역마다의 여건과 현실, 역량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먹거리 계획이 지향하는 목적과 중점 방향이 상이하며, 시기별로 진단되는 먹거리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표를 관리해 나가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먹거리 전략의 시행에 따른 개선 등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
-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사무국은 지역먹거리 전략의 분석틀(frame work)을 토대로 모니터링 지표를 지역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넷째,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수단을 통한 ‘정책시행’ 과정이므로 ‘시행효과 평가’의 ‘위치와 범위’를 고려해야 함

- 정책은 자원(재정, 활동, 사업, 제도 등)의 ‘투입’(input)을 통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progress)을 거쳐 양적으로 ‘산출’(output)되는 구조이며, 산출에 비추어 정책의 ‘목적’(objectives)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 정책의 효과는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일반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변화라는 ‘결과’(outcome)와 실질적인 ‘영향’(impact)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중점을 두어 고려해야 함
- ‘정책효과’(effectiveness)는 행정이 수립하여 내건 정책(수단 등) 목표의 달성 정도 (degree of goal achievement, 達成度)를 의미하는데, 행정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달성에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강조됨
- 행정이 실행하는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파악하지 않고 목표의 성취도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효율성’(efficiency)과 구별되는 개념임
- 효과성은 목표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신속에 역점을 둔 효율성과 대비되는 높은 수준의 행정 이념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4-1 정책의 추진과정과 정책효과 측정·평가의 구조



* 자료 : 박경귀(2018),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활용의 유의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는 정책시행의 전 단계에서 ‘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결과평가’와 ‘영향평가’를 다루는 ‘효과성’ 평가에 해당함

2. 효과분석 틀의 ‘방향검토’

□ 첫째, 지역먹거리 정책의 ‘시행목적’은 지역먹거리 체계를 갖추는 데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목적 중심’의 효과분석에 방향을 두어야 함

- 지역먹거리 전략의 국제적 논의 수준과 실천 기준으로, 지역먹거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먹거리 정책’ 시행의 주된 목적인 ‘지속가능성 영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먹거리 정책 시행 목적인 ‘지속가능성 영역’은 ‘지역먹거리 체계 지표 틀’(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s framework)이 제시하는 6개 정책 목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①사회적 지속성과 형평성, ②경제적 지속가능성, ③환경적 지속가능성, ④지역먹거리 공급 개선, ⑤먹거리 거버넌스, ⑥먹거리 취약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이 지향하는 ‘목적 중심 효과’를 분석해야 함

□ 둘째, 지역먹거리 체계가 다루는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영역)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순환’ 등인데, 이러한 ‘가치사슬’(value chain)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 시행을 통한 변화와 개선을 고려하는 효과분석이 되어야 함
- 지역먹거리 체계와 전략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계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과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에서는 먹거리의 단계별 가치사슬을 중요한 핵심요소로 파악하고 영역별 핵심과제를 다루고 있음
- 국제적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먹거리 체계 가치사슬(value chain)인 ‘①생산, ②가공, ③유통, ④소비, ⑤폐기, ⑥안전, ⑦실행체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구성하는 ‘영역별 직접+간접 효과’를 분석해야 함

□ 셋째,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먹거리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생효과’를 고려할 때, ‘변화’의 종합효과를 살펴야 함

-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먹거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전략’은 ‘종합계획’의 형식으로 수립되고 ‘정책수단’으로 실행되어 지역단위(사회)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효과로 파생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함

- 지역먹거리 체계와 전략의 국제적 기준 등에서는 지역먹거리 전략의 실행은 먹거리 체계의 가치사슬 개별 단계의 변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시민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으로 측정 가능한 파생효과로는 ‘①지역경제, ②농가소득, ③일자리, ④주민의식, ⑤취약인구, ⑥제도기반’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먹거리계획이 파생시키는 ‘종합적인 파생효과’로 정리할 수 있음

□ 넷째,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통한 효과의 ‘구조와 영역’을 설정하고자 함

-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 분석은 ‘지역먹거리 체계’(food system)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food plan)으로 실행되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tools)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개선되었는지 ‘현실화된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지역먹거리 전략이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6개),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가치사슬’ 단계(영역)(7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으로 기대되는 측정 가능한 ‘파생효과’ 영역(6개)가 이 연구에서 채택하는 계획 시행효과의 영역임
- 요컨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전제(가설)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영역에서 설정할 수 있음

Q1.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먹거리 체계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나 현실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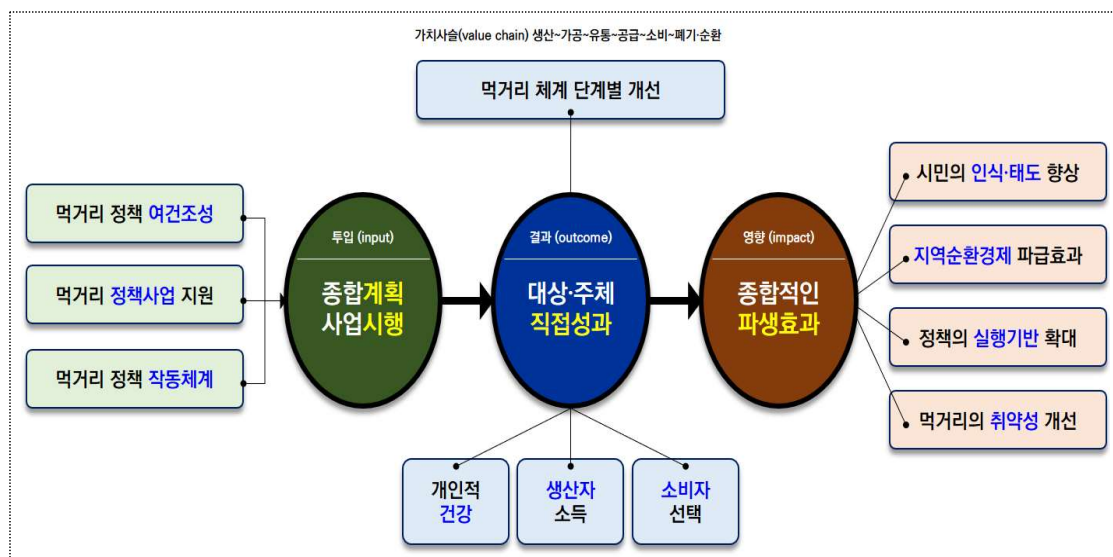
Q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종합적 파생효과로 현실화 된다.

Q3.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주체(시민)는 먹거리에 대한 태도·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3. 효과분석 틀의 ‘구조설정’

- (효과분석 틀 구조 설정) 먹거리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영역에서 다루는 ‘투입-결과-영향’의 단계를 고려하는 체계로 설정
 - 정책의 일반적인 시행과정인 ‘투입-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으로 의도(목적)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실행경로’와 ‘시행효과’를 구조로 설정함
 - ‘정책사업, 재정투자, 작동체계’의 ‘투입’은 먹거리 전략 ‘가치사슬 단계별’ 개선과 정책시행 대상자 ‘편익’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고 ‘시민, 경제, 정책, 사회’ 등에서 종합적인 ‘효과’를 발현시키는 구조임

그림 4-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경로’와 ‘시행효과’ 구조 설정



* 자료 : 연구진 작성

- (계획의 투입 요소)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정책여건 조성, 정책사업 지원, 작동체계’ 등이 ‘투입요소’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단(투입요소)은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정책사업’, 정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투자’, 먹거리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작동체계’ 등으로 구체화됨
 - 이에 따라 ‘투입’ 영역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정책 시행을 위한 ‘정책사업, 재정투자, 작동체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할 수 있음³¹⁾

31)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체계+중점과제+세부사업 등을 계획기간(5년)으로 마련하고,

- (계획시행의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 시행을 통해 먹거리 계획이 목적하는 ‘가치사슬’의 개선과 ‘대상자’의 편익으로 현실화(결과)되는 구조임
 - 지역먹거리계획 정책수단(투입)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먹거리와 관계된 ‘생산~가공~유통~공급~소비~폐기·순환’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현황(수준)이 개선되므로 이를 직접적인 성과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사회(시민 등)를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므로 정책 수혜자로서 ‘개인, 생산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성과(편익) 나타나는 구조임
- (종합적인 파생효과)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의 범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파생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지역먹거리계획은 우선 직접적인 정책 대상자인 ‘주체(시민)’가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옴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먹거리라는 ‘재화’가 가치사슬 단계 전반에 걸쳐 지역 내 생산~소비되는 구조이므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파급효과로 이어짐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 민간, 행정+민간 등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 ‘실행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귀결됨
- (시행효과 분석의 이용자료) 현실적으로 구득·이용 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미수립, 이전-이후, 활성화-일반’ 등으로 비교 분석함
 - (이용자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시·군 제출 자료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활성화 사례지역 대상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비교 분석
 - 가치사슬 단계 변화 개선 : 생산, 가공, 유통, 안전, 소비, 폐기 등에 대한 ‘지역먹거리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수립-미수립, 이전-이후, 활성화-일반’ 등으로 비교
 - 대상·주체 체감 정도 : 개인의 건강, 생산자 소득, 소비자 선택 등에 관해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먹거리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 시행 ‘이전-이후 비교’
 - 종합적인 파생효과 : 먹거리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를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진단하고, 사례지역 대상 지역경제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를 분석하며, 정책 실행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구조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정책사업과 재정투자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기반(추진체계, 조례 등)을 ‘이전-이후 비교’

표 4-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영역과 세부지표 설정

구분	영역	세 부 지 표	이용자료	분석방법	비고
결과 outcome	대상·주체 직접성과	개인의 건강, 생산자 소득, 소비자 선택 등 변화	설문조사	전후비교	사례지역
	가치사슬 변화개선 value chain	생산(기획생산 정책, 생산농가, 조직화 농가소득)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가공(가공품 생산자, 가공정책사업, 품목 다양화)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유통(직매장, 직거래장터, 민간급식, 판매처)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안전·영양(안전성 검사, 영양관리, 재료식별)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소비(학교·공공급식, 직매장, 학교급식, 선택권)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폐기·순환(음식폐기물 감축·낭비 절감 노력)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영향 impact	지역사회 종합적인 파생효과	먹거리와 전략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	전후비교	사례지역
		먹거리 정책의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지불의향	설문조사	의향분석	사례지역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투입예산	산업연관분석	사례지역
		실행기반 확대(조례, 부서, 지원센터, 거버넌스)	지수평가 설문조사	수준진단 대조비교	사례지역 전국지역

4. 활성화 ‘사례지역’ 선정

□ 전반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전국단위 수준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제약을 고려하여 사례지역 분석 방법을 채택함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는 ‘추진시기, 지역여건, 전략구조, 중점전략, 핵심사업, 실행체계’ 등에 있어 차이와 편차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먹거리 계획 시행효과 분석에 한계와 제약이 큼
- 이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해 계획의 수립·시행 이전부터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온 활성화 지역을 사례로 계획의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의 사례지역은 공식적인 평가인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역으로 선정함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의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평가 수단임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부터 전국의 100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먹거리 전략(계획 및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구조화된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도농복합형’ 3개 시·군(경기 화성시, 세종 특별자치시, 전북 완주군), ‘농촌형’ 2개 시·군(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도시형’ 2개 자치구(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광산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사례지역 개요

① 도농복합형 사례지역

- (경기 화성시) 2017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A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됨
- (세종 특별시) 2014년부터 로컬푸드 계획을 실행해 왔고, 2022년부터 지역먹거리계

획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A등급(2021년 B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됨

-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전략의 발원지역으로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S등급, 2020년 S등급)으로 평가됨

② 농촌형 사례지역

- (충남 청양군)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A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됨
- (전남 해남군)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A등급(2021년 C등급, 2020년 C등급)으로 평가됨

③ 도시형 사례지역

- (대전 유성구)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로컬푸드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의 전략적 제휴와 연대가 우수한 지역임, 도시형으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가 없음
- (광주 광산구)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도시지역 중심으로 도농교류가 활발한 우수 지역, 도시형으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 없음

표 4-2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사례지역 개요

사례지역	주요사유
경기 화성시	· 2017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A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
세종 특별시	· 2014년부터 로컬푸드 계획, 2022년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A등급(2021년 B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
전북 완주군	· 2012년부터 로컬푸드 전략,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S등급, 2020년 S등급)으로 평가
충남 청양군	·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S등급(2021년 A등급, 2020년 B등급)으로 평가
전남 해남군	·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022년 A등급(2021년 C등급, 2020년 C등급)으로 평가
대전 유성구	·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로컬푸드 중심 도시-농촌 전략적 제휴 연대 우수 (도시형,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 없음)
광주 광산구	·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중 · 도시지역 중심 도농 먹거리 교류 등 활발 우수 (도시형,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결과 없음)

* 자료 : 연구진 작성

제5장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분석

1. 지역생산에서의 변화
2. 지역가공에서의 변화
3. 지역유통에서의 변화
4. 안전관리에서의 변화
5. 지역소비에서의 변화
6. 폐기순환에서의 변화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직간접 효과 분석

□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별 시행효과, 분석개요

- (구조) 지역먹거리 체계의 가치사슬 단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으로 나타나는 수준과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비교하는 구조
- (전제)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에 반영되므로 사업시행 성과(outcomes)를 대표하고 자료(수치)로 이용·분석이 가능한 지표 선정
- (항목) ‘①지역생산, ②지역가공, ③지역유통, ④안전관리, ⑤지역소비, ⑥폐기·순환’으로 구분하고, 자료 획득·분석 가능한 세부지표로 구체화
- (방식) ①지역먹거리계획 유무에 따른 ‘수준비교’(수립-미수립 지역), ②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정도에 따른 ‘변화비교’(사례지역-전국평균), ③ 사례지역 주민의 계획 시행 ‘이전-이후’의 변화(체감) 비교
- (자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시·군 제출자료, 사례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

□ 먹거리 체계 가치사슬 단계별 시행효과, 지표설정

- ① 지역생산 :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정책 수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변화 추이, 기획생산 조직화 교육, 생산자-소비자 소통·교류, 생산자 농업 소득 증대 체감*
- ② 지역가공 :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자,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 사업 변화 추이,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증대 체감*

- ③ 지역유통 : 지역먹거리 유통·판매 수준, 직거래 장터 운영, 민간영역 공급 확대 노력, 지역먹거리 판매처 변화 추이, 지역먹거리 제공·판매처 확대 체감*
- ④ 안전관리 : 농산물 안정성 검사,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영양표시 활용률 변화 추이, 건강·안전 식재료 식별 강화 체감*
- ⑤ 지역소비 :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액,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액,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취약자 로컬푸드 공급액,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변화 추이, 학교급식 공급액 변화 추이, 지역먹거리 정보 확대 체감*, 소비자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 체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체감*
- ⑥ 폐기순환 :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노력, 1인당 음식 폐기물 배출 변화 추이,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 체감*, 환경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체감*

· 주 : * 표식은 활성화 사례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

1. ‘지역생산’ 영역의 ‘수준과 변화’

□ 로컬푸드 기획생산, 직매장 출하, 학교급식 출하 생산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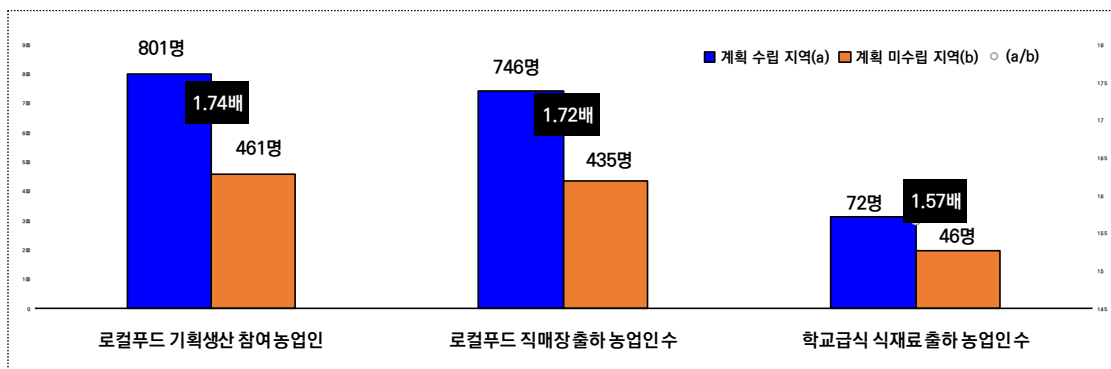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³²⁾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34개소)는 계획 미수립 지역(69개소)에 비해 ‘로컬푸드 기획생산, 직매장 출하, 학교급식 출하 농업인’이 1.57~1.74배 높은 수준임
 - 계획 수립 지역은 평균적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801명, 직매장 출하 농업인 746명, 학교급식 식재료 출하 농업인 72명으로 나타남
 - 반면, 계획 미수립 지역은 평균적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461명, 직매장 출하 농업인 435명, 학교급식 식재료 출하 농업인 46명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

표 5-1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생산자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구 분	단위	계획 수립 지역(a)	계획 미수립 지역(b)	전체 평균	(a/b)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명	801	461	559	1.74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 수	명	746	435	528	1.72
학교급식 식재료 출하 농업인 수	명	72	46	60	1.57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생산자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정책 유무 비교

- 지역먹거리의 연중 생산 공급을 위한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88.2%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수립지역보다 1.52배 높음
 -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는 58.0%만이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을 정책으로 시

32)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103개 지자체(2021년 실적 기준)

행하고 있음

표 5-2 다품목 기획생산 지원 정책 여부 ('21년)

구 분	기획생산 지원 정책 실행	기획생산 지원 정책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30 (88.2%)	4 (11.8%)	34 (100.0%)
계획 미수립	40 (58.0%)	29 (42.0%)	69 (100.0%)
합 계	70 (68.0%)	33 (32.0%)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기획생산 조직화 교육 여부 비교

- 지역먹거리의 '다품목 연중 기획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자(농가)의 조직화'가 선결 조건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본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85.3%가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어 미수립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음
 -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는 40.6%만이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어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음

표 5-3 기획생산 조직화 교육 여부 비교 ('21년)

구 분	농가조직화 교육 실행	농가조직화 교육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9 (85.3%)	5 (14.7%)	34 (100.0%)
계획 미수립	28 (40.6%)	41 (59.4%)	69 (100.0%)
합 계	57 (55.3%)	46 (44.7%)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생산자-소비자 소통·교류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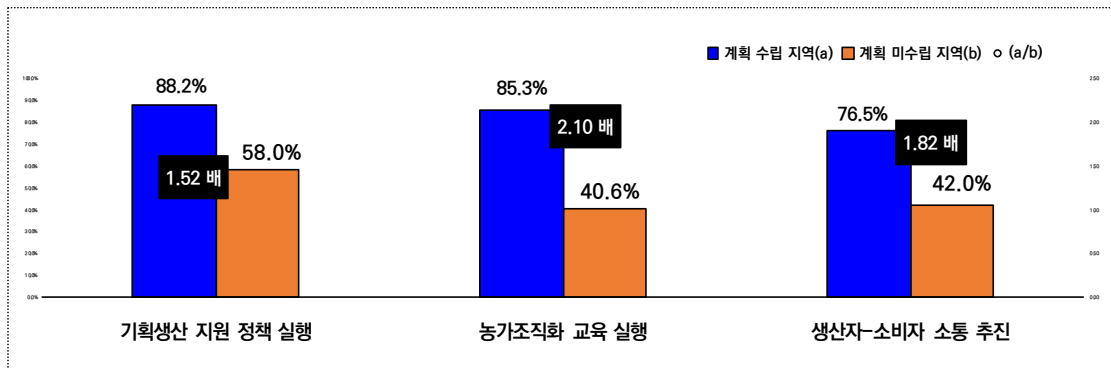
-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과 교류는 상호 신뢰 관계에 기반 하여 생산~소비에 이르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갖추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며, '얼굴 있는 지역먹거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천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지역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소비자의 소통과 교류'에 76.5%가 노력하고 있음
 - 반면,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69개)는 42.0%(29개소)만이 생산자-소비자 소통 교류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 생산자-소비자 소통·교류 노력 여부 비교 ('21년)

구 분	생산자-소비자 소통 추진	생산자-소비자 소통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9 (42.0%)	40 (58.0%)	34 (100.0%)
계획 미수립	26 (76.5%)	8 (23.5%)	69 (100.0%)
합 계	55 (53.4%)	48 (46.6%)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농가조직화+생산자·소비자교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농가 변화 추이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인 친환경 및 GAP 농산물 인증농가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20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표 5-5 활성화 사례지역 건강 농산물(친환경+GAP) 인증 농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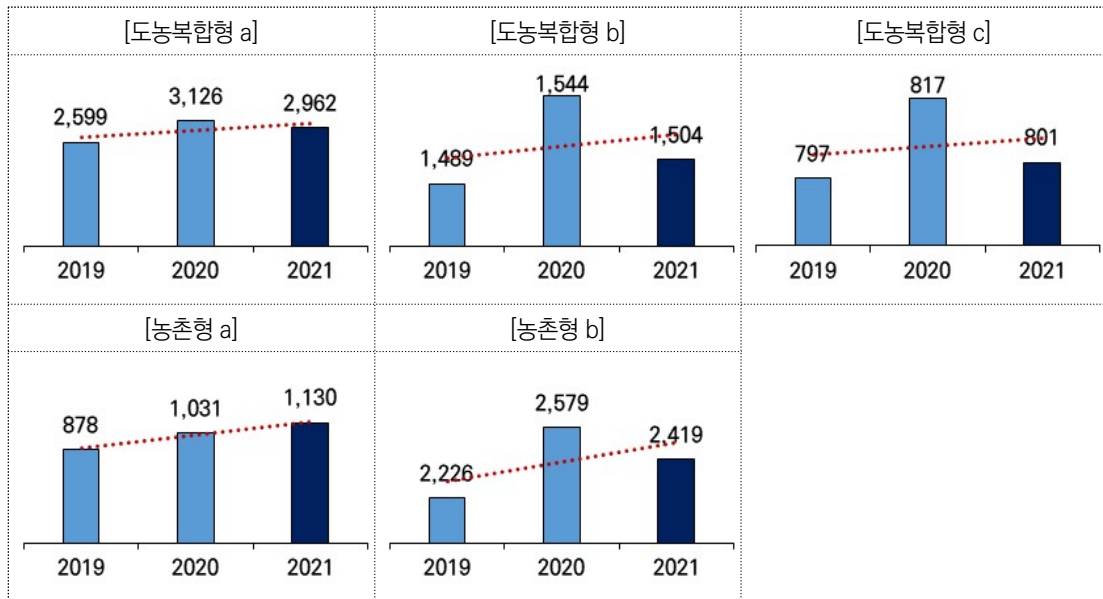
활성화 사례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2,599호	3,126호	2,962호	6.8%	14.0%
도농복합형 b	1,489호	1,544호	1,504호	0.5%	1.0%
도농복합형 c	797호	817호	801호	0.3%	0.5%
농촌형 a	878호	1,031호	1,130호	13.4%	28.7%
농촌형 b	2,226호	2,579호	2,419호	4.3%	8.7%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도농복합형과 농촌형 사례지역마다 친환경 및 GAP 농산물 인증 농가 증가하는 정도가 상이한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과 농림사업의 지원에 따라 생산자의 참여수준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³³⁾

33) 활성화 사례지역의 경우 도농통합형 a 지역과 농촌형 b 지역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을 기점으로 건강한 농산물의 인증을 크게 확대 지원한 반면, 도농복합형 b 지역과 농촌형 b 지역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이전부터 친환경 건강 농산물의

그림 5-3 활성화 사례지역 건강 농산물(친환경+GAP) 인증 농가 변화 추이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변화 비교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20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상향세가 크며, 전국 평균은 연평균 46.6% 증가하는 추세임

표 5-6 활성화 사례지역과 전국 평균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사례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1,056명	907명	1,971명	36.6%	86.7%
도농복합형 b	897명	569명	1,194명	15.4%	33.1%
도농복합형 c	1,729명	1,636명	6,299명	90.9%	264.3%
농촌형 a	205명	325명	798명	97.3%	289.3%
농촌형 b	59명	57명	500명	191.1%	747.5%
전국 평균	260명	232명	599명	46.6%	1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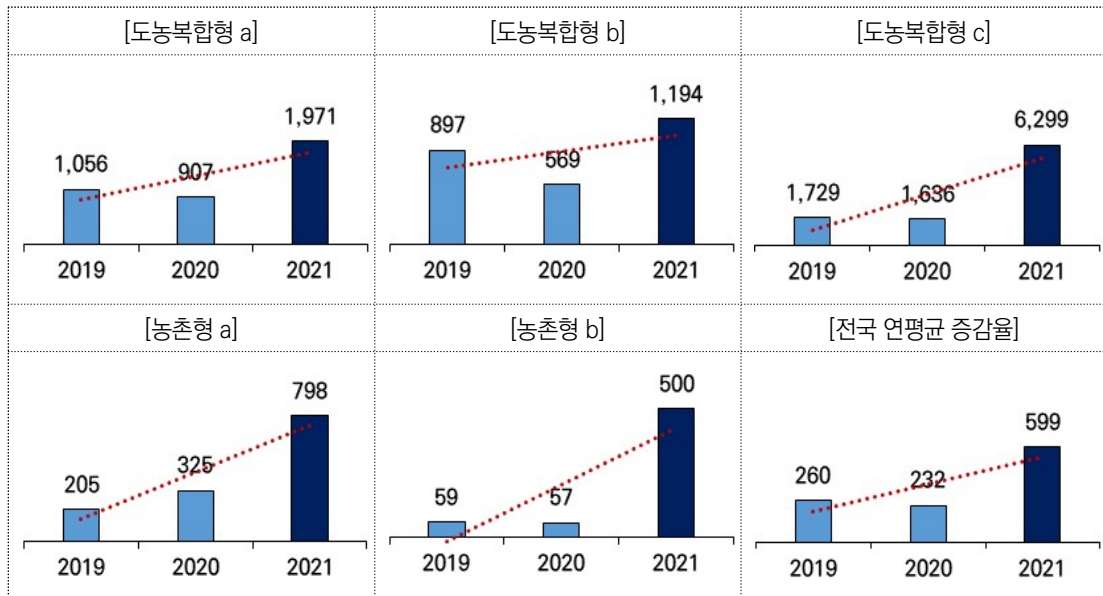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활성화 사례지역 대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도농복합형 지역은 자료 분석 시점 이전부터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³⁴⁾

생산 촉진과 인증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어 해당 기간의 증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34) 도농통합형 a 지역과 b 지역은 산지와 소비지 특성을 동시에 갖지만,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조직화의 전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5-4 활성화 사례지역과 전국 평균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변화 추이 비교



□ 생산자 농업소득 증대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³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통해 ‘생산자(농업인) 소득의 변화’를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농업소득이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생산자 농업소득 수준은 ‘보통(3.20)’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1)’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생산자의 농업소득 체감정도가 상이한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과 농림사업의 지원에 따른 관련 정책의 추진 정도 차이를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³⁶⁾
- 이러한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생산단계’에서 생산자(중소농 등)의 농업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1,150만원³⁷⁾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부 자료,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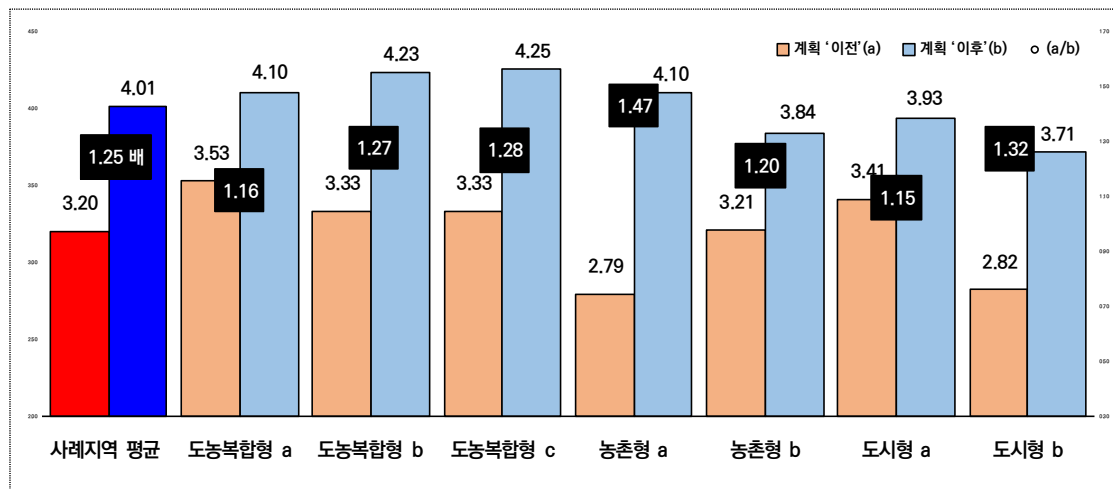
35) 7개 시·군·구 주민 대상 516명 설문조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1(전혀 아니다)~3(보통이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

36) 활성화 사례지역의 농업소득 증대 정도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통해 중소농가의 기획생산 조직화가 크게 진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37)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선 농산물 판매실적은 2013년 21개 매장 193억원에서 2020년 469개 매장 4,604억원으로 7년 사이 23.9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임

38)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2021.9.28.), ‘1인당 추가 소득 ‘1150만원, 농협 로컬푸드 농가 희망되다’를 참조

그림 5-5 생산자 농업소득 증대 수준(체감) 비교 (계획 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2. ‘지역가공’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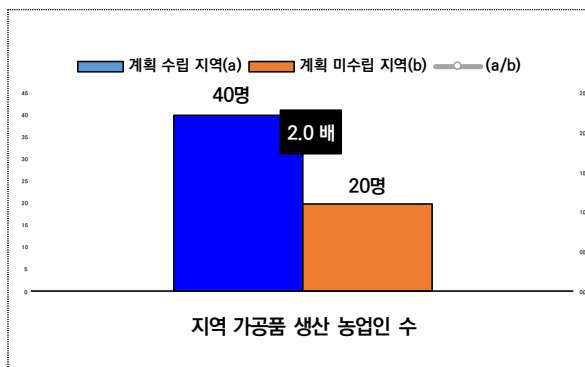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 체계에서 소비자의 밥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식재료(농산물) 활용 ‘지역 가공품’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지자체 중 지역먹거리계획 수립한 지자체는 계획 미수립 지역에 비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 농업인 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계획 미수립 지역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자 수가 평균 20명으로 대조를 보임

표 5-7 지역가공 생산 농업인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구 분	단위	계획 수립 지역(a)	계획 미수립 지역(b)	전체 평균	(a/b)
지역 가공품 생산 농업인 수	명	40	20	27	2.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6 가공 농업인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사업 변화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사례지역은 농림수산분야에서 지역 농식품 가공을 위한 정책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일부 지역 제외)
- 이 항목은 활성화 사례지역 이외 다른 지역 데이터가 없어 전국 평균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지역 농식품 가공 정책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에 포함된 지역가공 기반 확대 정책사업 예산이 시기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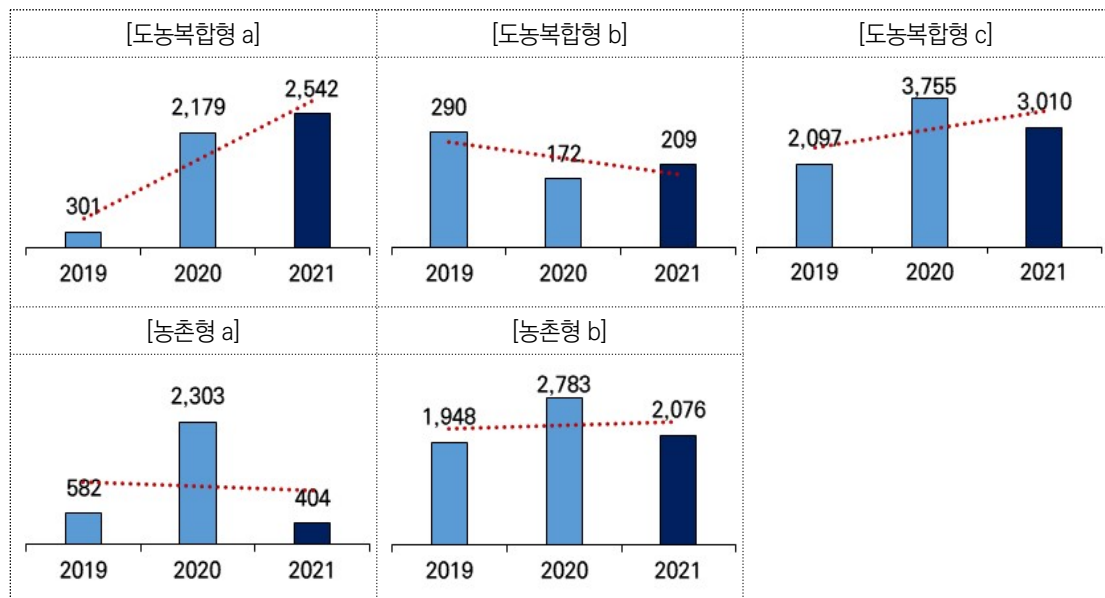
39) 도농복합형 a지역과 c지역, 농촌형 b지역은 소비지 수요에 부응해 지자체 예산 여력의 제약에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촌형 a지역은 지역 농식품 가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일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5-8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사업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사례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301백만원	2,179백만원	2,542백만원	190.7%	745.0%
도농복합형 b	290백만원	172백만원	209백만원	△15.0%	△27.8%
도농복합형 c	2,097백만원	3,755백만원	3,010백만원	19.8%	43.5%
농촌형 a	582백만원	2,303백만원	404백만원	△16.7%	△30.6%
농촌형 b	1,948백만원	2,783백만원	2,076백만원	3.2%	6.6%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7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정책사업 변화 추이 비교



□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증대 수준(체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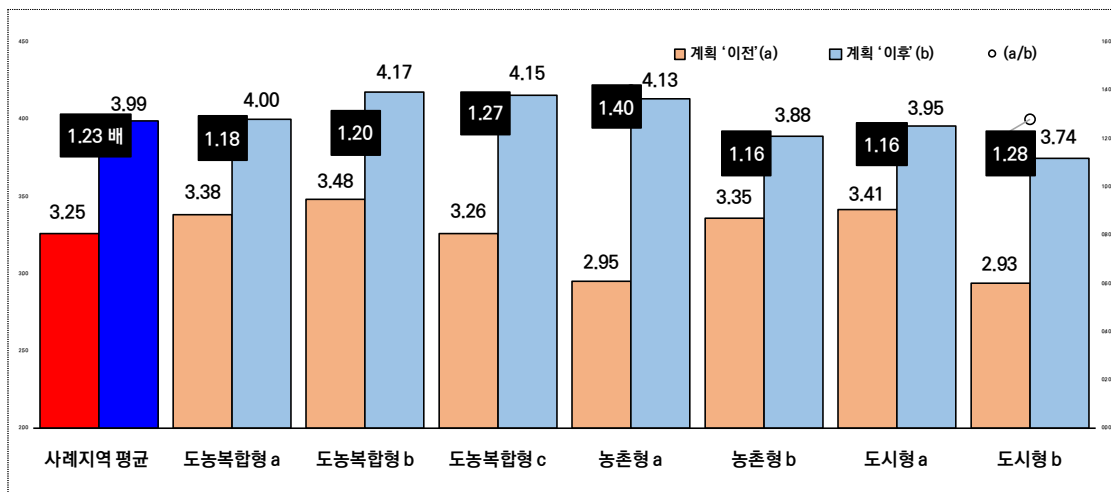
- 활성화 사례지역⁴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통해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를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먹거리 품목의 다양화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수준은 ‘보통(3.25)’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3.99)’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 농식품 가공 정책사업 예산을 최근 크게 늘린 도농복합형 a지역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수준에서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반면 이보다 앞서 예산을 늘린 도농복합형 c지역과 농촌형 a지역은 지역먹거리 품목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된

40) 7개 시·군·구 주민 516명 설문조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1(전혀 아니다)~3(보통이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

것으로 평가된 점이 특징임

- 활성화 사례지역 중 도농복합형 c지역에서는 지역거점농민가공센터(2개소)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교육과정(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가공교육, 시제품 개발, 제품생산, 상품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농촌형 a지역에서는 ‘농산물전처리센터, 산채 및 지역특산 농산물 가공센터, 친환경가공센터’를 집적화 조성하고, 먹거리 소비 편의를 위한 신선편이 식품(밀키트 등) 등 지역 내 다양한 가공품 먹거리 공급을 크게 늘려가고 있음⁴¹⁾

그림 5-8 지역먹거리 품목 다양화 증대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41) 한국농어민신문(2022.11.22.), '청양로컬푸드-특산품으로 만든 다짐장·밀키트, 공품 개발로 지속가능성 찾다'를 참조

3. ‘지역유통’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먹거리 유통·판매 수준(직매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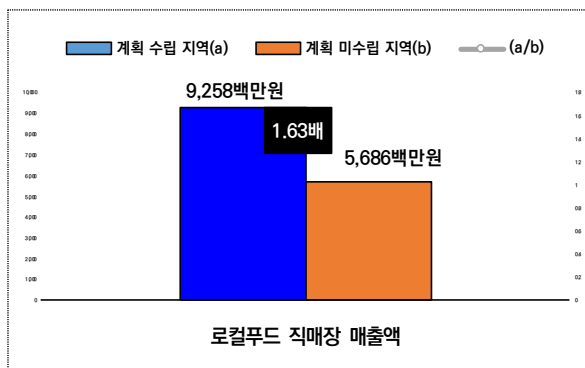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정책적 시행 이전부터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대표적 소비처로 양적으로 매장수가 늘고 있으며, 유통·판매액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계획 미수립 지역에 비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유통액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92.6억원 수준인데, 미수립 지역은 56.9억원 수준임

표 5-9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구 분	단위	계획 수립 지역(a)	계획 미수립 지역(b)	전체 평균	(a/b)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백만원	9,258	5,686	7,009	1.63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9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직거래 장터 운영 유무 비교

- 지역먹거리의 일정한 판매거점인면서 생산자-소비자 간 교류의 접점이 되는 ‘지역

표 5-10 직거래 장터 운영 유무 (‘21년)

구 분	직거래 장터 운영	직거래 장터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9 (85.3%)	5 (14.7%)	34 (100.0%)
계획 미수립	43 (62.3%)	26 (37.7%)	69 (100.0%)
합 계	72 (69.90%)	31 (30.10%)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거래 장터’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85.2%가 운영하고 있어 미수립 지역보다 다소 높게 확인됨

-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는 62.3%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음

□ 민간영역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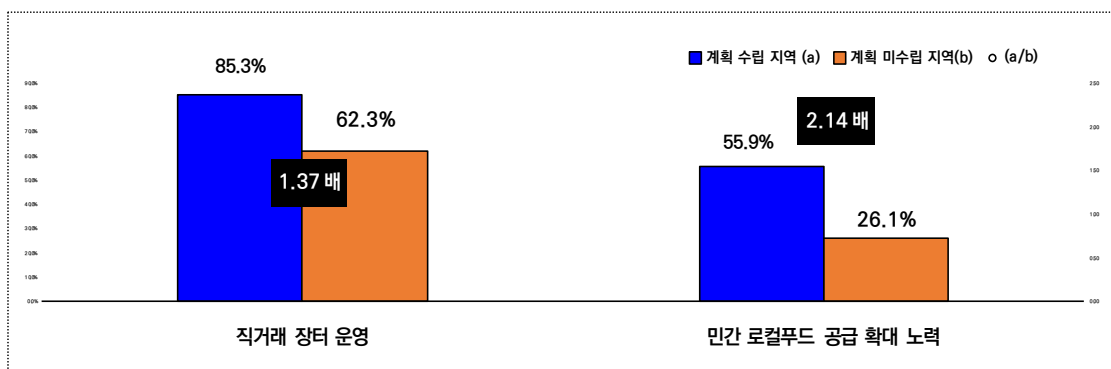
-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먹거리의 소비처 확대 노력과 함께 민간영역에서의 로컬푸드 소비는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다루는 중요한 지역소비 전략 중 하나임
- ‘지역먹거리 민간영역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55.9%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계획 미수립 지역보다 2.14배 높음
-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는 26.1%만이 로컬푸드의 민간영역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1 민간영역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 여부 (‘21년)

구 분	민간 로컬푸드 공급 확대 노력	민간 로컬푸드 공급 노력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19 (55.9%)	15 (44.1%)	34 (100.0%)
계획 미수립	18 (26.1%)	51 (73.9%)	69 (100.0%)
합 계	37 (35.9%)	66 (64.1%)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0 직거래 장터 운영+민간영역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지역먹거리 판매처(로컬푸드 직매장) 변화 비교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의 상설 판매처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전략 작동의 핵심 거점으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출하처, 소비자에게는 식재료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수치를 분석하면, 활성화 사례지역

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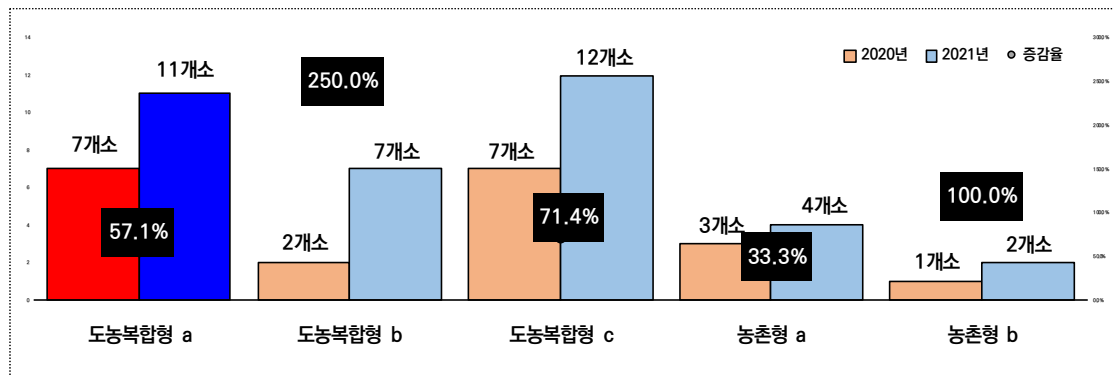
-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의 일정한 소비력을 배후로 개설·운영되는 점을 볼 때, 도시지역을 끼고 있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매장수가 많고, 증가율도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12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 판매처(로컬푸드 직매장) 변화 추이

활성화 사례지역	2020년	2021년	'20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7개소	11개소	57.1%
도농복합형 b	2개소	7개소	250.0%
도농복합형 c	7개소	12개소	71.4%
농촌형 a	3개소	4개소	33.3%
농촌형 b	1개소	2개소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자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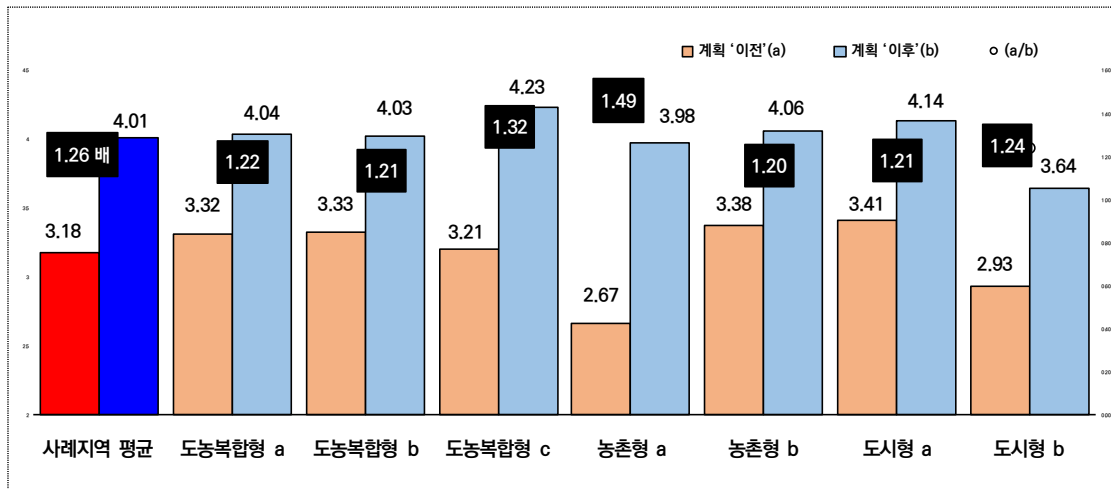
그림 5-11 지역먹거리 판매처(로컬푸드 직매장) 변화 추이 (활성화 사례지역, '21년~'22년)



□ 지역먹거리 제공·판매처 확대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통해 '지역먹거리 제공·구매처'의 변화를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지역먹거리 제공·구매처 수준은 '보통(3.18)'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1)'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에 힘써온 모든 지역에서 구매처 확대의 체감이 높았지만,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계기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힘써온 도농복합형 c지역과 농촌형 a지역에서 특히 체감이 높다는 점이 특징임
-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3년 9월 전국적으로 270개소인데, 소비자는 건강 먹거리 대표 구매처로 인식이 높지만, 이용 편의성(접근성) 등에 있어 과제가 지적됨⁴²⁾

그림 5-12 지역먹거리 제공·판매처 확대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표 5-13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2023년)

지 역	매장수	지 역	매장수	지 역	매장수	지 역	매장수	지 역	매장수	지 역	매장수
서울시	1	인천시	1	울산시	18	강원도	19	전북도	30	경남도	21
부산시	2	광주시	7	세종시	3	충북도	19	전남도	38	제주도	5
대구시	9	대전시	6	경기도	42	충남도	19	경북도	30	합 계	270

* 자료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작성(2023.9.1.)

42)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 로컬푸드 인지 비중은 77.3%에 달하며, 직매장 이용 경험 비중은 52.9%로 조사.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없어서'가 64.8%로 가장 높았음.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참조

4. ‘안전관리’ 영역의 ‘수준과 변화’

□ 농산물 안전성 관리(안전성 검사)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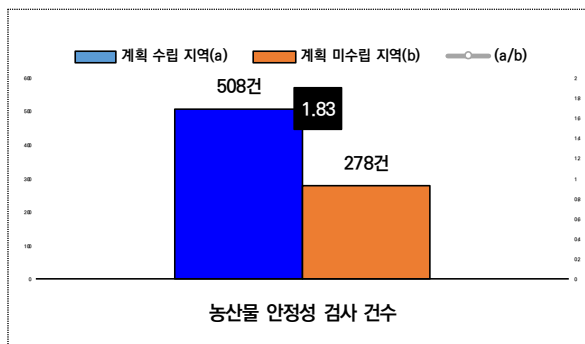
- 안전한 지역먹거리의 생산 이후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안은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역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으며, 무농약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연간 508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 계획 미수립 지역에 비해 1.8배 이상 높음
 - 계획 미수립 지역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간 167건을 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표 5-14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구 분	단위	계획 수립 지역(a)	계획 미수립 지역(b)	전체 평균	(a/b)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건	508	278	362	1.83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3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로컬푸드 안전관리(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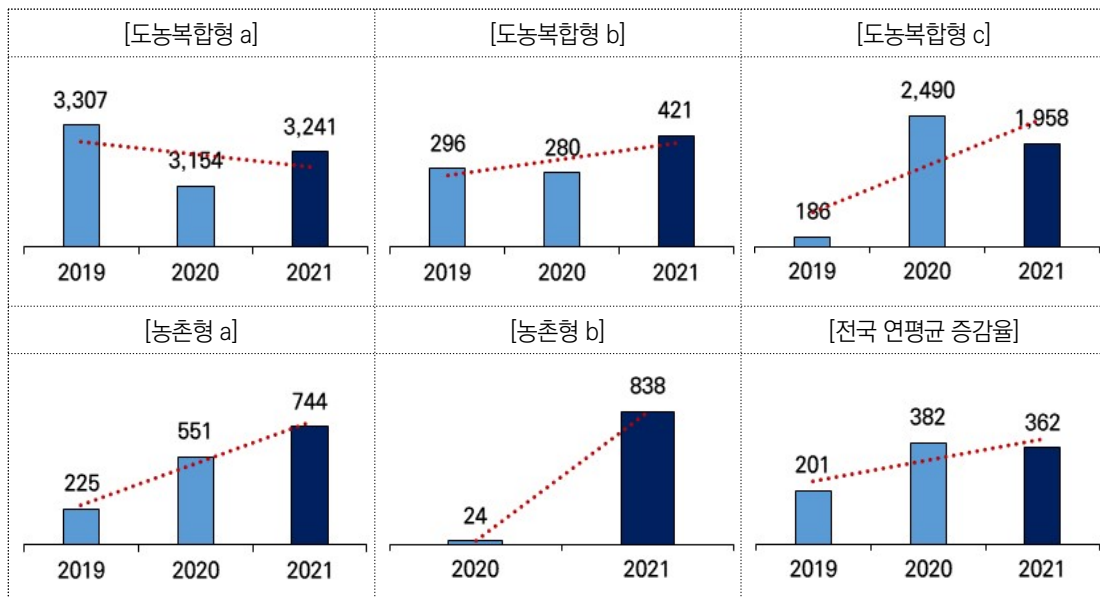
-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나타내는 ‘안전성 검사 건수’는 전반적으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상향세이지만, 전국 평균은 ‘19년 대비 ‘21년 80.7%가 증가하였음
- 2021년 기준 활성화 사례지역의 안전성 검사 건수는 전국평균(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제출 지역)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활성화 사례지역 중 도농복합형 a지역은 안전성 검사 건수가 ‘19년 대비 ‘21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검사 건수는 전국평균을 크게 앞서고 있음

표 5-15 활성화 사례지역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사례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3,307건	3,154건	3,241건	△1.0%	△2.0%
도농복합형 b	296건	280건	421건	15.4%	33.1%
도농복합형 c	186건	2,490건	1,958건	224.5%	952.7%
농촌형 a	225건	551건	744건	81.8%	230.7%
농촌형 b	-	24건	838건	3,391.7%	3,391.7%
전국 평균	201건	382건	362건	34.4%	80.7%

주 : 농촌형 b지역은 '19년 자료의 누락으로 '20년~'21년 2개년 자료만 반영하였음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4 활성화 사례지역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변화 추이 비교



□ 영양관리 역량(영양표시 활용률)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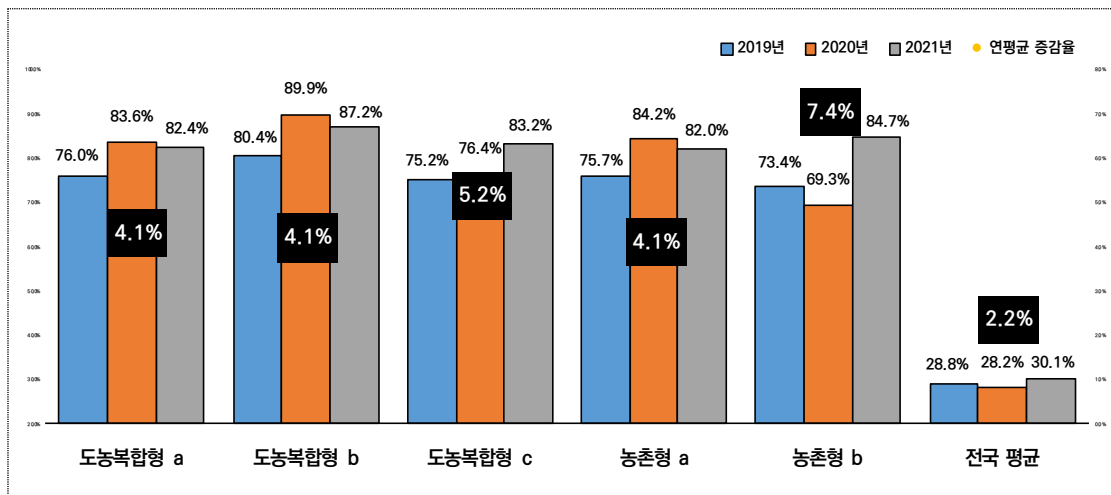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생활 습관을 갖추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일상에서 식재료의 ‘영양표시 이해를 통한 활용’이 중요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 모든 활성화 사례에서 지역주민 개개인의 영양관리 역량을 대표하는 ‘영양표시 활용율’이 20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상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식생활 습관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16 활성화 사례지역 식생활 영양관리(영양표시 인지율)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사례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76.0%	83.6%	82.4%	4.1%	8.4%
도농복합형 b	80.4%	89.9%	87.2%	4.1%	8.5%
도농복합형 c	75.2%	76.4%	83.2%	5.2%	10.6%
농촌형 a	75.7%	84.2%	82.0%	4.1%	8.3%
농촌형 b	73.4%	69.3%	84.7%	7.4%	15.4%
전국 평균	28.8%	28.2%	30.1%	2.2%	4.5%

주 : 대조군인 전국 기준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함
 * 자료 : 질병관리청(각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5 식생활 영양관리(영양표시 인지율)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사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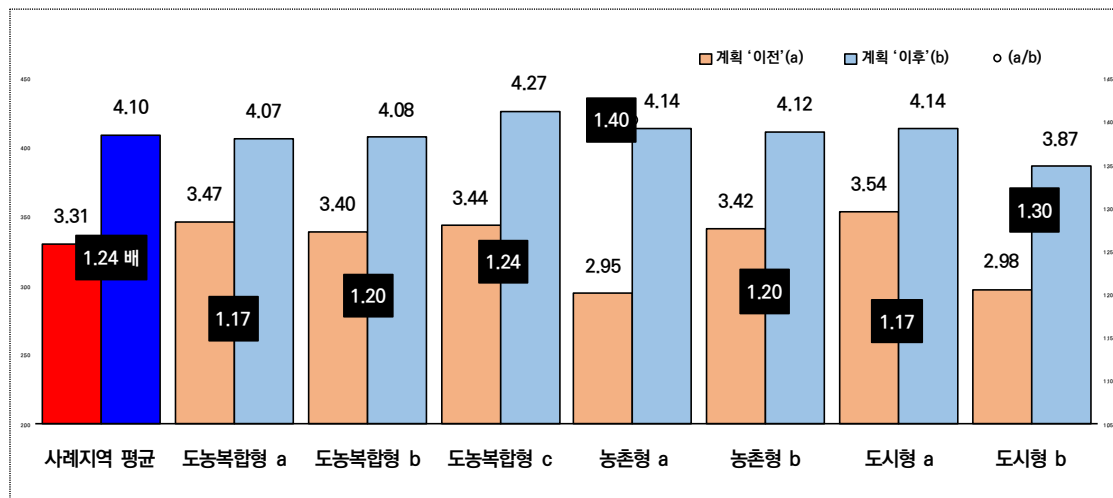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건강·안전 식재료 식별 강화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식별 역량'이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식별 역량'은 '보통(3.31)'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10)'으로 높게 상승하였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건강·안전 식재료를 식별하는 체감정도가 상이한데, 이는 해당 지자체가 중점을 두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세부사업 차이에 따라 주요 배경을 판단할 수 있음

그림 5-16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식별 강화(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5. ‘지역소비’ 영역의 ‘수준과 변화’

□ 지역먹거리의 지역소비 수준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 ‘소비단계’ 수준은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건강한 먹거리의 지역주민 소비력을 보여줌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103개 지자체(2021년 기준)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34개소)는 계획 미수립 지역(69개소)에 비해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취약계층 먹거리 공급액이 1.6~2.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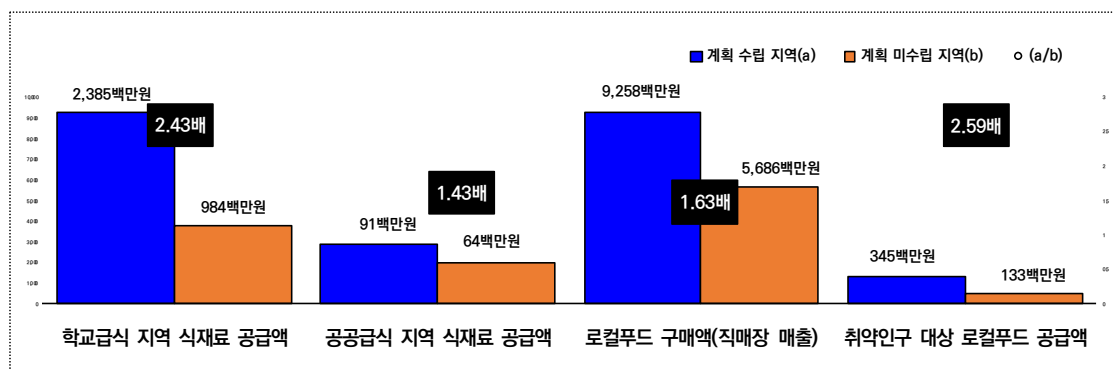
표 5-17 지역소비 관련 지역먹거리지수 지표 실적 (‘21년)

구분	단위	계획 수립(a)	계획 미수립(b)	전체 평균	(a/b)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액	백만원	2,385	984	1,563	2.43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액	백만원	91	64	78	1.43
로컬푸드 구매액(직매장 매출)	백만원	9,258	5,686	7,009	1.63
취약인구 대상 로컬푸드 공급액	백만원	345	133	194	2.59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23.9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보다 2.43배 높음
-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9.1천만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보다 1.43배 높음
- ‘로컬푸드 구매’ 수준은 직매장 매출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계획 수립 지역이 92.6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보다 1.63배 높음
- ‘취약인구 지역 식재료 공급’ 수준은 계획 수립 지역이 3.5억원으로 계획 미수립 지역

그림 5-17 학교·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공급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역보다 2.59배 높음

□ 지역먹거리 소비력(직매장 매출)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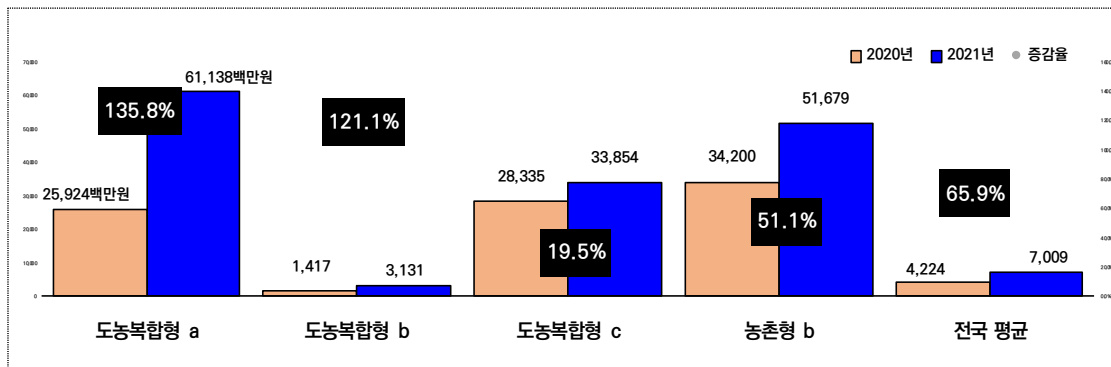
-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주민의 지역먹거리 직접 소비를 대표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향세를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에 견주어서 높은 수준임
- 활성화 사례지역 중 도농복합형 a지역과 b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매출액이 높으며, 농촌형 a지역⁴³⁾과 도농복합형 b지역⁴⁴⁾을 제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주민의 지역먹거리 소비력은 전국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높음

표 5-18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 소비력(직매장 매출액) 변화 추이

활성화 사례지역	2020년	2021년	'20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25,924백만원	61,138백만원	135.8%
도농복합형 b	1,417백만원	3,131백만원	121.1%
도농복합형 c	28,335백만원	33,854백만원	19.5%
농촌형 a	1,041백만원	729백만원	△30.0%
농촌형 b	34,200백만원	51,679백만원	51.1%
전국 평균	4,224백만원	7,009백만원	65.9%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8 지역먹거리 소비력(직매장 매출액) 변화 추이 비교 (활성화 지역-전국 평균)



□ 청소년 건강 먹거리 소비수준(학교급식) 변화 비교

- 청소년의 건강한 지역먹거리 소비는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43) 농촌형 a지역은 관계자 인터뷰 조사결과 해당년도 학교 및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음

44) 도농복합형 b지역은 2022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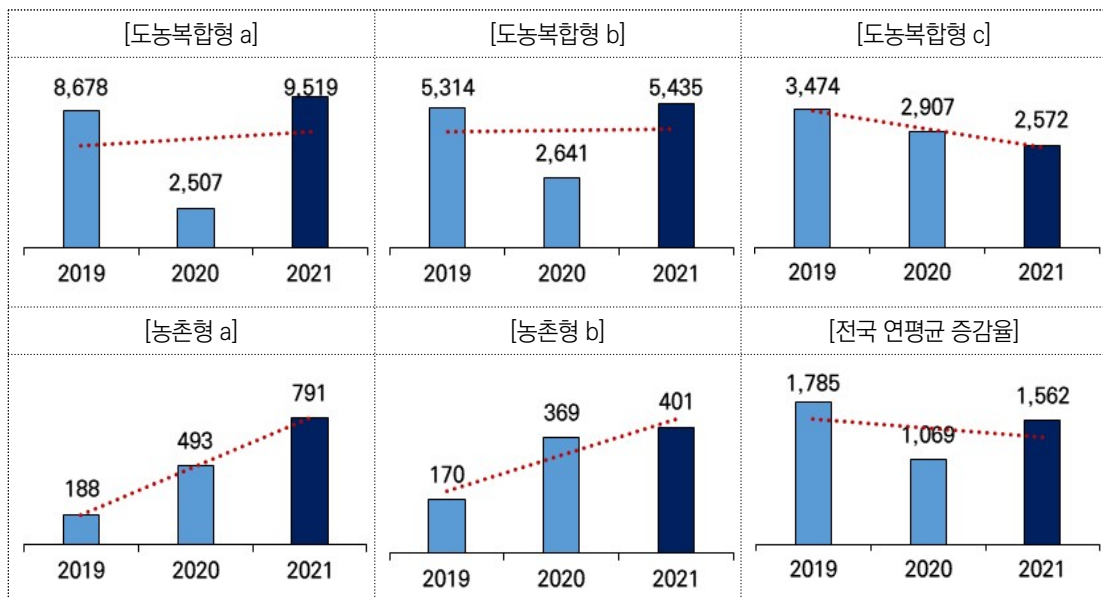
- 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액은 학생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전국 평균 연평균 6.5%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활성화 사례지역은 학교급식 지역먹거리 공급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농복합형 c지역은 감소 추세)
- 학교급식의 규모는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도농복합형 지역이 농촌형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규모가 높지만, 농촌형 지역도 지역먹거리의 학교급식 공급액을 1.3~3.2배 규모로 키웠음을 알 수 있음

표 5-19 활성화 사례지역 청소년 건강 먹거리 소비수준(학교급식) 변화 추이

활성화 사례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8,678백만원	2,507백만원	9,519백만원	4.7%	9.7%
도농복합형 b	5,314백만원	2,641백만원	5,435백만원	1.1%	2.3%
도농복합형 c	3,474백만원	2,907백만원	2,572백만원	△14.0%	△26.0%
농촌형 a	188백만원	493백만원	791백만원	105.1%	320.7%
농촌형 b	170백만원	369백만원	401백만원	53.6%	135.8%
전국 평균	1,785백만원	1,069백만원	1,562백만원	△6.5%	△12.5%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19 활성화 사례지역 청소년 건강 먹거리 소비수준(학교급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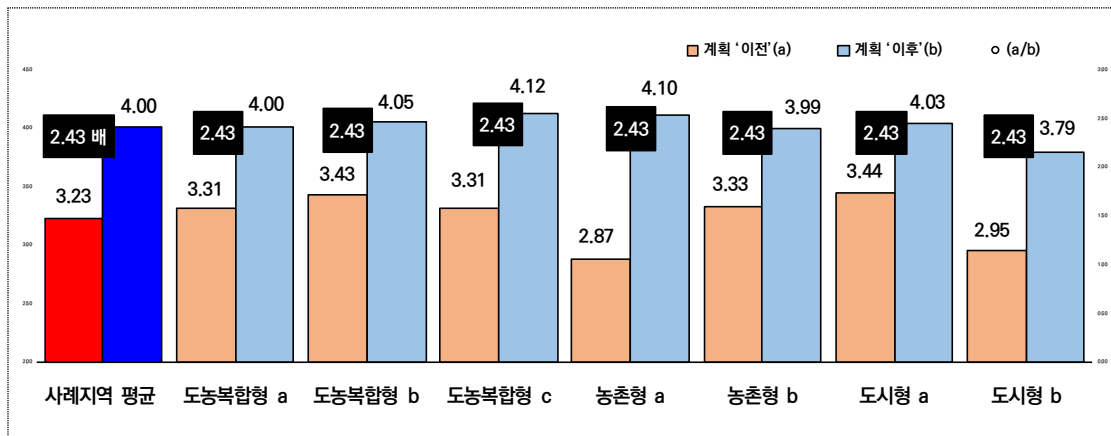
□ 소비자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가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는 ‘보통(3.2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0)’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선택권 등 소비 다양화 정도의 차이는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중점과제 차이에서 그 배경을 판단할 수 있음

그림 5-20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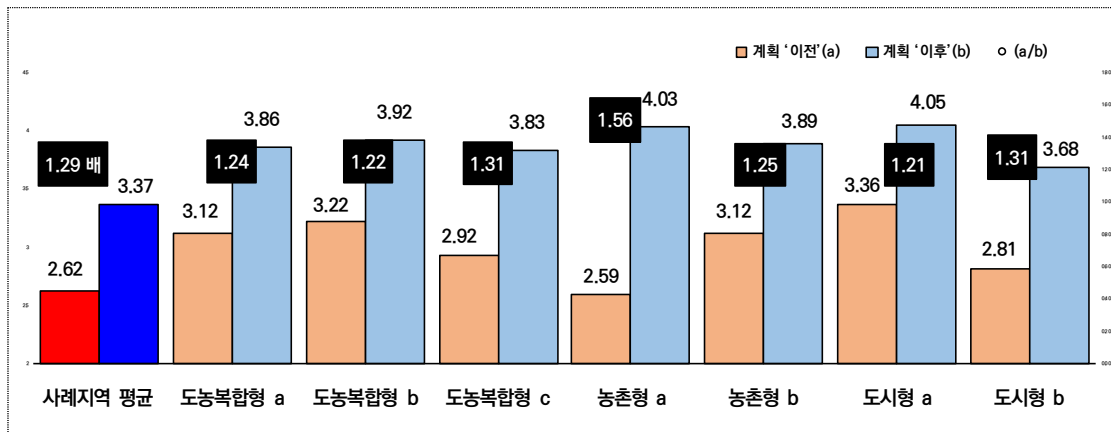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5-21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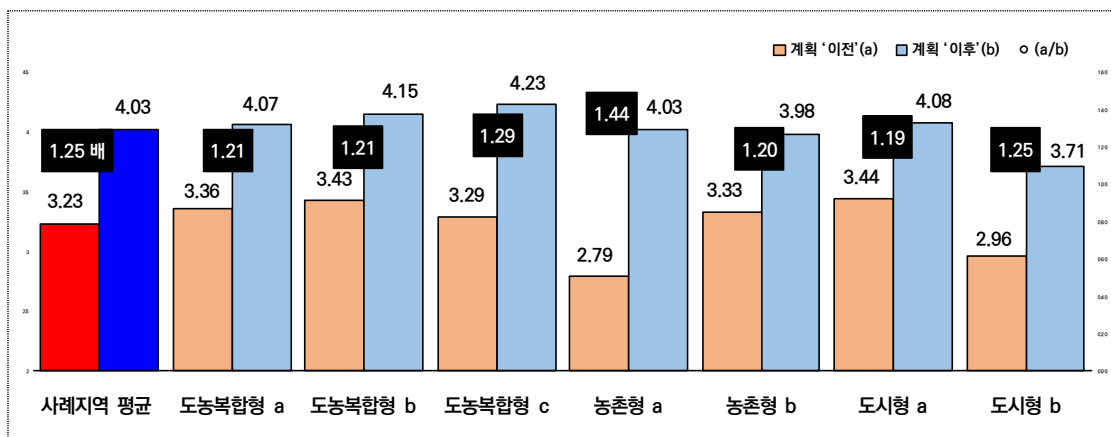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다양화’는 ‘낮음(2.62)’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보통(3.37)’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역먹거리 정보의 차이는 해당 지자체 추진 지역먹거리계획 중점과제에서 그 배경을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의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를 구조화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를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는 ‘보통(3.2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3)’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지역주민이 평가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⁴⁵⁾

그림 5-22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45) 활성화 사례지역별 먹거리 정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도시형이나 도시화가 높은 도농통합형 지역보다 농촌형 또는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도농통합형 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음

6. ‘폐기순환’ 영역의 ‘수준과 변화’

□ (계획수립-미수립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노력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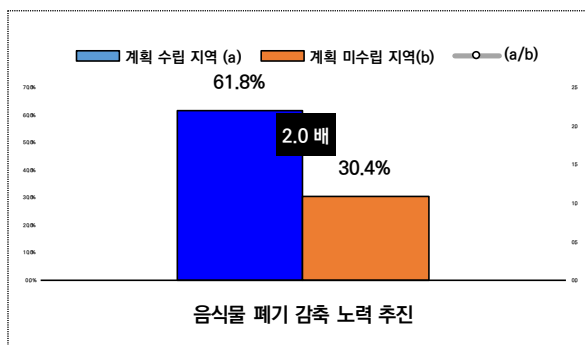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환경적 가치와 방향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에 61.8%가 노력하고 있음
- 반면, 지역먹거리계획 미수립 지자체는 30.4%만이 먹거리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0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노력 여부 (‘21년)

구 분	음식물 폐기 감축 노력 추진	음식물 폐기 감축 노력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1 (61.8%)	13 (38.2%)	34 (100.0%)
계획 미수립	21 (30.4%)	48 (69.6%)	69 (100.0%)
합 계	42 (40.8%)	61 (59.2%)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5-23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노력 여부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먹거리 자원 낭비 감축⁴⁶⁾ 변화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에서 자원 순환형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환경부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2개 사례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전국 평균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연평균 3.2% 감소하고 있는데, 활성화 사례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4.7%~43.8%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c지역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46) 먹거리 자원의 낭비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생활시설)로 판단하여 비교함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⁴⁷⁾할 수 있지만, 지역먹거리계획이 환경 친화적 먹거리 순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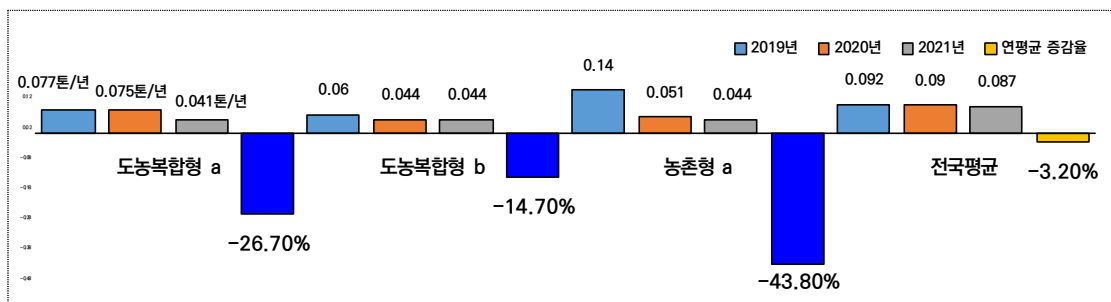
표 5-21 활성화 사례지역 별 먹거리 자원낭비 절감(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생활시설) 변화 추이

활성화 사례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율	'19년 대비 '21년 증감율
도농복합형 a	0.077톤/년	0.075톤/년	0.041톤/년	△26.7%	△46.2%
도농복합형 b	0.060톤/년	0.044톤/년	0.044톤/년	△14.7%	△27.2%
도농복합형 c	0.114톤/년	0.122톤/년	0.122톤/년	3.4%	6.9%
농촌형 a	0.140톤/년	0.051톤/년	0.044톤/년	△43.8%	△68.4%
농촌형 b	0.072톤/년	0.078톤/년	0.081톤/년	6.2%	12.7%
전국 기준	0.092톤/년	0.090톤/년	0.087톤/년	△3.2%	△6.3%

주 : 대조군으로 전국 합산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함

*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년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5-24 먹거리 자원낭비 절감(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생활시설) 변화 추이(활성화 지역-전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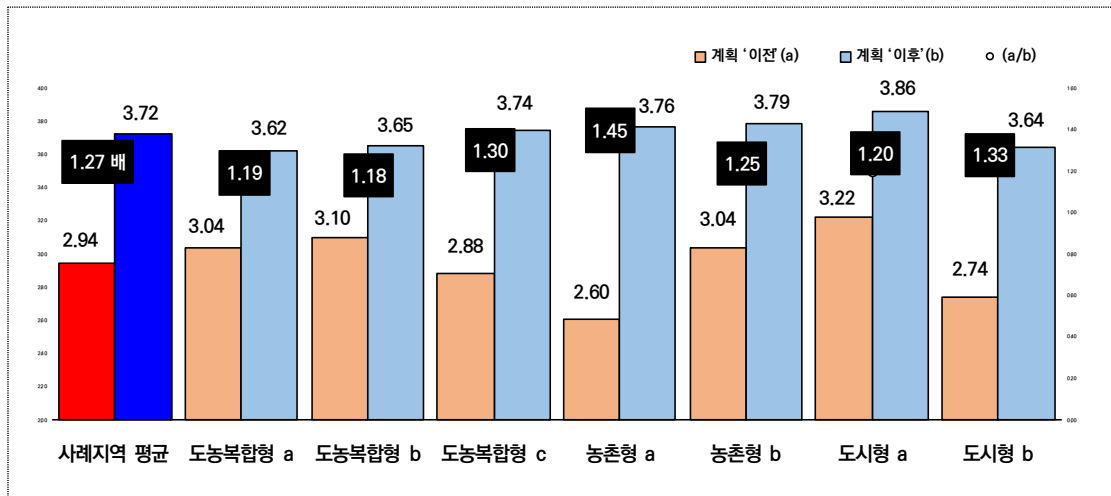


□ 남기지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이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은 ‘부족(2.94)’한 수준으로 진단하였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보통 이상(3.72)’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의 체감 정도가 상이한데, 해당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강조점과 지역주민의 실천역량 등의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47) 해당 활성화 사례지역은 혁신도시 개발의 안정화로 도시지역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그림 5-25 남기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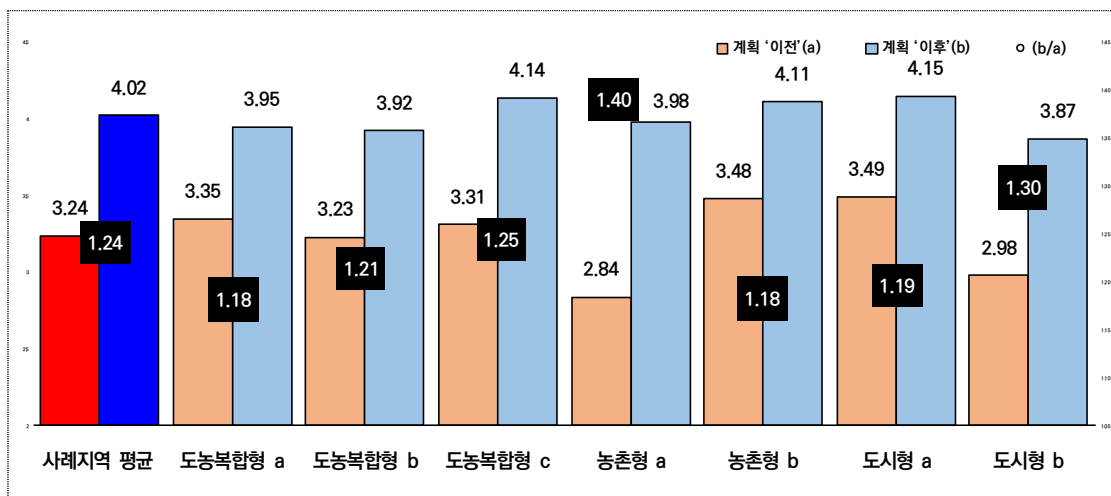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계획시행 이전-이후)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와 순환 활성화’가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 수준’은 ‘보통 (3.24)’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음(4.02)’으로 크게 상향하여 평가하고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 체

그림 5-26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순환 활성화(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주 : 응답자 중 무응답 및 중복응답 결측치 처리한 516명 응답결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감 정도가 상이한데, 이는 ‘남기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절감’에 대한 체감 정도와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남

제6장

지역먹거리계획의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

1. 지역주민 인식·태도 변화
2. 지역경제 파급 효과·영향
3. 추진체계·실행기반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의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개요

- (구조) 지역먹거리계획은 가치사슬 변화를 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분야에 긍정 효과로 이어지므로 영향을 모니터링·측정하는 구조
- (전제) 지역먹거리계획의 사업·활동으로 전이되어 나타는 결과(outcomes)·영향(impact)은 종합적 ‘변화+개선’의 파생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
- (항목) ‘①시민의 인식·태도, ②지역경제 순환구조, ③계획실행 기반’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하고, 자료 획득·분석 가능한 세부지표로 구체화
- (방식) ①지역주민 인식 변화(계획시행 이전-이후), ②정책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③실행체계 변화 및 자치법규 수준 등으로 비교
- (자료) 사례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 및 행정자료,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참여 시·군 제출자료

□ 지역먹거리계획 종합적 파생효과, 분석내용

- ① 지역주민의 먹거리 인식·태도 변화: 먹거리 체계 주요 항목에 대한 주민 체감 정도(수준)를 측정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로 비교·분석
- ②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지역먹거리계획 사업 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으로 구분·분석
- ③ 정책 추진체계와 자치법규 현황: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체계(전담부서, 지원센터, 거버넌스)와 정책 실행기반으로 ‘자치법규’ 현황을 비교·분석

1. 지역주민의 먹거리 ‘인식·태도’ 변화

(1) 주민의식 조사개요

□ 지역주민 의식조사 기본개요

- (구조) 지역먹거리계획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7개 사례지역(시·군·구) 주민(주체)이 지역먹거리 체계 및 전략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과제 등의 실행으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에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체감하는 정도(수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
- (전제) 지역먹거리계획은 정책 대상자인 주민(주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개개인이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일정한 영향(impact)을 미쳤을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사회적 여건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방식) 사례지역 주민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중점과제에 대해 계획의 시행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체감하는 수준(정도)을 설문조사로 자료(데이터) 생성하여 정성적 결과(outcome)를 정량적 자료로 변환하여 시행효과를 검토함
- (항목)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 목적과 관계된 지역먹거리 전략의 대표 기대효과로 ‘①건강, ②사회, ③환경, ④돌봄, ⑤경제, ⑥추진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항목을 제시하고 체감 정도와 변화 수준을 구분하여 측정(5점 리커트 척도⁴⁸)를 활용한 자기기입 방식)
- (조사) 7개 사례지역(시·군·구)별 100명씩 표본을 할당(성, 연령, 생산자+소비자 등)하고 해당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활동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⁴⁹)

□ 지역주민 의식조사 세부지표

- (개인건강) 건강한 식습관 형성, 영양과 균형있는 식사,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접근
- (사회인식) 먹거리 가치 이해, 학교교육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역사회 수준의 식생활 교육

48) 5점 리커트 척도는 1(전혀 아니다)~2(아니다)~3(보통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이며, 평균값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진단하였음

49) 지역먹거리계획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조사 특성상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과 관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집함. 조사응답 결과 무응답 및 중복응답 등은 분석에서 제외함. 설문분석에 활용한 표본수는 총 520개임(도농복합형-a지역 81개, b지역 60개, c지역 84개, 농촌형-a지역 63개, b지역 85개, 도시형-a지역 59개, b지역 88개)

- (환경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환경을 배려한 식생활 습관, 생태적 자원순환
- (돌봄·복지) 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먹거리 매개의 지역사회 돌봄
- (지역경제) 지역먹거리 생산(신선+가공), 지역먹거리 소비(급식+가정), 건강한 먹거리 선택, 지역먹거리 판매거점(매장+주체)
- (실행체계) 계획 관련 주체의 정책 참여, 먹거리 정책 프로그램·예산, 먹거리 관련 정보 제공, 지역먹거리 체계의 제도기반
- (태도의향) 지역먹거리 전략 목적 인지, 지역먹거리계획 인지와 동의, 지역먹거리계획 참여의향, 지역사회의 계획시행 여건 인식,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지불의향
- (전후비교) 식생활 변화와 식재료 식별, 사회적 가치 인식, 식생활 교육, 환경 배려와 폐기 저감, 먹거리 돌봄, 생산자 소득,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 소비자 선택, 지역순환경제, 정책참여, 예산·제도, 정보
- (제약조건)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이 주체의 인식·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impact)을 측정하여 정성적 효과를 수치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분석함
- (분석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인식·태도 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계획 시행 이전-이후 비교(지역먹거리계획 만족도 요인·군집·판별분석 기반)

□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42%, 여성이 58%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의 비율은 73.7%, 미혼자의 비율은 26.4%로 나타남

표 6-1 응답자의 성별(좌) 및 결혼 유무(우)

성별	빈도	비율	결혼유무	빈도	비율
남성	215	42.0	기혼	369	73.7
여성	297	58.0	미혼	132	26.4
합계	512	100	합계	501	100
표준편차	125.24		표준편차	152.66	

- 응답자의 연령대 중 50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40대(24.1%), 30대(21.5%), 20대(12.9%) 등의 순임
- 직업으로는 사무·관리직(일반회사 등)이 35.8%로 가장 높았고, 생산자(농림어업)(15.7%), 주부(14.5%) 등의 순이었는데, 생산자 15.7%, 소비자 84.3%의 구성임

표 6-2 연령(좌)과 직업(우)

연령	빈도	비율	직업	빈도	비율
10대	6	1.2	교사·공무원	44	8.9
20대	66	12.9	농림어업	78	15.7
30대	110	21.5	무 직	10	2.0
40대	123	24.1	사무·관리직(일반회사 등)	178	35.8
50대	146	28.6	생산직·기능직	28	5.6
60대	50	9.8	자 영 업	35	7.0
70대	9	1.8	전문직(의사·교수·연구원)	16	3.2
80대	1	0.2	주 부	72	14.5
합계	511	100	퇴직(은퇴)	10	2.0
표준편차	149.29		학생·취업준비	26	5.2
			합 계	497	100
			표준편차	136.59	

- 학력은 대학졸업(60.6%), 고졸(30.1%), 대학원 이상(6.1%), 중졸(2.6%), 초졸 이하(0.6%) 등임
- 소득은 1억원 이상(4.6%), 7천만원~1억원 미만(7.0%), 5천만원~7천만원 미만(17.8%), 3천만원~5천만원 미만(40.7%), 3천만원 미만(30%) 등의 분포를 보임

(1)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태도 진단’

□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먹거리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인지+동의’, 해당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참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인지도’(알고 있다)는 평균 3.52점, 계획 시행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동의도’(동의한다)는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도’(알고 있다)는 평균 3.45점, 해당 지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참여도’(참여하겠다)는 평균 3.74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대한 여건과 인식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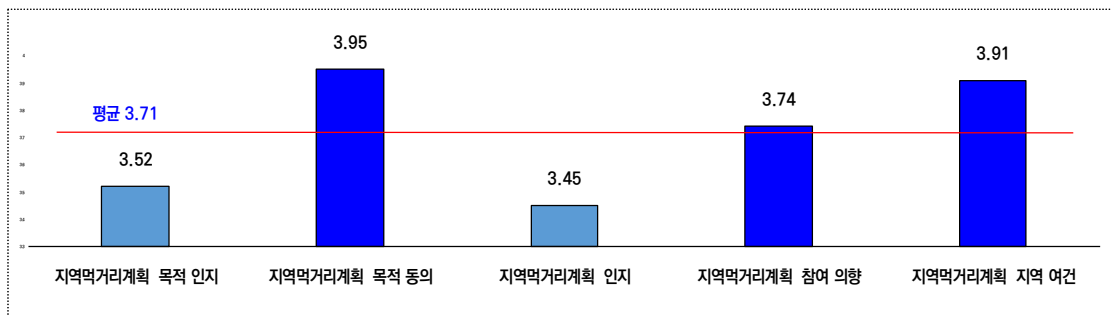
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1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여건은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됨

- ‘지역먹거리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지역계획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6-3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진단

구분	평균값	std	구분	평균값	std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취지(목적) 인지	3.52	0.9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의 참여 의향	3.74	0.9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취지(목적) 동의	3.95	0.98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사회 여건	3.91	0.98
살고 있는 곳의 ‘지역먹거리계획’의 인지	3.45	0.98	전체평균	3.71	0.98

그림 6-1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과제의 ‘현재수준’ 진단

-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먹거리 전략의 기대효과 영역을 ‘건강, 사회, 환경, 돌봄, 경제, 체계’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총 21개의 세부 항목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현재 수준’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의 영역에서 나와 이웃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3.85), 건강한 식습관 형성(3.70), 영양 있고 균형잡힌 식사(3.67)’ 등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3.74)’의 수준으로 평가됨
- ‘사회’의 영역에서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3.77),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3.77),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 이해(3.76),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여(3.61)’ 등으로 평가되어 ‘보통 이상(3.73)’으로 나타남
- ‘환경’의 영역에서 ‘생태적이고 환경적 자원의 순환(3.62),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3.59), 음식 폐기물 절감(3.33)’ 등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3.51)’으로 평가됨

- ‘돌봄’의 영역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3.64),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3.61),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3.57)’ 등으로 평가되어 ‘보통 수준(3.61)’으로 진단됨
- ‘경제’의 영역에서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3.74),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3.76),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3.77),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3.64)’ 등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3.73)’으로 평가됨
- ‘체계’의 영역에서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제도(3.65),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3.63),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 참여(3.56),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3.56)’ 등으로 진단되어 ‘보통 수준(3.60)’으로 나타남
- 6개 영역 21개 세부항목으로 현재 수준을 진단한 내용은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다루는 중점과제인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항목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 학교의 식생활 교육, 사회의 식생활 교육, 주민의 건강 먹거리 선택, 지역먹거리 소비 증대, 농업·농촌의 가치 인지’ 등임

표 6-4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영역별 세부항목의 ‘현재 수준’ 진단

구분		평균값	std	순위	구분		평균값	std	순위
건강 (3.74)	건강한 식습관 형성	3.70	0.86	8	돌봄 (3.61)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	3.62	0.88	15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 도움	3.67	0.87	9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	3.57	0.89	18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	3.85	0.87	1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3.64	0.87	11
사회 (3.73)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 인지	3.76	0.9	6	경제 (3.73)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 증대	3.74	0.86	7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3.77	0.88	2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 증대	3.76	0.85	5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3.77	0.89	3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대	3.77	0.86	4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3.61	0.91	16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 확대	3.64	0.88	12
환경 (3.51)	음식 폐기물 절감	3.33	0.93	21	체계 (3.60)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참여	3.56	0.89	20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	3.59	0.9	17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	3.56	0.88	19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	3.62	0.9	14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3.63	0.9	13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제도 마련	3.65	0.88	10
전체평균		3.66			obs		516		

- 반면, 현재 수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항목은 ‘음식 폐기물 절감, 먹거리 정책에 다양한 주체 참여, 먹거리 정책·예산, 환경배려 식생활 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사회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과제의 ‘향후 중요도’ 진단

-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먹거리 전략의 기대효과 영역을 ‘건강, 사회, 환경, 돌봄, 경제, 체계’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총 21개의 세부 항목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향후 중요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의 영역에서 나와 이웃의 ‘영양 있고 균형잡힌 식사(4.36),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4.29), 건강한 식습관 형성(4.29)’ 등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4.31)’ 수준으로 평가됨
- ‘사회’의 영역에서 ‘농업·농촌·먹거리 의미·가치 인지(4.30),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4.29), 지역사회 건강 먹거리 식생활 교육(4.28),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여(4.20)’ 등으로 평가되어 ‘매우 중요(4.27)’로 나타남
- ‘환경’의 영역에서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4.20),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 도움(4.17), 음식 폐기물 절감(3.98)’ 등으로 나타나 ‘중요(4.12)’로 평가됨
- ‘돌봄’의 영역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 확대(4.21),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4.21),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4.17)’ 등으로 평가되어 ‘매우 중요(4.20)’로 진단됨
- ‘경제’의 영역에서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 증대(4.30),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 증대(4.28),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대(4.32),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 확대(4.22)’ 등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4.28)’로 평가됨
- ‘체계’의 영역에서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4.22),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제도 마련(4.20),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 정책 참여(4.17),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4.16)’ 등으로 진단되어 ‘중요(4.19)’로 나타남
- 6개 영역 21개 세부항목으로 향후 중요정도를 진단한 내용은 지역먹거리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결과인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항목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 주민의 건강 먹거리 선택, 농업·농촌의 가치 인지, 지역먹거리 생산 증대, 건강한 식습관 형성, 학교의 식생활 교육’ 등임

- 반면, 향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항목은 ‘음식폐기물 절감, 먹거리 정책·예산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환경배려 식생활 습관, 먹거리 정책의 다양한 주체 참여, 생태적·환경적 자원순환’ 등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

표 6-5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과제의 ‘향후 중요도’ 진단

구분		평균값	std	순위	구분		평균값	std	순위
건강 (4.31)	건강한 식습관 형성	4.29	0.75	5	돌봄 (4.20)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	4.21	0.78	12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 도움	4.27	0.75	9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	4.17	0.80	19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	4.36	0.74	1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4.21	0.79	13
사회 (4.27)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 인지	4.30	0.76	3	경제 (4.28)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 증대	4.30	0.75	4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4.29	0.76	6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 증대	4.28	0.73	7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4.28	0.76	8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대	4.32	0.77	2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4.20	0.81	15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 확대	4.22	0.79	11
환경 (4.12)	음식 폐기물 절감	3.98	0.88	21	체계 (4.19)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참여	4.17	0.79	17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	4.17	0.82	18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	4.16	0.80	20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	4.20	0.81	16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4.22	0.78	10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제도 마련	4.20	0.80	14
전체평균		4.23			obs		516		

(2)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개요

- 앞서 살펴본 지역먹거리계획이 다루는 영역인 ‘건강, 사회, 환경, 돌봄, 경제, 체계’ 등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이므로 여기에서는 ‘만족도(현재의 수준)과 중요도(향후 중요도)’를 종합하여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을 실시하여 특징을 살펴봄
- 기존의 IPA 분석은 조사와 분석과정의 간편성, 시각화에 대한 장점이 있음에도 중요도 비율이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한계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존의 IPA 분석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정 IP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수정 IPA 분석 방법론으로 Deng(2007)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IPA⁵⁰⁾를 활용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총 21개 세부항목 중 현재 만족 수준에서 가장 높

표 6-6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세부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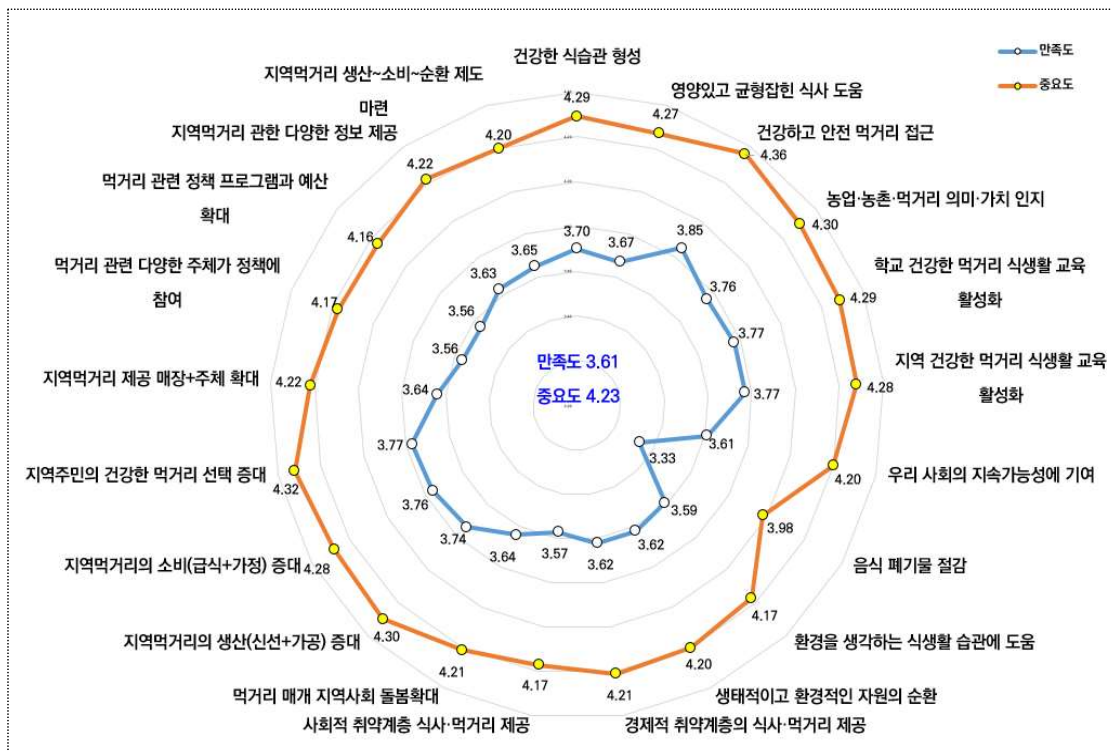
구 분		현재 만족 수준			향후 중요 수준			차이 (b-a)
		평균값(a)	std	순위	평균값(b)	std	순위	
건강	건강한 식습관 형성	3.70	0.86	8	4.29	0.75	5	0.59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 도움	3.67	0.87	9	4.27	0.75	9	0.60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	3.85	0.87	1	4.36	0.74	1	0.51
사회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 인지	3.76	0.90	6	4.30	0.76	3	0.54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3.77	0.88	2	4.29	0.76	6	0.52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	3.77	0.89	3	4.28	0.76	8	0.51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3.61	0.91	16	4.20	0.81	15	0.59
환경	음식 폐기물 절감	3.33	0.93	21	3.98	0.88	21	0.65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	3.59	0.90	17	4.17	0.82	18	0.58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	3.62	0.90	14	4.20	0.81	16	0.58
돌봄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	3.62	0.88	15	4.21	0.78	12	0.59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	3.57	0.89	18	4.17	0.80	19	0.60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3.64	0.87	11	4.21	0.79	13	0.57
지역 경제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 증대	3.74	0.86	7	4.30	0.75	4	0.56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 증대	3.76	0.85	5	4.28	0.73	7	0.52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대	3.77	0.86	4	4.32	0.77	2	0.55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 확대	3.64	0.88	12	4.22	0.79	11	0.58
추진 체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참여	3.56	0.89	20	4.17	0.79	17	0.61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	3.56	0.88	19	4.16	0.80	20	0.60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3.63	0.90	13	4.22	0.78	10	0.59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을 위한 제도 마련	3.65	0.88	10	4.20	0.80	14	0.55
전 체		3.66			4.23			0.57

50) Deng(2007)의 연구 결과로는 설문조사로 수집된 직접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 방법으로 도출된 간접 중요도가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Deng(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각 속성별 만족도 항목을 자연로그로 변형하여 전반적 만족도와 편상관분석을 통해 편상관계수를 도출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직접 평가결과인 만족도를 X축으로, 만족도를 자연로그로 변경하여 전반적 만족도와와의 편상관 계수를 상대적 중요도인 Y축으로 사용하였음. 평균값(중심점)을 기준으로 X축은 성취도(명시적 만족도), Y축은 중요도(내재적 중요도)로 설정하고 4사분면에 나타내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ng, W., (2007).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5), 1274-1284.를 참조

은 조사 결과를 나타낸 항목은 ‘건강(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이며, 향후 중요 수준에서도 같은 항목(건강)이 가장 높은 중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1개 세부항목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보다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21개 항목 모두 지역먹거리 계획의 현재 만족 수준 보다 향후 중요도가 더 높게 판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2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세부항목’ 비교



□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총 21개 세부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를 4개의 사분면에 위치하여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선시정 필요영역(2사분면)은 (내재적) 중요도가 높은 반면 (명시적)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선과제로 꼽을 수 있음
 - 우선시정 영역에는 사회 분야 ‘배려와 포용 등 지속가능성’, 환경 분야 ‘음식폐기물 절감, 자원 순환’, 돌봄분야 ‘먹거리 매개 지역사회 돌봄’, 경제 분야 ‘먹거리 제공 주체 확대’, 추진체계 분야 ‘다양한 주체의 정책 참여, 제도마련 기여’ 등이 포함됨

- 지속관리 중요영역(1사분면)은 (내재적) 중요도와 (명시적)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지속관리 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사회분야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 경제분야 ‘지역먹거리 생산 증대, 지역먹거리 소비 증대’ 등임
- 과잉노력 지양영역(4사분면)은 (내재적) 중요도는 낮으나 (명시적)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중요도에 견주어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과잉노력을 지양할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잉노력 지양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건강분야 ‘건강한 식습관,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 사회분야 ‘농업·농촌·먹거리 의미·가치 이해, 지역사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경제 분야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확대’ 등임
- 후순위 약점영역(3사분면)은 (내재적) 중요도와 (명시적)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주의해야 하는 내용 이면서 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후순위 대응이 적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후순위 약점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환경 분야 ‘환경을 고려하는 식습관 형성’, 돌봄 분야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추진체계 분야 ‘정책 프로그램과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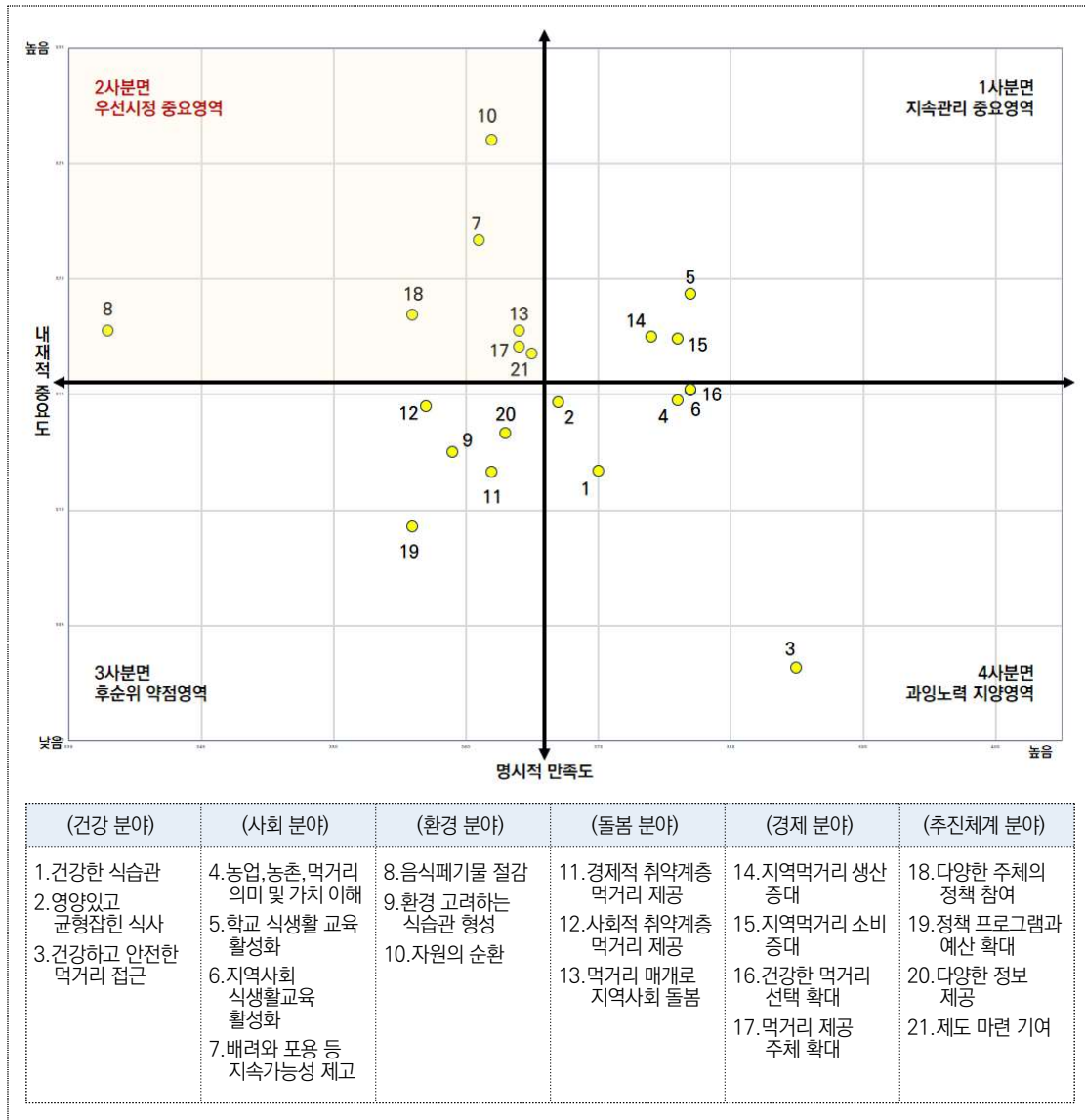
표 6-7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종합

구분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영역 (3사분면)	과잉노력 지양영역 (4사분면)
건강	-	-	-	·건강한 식습관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
사회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배려와 포용 등 지속 가능성	-	·농업, 농촌, 먹거리 의미 및 가치 이해 ·지역사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환경	-	·음식폐기물 절감 ·자원의 순환	·환경 고려하는 식습관 형성	-
돌봄	-	·먹거리 매개 지역사회 돌봄	·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
경제	·지역먹거리 생산 증대 ·지역먹거리 소비 증대	·먹거리 제공 주체 확대	-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확대
체계	-	·다양한 주체 정책 참여 ·제도마련 기여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 ·다양한 정보 제공	-

산 확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별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부록 2’를 참고

그림 6-3 지역먹거리계획 영역별 기대효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수정 IPA)



(3) 기대효과에 대한 군집별 먹거리계획 태도 비교

□ 군집분석

- 이 연구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세분화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⁵¹⁾ 도출된 4가지 요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함

- 군집분석은 계층적·비계층적 군집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와드방법(Ward's method)의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함
 -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유효한 군집 수를 확정하였으며, 도출된 군집해의 군집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수행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의 기대효과별 ‘만족 수준’에 대해서 도출된 4개의 군집해가 결정되고 프로파일을 통해 세분 집단을 아래와 같이 명명함
- 군집 1: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이하이며 환경 분야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 군집 2: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최하위 집단
 - 군집 3: 건강분야 및 사회분야에서 만족하는 집단
 - 군집 4: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

표 6-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구분		건강 및 사회분야 기대효과	환경분야 기대효과	돌봄분야 기대효과	경제 및 체계분야 기대효과
K- 평 균 값	군집 1(n=151)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15 ^{주)}	2.90	3.04	3.09
	군집 2(n=27) :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20	1.99	2.10	2.08
	군집 3(n=235)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3.89	3.63	3.72	3.80
	군집 4(n=103) :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64	4.54	4.59	4.59
F-Value		377.98	362.11	306.39	467.56
P-Value(***= p<0.001)		0.000***	0.000***	0.000***	0.000***

주 : 군집 당 기대효과별 만족도 점수를 나타냄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의 기대효과별 ‘중요 수준’에 대해서 도출된 4개의 군집해가 결정되고 프로파일을 통해 세분 집단을 아래와 같이 명명함
- 군집 1: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요하게 판단하는 집단
 - 군집 2: 건강 및 사회 분야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집단
 - 군집 3: 환경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는 집단
 - 군집 4: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는 집단
- 사후적으로 수행한 판별분석의 주요내용은 부록 2를 참고

51) 부록 2 내용 참고

표 6-9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구분		건강 및 사회분야 기대효과	환경분야 기대효과	돌봄분야 기대효과	경제 및 체계분야 기대효과
K- 평 균 값	군집 1(n=146) :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92 ^{주)}	4.83	4.89	4.86
	군집 2(n=167)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	4.44	4.25	4.34	4.41
	군집 3(n=166) : 환경분야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88	3.68	3.72	3.81
	군집 4(n=37)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87	2.64	2.93	2.91
F-Value		511.81	321.11	299.37	453.84
P-Value(***= p<0.001)		0.000***	0.000***	0.000***	0.000***

주 : 군집 당 기대효과별 만족도 점수를 나타냄

□ 세분 집단별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태도 비교분석

- 응답자의 군집 특성별 지역먹거리계획의 목적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해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에 만족하는 그룹’이 계획의 목적을 가장 잘 인지하였고, ‘건강·사회 분야 만족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불만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 그룹’ 순으로 나타남
 - ‘중요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매우 중요 그룹’이 계획의 목적을 가장 잘 인지하였고, ‘건강·사회 분야 중요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효과 중요하지 않은 그룹’ 순임

표 6-10 지역먹거리계획 ‘목적 인지’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Cluster 구분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취지(목적)에 대해 잘 인지		
		평균값	F-statistic	Scheffe's test
만 족 도 기 준	군집 1 : 환경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08	31.06***	· 군집 2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33		
	군집 3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3.69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08		
중 요 도 기 준	군집 1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03	35.66***	·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	3.72		
	군집 3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08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46		

주 : ***= p<0.01, **= p<0.05, *= p<0.1

- 응답자의 군집 특성별 지역먹거리계획의 목적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해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만족 그룹’이 계획의 목적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건강·사회 분야 만족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 그룹’ 등의 순임
- ‘중요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중요 그룹’이 계획 목적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건강·사회 분야 중요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그룹’ 순임

표 6-11 지역먹거리계획 ‘목적 동의’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Cluster 구분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취지(목적)에 대해 동의		
		평균값	F-statistic	Scheffe’s test
만족도 기준	군집 1 : 환경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50	42.96***	· 군집 2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89		
	군집 3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4.12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50		
중요도 기준	군집 1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47	56.20***	·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건강·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	4.13		
	군집 3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59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73		

주 : ***= p<0.01, **= p<0.05, *= p<0.1

- 응답자의 군집 특성별로 해당 지역 지역먹거리계획의 ‘인지정도’에서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2 지역먹거리계획 ‘지역계획 인지’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Cluster 구분		본인 거주 ‘지역먹거리계획’ 인지		
		평균값	F-statistic	Scheffe’s test
만족도 기준	군집 1 : 환경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2.96	38.04***	· 군집 2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37		
	군집 3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3.61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07		
중요도 기준	군집 1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3.92	33.00***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건강·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	3.65		
	군집 3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04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49		

주 : ***= p<0.01, **= p<0.05, *= p<0.1

- ‘만족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하는 그룹’이 자기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건강·사회 분야 만족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인 그룹’ 순임
 - ‘중요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다는 그룹’이 자기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그룹’ 순임
- 응답자의 군집 특성별로 해당 지역 지역먹거리계획의 ‘참여의향’에 대해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만족 그룹’이 계획 참여의향이 높고, ‘건강·사회분야 만족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 그룹’ 순임
 - ‘중요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중요 그룹’이 계획 참여의향이 높고, ‘건강·사회분야 중요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중요하지 않은 그룹’ 순임

표 6-13 지역먹거리계획 ‘지역계획 참여의향’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Cluster 구분		‘지역먹거리계획’ 참여의향		
		평균값	F-statistic	Scheffe’s test
만 족 도 기 준	군집 1 : 환경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16	50.76***	· 군집 2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78		
	군집 3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3.97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33		
중 요 도 기 준	군집 1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27	54.38***	·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건강·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	3.96		
	군집 3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34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51		

주 : ***= p<0.01, **= p<0.05, *= p<0.1

- 응답자의 군집 특성별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우호적 지역인식’에 대해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기대효과 만족 그룹’이 지역사회 먹거리 계획 우호적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건강·사회 분야 만족 그룹,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 그룹’ 순임

- ‘중요도’ 기준으로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 매우 중요 그룹’이 지역사회가 먹거리계획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환경 분야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그룹’ 순임

표 6-14 지역먹거리계획 ‘지역사회 우호적 여건 인지’에 대한 세분 집단별 비교

Cluster 구분		‘지역먹거리계획’ 지역사회 우호적 여건		
		평균값	F-statistic	Scheffe's test
만 족 도 기 준	군집 1 : 환경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43	51.11***	· 군집 2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81		
	군집 3 : 건강·사회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4.07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53		
중 요 도 기 준	군집 1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34	45.41***	· 군집 1 > 군집 3 > 군집 4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군집 2 : 건강·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	4.14		
	군집 3 : 환경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54		
	군집 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81		

주 : ***= p<0.01, **= p<0.05, *= p<0.1

(4)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이후’ 수준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이 담고 있는 세부항목에 대해 계획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수준을 각각 진단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비교 결과, 전 항목 평균이 시행이전 3.17에서 시행 이후 3.96으로 증가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충분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함
- 계획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수준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그 차이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개선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 이전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크게 높아진 항목은 ‘먹거리 정책의 민간 참여(0.882),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0.877), 지역먹거리 제공 및 구매처 확대(0.839),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0.818), 농업·농촌·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이해(0.816),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0.807)’ 등의 순임
- 계획 이전 보다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나와 가족·이웃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0.711),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와 돌봄(0.758), 학교·지역사회 식생활 교육(0.774),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0.775)’ 등의 순임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이후 수준진단 결과를 4개의 사분으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개선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사분면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건강한 식재료의 식별,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학교 및 지역사회 식생활 교육’ 등이 해당함
- 3사분면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수준이 낮은 영역으로 ‘음식 폐기물 감축,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지역먹거리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됨
- 4사분면은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보다 시행 이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은 영역으로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이 해당함
 - 다만, 해당 항목의 평균은 계획 시행이전 3.23에서 시행 이후 3.95로 0.72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수준은 향상된 것임

그림 6-4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이후’의 세부항목별 수준진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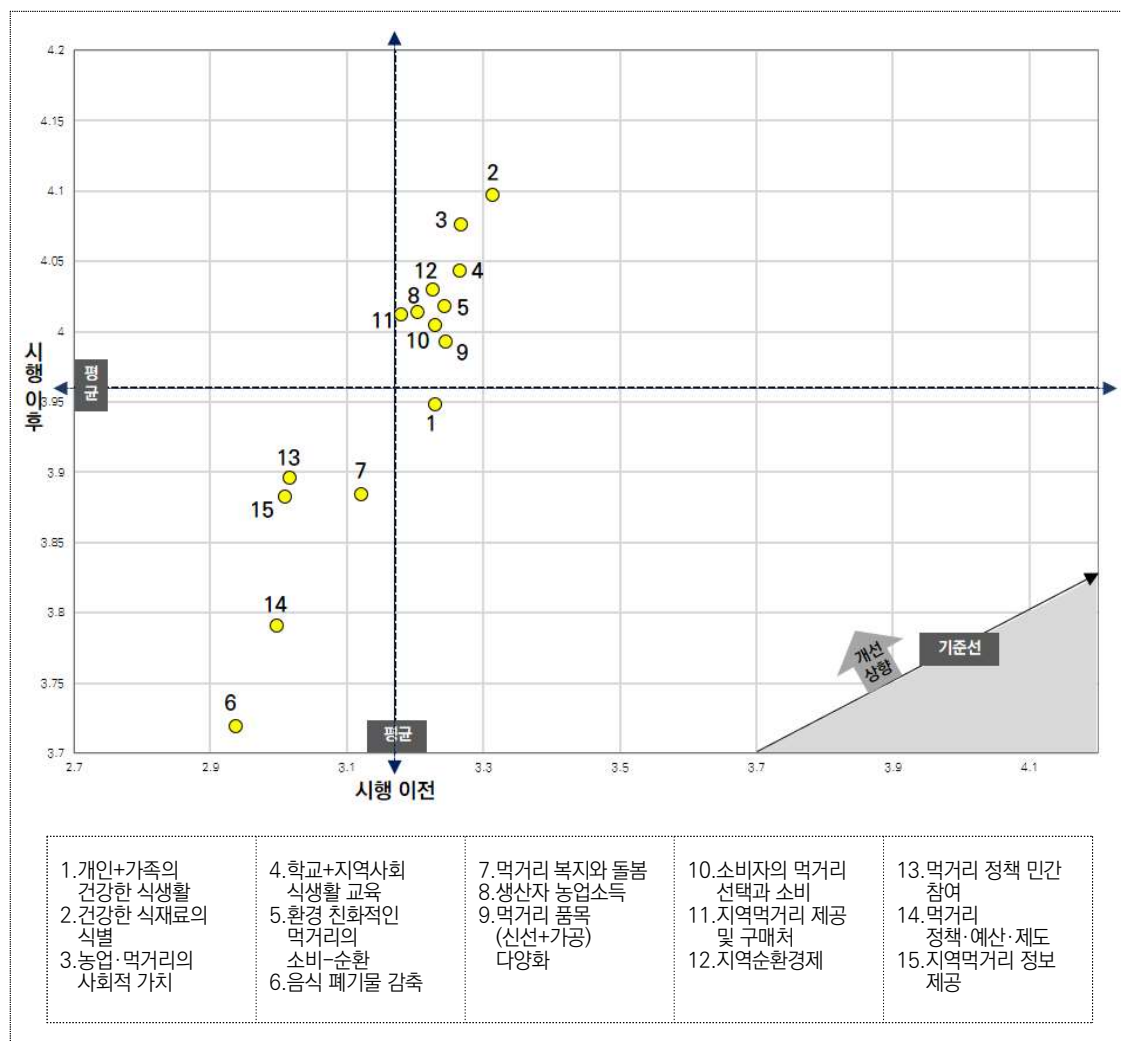


표 6-1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과 이후 세부항목별 비교

세부항목	시행 이전(a)	시행 이후(b)	(b-a)	순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3.231	3.942	0.711	15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식별 능력	3.315	4.099	0.785	8
농업·농촌·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이해	3.262	4.078	0.816	5
학교와 지역사회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3.270	4.045	0.774	12
환경 친화적 먹거리 소비와 순환 강화	3.240	4.017	0.777	10
남기거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 감축	2.945	3.723	0.778	9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와 돌봄 확대	3.128	3.887	0.758	13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	3.204	4.023	0.818	4
다양한 지역먹거리 품목(신선+가공) 증가	3.253	4.003	0.750	14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과 소비 확대	3.235	4.010	0.775	11
지역먹거리 제공 및 구매처 확대	3.178	4.017	0.839	3
지역생산-지역소비 순환경제 활성화	3.229	4.037	0.807	6
먹거리 정책의 민간 참여 강화	3.031	3.913	0.882	1
먹거리 정책, 예산, 제도 확대	3.013	3.800	0.787	7
지역먹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	3.018	3.896	0.877	2
전체평균	3.170	3.966	0.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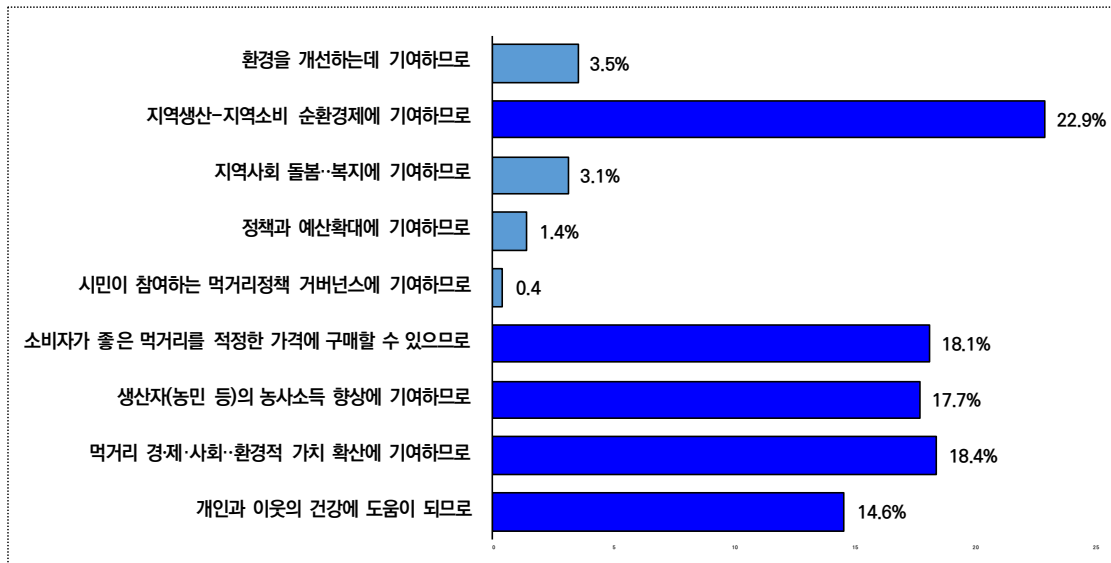
(5) 지역먹거리계획 필요 자원 지불의향 분석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필요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민간영역에서 계획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일정 정도 담당하는 역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 예산 이외의 재원을 위해 지역주민은 지불할 의향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지불(지출)하겠다’는 응답은 55.6%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6-16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

지불(지출) 의사	빈도	비율(%)
지불(지출)하겠다	287	55.6
지불(지출)하지 않겠다	229	44.4
합 계	516	100

그림 6-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의 주된 이유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 예산 이외의 재원에 대해 ‘지불(지출)하겠다’로 주된 이유로는 ‘먹거리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므로(18.4%), 소비자가 좋은 먹거리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18.1%), 생산자(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므로(17.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 지불 응답자(전체의 55.6%)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은 ‘월 1만원(46.6%), 월 3만원(20%), 월 2만원(17.1%)’ 등의 순으로, 1인당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월 2.2만원으로 나타남

표 6-17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지불 의사(의향) 금액

구분	월 1만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4만원	월 5만원	합계	표준편차
빈도	128	47	55	6	39	275	89.8
비율	46.6	17.1	20	2.2	14.2	100	

- 반면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필요 재원에 지불(지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44.4%)의 지불·지출 반대 이유로는 ‘지불(지출)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43.5%),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0.9%), 지불(지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서(9.1%), 지역먹거리계획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8.7%)’ 등으로 나타남

표 6-1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원의 미지출·미지불 의사(의향)의 주된 이유

지불(지출)거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빈도	비율(%)
지불(지출)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100	43.5
지불(지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서	21	9.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12	5.2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48	20.9
지역먹거리계획에 기대가 없어서	13	5.7
지역먹거리계획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	20	8.7
기 타	16	7.0
합 계	230	100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영향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전제

- 지자체(시·군·구)가 시행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정책 사업은 해당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 시·도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함
-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기초(시·군·구) 단위까지 내려가는 산업연관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단위의 산업연관표 작성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간접추계를 통해 구하는 방식인 다 지역 산업연관표 방식으로 선행연구⁵²⁾에서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광역 시·도의 시·군·구 산업연관표를 따로 작성하여 분석하였음
-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발생함
- 첫째, 지역먹거리계획의 세부사업 별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해당 산업 분야의 신규 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후방산업의 연쇄적인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임
- 둘째, 지역먹거리계획의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인건비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전후방산업의 연쇄적인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임

(1) 경기도 화성시 (도농복합형)

□ 분석 개요

- 화성시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19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화성시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78,538	2,342

52) 김시백, 김수은. (2023). 전라북도 경제정책 수립 방안 연구 II. 전북연구원.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20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영양플러스 사업	177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0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교육	63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농식품가공연구관 운영관리	12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2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	16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우량종자 보급	8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49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과수새기술보급	32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	20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업문화분야 연구회 육성	1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농업신기술시범(농업문화)	20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업신기술시범(식량작물)	100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업신기술시범(식량작물)	56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	50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00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원예새기술보급	11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128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 프로그램 개발교육	2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30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4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	5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우리지역 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	2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24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탄소포인트제 운영	63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G마크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지원	82	농산물 창고업	운송서비스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G마크 친환경 컨설팅 지원	2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2,482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17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공공급식 사업운영	92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공공급식지원 시범사업	8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10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1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83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173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41,044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	16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0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6,00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1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15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8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76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	2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경기청년 스마트팜	353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건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5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	3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발농업직불제(논이모작)	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5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1,700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제품
지역특화품종(골든퀸3호) 전용실시권 취득지원	1,400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지역특화품종(골든퀸3호) 품종 구입 지원	416	농림수산화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및 육성사업	8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2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76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20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40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44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지원	600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25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	17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친환경농업직불	12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202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34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음식료품
푸드마켓 지원	128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푸드뱅크 지원	201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비봉습지공원 조성 사업	199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44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9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598	기타 발전업	전력, 가스 및 증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686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결식아동 급식	476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결식아동급식 지원	4,231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86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다화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500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4,100	지정 폐기물 처리업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289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641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운영 지원	133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경양이양 직불금 지원	20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35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1 화성시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효과 유형	화성시	경기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103,103	116,824	158,565
부가가치 유발효과	41,053	46,704	64,223
취업유발효과	1,085	1,182	1,513

-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 사업 추진으로 화성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103,103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41,053백만원의 부가가치와 1,085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16,824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6,704백만원의 부가가치, 1,18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발생함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158,565백만원의 생산, 64,223백만원의 부가가치, 1,51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

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 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경기도의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산업별 경기도 지역에서의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성시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경기도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경기도 도민의 소득의 70.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37.8%는 경기도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경기도 도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2 화성시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경기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1,234	2,590
부가가치 유발효과	628	1,229
취업유발효과	10	20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경기도 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234백만원의 생산, 628백만원의 부가가치, 1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2,590백만원의 생산, 1,229백만원의 부가가치, 20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2)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융합형)

□ 분석 개요

-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3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종시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세종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5,895	840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24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육성	10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70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66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건설
로컬푸드 기획새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5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기획생산 참여농가 순회수집 차량 운행	10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운송서비스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화 사업	3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로컬푸드 가공상품화 창업기반 조성	154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농산물 제도가공 시설장비 지원	5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로컬푸드 가공 아카데미 운영	14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청년농업인 지역가공 정착 지원사업	2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업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95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력, 가스 및 증기
저탄소스마트농업실천경영체 우수사례발굴	1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음식폐기물 축소 자원화 확대 시범사업	3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36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GAP 농산물 장려금 지원	24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시료구입	3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시료 구입	7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차액 지원	2,933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지역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지원	15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2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시범	2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주말농장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1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농촌마을 착한 먹거리 탐방	1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1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영유아플러스사업 지역농산물 공급차액 지원	1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경로당 지역산 양곡 차액 지원사업	3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먹거리 공급 거점지 기반구축 사업	10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운송서비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40	보건 및 복지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공유주방 운영지원 시범사업	20	보건 및 복지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세종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5 세종시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세종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6,447	10,676
부가가치 유발효과	3,308	5,154
취업유발효과	80	108

-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세부 사업 추진으로 세종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6,447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3,308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80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10,676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5,154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108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종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 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시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지역별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의 소득의 49.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10.2%는 세종시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2015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되고 자족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세종시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세종시의 산업구조 및 소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모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분석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6 세종시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세종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100	725
부가가치 유발효과	48	346
취업유발효과	1	6

- ‘세종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세종시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0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48백만원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72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346백만원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3) 전북 완주군 (도농복합형)

□ 분석개요

- 완주군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7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주군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6,676	1,177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28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0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읍면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2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로컬푸드 통합교육 운영	2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36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건설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기획생산)	1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	60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	농림수산물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노인)	142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아동)	85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영유아 및 임산부)	16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태어나다 건강 완주(임산부·영유아)	8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란다 건강 완주(아동·청소년)	12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익어간다 건강 완주(성인)	7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팔팔하다 건강 완주(노인)	5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61	농산물 창고업	운송서비스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로컬푸드직매장 모니터단 운영	2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완주로컬푸드 인증 확대	85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안전성 검사 강화	127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57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식중독예방 및 관리	9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음식문화 개선사업	98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8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공공기관·복지시설 및 기업체 로컬푸드 공급	13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학교급식 · 어린이집급식 지원사업	3,596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	2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완주군먹거리위원회 운영	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거버넌스)	1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 소비 교류활동 지원	85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식생활, 영양, 식농교육 등)	4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완주형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2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29 완주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완주군	전라북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8,349	9,477	13,085
부가가치 유발효과	3,668	4,112	5,602
취업유발효과	117	127	153

-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사업 추진으로 완주군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8,34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3,668백만원의 부가가치와 117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완주군을 포함한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9,477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12백만원의 부가가치, 12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발생함
-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13,085억원의 생산, 5,602억원의 부가가치, 15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전라북도의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산업별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라북도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의 81.4%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44.4%는 전라북도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전라북도 도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0 완주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전라북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680	1,534
부가가치 유발효과	342	716
취업유발효과	7	13

-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전라북도 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680백만원의 생산, 342백만원의 부가가치, 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1,534백만원의 생산, 716백만원의 부가가치, 13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4) 충남 청양군 (농촌형)

□ 분석개요

- 청양군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1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양군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청양지역활성화재단) 인건비
비용	18,257	1,647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32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운영	3,200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건설
청정산채 가공시설 운영	400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음식료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174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가공센터(특화, 종합) 운영 활성화	255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음식료품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86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확대	16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청양군수품질인증제 활성화	96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1,87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청정 임산물 연중생산 기반 구축	7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38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귀농귀촌인 참여확대	25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푸드플랜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무화	6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동계작물 생산지원	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읍면별 농산물 집하시스템 구축	30	농산물 창고업	운송서비스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푸드플랜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지원	30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가공산업(6차산업)육성	4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청양먹거리 활성화	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청양 더 한우” 브랜드 활성화	265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농림수산물
학교 ·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사업	2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20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토요장터와 별자리아시장 운영	95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홍보지원	10	한식 일반 음식점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청양 푸드플랜 홍보단 운영	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	2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73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389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칠갑마루 브랜드 육성 및 차별화	1,050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림수산물
먹거리 크라우드펀딩 지원	10	기타 금융 투자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	18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3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학교·공공급식 지원 확대	2,359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학교급식 청양산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24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3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지역사회통합돌봄맞춤형영양보충사업	125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576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8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81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8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청양 케어푸드 개발 및 보급	5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영양플러스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1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먹거리통합돌봄 추진체계 확립	2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통합돌봄 모니터링 시범사업	20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청양 먹거리 리더양성	1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식문화교육	1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	55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활용 사회적경제모델 발굴확산	2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직매장 활성화 사업	25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702	지반조성 건설업	건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지원사업	19.5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	1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마을공동체 공유부역 설치 · 운영	5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기타 제조업 제품
청양 먹거리 경연대회	2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
청양 식문화체험 공정여행프로그램	4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활성화	2,25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청양군 먹거리 위원회 운영	1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3 청양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청양군	충청남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25,328	26,757	37,182
부가가치 유발효과	10,406	11,017	15,235
취업유발효과	251	258	328

-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사업 추진으로 청양군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25,328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0,406백만원의 부가가치와 251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청양군을 포함한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6,757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17백만원의 부가가치, 25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발생함
-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37,182백만원의 생산, 15,235백만원의 부가가치, 328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청양지역활성화재단’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 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도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산업별 충청남도 지역에서의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양군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충청남도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민의 소득의 46.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23.0%는 충청남도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충청남도 도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4 청양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충청남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517	1,228
부가가치 유발효과	241	563
취업유발효과	4	10

- ‘청양지역활성화재단’ 인건비 지출로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517백만원의 생산, 241백만원의 부가가치, 4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1,228백만원의 생산, 563백만원의 부가가치, 10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5) 전남 해남군 (농촌형)

□ 분석개요

- 해남군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5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해남군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4,682	460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36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00	농림수산물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푸드플랜 추진(교육, 홍보 등)	32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2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40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지역상가 상생 협력사업	30	기타 식료품 소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운영	3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	26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농식품바우처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35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운송서비스
로컬푸드 하우스 보온 향상 지원사업	6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력, 가스 및 증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853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96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초·중 무상급식 지원(군 부담분)	830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	486	기관 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24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71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건설
마을공동체 육성 이중비닐하우스 설치지원	79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건설
로컬푸드 하우스 보온 향상 지원사업	6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력, 가스 및 증기
로컬푸드 스마트 무인 판매대 설치	10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먹거리 위원회 운영(수당)	8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로컬푸드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 운영비	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유지관리	12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공공학교급식 추진 간담회 개최	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유지관리	6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3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해남군 먹거리 계획 사업 추진으로 해남군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5,776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2,827백만원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84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표 6-37 해남군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해남군	전라남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5,776	6,199	8,625
부가가치 유발효과	2,827	2,981	3,959
취업유발효과	84	86	103

- 해남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6,19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2,981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고 8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발생함
-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8,62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3,959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고 10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 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도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전라남도의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지역별,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군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라남도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민의 소득의 51.9%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27.4%는 전라남도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전라남도 도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

의 표와 같음

표 6-38 해남군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전라남도	전 국
생산유발효과	161	418
부가가치 유발효과	84	199
취업유발효과	2	3

-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61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84백만원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2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418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이 중 199백만원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3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6) 대전 유성구 (도시형)

□ 분석개요

- 유성구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39 유성구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성구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5,154	341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40 유성구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로컬푸드 생산지원	7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지역먹거리 가공지원 활성화	56	기타 식품 제조업	음식료품
어린이집+유치원지역우수농산물 지원(현물)	3,809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수산물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407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659	보건 및 복지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로컬푸드 기반 지역공동 체형성	42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먹거리위원회 등 협치 활성화	3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먹거리 교육 홍보 강화	4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교육서비스
도농상생 먹거리 교류 활성화	5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41 유성구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유성구	대전광역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5,556	5,829	8,468
부가가치 유발효과	3,347	3,492	4,512
취업유발효과	135	137	153

- 유성구 먹거리 계획 세부 사업 추진으로 유성구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5,556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3,347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고 135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유성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5,82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유발효과 중 3,492백만원이 부가가치이며, 13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발생함
-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8,468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4,512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15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 지

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시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지역별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성구 군민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전광역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시민의 소득의 80.4%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39.6%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시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42 유성구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대전광역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163	481
부가가치 유발효과	91	230
취업유발효과	2	4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63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91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고, 2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481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이 중 230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4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7) 광주 광산구 (도시형)

□ 분석개요

- 광산구의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43 광산구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비용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광산구 먹거리 계획 세부사업비	사업조직(광산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
비용	835	162

□ 정책사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부사업 집행이 어느 산업의 최종 수요를 발생시켰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세부사업들의 성격에 맞는 산업분류를 하기 위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단위 수준에서 매칭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33개의 대분류 산업간의 거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업에 다시 매칭함

표 6-44 광산구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별 산업분류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통계청 기준 세세분류	산업연관표 기준 중분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30	기타 식료품 소매업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5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직거래 장터 등 운영	10	기타 식료품 소매업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기획생산체계 구축(농가조직화 등)	20	농림수산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먹거리위원회 운영	2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공유부엌 조성	200	가구 제조업	기타 제조업 제품
도농상생 소비자 교육 등	205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교육서비스

- 위의 산업별 최종 수요 변화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광산구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사업 추진으로 광산구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 연간 957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생산유발효과 중 571백만원이 부가가치로 창출되며, 981명의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표 6-45 광산구 먹거리 계획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광산구	광주광역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957	992	1,375
부가가치 유발효과	571	593	742
취업유발효과	11	11	14

-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992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유발 중 593백만원이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광주광역시 내에서는 광산구에서만 취업이 발생함
-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따져 보면, 매년 1,37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유발효과 중 742백만원은 부가가치로 발생하며 14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계산됨

□ 사업조직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광산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 혹은 신규 고용이 발생하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최종 수요인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로 이어져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함
-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광주광역시의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지역별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금액 비중을 적용함
- 앞서 분석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분석 범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시민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라북도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시민의 소득의 79.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45.6%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시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패턴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다음

의 표와 같음

표 6-46 광산구 먹거리 계획 사업조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효과 유형	광주광역시	전 국
생산유발효과	91	227
부가가치 유발효과	50	108
취업유발효과	1	2

- ‘광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로 광주광역시 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91백만원의 생산, 50백만원의 부가가치, 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함
- 전국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매년 227백만원의 생산, 108백만원의 부가가치, 2명의 취업 유발이 되는 것으로 예상됨

3. 추진체계 및 실행기반 확대

□ 지역먹거리계획 담당 전담부서 유무 비교

-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추진 방식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2021년 기준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103개 지자체 중 57.3%로 나타남
-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팀’이 전체의 84.7%로 대부분이며, ‘과’는 15.3%임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85.3%는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인 반면, 전담 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전담부서의 설치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의 선행조건이며, ‘팀’ 단위보다 ‘과’ 수준에서의 전담부서가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책임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함

표 6-47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전담부서 설치 여부 비교 ('21년)

구 분	전담부서 있음			전담부서 없음	합 계
	(소계)	(전담 팀)	(전담 과)		
계획 수립	29 (85.3%)	21 (61.8%)	8 (23.5%)	5 (14.7%)	69 (100.0%)
계획 미수립	30 (43.5%)	29 (42.0%)	1 (1.5%)	39 (56.5%)	34 (100.0%)
합 계	59 (57.3%)	50 (48.5%)	9 (8.7%)	44 (42.7%)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여부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의 전략 추진과 주요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조직+지원조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며, 법률에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표 6-48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농가 조직화 기능 여부 비교('21년)

구 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없음	합 계
	(소계)	조직화 역할 담당	조직화 역할 없음		
계획 수립	21 (61.8%)	18 (52.9%)	3 (8.8%)	13 (38.2%)	69 (100.0%)
계획 미수립	19 (27.5%)	14 (20.3%)	5 (7.3%)	50 (72.5%)	34 (100.0%)
합 계	40 (38.8%)	32 (31.1%)	8 (7.8%)	63 (61.2%)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61.8%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반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자체의 72.5%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중 ‘기획생산 농가조직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85.7%는 농가 조직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구성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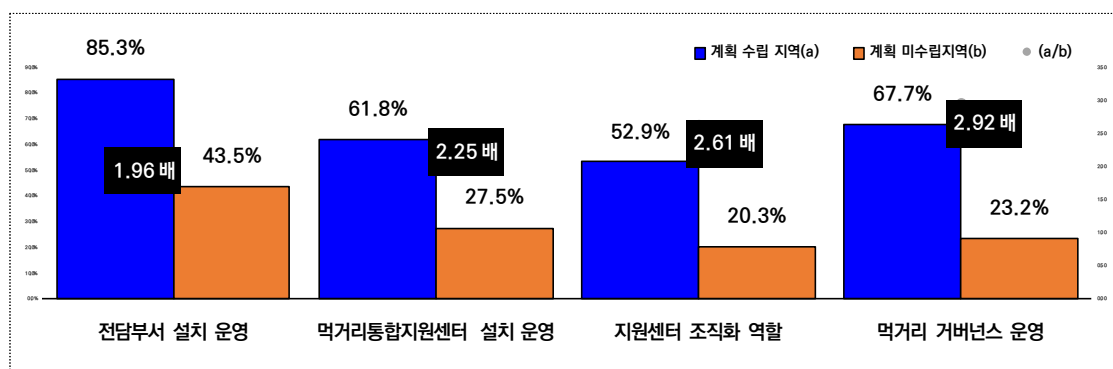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게 강조됨
-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기구’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및 개선 등 과정에서 심의·논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형태가 ‘먹거리위원회’임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67.7%는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32.4%는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6-49 지역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구성 여부 비교 (‘21년)

구 분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먹거리 거버넌스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3 (67.7%)	11 (32.4%)	34 (100.0%)
계획 미수립	16 (23.2%)	53 (76.8%)	69 (100.0%)
합 계	39 (37.9%)	64 (62.1%)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6 지역먹거리계획 전담부서+통합지원센터+거버넌스 비교 (계획 수립-미수립 지역) (‘21년)



□ 지역먹거리계획 자치단체장 공약 반영 여부 비교

- 모든 정책은 정책 결정권자(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지며,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먹거리계획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약 반

영 여부'를 살펴보았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81.8%가 해당 단체장의 선거 공약에 반영된 반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의 절반 이상은 단체장 공약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단체장의 추진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표 6-50 지역먹거리계획의 자치단체장 공약 반영 여부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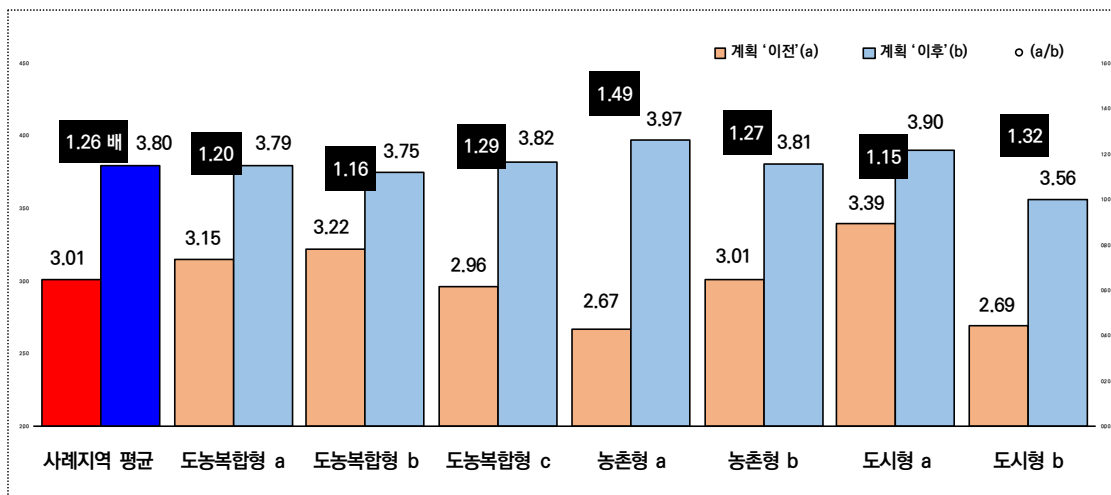
구 분	단체장 공약 있음	단체장 공약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7 (81.8%)	6 (18.2%)	33 (100.0%)
계획 미수립	32 (49.2%)	33 (50.8%)	65 (100.0%)
합 계	59 (60.2%)	39 (39.8%)	98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확대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예산·제도 확대'가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확대 수준'은 '보통(3.01)'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는 '보통 이상(3.80)'으로 상향하여 평가하고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의 정책과 예산 등의 주민 체감 정도가 상이한데,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사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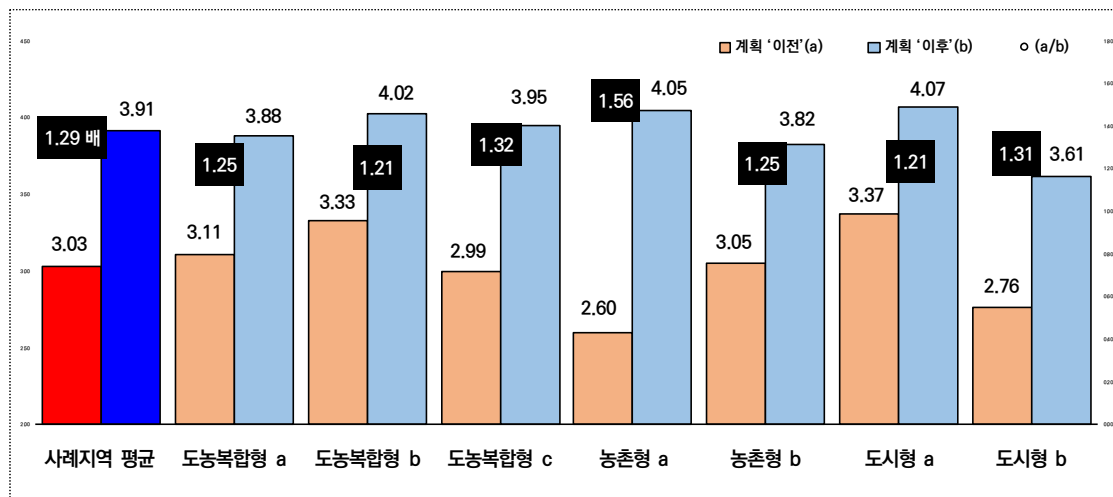
그림 6-7 먹거리 정책·예산·제도 확대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 먹거리 정책의 민간참여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

-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어떠한지 체감하는 수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기점(이전-이후)으로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이전’의 ‘민간의 참여’는 ‘보통(3.03)’ 수준이었으나, 계획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3.91)’으로 상향하여 평가하고 있음
-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사례지역마다 민간 먹거리 정책 참여 체감 정도가 상이한데, 이는 해당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 여건과 사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그림 6-8 먹거리 정책의 민간참여 활성화 수준(체감) 비교 (계획시행 이전-이후)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사례 여부 비교

- 지역먹거리계획은 먹거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의 정책계획으로 개념을 정의한 바 있음
- 지역사회의 먹거리에 대한 필요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주체는 지역사회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므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주요한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먹거리 지원활동이 있는 비중은 6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의 24.6%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 관련 지원활동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6-51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먹거리 지원활동 사례 여부 비교 (2021)

구 분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22 (64.7%)	12 (35.3%)	34 (100.0%)
계획 미수립	17 (24.6%)	52 (75.4%)	69 (100.0%)
합 계	39 (37.9%)	64 (62.1%)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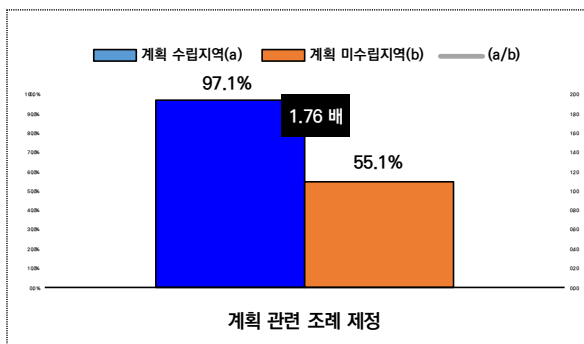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2022년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실행의 근거로 삼아 왔음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대부분인 97.1%는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조례에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자체도 55.1%에 달하고 있음

표 6-52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 여부 비교 ('21년)

구 분	계획 관련 조례 제정	계획 관련 조례 없음	합 계
계획 수립	33 (97.1%)	1 (2.9%)	34 (100.0%)
계획 미수립	38 (55.1%)	31 (44.9%)	69 (100.0%)
합 계	71 (40.8%)	32 (31.2%)	103 (100.0%)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 지역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9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 여부 비교 ('21년)



□ (자치법규 의미) 지자체 수준 지역먹거리계획의 정책실행 기반으로 성격을 가짐

- 지자체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에 담고 있는 정책사업의 지원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왔음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맞춰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자치법규(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로 삼아 왔음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 관련 종합계획으로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계획에서 다루는 영역은 ‘생산~가공~급식~유통~소비~폐기’ 등 범위가 매우 넓음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 정책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추진·지원해 왔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정책사업의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었음
- 한편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다루는 관련한 영역 그동안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직거래, 도시농업’ 등과 같이 국가의 상위 법률⁵³⁾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거한 ‘위임조례’ 또는 위임이 없이 제정하는 ‘직권조례’가 관련 자치법규의 대부분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은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먹거리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면서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역먹거리 체계에 관계하는 핵심 주체(행정과 주민)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하면서 지역단위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로서 ‘먹거리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데 주된 내용을 할애하고 있음
- 특히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체계 가치사슬의 분야별 개별조례와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대별되는 특징이 있음
- 한편에서는 ‘먹거리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 체계 전반에 걸친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 현 시점의 여건에 맞춰 개정하거나, 개별 조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먹거리 정책에 관한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동시에 규정하고, 기관의 부서 간 정책협업과 총괄을 담당할 행정기구(먹

53) 직거래법, 도시농업 육성법, 식생활교육 기본법 등이 그러한 예임

거리정책책임관)를 지정한 사례⁵⁴⁾는 지자체 수준에서 먹거리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자치법규 영역) 지역먹거리계획이 담고 있는 정책 분야를 반영하여 연계해야 함

- 지자체가 수행하는 먹거리 관련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임사무’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사무’이므로 그 사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쟁점이 있음
 - (예시)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지원 사업 등
-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적 목적 외 조례 및 초과 조례’ 제정을 긍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조례의 제정을 인정한 것임
 - (사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조례’는 ‘생활보호법’의 규정보다 보호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련 정책 확대 지원을 인정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의 분야를 토대로 자치법규 검색 연관어는 ‘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거래, 식생활, 음식품 폐기, 농산물 안전, 농식품·식품 기부·가공, 영양관리, 도시농업’ 등으로 를 정리할 수 있음
-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에서 전국 지자체의 먹거리 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54)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는 행정청(도지사)과 교육청(도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을 같이 규정하여 정책의 기관간 협의를 명문화했고, 행정청과 교육청에 먹거리 정책을 총괄·조정할 기구로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6-53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자치법규의 연관어 구조

구 분	연관어
먹거리(기본)	먹거리 보장, 먹거리 기본 조례, 먹거리 계획,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공공급식 지원,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먹거리 및 공공급식,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관련 우수 급식산업, 도농상생공공급식, 어린이집 급식, 사회복지 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학교급식 정보공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로컬푸드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 유통센터,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공공급식, 외식산업 로컬푸드 사용, 로컬푸드 시설물, 로컬푸드운동, 로컬푸드 장터
직 거 래	직거래,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식생활(교육)	식생활 교육, 영양 식생활 교육, 어린이 식생활, 녹색식생활,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영양관리	영양관리, 영양 식생활 교육, 시민+군민 영양관리
농산물 안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산물 안전성 분석, 유전자변형농산물
농식품, 식품	식품등 기부, 지역농식품, 농식품 제조가공,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도시농업	도시농업, 친환경 도시농업
음식물 폐기	음식물류 폐기물

표 6-54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영역별 제정 현황 (전국)

지역	먹거리 (기본)	공공 급식	학교 급식	로컬 푸드	직거래	식생활 교육	식생활 관리	안전성 관리	농민 가공	도시 농업	식품 기부	폐기 순환	합계
강원	도 ('21.9.)	-	1	-	1	1	-	-	-	-	1	-	5
	시군 (18개)	5	6	15	7	2	14	-	3	5	-	4	79
	교육청	-	-	2	-	-	1	-	-	-	-	-	3
경기	도 ('19.1.)	1	1	1	1	1	-	1	1	1	1	1	11
	시군 (31개)	20	11	27	20	9	18	6	-	5	26	14	192
	교육청	-	-	4	-	-	1	-	-	-	-	-	5
경남	도 ('20.2.)	1	1	-	1	1	-	-	-	-	1	-	6
	시군 (18개)	10	9	8	6	6	4	-	-	9	6	2	80
	교육청	-	-	2	-	-	1	-	-	-	-	-	3
경북	도 ('21.7.)	1	1	1	1	1	-	1	-	-	-	-	7
	시군 (22개)	3	4	21	10	4	6	-	2	2	4	1	81
	교육청	-	-	3	-	-	-	-	-	-	-	-	3
충남	도 ('19.12.)	1	1	-	1	1	-	1	-	1	-	-	7
	시군 (15개)	9	10	14	12	7	4	2	1	1	5	4	87
	교육청	-	-	2	-	-	1	-	-	-	-	-	3

지역		먹거리 (기본)	공공 급식	학교 급식	로컬 푸드	직거래	식생활 교육	식생활 관리	안전성 관리	농민 가공	도시 농업	식품 기부	폐기 순환	합계
충북	도	(‘21.5.)	-	1	-	1	1	-	-	-	-	1	-	5
	시군 (11개)	7	5	8	5	3	7	2	2	5	2	3	11	60
	교육청	-	-	2	-	-	-	-	-	-	-	-	-	2
전남	도	(‘20.4.)	-	3	1	1	1	-	-	1	1	1	-	10
	시군 (22개)	13	8	25	9	5	8	3	4	12	9	3	23	122
	교육청	-	-	3	-	-	-	-	-	-	-	-	-	3
전북	도	(‘21.12.)	-	1	-	1	1	-	1	1	1	-	-	7
	시군 (14개)	13	6	10	15	4	11	-	3	1	4	2	20	89
	교육청	-	-	3	-	-	-	-	-	-	-	-	-	3
서울	시	(‘17.9.)	1	1	-	-	1	-	-	-	1	1	1	7
	자치구 (25개)	1	15	27	1	-	10	1	1	-	23	12	31	122
	교육청	-	-	1	-	-	-	-	-	-	-	-	-	1
세종	시	(‘21.7.)	1	-	1	1	1	-	-	-	1	1	1	8
	교육청	-	-	1	-	-	1	-	-	-	-	-	-	2
울산	시	(‘21.9.)	-	1	1	-	1	-	-	-	1	-	-	5
	자치구 (5개)	-	-	5	2	-	-	-	-	-	5	-	5	17
	교육청	-	-	1	-	-	-	-	-	-	-	-	-	1
인천	시	(‘22.2.)	1	1	-	-	1	-	-	-	1	-	-	5
	자치구 (10개)	-	-	9	-	2	7	1	-	1	8	-	12	40
	교육청	-	-	4	-	-	1	-	-	-	-	-	-	5
광주	시	-	-	1	-	-	1	1	-	-	1	1	1	6
	자치구 (5개)	2	3	3	3	-	1	2	-	1	5	3	6	29
	교육청	-	-	3	-	-	-	-	-	-	-	-	-	3
대구	시	-	-	-	1	-	1	-	-	-	1	1	-	-
	자치구 (9개)	1	-	8	-	-	1	-	-	-	4	2	10	26
	교육청	-	-	2	-	-	-	-	-	-	-	-	-	2
대전	시	-	-	1	1	-	1	-	-	-	1	1	-	5
	자치구 (5개)	2	2	4	1	-	4	-	-	-	5	-	5	23
	교육청	-	-	2	-	-	-	-	-	-	-	-	-	2
부산	시	(‘21.1.)	-	-	-	-	1	-	-	-	1	1	-	-
	자치구 (16개)	-	-	15	-	-	12	2	-	1	8	1	17	56
	교육청	-	-	3	-	-	1	-	-	-	-	-	-	4
제주	도	(‘17.8.)	-	1	-	-	1	-	-	-	-	1	2	6
	교육청	-	-	3	-	-	-	-	-	-	-	-	-	3

- 사례지역 7개 시·군·구의 먹거리 계획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조례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이후로 자치법규 마련 필요 등이 주요한 배경임

표 6-56 사례지역(7개 시·군·구)의 먹거리 계획 관련 자치법규 현황

분 야	도농복합형 a	도농복합형 b	도농복합형 c	농촌형 a	농촌형 b	도시형 a	도시형 b
먹거리(기본)	○	○	○	○	○	○	○
공공급식	○	○	○	○	○	○	○
학교급식							
로컬푸드	○	○	○		○		○
직 거 래		○		○			
농가가공					○		○
도시농업	○	○	○			○	○
식생활교육	○	○	○		○	○	
식생활지원							
식품기부		○					
안전성관리				○	○		
폐기순환	○	○	○	○	○	○	○

표 6-55 사례지역(7개 시·군·구)의 먹거리 계획 관련 자치법규 목록

지역명	법령명	분야	제정일자	부서
도농복합형 a지역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22. 9.26.	
	도시농업 지원 조례	도시농업	2021. 7.30.	기술보급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23. 3.17.	농식품유통과
	먹거리 기본 조례	먹거리	2023. 5.16.	농식품유통과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식생활교육	2020. 8. 5.	농식품유통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23. 4.14.	자원순환과
도농복합형 b지역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직거래	2022. 7.29.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	2022. 8.22.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23. 7.10.	로컬푸드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먹거리	2023. 3. 6.	로컬푸드과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식생활교육	2023. 3. 6.	로컬푸드과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식품기부	2021. 7.15.	복지정책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22. 11.14.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21. 12.10.	로컬푸드과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2021. 4.12.	교육복지과
	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	2021. 12.10.	교육복지과

지역명	법령명	분야	제정일자	부서
도농복합형 c지역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	2015. 6.25.	지역활력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22. 12.22.	경제식품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22. 12. 2.	경제식품과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로컬푸드	2021. 5.24.	경제식품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먹거리	2022. 3.31.	경제식품과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	2020. 7.2.	경제식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17. 5.11.	자원순환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21. 4.15.	경제식품과
농촌형 a지역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성관리	2021. 7.13.	농업기술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폐기순환	2019. 5.16.	환경보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폐기순환	2020. 10.8.	환경보호과
	지역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먹거리	2020. 5.15.	농촌공동체과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21. 12.15.	농촌공동체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직거래	2019. 1.30.	농업정책과
농촌형 b지역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가가공	2016. 1.7.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23. 4.17.	유통지원과
	먹거리 기본 조례	먹거리	2019. 7.1.	유통지원과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	2018. 12.28.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16. 8.8.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19. 5.15.	유통지원과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성관리	2021. 4.15.	
도시형 a지역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	2022. 12.22.	지역산업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16. 12.27.	청소행정과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먹거리	2023. 7.14.	지역산업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도시농업	2018. 12.21.	지역산업과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급식	2023. 2.6.	지역산업과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2023. 2.6.	지역산업과
도시형 b지역	공공급식 지원 조례	공공급식	2022. 11.1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가가공	2021. 2.15.	생명농업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2017. 11.15.	생명농업과
	상생먹거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먹거리	2020. 11.17.	생명농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폐기순환	2022. 10.1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순환	2021. 8.13.	청소행정과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	2016. 5.25.	생명농업과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에서 작성, 최종 검색일 2023.9.4.

제7장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과 과제

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향상이 대응방향
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의 검토
3.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방향과 과제

1. 지역먹거리계획 특징과 효과분석 관점 종합

-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촉진과 지원이 핵심
 - 정책으로서의 ‘지역먹거리계획’은 특정 영역에 국한하는 ‘법정계획’⁵⁵⁾이 아니라 지역먹거리 체계 관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얻기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으로 성격을 가짐
 - 정부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위해 ‘정책안내+추진지원+실행관리+정책사업+재정지원’ 등 정책수단을 활용·투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농림 분야 정책사업과는 다른 정책추진 과정 양식(패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지원정책은 신규 재정사업 마련과 달리, 기존 농림사업(재원)을 패키지(포괄) 방식으로 수정 적용하였으며, 정부는 계획수립과 정책실행에 필요한 지역사회 실행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집중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수준에 맞게 먹거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실행전략’을, 정부가 ‘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촉진하며 시행에 필요한 여건(역량 등)을 지원하는 구조임
 - 지자체는 정부의 촉진과 장려를 계기로 지역적 문제와 필요를 계획의 수립·실행과 결합하여 대응하는 구조를 갖지만, 기존 농림사업 경로와는 다른 특징 때문에 지자체의 선행조건(계획의 수립, 정책협약, 추진체계, 시민참여 등) 이행이 관건임

55) 이미 공공영역에서는 먹거리 관련 정책이 농림사업 분야에서 다수 시행되고 있고, ‘지역먹거리계획’의 전략과제인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거래, 식생활 교육, 먹거리 돌봄, 도시농업’ 등이 개별적인 계획·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지표 마련이 필요

- 국제사회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에 요구되는 권장기준(가이드라인)을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도시(지역) 단위 먹거리 전략’의 진전과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진단지표의 틀’을 통해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영향을 ‘수준과 변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포착하고 파악하고자 하였음
- ‘정책의 투입-산출-결과-영향’이라는 일반적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되,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의 개선·변화’와 ‘정책 주체이자 대상인 주민(시민) 태도’에 주목하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기대되는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였음
- 단선적 경로(투입→산출)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성격·방안·과제 등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먹거리 체계+전략’ 구조 특성을 반영해 ‘시행효과’로 파악할 영역을 국제사회 논의(지표 등)를 근거로 확대 적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에 필요한 이용·분석 가능한 자료의 제약이 전제

- 계획을 수립 또는 실행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139개소)이지만, 저마다 ‘문제진단, 전략 구조설정, 정책범위, 사업과 예산, 실행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계획 시행의 성과와 효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국제사회에서 적용·실험되는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는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별로 강조하고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현재적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실행과제를 식별하는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를 ‘①먹거리의 가치사슬 단계 변화 비교, ②먹거리에 대한 주민의 태도 변화 파악,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④정책실행의 기반 수준’ 등을 진단하고 정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지자체 수준의 분석 가능한 자료 여부가 중요한 판단이었는데, 계획 실행 과정에서 결과 등을 나타내는 통계 작성이 미흡하거나 이용에 제약이 큰 점이 한계임⁵⁶⁾
-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간 수준을 비교 진단·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제출 자료⁵⁷⁾와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지자체(7개 시·군·구)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변화와 개선을 측정하였음

56) 국제사회 사례를 보면 정책은 실행되었으나 기록되지 않는 사업 시행으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

57)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 응하는 지자체가 평가기관에 제출한 해당 지역 활동 실적이 현실의 성과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일관적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변화를 살펴 시행효과 관점에서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가장 유용한 자료임

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활성화 방향 검토

□ 분석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효과 수준 파악과 주체의 역할 검토 근거 마련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으로 ‘①먹거리 체계 가치사슬 단계별 유의미한 변화, ②정책 대상자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 체감 수준의 편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①주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높였다는 점, ②정책실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등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③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수 지자체가 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를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 무엇보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담당 주체(정부+지자체+지역사회)에게 계획의 안정적 실행과 활성화된 추진을 위한 일정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①정부의 지원정책 지속 유지 근거, ②지자체의 정책실행 판단 기준, ③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되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검토 근거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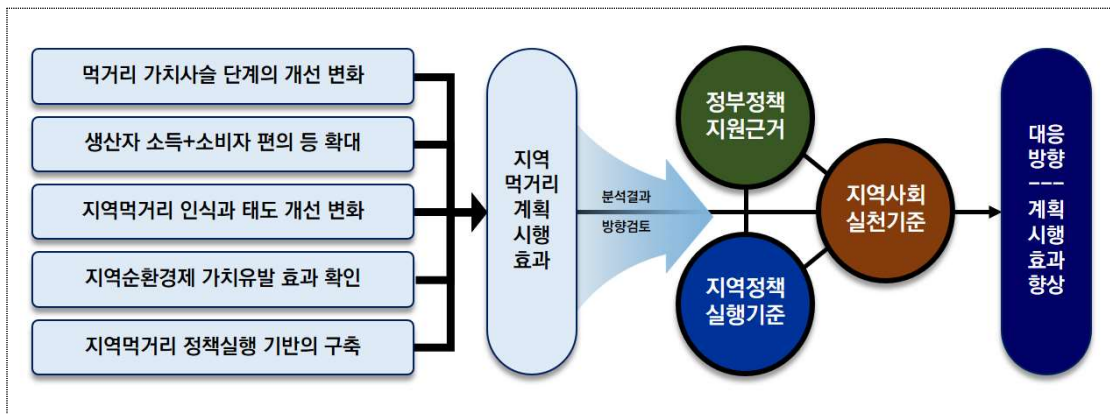
□ 대응방향,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의 방향은 계획의 ‘시행효과’ 향상이 주된 목적

- 지역먹거리계획이 ‘①충실하게 마련되고(수립단계), ②실효적으로 실행되며(집행단계), ③성과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변화단계)’ 위해 검토할 사항은 종합적이고 중층적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국제사회 수준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먹거리 전략과 계획’에서 다룰 영역은 ‘1축(가로축)-실행목적에 관한 사항(6개), 2축(세로축)-먹거리 가치사슬별 과제(7개)’로 중점과제는 이러한 내용이 교차하는 수만큼 매우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⁵⁸⁾
- 국제적으로는 먹거리 전략·계획의 수립-추진-모니터링 단계에 걸쳐 지역사회 핵심 주체가 정책의 모든 과정에 관계하는 이른바 ‘참여형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주체가 전략·계획을 종합적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음

58) (가로축)사회적 지속가능성·형평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농촌의 통합(융합), 먹거리 거버넌스, 취약성 감소와 회복력 증가 / (세로축) 투입 공급 및 먹거리 생산, 먹거리 저장-가공-제고, 먹거리 도매 및 유통, 먹거리 판매-음식서비스-소매, 먹거리 소비, 음식 및 유기 폐기물 관리, 교차편집(먹거리 체계의 정책과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성과 있게 ‘수립-실행-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역량강화 지원,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먹거리지수를 활용한 진단과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정책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늘려 나가되, 계획 실행으로 지역수준에서 지역먹거리 체계의 ‘변화와 개선’ 등 ‘시행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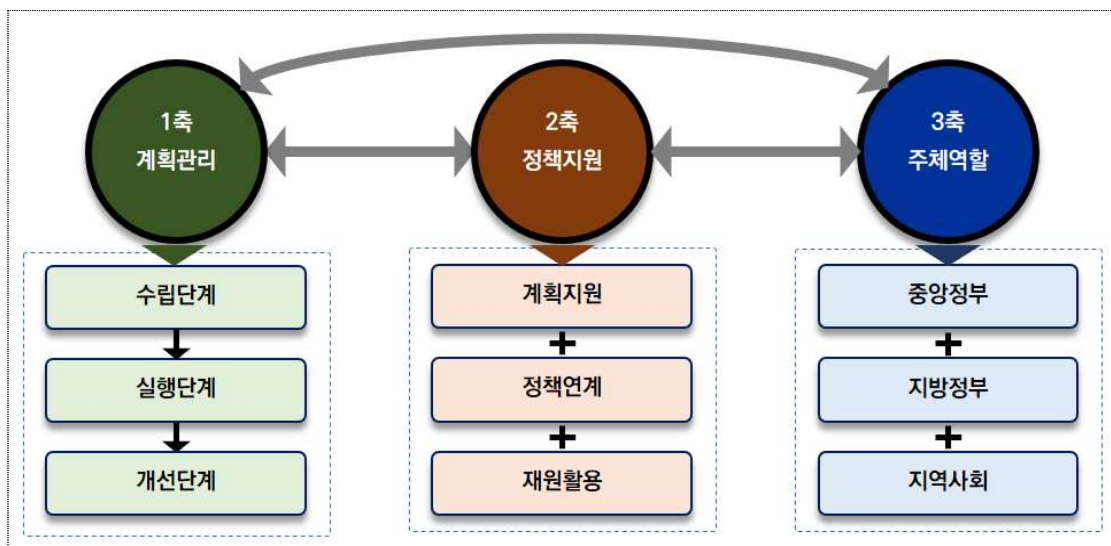
그림 7-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에 따른 정책추진의 근거와 대응방향



3.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제안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①계획관리 영역, ②정책지원 영역, ③주체역할 영역’ 등 3개의 축으로 구조를 설정할 수 있음
- 영역 1. (계획관리)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 단계별 방안 : 수립단계→실행단계→개선단계
 -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평가 및 개선하는 단계 등 ‘계획 실행’의 프로세스(과정)을 직접 관리하는데 관련된 실행과제가 해당
- 영역 2. (정책지원)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 수단별 방안 : 계획지원+정책연계+재원 활용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지원, 계획에 담긴 전략과 과제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연계, 세부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활용 등에 관한 실행과제가 해당
- 영역 3. (주체역할)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 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 사회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전반에 관계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실행과제가 해당

그림 7-2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활성화, 구조와 과제 제안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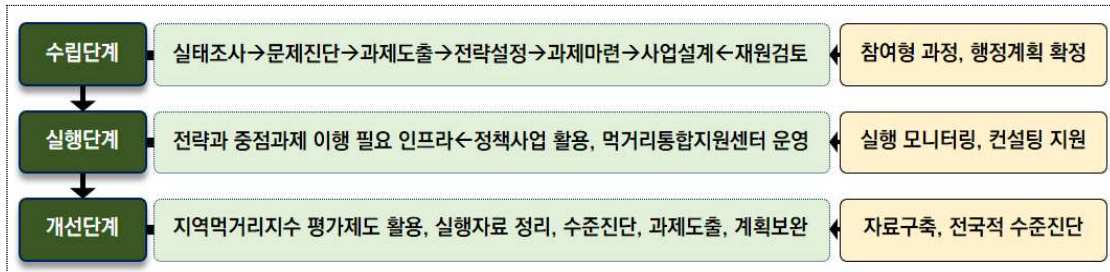


(1) 계획관리 : 단계별 맞춤지원 체계의 안정화·고도화 촉진

-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지해온 계획의 ‘①수립단계, ②실행

단계, ③개선단계’ 등 ‘단계별 맞춤지원 체계’에 따라 동원 가능한 자원(재정+인적+물적)을 활용하여 내실화하는 구조를 정립해 나가야 함

그림 7-3 계획관리 : 단계별 맞춤지원 체계의 안정화·고도화 촉진



□ (수립단계) 지자체 먹거리 실태조사, 먹거리 전략 연구, 먹거리 계획 수립 지원 등

- 지자체가 정부의 연구용역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신규로 수립하거나 계획기간 종료된 지역은 1단계 계획의 평가와 2단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
- 계획은 지역사회 먹거리 실태조사, 문제진단, 과제도출, 전략설정, 과제마련, 사업설계, 재정계획 등이 현실적으로 마련·반영되는 ‘실행계획’ 수준 결과 도출을 강조
-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지역사회(시민주체)와 공동의 ‘참여형 연구’로 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필수사항’으로 제시
- 계획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수준(행정+의회+위원회)에서 행정계획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 실행해 나가도록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 (실행단계) 계획실행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정책실행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

- 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인 기반(인프라)은 기존의 농림사업을 결합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임
- 지역먹거리계획의 전략체계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기존 농림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재정투자 원천이 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조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앞으로 중요

- 계획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내실있는 정책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가(FD)는 ‘계획실행의 모니터링, 컨설팅’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운영관리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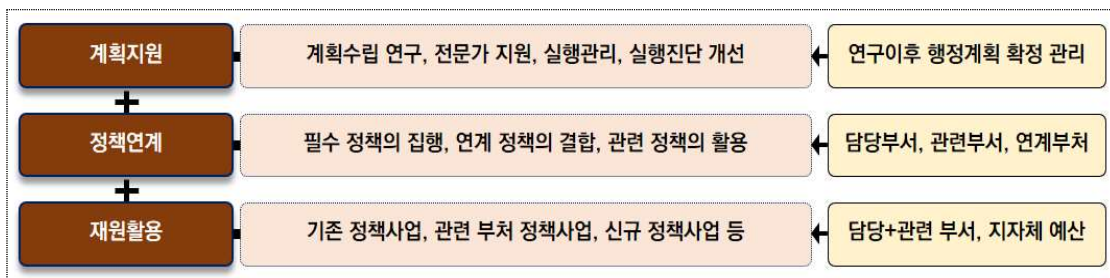
□ (개선단계) 지역단위 계획의 중점사업 점검 및 환류(지원사업 중심),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한 진단과 평가 등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중이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제도는 계획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제도는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평가지표가 개선되었고,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점검하는 방안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개선은 지수 평가 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책임있게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받으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성격과 위치를 강화⁵⁹⁾

(2) 정책지원 : 계획실행을 위한 실효적 정책·예산 결합 방안 강구

- 지역먹거리계획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먹거리 전략에 관한 실행과제를 행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하여 실천·실행하는 종합계획임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을 담당하는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①계획지원, ②정책지원, ③재정지원’의 적절하고 실효적 결합이 중요함

그림 7-4 정책지원 : 계획실행을 위한 실효적 정책·예산 결합 방안 강구



□ (계획지원) 계획연구, 전문가 지원, 자원조사, 문제정의, 시민참여, 실행진단 등

-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행정계획’으로 확정되고, ‘실행계획’이 되도록 ‘계획관리’의 역할을 높임
- 계획 수립 현행 지원방식(연구비 지원, 전문가 지원, 자원조사 규정, 전략체계 및 세

⁵⁹⁾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자율 참여 방식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책임있는 참여가 예상되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실행 점검 등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부사업 기준 제시, 시민참여 안내)에 갇히지 말고, 지역사회 참여방식으로 계획수립이 진행되도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강조되어야 함⁶⁰⁾

- 지자체마다 여건 차이로 ‘행정계획’으로 논의·심의·확정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연구 이후 ‘계획 확정’으로 나아가는 관리를 강화⁶¹⁾

□ (정책지원) 계획 실행 필요 재원은 ‘필수 정책 집행, 연계 정책 결합, 관련 정책 활용’ 등 ‘종합적 정책지원 구조’ 마련

- 지역먹거리계획에 반영된 먹거리 전략체계 중점과제는 정책사업 등으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재원·기간·범위·대상·주체·방식)을 구상하고 마련해야 함
- 중앙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활용가능한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필수 정책의 집행, 연계 정책의 결합, 관련 정책의 활용 등으로 대별)
- (필수 정책의 집행) 농림축산식품부(먹거리 계획 사업부서)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직접 관리·집행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사업, 지역먹거리 정책포럼, 전담자문가 지원,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등
- (연계 정책의 결합)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 관장은 아니지만, 지역먹거리계획 필요사업으로 부처 내 부서간 연계를 통해 결합시켜나아가야 하는 성격의 사업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직매장 설치 지원, 저온유통체계 지원, 안전성 분석실 설치 지원, 안전·품질관리 지원, 산지유통시설 개선 지원 등)
- (관련 정책의 활용)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활용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다른 정부 부처 관련 정책사업 중 활용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사업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보건복지부·교육부·중소기업벤처부·환경부·농촌진흥청, 지방이양된 정책사업도 해당

□ (재원활용) 기존 정책사업 예산 활용, 신규 정책사업 예산 확보, 관련 부처사업

60)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 수립 연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전담 자문가(FD)’ 등이 참여하여 내용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마련해 가는 ‘단계적 절차’의 추가 검토를 제안함

61) 이를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의 심의 기능이 부여된 ‘먹거리위원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정치적·현실적 여건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가 계획을 보고받고 검토·논의를 하여 공식화하는 방안을 촉진·추동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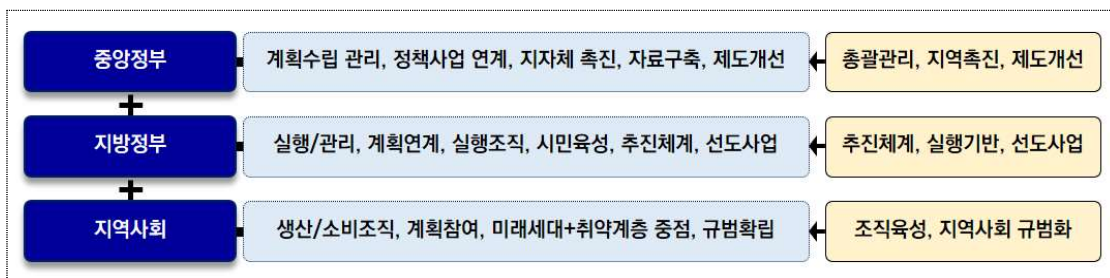
활용 등

-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기 불안정,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은 가변성이 높은 시기로 진입한 상황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 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효적인 실행을 통해 의미있는 시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예산으로 마련하는 구조를 잘 갖춰가야 함
- (기존 정책사업 예산 활용)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최소한 정책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부처(부서)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사업이 일몰되지 않는 정책유지 대응이 관건
- (관련 부처+부서사업 활용) 지역먹거리계획은 생산~공급~소비~폐기에 이르는 종합계획이므로 영역별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⁶²⁾
- (신규 정책사업 예산 확보) 다수의 지자체가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⁶³⁾
- (지자체 수준 예산 확보) 지자체 재정여건 범위에서 지자체가 수준에서 확보 가능한 자원(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한 정책마련과 예산확보 추진

(3) 주체역할 : 계획 관계주체(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 역할 방안

-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목적하였던 기대가 효과로 현실화를 위해서는 계획과 관련된 핵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그림 7-5 정책지원 : 계획 관계주체(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 역할 방안



□ (중앙정부) 계획수립 지원·관리, 필요 정책사업 유지, 정책시행 기반 안정화

62) 농림축산식품부 내 타 부서가 관장하는 예산 중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관이 높은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먹거리 계획과 연계해 할당을 받고, 지방이양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자원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63) 먹거리를 둘러싼 문제(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고, 정책시행을 통해 다수가 정책효과와 관계되는 내용을 우선 정책과제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예시)취약계층 결식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 먹거리 돌봄 예산, 기존 복지부서 영양지원 내 식재료를 건강한 지역 식재료로 대체하는 사업 등

- 계획수립·관리체계 유지(현행유지), 필수 정책사업 유지(사업부서), 연계 정책사업 결합(부서협력), 관련 정책사업 활용(부처협력) 등
- 지역단위 선도 정책사업 촉진⁶⁴⁾(지자체), 관련정보 작성관리(통계자료)⁶⁵⁾, 관련 규제요건 개선(제도개선)⁶⁶⁾ 검토 등

□ (지방정부) 계획수립 확정·실행, 정책사업 활용, 역량 구축, 필요 정책사업 개발

- 계획실행·평가 개선(관리강화)⁶⁷⁾, 종합계획으로 확대(계획간 연계)⁶⁸⁾, 사업조직 지정·설립(지원조직)⁶⁹⁾, 핵심거점 기반 확대(물적거점)⁷⁰⁾ 등
- 먹거리시민 육성(교육·홍보)⁷¹⁾, 거버넌스·조직 강화(추진체계)⁷²⁾, 지역단위 선도특화 정책추진(시범사업)⁷³⁾ 등

□ (지역사회): 계획 수립·실행 참여, 사업·활동·프로그램 주체로 기능, 지역사회

-
- 64) 지역먹거리계획에서 다루는 실천전략은 우리 사회(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음
- 65)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 적용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역먹거리계획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책정보와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해 나가야 함. 통계청 및 지자체 공인 통계조사에 먹거리 전략 관련 조사항목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 66)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생산~가공~공급~유통~소비~순환하는 단계에서 과도한 과학적 기준(식품위생법 등)이 적용되어 생산자의 참여가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준과 같이 취약계층이 정부 정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여러 부처의 정책 대상으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있어 제도 및 정책지침 등의 개선이 요구됨
- 67) 지자체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확정하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도와 점검 등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매년 계획의 집행내역, 주요성과, 개선과제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과 관련한 자료의 작성과 통계의 관리를 지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68)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농촌, 경제, 환경, 교육, 유통, 사회 등에 관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짐. 외국의 사례와 같이 관련 계획과 연계해 확대 실행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조례'에 관련 계획과의 연계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69)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은 지역먹거리의 생산~공급~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비즈니스 방식으로 활동을 담당할 전담조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수적임. 그동안 개별 정책을 통해 지정·설치된 지원조직(학교급식·공공급식·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일정 수준의 먹거리 공급수요가 있는 지역은 민간의 지정·위탁 방식을 넘어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 등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강화가 요구됨
- 70) 지역사회에서는 먹거리를 매개로 다양한 주체가 교류하는 접점으로 물리적 공간(직매장, 마을부엌 등)이 중요해지고 있어, 타 부처 정책사업 등을 활용하여 핵심거점 조성이 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11개 읍·면에 '먹거리 돌봄 공동체 마을부엌'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인프라를 갖추어 기존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실천기반(여건)을 넓혀가고 있음
- 71)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 최종 목적은 지역주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식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며 먹거리 기본권을 높이는데 있음. 먹거리의 가치를 식별하고 실천능력을 갖춘 먹거리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먹거리 시민'으로 정의함. 지역사회는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매개로 지역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조직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식생활교육 활동가'를 다수 양성해 지역사회의 중요 역량으로 기능하고 있음
- 72) 민관 거버넌스 기구(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 내 전담부서(과 또는 팀 설치·운영), 행정 내 정책총괄자(먹거리 정책책임관 지정·운영) 등
- 73)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높는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자체 재원(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 완주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1차년도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업'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사회적농장이 실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

우호적 여건 마련

- 소비자 조직 활동 강화⁷⁴⁾, 생산자 조직 역할 강화⁷⁵⁾, 시민사회 참여 강화⁷⁶⁾, 미래세대 중점 고려⁷⁷⁾,
- 취약계층 우선 배려⁷⁸⁾, 지역사회 소비 확대로 순환경제 촉진⁷⁹⁾, 지역사회 규범화⁸⁰⁾ 정립 등

74)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우호적인 사회인식은 다수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과 공감대에서 비롯되는데, 불특정 소비자를 넘어 소비자 단체(조직)가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 공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75)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다품목으로 생산하는 생산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생산자 조직이 있을 때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갖출 수 있으므로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은 물론 생산자 조직의 책임있는 역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76)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전략은 지역주민(시민) 개개인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정책 대상화되지 않게 참여 가능한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는 책임있게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77)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는 지역을 유지하는 핵심이므로 미래세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대학 등 연령별로 먹거리 돌봄, 급식, 교육 등이 이뤄지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역할을 다해야 함

78)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이 지역사회 돌봄의 주류가 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79) 지역먹거리는 그 자체로 지역순환-지역소비의 지역순환경제를 작동시키는 재화·상품·서비스(매개물)임. 지역먹거리가 지역사회·경제 곳곳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관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80) 먹거리 기본조례의 목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먹거리 기본권을 높이고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어 나가는 실행력을 지역사회의 규범화해 나가야 함. 지역먹거리에 대한 지역사회 규범화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정책사업+재정 확보 등 정책적 추진의 근거임

표 7-1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전략 영역별 주요과제

구 분	주요과제 검토
생산단계	기획생산 프로그램 지속 유지, 생산자조직화 프로그램 유지, 기초(시군) 다품목 연중생산체계 구축 강화, 시군 한계+광역 연계(제휴푸드), 산자+소비자 도농상생 연계, 안전성 검사 지속 유지, 지역인증 체계 유지, 소비자 모니터링 활동 등
식생활 교육	학교단위 식생활 교육(영양관리 교육, 농업농촌교육, 먹거리 교육,), 학교텃밭(텃밭수, 프로그램), 사회단위 식생활 교육(식생활교육 활동가 양성, 활동가 역할 부여, 지역 식생활교육단체 지원) 등
가공단계	시군 거점가공센터 인큐베이팅 강화, 농민가공 창업 확대 지원, 농민가공 상품화 역량 지원(인허가, 등록 등), 농민가공 판매처 입점 지원(농협하나로마트, 지역마트 등) 등
유통단계	직매장 확대(소비자 마을단위), 직매장 상품 내실화(신선+육류+생선+반찬+가공+정보), 직매장 복합화(문화·정보·교류거점), 직거래 이동장터 확대(지역농협,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자치조직 연계), 꾸러미 사업조직(한국형 CSA), 지역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지원, 지역상권 숨인숨(시범) 등
급식영역	학교급식(지역 식재료 비율 상향, 식단가 인상),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식재료 공급, 물량 조직화), 사회복지(식재료 대체, 물량 조직화), 공공기관(식재료 연계·대체, 주체 대체, 공공기관 ESG 경영 연계) 등
복지·돌봄	사회복지 프로그램(지역 식재료 공급), 취약계층 무료 급식소 관리, 마을부엌 먹거리 돌봄 거점(확대, 프로그램), 먹거리 돌봄 지속 추진(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과일간식, 임산부꾸러미 등), 푸드뱅크-마켓 연계 관리, 사회적농업 연계 등
소비단계	식품표시 인지력 향상, 소비자 조직(생협) 활동 촉진, 지역먹거리 소비 캠페인, 소비자 시민조직 활동 프로그램, 푸드마일리지(탄소배출과 지역먹거리) 정립, 지역식당 지역먹거리 식재료 대체 지원, 지역먹거리 우수식당 인증 등
폐기·순환	가정내 폐기량 감축 캠페인, 단체급식소 폐기량 감축 캠페인, 음식폐기물 유기자원화 촉진(도시농업 활동 연계) 등
지역경제	지역먹거리 지역화폐 연계, 지역먹거리 소비 마일리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보공유, 지역먹거리 정보 제공 등
추진체계	먹거리위원회 구성 운영(정례화, 의제화, 심의·의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공공급식·학교급식·어린이급식지원센터 통합, 재단법인 유도), 행정 내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시군구, 광역, 교육청), 먹거리 정보 작성, 먹거리 통계 작성, 정보통계 제공, 활동 보고대회, 연차보고서 작성 등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7-2 지역먹거리계획 수준에서의 정책시행의 개선방향

전략	추진과제
(1) 기본총질	◎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지향 -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제조~공급·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실행계획, '커뮤니티 푸드시스템' 구축을 지향 '생산·공급 대책, 안전·환경 대책, 소비·생활 대책, 복지·보장 대책, 사회·통합 대책' 등 성격을 갖는 현실의 먹거리 문제 시정 위한 액션플랜
(2) 시민역량	◎ 먹거리 전략 활동성과는 '먹거리 시민 역량' 강화로 먹거리 관련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대응, 시민+지역사회(공동체)가 사회규범

전략	추진과제
	수준에서 건강·안전 먹거리를 일상화하는 역량에 초점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전략 활동성과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 이해·실천할 수 있는 역량 갖추는 것으로 귀결
(3) 실행체계	◎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전략 추진체계’의 운영·강화 -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균형점으로 다양한 실행·추진,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침, 먹거리 영역과 실행력을 고려하는 다층적 추진체계 구축이 관건 - 먹거리 전략을 진화·발전시켜오는 선진사례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 통해 다양한 주체·시민 이해관계를 조정 실행과제를 도출
(4) 돌봄지향	◎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애주기 돌봄’을 지향 - 양적인 먹거리 공급을 넘어 사회적인 먹거리 보장이 실효적으로 이뤄져 먹거리에 있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지역사회 먹거리 기본권과 보장을 확립 - 모든 시민이 생애주기에 걸친 먹거리 취약성을 최소화해 내는 지역먹거리 체계로 먹거리 돌봄과 나눔이 실현되는 구조를 갖추어 나감
(5) 역할확장	◎ ‘기초+광역’ 단위 먹거리 전략의 실효적인 결합·확장 - 지역생산-지역소비 구조를 내실있게 강화하면서, 지역적 한계와 장점을 살려 기초단위 전략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로 확장 - 도시-도농복합-농촌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도농상생 먹거리 체계’를 위한 실천적 협력방안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협약) 방안을 제도화
(6) 거점구축	◎ 먹거리 전략의 확장을 위한 ‘핵심시설과 활동거점’을 확대 - 생활 속에서 지역먹거리 소비와 다양한 실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먹거리 체계의 가치사슬(단계별)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기반을 확대해 나감 - 발전적 확장을 위해 ‘생산~유통~소비~활동’ 콘텐츠가 복합화된 핵심시설 구축과 시민활동 거점을 다양한 방식(형태, O2O)으로 구축

자료 : 황영모 외(2021)에서 수정

- 강정혜(2014),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논고', 서울법학, 22(2), pp.1-28.
- 김시백·김수은(2023). 전라북도 경제정책 수립 방안 연구 II. 전북연구원.
- 김유리(2023), '지역먹거리계획 정책현황', 서울시+MUFPF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2022 지역먹거리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식'.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홍보 리플렛'.
- 박경귀(2018),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활용의 유의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소비자시민모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3), '2023 지역먹거리지수(농촌·도농복합형) 매뉴얼'.
- 이수행·박정지(2022), '소비자인식에 기초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책브리프 2022-08, 경기연구원.
- 전주시(2021), 「사회조사」 보고서.
- 질병관리청(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각 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청(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통계청(2020), 「사회조사」 조사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자료(내부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3), '지역먹거리계획 수립현황 조사결과(2023.2.)'.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각 연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각 연도), 「지역산업연관표」.
- 환경부(각 연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황영모 외(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 황영모 외(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황영모 외(202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황영모 외(2022), '전주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전주시청
- Blay-Palmer et al.(2019), 'Sustainable Food System Assessment', Routledge.
- Braathen et al.(2021), 'FUSILLI Evaluation Research Innovation Action: Living Labs for Urban Food System Transformation - an inventory report', Fostering the Urban food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Innovative Living Labs Implementation(FUSILLI).
- Bristol One City(2022), 'A One City Food Equality Strategy for Bristol 2022 - 2032'.
- Carey and Cook(2021),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onitoring framework: A practical handbook for implementation', FAO. Rome.
- Carey & Marielle Dubbeling (2017), '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 Framework: City Region Food System Toolkit', RUAF Foundation.
- Deller et al(2017), 'Food access, local foods, and community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48(5), pp.1-24.
- Deng, W.(2007).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5), pp.1274-1284.
- Dubbeling and Santini(2018), 'City Region Food System Toolkit: Assessing and planning sustainable city region food systems', FAO, RUAF Foundati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Centre for Sustainable Food Systems.
- Ellie King(2023), 'One City Food Equality Strategy Action Plan 2023-26', Bristol One City, Feeding Bristol, Bristol City Council.
- FAO·MUFPF·RUAF(2018),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onitoring Framework'.
- FAO(2019), 'MUFPF Monitoring Framework Pilot Cities Project : Quito Case Study Presentation'.
- Filippini et al.(2019), 'The contribution of Urban Food Policies toward food security in developing and

- developed countries: A network analysis approach,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47(2):101506.
- Freudenberg, Willingham and Cohen(2018), 'The role of metrics in food policy: Lessons from a decade of experience in New York City', *Journal of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8(2), pp.191-209.
- IPES-Food(2015), 'THE NEW SCIENCE OF SUSTAINABLE FOOD SYSTEMS: Overcoming Barriers to Food Systems Reform'.
- King and Sanderson-Bellamy(2023), 'Bristol Good Food 2030: A Framework for Action on Food', Bristol Food Network, Bristol One City, Bristol City Council.
- Lawrence et al.(2013), 'Food Security in Australia: Emerging Concerns in an Era of Neoliberalism, Productivism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Rural Studies* 29, pp.30-39.
- Lyer et al.(2009), 'Baltimore City Food Policy Task Force, Final Report', Baltimore City Food Policy Task Force.
- McIntyre et al(2009), 'Agriculture at a Crossroads: The Global Report',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IAASTD).
- Morgan and Santo(2018), 'Localizing Global Food: Chapter, The rise of municipal food movements', Routledge.
- Moragues-Faus(2020), 'Distributive food systems to build just and liveable future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volume 37, pp.583-584.
- Morley and Morgan(2021), 'Municipal foodscapes: Urban food policy and the new municipalism', *Food Policy* 103(5):102069.
- MUFPP(2015).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 Santo and Moragues-Faus(2019), 'Towards a trans-local food governance: Exploring the transformative capacity of food policy assemblages in the US and UK'. *Geoforum* 98, pp. 75-87.
- Santo, Yong and Palmer(2014), 'Collaboration Meets Opportunity: The Baltimore Food Policy Initiative', *Journal of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4(3), pp.193-208.
- Baltimore Food Policy Director(2016). 'BALTIMORE FOOD POLICY INITIATIVE (BFPI): ORGANIZATIONAL STRUCTURE',
- Sonnino, R. and Beynon, B.(2015), "Rethinking Food Governance: Urban Innovations", in Borrelli, N., Deakin, M. and Diamantini, D. (Eds.), *The Governance of Food System*,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Milan, pp. 35-48.
- The City of New York Mayor Eric Adams (2021), 'Food Metrics Report 2022', NYC Food Policy.
- 이병성(2021), '1인당 추가 소득 '1150만원, 농협 로컬푸드 농가 희망되다', *한국농어민신문*(2021.9.28.).
- 김관태(2022), '청양로컬푸드-특산품으로 만든 다짐장·밀키트, 공품 개발로 지속가능성 찾다', *한국농어민신문* (2022.11.22.).

바로정보(www.baroinfo.c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

Bristol Good Food 2030 홈페이지(<https://bristolgoodfood.org/action-plans/>)

부록

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 방향과 영향 결과
2.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별 만족도-중요도 비교
3.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만족도-중요도 특성분석
4. 먹거리의 취약성 개선효과 분석
5.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의 지향 방향과 영향 결과

부표-1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의 지향 방향과 영향 결과

가치 (6대)	목표 (9대)	(방향) 전환방향(21대) (장기적 달성, 변화)	(결과) 영향의 결과, 측정문제(29대) (평가에 초점 명확화, 제안은 적절한 선택)	SDGs와 대응
사회적 지속 가능성 및 형평성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모든 농촌· 도시주민은 적당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고, 안전하고, 적절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이용	· (접근성) 취약계층·저소득층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용이성(정도)	SDG 11.1.1 (빈민가, 비공식 정착지 또는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 (경제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취약계층 포함)에 대한 먹거리 소비 및 지출동향	SDG 1.3.1 (사회적 보호계층, 시스템, 성별,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 피해자, 빈곤층·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인구 비율) SDG 2.c.1 (먹거리 가격 인상 지표)
			· (건강·웰빙·영양) 사회적 식이관련 질병 발생률, 식이 관련 신체·정신건강 상태	SDG 2.1.1 (영양 결핍 유병률) SDG 2.1.2 (FIES*를 기반으로 중증도 또는 중증의 먹거리 불안 유병률) *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SDG 2.2.1 (5세미만 아동 발육부진(WHO) 아동성장 기준 중앙값에서 2세 미만 신장 표준편차) 유병률 SDG 2.2.2 (유형별 낭비 및 과체중, 5세미만 아동 영양실조 유병률(신장/체중), WHO 아동성장 기준 중앙값에서 표준편차, +2~-2) SDG 3.4.1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표준영양·규정) 가공·소매·음식서비스 부문(공공 먹거리 조달포함)에서 양질의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범위	SDG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 및 실행계획을 실행하는 국가의 수)
			· (교육·인식)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도	
			· (식품안전) 가공, 소매, 음식서비스 부문이 위생 및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SDG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SDG 16.5.1 (1년 동안 공무원과 한번 이상 접촉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했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청한 사람의 비율) SDG 16.5.2 (아래)

가치 (6대)	목표 (9대)	(방향) 전환방향(21대) (장기적 달성, 변화)	(결과) 영향의 결과, 측정문제(29대) (평가에 초점 명확화, 제안은 적절한 선택)	SDGs와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 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 개선	먹거리 체계 모든 노동자 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근무) 조건	· (노동력 조건) 먹거리 체계 내 비즈니스에서 노동자에게 건강 및 안전한 작업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위험의 평가·감축을 제공하는 범위	SDG 16.5.2 공무원과 한 번 이상 접촉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했거나 1년 동안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청한 기업의 비율 SDG 16.5.1 (위)
	지역먹거리 문화 및 유산 구축	먹거리 문화, 먹거리 유산, 정체성	· (식문화·정체성) 먹거리 관련 사업·활동이 실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먹거리와 연결되어 먹거리 원산지(출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	
	모든 주민을 위한 먹거리 공급 수용 가능성 보장	시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습관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의 공급	· (먹거리 선택)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먹거리 공급의 범위	
경제적 지속 가능성	지역경제를 성장·촉진 하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경제를 위한 '지역먹거리 화폐' 유지	· (지역재정 회복력) 자금흐름이 지역먹거리 체계 내에서 유통되는 정도,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정도 · (사업의 다양성) 먹거리 사업과 활동의 유형, 규모 및 위치의 범위	
		먹거리 체계 전반의 소규모 생산자, 노동자·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일자리(공식·비공식) 와 소득의 기회	· (일자리) 먹거리 체계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도 · (다양한 소득흐름) 다양한 소득을 올릴 기회가 실현되는 정도	SDG 2.3.2 (성별·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품 생산자의 평균 소득) SDG 8.3.1 (식량 및 농업 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비공식 고용 비율) SDG 5.c.1 (성평등과 여성 권한 부여 위한 공공활동을 추적하고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
			· (기술·전문성·지식) 노동자(인력)가 기술·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먹거리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정도	SDG 4.4.1 (기술 유형별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SDG 2.a.1 (정부 지출에 대한 농업지향 지수) SDG 2.a.2 (농업부문으로의 총 공식흐름, 공식개발 지원 및 기타 공식흐름)
				SDG 8.9.2 (전체 관광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일자리의 비율)
도시와 농촌의 통합 (융합)	먹거리 생산 및 공급체계 강화	먹거리 생산 능력 최적화	· (생산) 가능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농지)가 관리되고 사용되는 범위	SDG 2.3.1 (농업/목축/임업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 단위당 생산량)
		효율적·다양한 농업의 공급·가치사슬은 다양한 시장기회 접근을 제공해 먹거리 생산자와 연결	· (짧은 공급망) 생산자가 다양한 지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공급 및 가치사슬의 범위	SDG 9.1.1 (세계철 도로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율)
		먹거리·양분· 에너지·기타자원· 서비스 흐름이 도시와 농촌지역 연결	· (상호이익) 농촌과 도시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정도	SDG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가치 (6대)	목표 (9대)	(방향) 전환방향(21대) (장기적 달성, 변화)	(결과) 영향의 결과, 측정문제(29대) (평가에 초점 명확화, 제안은 적절한 선택)	SDGs와 대응
환경 지속 가능성	생태계 및 환경자원 보호 및 관리개선	농생태학적 다양성이 보호되고 촉진	· (농업활동) 먹거리 생산활동이 생물다양성, 토양·생태계 건강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키는 정도	SDG 2.4.1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농업 면적의 비율) SDG 2.5.1 (중장기 보존 시설에서 확보 한 식량 및 농업용 식물 및 동물 유전자원의 수) SDG 2.5.2 (위험, 비위험 또는 멸종위험 수준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된 현지 품종 비율) SDG 14.4.1 (생물학적 지속 가능 수준 내 어족 비율) SDG 2.4.1 (지속가능 농업활동 농업면적 비율) SDG 2.4.2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 비율) SDG 2.4.3 (비료사용/친환경비료 사용 농가 비율)
		도시 및 자연 생태계 적절한 보존과 관리	· (생태계관리) 농촌과 도시의 자연자원이 평가, 보존, 보호되는 범위	SDG 11.4.1 (문화유산유형 (문화, 자연, 혼합·세계유산 센터지정), 정부수준(국가)별 문화·유산보존, 보호·보존 지출 1인당 총 지출(공공·민간), 지역(운영지출·투자), 민간자금 (현물기부·비영리부문·후원) SDG 15.1.2 (생태계 유형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육상·담수 생물 다양성 중요 부지 비율) SDG 15.1.1 (총 토지 면적 대비 산림 면적) SDG 15.3.1 (총 토지면적 대비 황폐화된 토지 비율) SDG 15.a.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식개발 지원 및 공공지출)
		먹거리 체계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 생산자·기업 등 먹거리 체계 내의 주체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도	SDG 8.4.1 (재료발자국, 1인당 및 GDP당) SDG 8.4.2 (국산 재료소비, 1인당 국내 재료소비, GDP당 국내재료 소비)
		먹거리 손실·폐기물을 먹거리 체계 전반에 걸쳐 감소 또는 재사용	· (먹거리 손실·폐기) 먹거리 체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먹거리 손실·폐기 발생의 동인을 이해하고 정량화하고 해결방안을 식별·구현하는 범위	SDG 11.6.1 (도시발생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 수집되고 적절한 최종 배출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 SDG 12.3.1 (글로벌 먹거리 손실 지수) SDG 12.5.1 (국가 재활용률, 재활용 자재)
먹거리 거버넌스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 및 계획의 개선	먹거리 체계 정책·법규·전략으로 구체화, 다른 정책·계획·프로세스·프로그램과 통합	· (조정과 통합) 먹거리 체계의 계획과 도시-농촌 연계를 인식하고 넓은 지역·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계획에 포함되는 정도	SDG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 사회 파트너십에 투입된 금액)
		거버넌스 구조는 행정과 부문간·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	· (참여) 먹거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범위에는 다양한 층위(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포함	SDG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서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구조를 가진 도시의 비율)

가치 (6대)	목표 (9대)	(방향) 전환방향(21대) (장기적 달성, 변화)	(결과) 영향의 결과, 측정문제(29대) (평가에 초점 명확화, 제안은 적절한 선택)	SDGs와 대응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는 투명성, 소유권, 협업·공동 투자를 향상	· (영향) 먹거리 거버넌스 구조의 이해·신뢰·지원 의 효과가 있는 정도 · (모니터링) 공식 데이터 수집, 시민사회와 기타 파트너 등에 의해 먹거리 체계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품질·수량·적용범위·관리·이용을 강 화하여 먹거리 정책개발·책임을 위한 정보시스 템 개발·사용하는 범위	
		먹거리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감소	· (사회통합과 불평등 감소) 먹거리 정책이 다루고 개선하는 범위 ①사회적 통합(성별, 소득, 교육·문화, 연령 등), ②취약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감소	
		먹거리 정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 (환경적 지속가능성) 먹거리 정책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향상을 다루고 개선하는 범위	SDG 14.4.1 (생물학적 지속 가능한 수준 어족 비율) SDG 14.5.1 (해양 지역과 관 련된 보호지역의 범위) SDG 14.6.1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퇴치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이행정도에 대한 국가별 진전)
취약성 및 복원력	취약성 감소 및 회복력 증가	먹거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 (경제·기후·재난)에 대응할 능력이 증가	· (역량) 미래의 재해대응 및 회복력을 평가, 대응 계획에 먹거리 체계가 포함되는 범위	SDG 11.b.1 (재난위험 경감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 재 난위험 경감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 SDG 11.b.2 (국가재난 위험 감소 전략에 따라 지역 재난위 험 감소 전략 채택·실행 지방 정부 비율) SDG 11.5.2 (글로벌 GDP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중요 인프라 손상/재난으로 인한 기본 서비스 중단 횟수)
		농업자원 기반보호와 외부 먹거리 공급에 대한 의존을 감소	· (자급자족) 자급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먹거 리 체계 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도	
		개발·지역계획 내용에 먹거리 안보 및 회복력을 포함	· (먹거리 계획) 토지(농지)이용 및 지역개발계획 과 관련하여 계획자가 인식하고 먹거리 체계의 안보·회복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범위	SDG 11.3.1 (인구 증가율에 대한 토지사용 비율) SDG 11.a.1 (인구전망과 자 원수요 통합하는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 실행하는 지역 거주 인구비율)

* 자료 : Joy Carey & Marielle Dubbeling (2017), 'City Region Food System Indicator Framework: City Region Food System Toolkit', RUAF Foundation; 황영모 외(2020)에서 재인용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별 만족도-중요도 비교표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부표-2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만족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1

구분		건강			사회			환경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성별	남성	3.72	-0.33	0.74	3.72	0.01	0.99	3.47	-0.89	0.37
	여성	3.75			3.72			3.54		
연령	10대	2.89	2.79	0.01	2.54	3.83	0.00	2.50	2.43	0.02
	20대	3.51			3.50			3.46		
	30대	3.74			3.78			3.44		
	40대	3.76			3.78			3.53		
	50대	3.90			3.85			3.66		
	60대	3.66			3.59			3.39		
	70대	3.63			3.56			3.52		
	80대	3.00			4.00			4.00		
결혼유무	기혼	3.80	2.90	0.00	3.78	2.53	0.01	3.57	2.58	0.01
	미혼	3.56			3.58			3.36		
학력	고졸	3.63	6.70	0.00	3.60	11.08	0.00	3.40	6.34	0.00
	대학원이상	4.00			4.04			3.70		
	대학졸	3.81			3.82			3.60		
	중졸	2.92			2.62			2.67		
	초졸이하	4.67			4.42			4.33		
직업	교사/공무원	3.92	2.65	0.01	3.94	3.13	0.00	3.65	1.52	0.14
	농림어업	3.80			3.71			3.50		
	무직	3.93			3.70			3.63		
	사무/관리직	3.81			3.79			3.49		
	생산/기능직	3.52			3.54			3.42		
	자영업	3.66			3.81			3.62		
	전문직	3.88			3.91			3.77		
	주부	3.72			3.75			3.63		
	퇴직(은퇴)	3.80			3.65			3.50		
	학생/취업준비	3.10			3.04			3.06		
소득수준	1억원 이상	3.77	2.08	0.08	3.65	3.72	0.01	3.68	0.92	0.45
	3천만원 미만	3.60			3.57			3.42		
	3~5천만원 미만	3.80			3.77			3.51		
	5~7천만원 미만	3.76			3.80			3.60		
	7천~1억원 미만	3.99			4.10			3.56		

부표-3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만족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2

구분		돌봄			경제			체계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성별	남성	2.71	0.21	0.83	3.71	-0.29	0.77	3.61	0.28	0.78
	여성	2.70			3.73			3.59		
연령	10대	2.08	1.30	0.25	3.17	0.91	0.50	2.71	1.52	0.16
	20대	2.73			3.61			3.56		
	30대	2.72			3.74			3.70		
	40대	2.73			3.74			3.56		
	50대	2.74			3.79			3.59		
	60대	2.60			3.73			3.60		
	70대	2.61			3.53			3.83		
	80대	2.75			4.00			4.00		
결혼 유무	기혼	2.72	0.41	0.68	3.77	2.09	0.04	3.63	1.49	0.14
	미혼	2.69			3.61			3.51		
학력	고졸	2.69	3.14	0.01	3.59	4.72	0.00	3.49	5.28	0.00
	대학원이상	2.92			4.03			3.96		
	대학졸	2.73			3.81			3.66		
	중졸	2.23			3.33			3.06		
	초졸이하	2.67			4.42			4.58		
직업	교사/공무원	2.88	2.12	0.03	3.91	2.37	0.01	3.86	2.12	0.03
	농림어업	2.66			3.76			3.67		
	무직	2.60			3.78			3.48		
	사무/관리직	2.77			3.80			3.64		
	생산/기능직	2.70			3.66			3.56		
	자영업	2.67			3.63			3.42		
	전문직	2.81			3.84			3.78		
	주부	2.68			3.74			3.59		
	퇴직(은퇴)	2.63			3.63			3.30		
	학생/취업준비	2.31			3.13			3.13		
소득 수준	1억원 이상	2.60	0.86	0.49	3.77	0.43	0.79	3.34	1.49	0.20
	3천만원 미만	2.66			3.70			3.54		
	3~5천만원 미만	2.72			3.73			3.61		
	5~7천만원 미만	2.76			3.74			3.62		
	7천~1억원 미만	2.82			3.89			3.84		

부표-4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중요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1

구분		건강			사회			환경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성별	남성	4.25	-1.51	0.13	4.25	-0.59	0.55	4.05	-1.58	0.11
	여성	4.34			4.28			4.16		
연령	10대	3.72	3.23	0.00	3.21	4.65	0.00	3.00	4.09	0.00
	20대	4.07			4.08			4.07		
	30대	4.27			4.24			3.99		
	40대	4.40			4.37			4.24		
	50대	4.40			4.38			4.24		
	60대	4.35			4.23			3.98		
	70대	3.85			3.83			3.74		
	80대	4.00			4.00			4.33		
결혼 유무	기혼	4.36	2.88	0.00	4.34	3.78	0.00	4.17	2.59	0.01
	미혼	4.16			4.08			3.97		
학력	고졸	4.19	4.50	0.00	4.15	8.02	0.00	3.99	8.61	0.00
	대학원이상	4.54			4.48			4.14		
	대학졸	4.37			4.34			4.23		
	중졸	3.90			3.50			3.18		
	초졸이하	5.00			4.92			4.78		
직업	교사/공무원	4.55	4.67	0.00	4.56	4.19	0.00	4.33	2.46	0.01
	농림어업	4.40			4.33			4.14		
	무직	4.27			4.13			4.23		
	사무/관리직	4.35			4.27			4.14		
	생산/기능직	4.27			4.17			4.14		
	자영업	4.30			4.37			4.17		
	전문직	4.25			4.33			4.17		
	주부	4.31			4.30			4.11		
	퇴직(은퇴)	4.13			3.95			3.90		
	학생/취업준비	3.55			3.63			3.51		
소득 수준	1억원 이상	4.39	2.88	0.02	4.28	3.88	0.00	4.17	3.11	0.02
	3천만원 미만	4.18			4.11			3.94		
	3~5천만원 미만	4.32			4.27			4.15		
	5~7천만원 미만	4.40			4.37			4.28		
	7천~1억원 미만	4.56			4.54			4.13		

부표-5 지역먹거리계획 시행 기대효과별 '중요수준' 응답자 특성별 비교 2

구분		돌봄			경제			체계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평균값	T/F	p-value
성별	남성	3.14	-0.08	0.94	4.26	-0.59	0.55	4.18	-0.23	0.82
	여성	3.15			4.30			4.20		
연령	10대	2.38	3.39	0.00	3.58	3.46	0.00	3.17	3.17	0.00
	20대	3.10			4.08			4.03		
	30대	3.11			4.28			4.25		
	40대	3.25			4.37			4.28		
	50대	3.19			4.36			4.22		
	60대	3.10			4.31			4.11		
	70대	2.78			3.72			3.97		
	80대	3.25			4.75			5.00		
결혼 유무	기혼	3.18	1.69	0.09	4.34	3.30	0.00	4.25	2.97	0.00
	미혼	3.08			4.12			4.04		
학력	고졸	3.13	4.86	0.00	4.14	6.89	0.00	4.09	7.74	0.00
	대학원이상	3.32			4.52			4.48		
	대학졸	3.18			4.37			4.26		
	중졸	2.58			3.73			3.44		
	초졸이하	3.33			4.92			5.00		
직업	교사/공무원	3.36	2.66	0.01	4.49	4.71	0.00	4.48	4.26	0.00
	농림어업	3.13			4.38			4.29		
	무직	3.10			4.23			4.25		
	사무/관리직	3.17			4.32			4.23		
	생산/기능직	3.21			4.32			4.20		
	자영업	3.18			4.28			4.11		
	전문직	3.09			4.36			4.28		
	주부	3.14			4.27			4.19		
	퇴직(은퇴)	2.88			3.98			3.80		
	학생/취업준비	2.77			3.56			3.52		
소득 수준	1억원 이상	3.17	1.14	0.34	4.41	3.21	0.01	4.00	3.84	0.00
	3천만원 미만	3.08			4.14			4.09		
	3~5천만원 미만	3.15			4.30			4.17		
	5~7천만원 미만	3.19			4.39			4.36		
	7천~1억원 미만	3.27			4.50			4.49		

지역먹거리계획 기대효과 만족도-중요도 특성분석 결과 (요인+군집+판별분석)

□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이 연구에서 설정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에 따른 세부 기대효과(21개)별 만족도 및 중요도 항목의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함
 - 만족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이 전체 변량 중에서 설명되는 부분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 기준 대신에 임의로 설정한 고정된 요인 수 4개를 추출
 - 4가지 요인을 설명해주는 총 분산 설명력은 76.63%,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0.959로 최소 요구조건인 0.7이상을 만족하고 있음
 - 분산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로 나타나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21개 변인들은 4개의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인별 요인적재량의 공통성도 모두 최소 요구조건인 0.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설정한대로 각 요인을 ‘건강 및 사회’, ‘환경’, ‘돌봄’, ‘경제 및 체제’의 4가지 요인으로 명명함
- 탐색적 요인을 바탕으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상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함

부표-6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alpha	평균 값
Factor 1. 건강 및 사회 분야 만족		12.97	61.77	0.9424	3.73
1. 나와 이웃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	0.8116				
2. 나와 이웃이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데 도움	0.7888				
3. 나와 이웃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데 도움	0.7975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alpha	평균 값
4.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	0.7006				
5.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도움	0.6718				
6.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도움	0.7088				
7. 우리 사회가 배려와 포용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	0.5581				
Factor 2. 환경 분야 만족		0.87	4.13	0.8713	3.51
1.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데 도움	0.7968				
2.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	0.7374				
3.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에 기여	0.6375				
Factor 3. 돌봄 분야 만족		1.00	4.75	0.8969	3.61
1.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에 기여	0.8112				
2.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에 기여	0.8387				
3.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데 기여	0.6687				
Factor 4. 경제 및 체계 분야 만족		1.26	5.98	0.9464	3.66
1.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을 늘리는데 기여	0.6383				
2.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를 늘리는데 기여	0.6463				
3.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늘리는데 기여	0.6045				
4.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가 늘어남	0.6537				
5.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참여하는데 기여	0.7211				
6.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에 기여	0.7830				
7.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0.7410				
8.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등 제도(조례 등) 마련에 기여	0.7547				

주 : 설명 분산의 누적 값 = 76.63%, KMO = 0.959,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 10,370.051(d.f=210, p=0.000***)

- 중요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들이 전체 변량 중에서 설명되는 부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 기준 대신에 본 연구에서 임의로 설정한 고정된 요인 수 4개를 추출함
 - 4가지 요인을 설명해주는 총 분산 설명력은 75.93%,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0.960로 최소 요구조건인 0.7이상을 만족하고 있음
 - 분산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로 나타나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21개 변인들은 4개의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인별 요인적재량의 공통성도 모두 최소 요구조건인 0.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설정한대로 각 요인을 ‘건강 및 사회’, ‘환경’, ‘돌봄’, ‘경제 및 체계’의 4가지 요인으로 명명함

부표-7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 alpha	평균 값
Factor 1. 건강 및 사회 분야 만족		12.97	61.76	0.9410	4.28
1. 나와 이웃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	0.7775				
2. 나와 이웃이 영양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데 도움	0.7374				
3. 나와 이웃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데 도움	0.7447				
4. 농업·농촌·먹거리의 의미·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	0.6412				
5. 학교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도움	0.6647				
6.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도움	0.7100				
7. 우리 사회가 배려와 포용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	0.5228				
Factor 2. 환경 분야 만족		1.00	4.65	0.8829	4.12
1.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데 도움	0.8025				
2.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	0.7726				
3.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의 순환에 기여	0.7212				
Factor 3. 돌봄 분야 만족		0.88	4.21	0.8979	4.20
1.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식사·먹거리 제공에 기여	0.7866				
2.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중장년 등) 식사·먹거리 제공에 기여	0.8208				
3.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데 기여	0.6938				
Factor 4. 경제 및 체계 분야 만족		1.11	5.30	0.9392	4.24
1. 지역먹거리의 생산(신선+가공)을 늘리는데 기여	0.6032				
2. 지역먹거리의 소비(급식+가정)를 늘리는데 기여	0.5841				
3.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늘리는데 기여	0.5379				
4. 지역먹거리 제공(판매)하는 매장+주체가 늘어남	0.6453				
5.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참여하는데 기여	0.7249				
6. 먹거리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에 기여	0.7619				
7. 지역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0.6842				
8.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순환 등 제도(조례 등) 마련에 기여	0.7225				

주 : 설명 분산의 누적 값 = 75.93%, KMO = 0.960,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 9990.649(d.f=210, p=0.000***)

□ 군집분석

- 이 연구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대상의 세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도출된 4가지 요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함

- 군집분석은 계층적·비계층적 군집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먼저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와드방법(Ward's method)의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함
 -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유효한 군집 수를 확정하였으며, 도출된 군집해의 군집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해서 도출된 4개의 군집해가 결정되고 프로파일을 통해 세분 집단을 명명함
- 군집 1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이하이며, 특히 환경 분야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군집 2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최하위인 집단, 군집 3은 건강 및 사회 분야 만족 집단, 군집 4는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 만족 집단으로 명칭을 붙임

부표-8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구분		건강 및 사회분야 기대효과	환경분야 기대효과	돌봄분야 기대효과	경제 및 체계분야 기대효과
K-평균값	군집 1(n=151) : 환경 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3.15 ^{주)}	2.90	3.04	3.09
	군집 2(n=27)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2.20	1.99	2.10	2.08
	군집 3(n=235) : 건강 및 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3.89	3.63	3.72	3.80
	군집 4(n=103)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4.64	4.54	4.59	4.59
F-Value		377.98	362.11	306.39	467.56
P-Value(***= p<0.001)		0.000***	0.000***	0.000***	0.000***

주 : 군집 당 기대효과별 만족도 점수를 나타냄

부표-9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분석

구분		건강 및 사회분야 기대효과	환경분야 기대효과	돌봄분야 기대효과	경제 및 체계분야 기대효과
K-평균값	군집 1(n=146)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	4.92 ^{주)}	4.83	4.89	4.86
	군집 2(n=167) : 건강 및 사회 분야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	4.44	4.25	4.34	4.41
	군집 3(n=166) : 환경 분야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88	3.68	3.72	3.81
	군집 4(n=37)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음	2.87	2.64	2.93	2.91
F-Value		511.81	321.11	299.37	453.84
P-Value(***= p<0.001)		0.000***	0.000***	0.000***	0.000***

주 : 군집 당 기대효과별 만족도 점수를 나타냄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해서 도출된 4개의 군집해가 결정되고 프로파일을 통해 세분 집단을 명명함

- 군집 1의 경우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집단, 군집 2는 건강 및 사회 분야 중요 집단, 군집 3은 환경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집단, 군집 4는 모든 분야의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집단으로 명칭을 붙임

□ 판별분석

- 군집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요인들과 4개의 군집을 이용하여 판별 분석을 실시함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에 대하여 도출된 판별함수는 전체 표본 516명 중 511명(99.03%)이 정확히 판별되었음
 - 환경 분야의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그룹 : 151명 중 149명 판별(98.7%)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불만족 그룹 : 27명 중 27명 판별(100.0%)
 - 건강 및 사회 분야 기대효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그룹 : 235명 중 234명 판별(99.6%)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에 만족 그룹 : 103명 중 101명 판별(98.1%)

부표-10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만족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판별분석

Function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Prob>F	
1	6.916	0.9347	0.125		0.000	
2	0.009	0.0938	0.989		0.487	
3	0.002	0.0428	0.998		0.626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Variable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건강+사회 기대효과 만족수준	-0.355	0.521	-0.745	
		환경 분야 기대효과 만족수준	-0.512	-0.602	-0.307	
		돌봄 분야 기대효과 만족수준	-0.484	-0.475	0.258	
		경제+체계 기대효과 만족수준	-0.429	0.446	0.731	
Cluster		Predicted group membership				Sum
		1	2	3	4	
Original	Cluster 1	149 (98.68%)	1 (0.66%)	1 (0.66%)	0 (0.00%)	151 (100%)
	Cluster 2	0 (0.00%)	27 (100%)	0 (0.00%)	0 (0.00%)	27 (100%)
	Cluster 3	1 (0.43%)	0 (0.00%)	234 (99.57%)	0 (0.00%)	235 (100%)
	Cluster 4	0 (0.00%)	0 (0.00%)	2 (1.94%)	101 (98.06%)	103 (100%)

주 : hit ratio= 99.03%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군집에 대하여 도출된 판별함수는 전체 표본 516명 중 508명(98.45%)이 정확히 판별되었음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매우 중요한 그룹 : 146명 중 146명 판별(100.0%)

- 건강·사회 분야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룹 : 167명 중 166명 판별(99.4%)
- 환경 분야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룹 : 166명 중 160명 판별(96.4%)
- 전반적 모든 분야 기대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그룹 : 37명 중 36명 판별(97.3%)

부표-11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별 중요수준에 대한 설문대상의 판별분석

Function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Prob>F	
1	6.828	0.9339	0.125		0.000	
2	0.014	0.1164	0.981		0.130	
3	0.006	0.0754	0.994		0.233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Variable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건강+사회 기대효과 중요수준	-0.417	0.642	-0.222	
		환경 분야 기대효과 중요수준	-0.488	-0.069	-0.629	
		돌봄 분야 기대효과 중요수준	-0.454	-0.822	-0.097	
		경제+체계 기대효과 중요수준	-0.381	0.043	0.843	
Cluster		Predicted group membership				Sum
		1	2	3	4	
Original	Cluster 1	146(100%)	0(0.00%)	0(0.00%)	0(0.00%)	146(100%)
	Cluster 2	1(0.60%)	166(99.40%)	0(0.00%)	0(0.00%)	167(100%)
	Cluster 3	0(0.00%)	3(1.81%)	160(96.39%)	3(1.81%)	166(100%)
	Cluster 4	0(0.00%)	0(0.00%)	1(2.70%)	36(97.30%)	37(100%)

주 : hit ratio= 98.45%

‘먹거리의 취약성’ 개선효과 분석

□ 선행연구 검토

-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먹거리 취약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먹거리와 건강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꼽을 수 있음
- Deller et al(2017)은 공중(公衆)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8개의 변수를 미국 50개주 카운티(County) 단위의 건강 관련 지표와 주요 변수의 관계를 통계 분석하여 검증함
 - 모델의 구성은 아래의 식과 같음

$$PH = \alpha + \beta LF + \gamma FA + \theta HB + \delta EN + \varphi SE + \vartheta SC + \pi AF + \tau HC + \varepsilon$$
 - PH(public health, 공중건강) : 당뇨 유병률, 비만률, 조기사망률
 - LF(local foods, 로컬푸드) : 파머스마켓 비중, 직거래 비중, 인구 당 직거래 금액, 소비자 지원농업(CSA) 농장 비율, 소매업체 직거래 비율
 - FA(외부유입 먹거리), HB(건강유의 활동), EN(쾌적한 환경), SE(해당 지역 사회경제적 특징), SC(사회적 자본), AF(생활지원센터), HC(보건시설)
-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를 유지·관리 방안이 지역사회 건강에 더 효과적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로컬푸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당뇨·조기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변수들의 경우 관계가 복잡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됨
- 반면, 지역사회 건강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먹거리 접근성, 생활지원센터와 보건시설 접근성’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분석방법론

-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 방법론으로는 범주형(이항) 변수의 형태인 종속변수에 따라 횡단면 로지스틱 회귀분석⁸¹⁾을 수행하였음

81)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하여 추후 예측모델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 이는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된 모델링으로 모형의 결정계수나 유의성이 낮을 수 있으나, 이 분석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자원과 결식·영양섭취부족·비만유병 유무(종속변수(0, 1))의 관계를 분석·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본 연구에서 수행된 횡단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종속변수가 범주형(0, 1)인 경우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 용이한 통계적 분석 방법임
- 먼저, 분석에 사용될 회귀식을 유도하고 나타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 형태는 아래의 식과 같음

$$(1) Y_i^* = \beta_0 + \beta_i x_i + e_i, \quad Y_i = \begin{cases} 1, & Y_i^* > 0 \text{인 경우} \\ 0, & Y_i^* \leq 0 \text{인 경우} \end{cases}$$

- 위 식에서 오차항 e_i 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

- 기본형태의 식에서 Y를 확률화(P)할 경우 확률 값은 식 (2)로 표현될 수 있음

$$(2) P = \frac{\exp[f(x_i, \beta_i)]}{1 + \exp[f(x_i, \beta_i)]} = \frac{\exp[\beta_0 + \sum \beta_i x_i]}{1 + \exp[\beta_0 + \sum \beta_i x_i]}$$

- 여기서 P 는 $P(Y^*=1|x_1, \dots, x_i)$ 로 1일 1회 이상 결식 유무, 영양섭취 부족 유무를 판단하는 확률을 뜻하며, x_i 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및 ‘먹거리 인프라’ 등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고, β_i 는 모형에서 추정되어 나타난 계수를 뜻함
- 최소자승법으로 모형의 절편과 계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대 우도 추정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계수와 절편을 추정함
- 식 (2)를 살펴보면 변수들의 관계가 비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형화를 위해 Log화를 시켜 변환하면 식 (3)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로지스틱 변환(logistic transformation)이라 불림

$$(3) \log_e P = \ln \frac{\exp[\beta_0 + \sum \beta_i x_i]}{1 + \exp[\beta_0 + \sum \beta_i x_i]} = \log_e \left[\frac{P}{1-P} \right] = \beta_0 + \sum \beta_i x_i$$

- 여기서 $\frac{P}{1-P}$ 는 오즈(Odds)를 뜻하며, 식(3)을 다시 Log를 푸는 형태로 e를 씌우면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종속변수가 범주형(이항) 변수를 바탕으로 결과 값이 특정한 분류로 나누어짐에 따라 분류분석(classification)으로 불림

식 (4)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4) \quad e^{\log_e\left(\frac{P}{1-P}\right)} = e^{\beta_0 + \sum \beta_i x_i} = \frac{P}{1-P}$$

- 식 (4)를 더 간결하게 확률 P 에 대해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식 (5)와 같이 나타남

$$(5) \quad P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 = \frac{1}{1 + e^{-(\beta_0 + \sum \beta_i x_i)}}$$

- 로지스틱 회귀분석 특성상 비선형 함수 형태로 변수들 간의 비선형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로 회귀계수를 일반 선형회귀 계수처럼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직관적으로 계수에 대해 다시 확률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확률에 대해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자 식 (6)과 같이 미분하여 한계효과를 구함

$$(6) \quad \frac{\partial P}{\partial x_i} = \frac{\partial}{\partial x_i} \left(\frac{1}{1 + e^{-(\beta_0 + \sum \beta_i x_i)}} \right)$$

- 식 (6)을 살펴보면 I번째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구하는 경우 해당 변수를 x_i 라고 하면 식(7)의 값으로 나타남

$$(7) \quad \text{marginal effect} =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2} (-\beta_i)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2} (\beta_i)$$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설명변수들의 인과성에 대한 규명에 한계가 있어 한계효과 대신에 계수의 부호조건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적으로 검토함

□ 분석 개요

- Deller et al(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내용과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로컬푸드 접근성, 외부 유입 먹거리 접근성, 지역먹거리 관련 제반시설 접근성 및 예산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민의 결식과 영양섭취 부족이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검토해보고자 함
- 특히, 먹거리의 취약인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지표로 결식, 영양섭취부족 유무를 선택함
 - 상기의 2가지 지표가 먹거리 분야에 있어 먹거리 취약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규명함
 - 특히, 비교적 유사성이 있는 황영모 외(2021)에서는 먹거리의 취약성을 단순히 결식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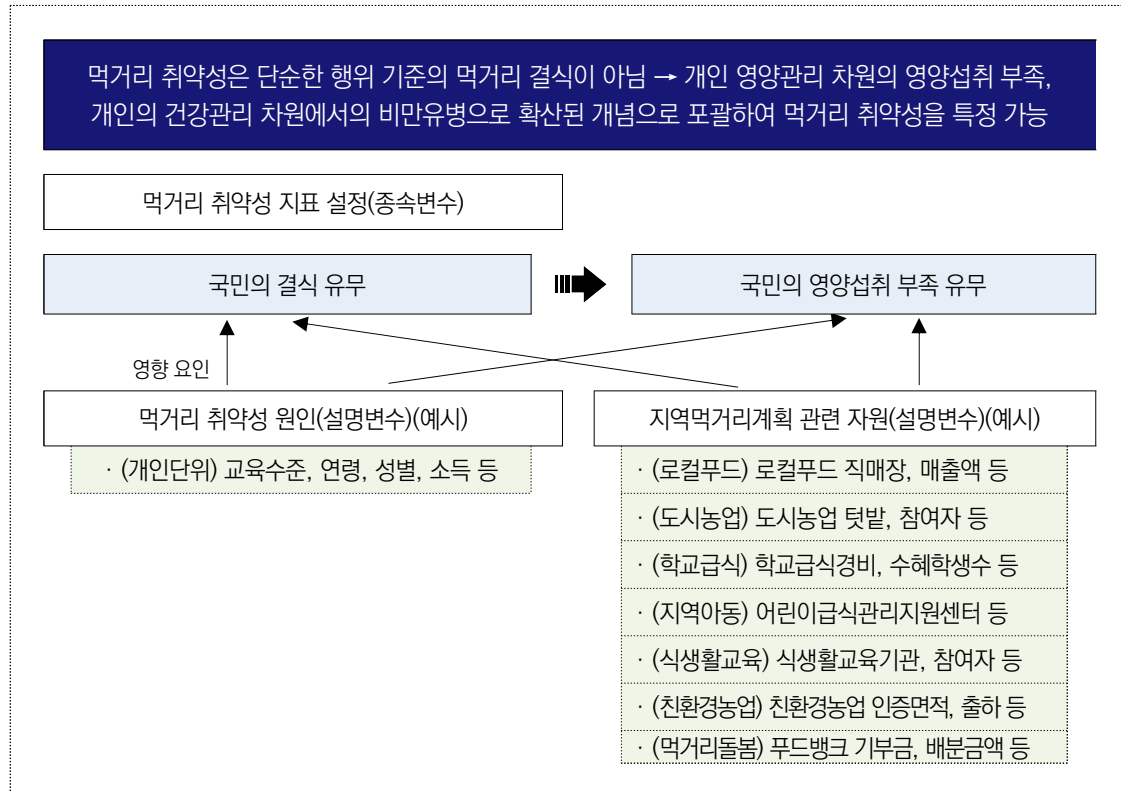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먹거리의 취약성을 행위 기준인 먹거리 결식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영양관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측면에서 발전된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모형 설정

(1) 분석모형

-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2021년 원 자료를 사용하였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순환표본조사의 특성을 지니며, 매 순화주기별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통계적 신뢰도를 가진 모집단 추정에 유리함
- 황영모 외(2021)의 연구에서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2019~2021년(3개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부도-1 먹거리 취약성 개선 효과에 대한 영역 구성 (검토)



* 자료 : 연구진 작성

-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모형’⁸²⁾은 인과관계에 있어 ‘결식유무, 영양섭취부족 유무’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둠
- 따라서 결식 유무에 대한 종속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아침, 점심, 저녁의 결식 유무’로 설정함(0: 미결식자, 1: 1일 1회 이상 결식)
- 영양섭취 부족 유무에 대한 종속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제공하는 영양섭취 부족자의 기준에 부합한 지표를 설정함 (0: 이상 없음, 1: 영양섭취 부족)⁸³⁾
- 설명변수로는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선정함
- 이와 함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와 관련된 변수들로 시·도(광역시)별 수준에서의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항목을 신규로 만들어 변수를 설정함
-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항목은 ‘시·도별 로컬푸드 직매장, 도시농업 텃밭, 학교급식경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기관,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 푸드뱅크’ 등임
 - 자료이용 접근성이 높은 구득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각 년도별· 시도별 통계치를 활용함

□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인과관계 분석결과 논의

(1) ‘결식 유무’와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의 관계

- 우선 로짓모형 분석을 통해 결식(1회 이상)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부호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추정하고 결과 분석을 실시함⁸⁴⁾

82) 원하는 설명변수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살피기 위한 주관적 기준에 따른 모형으로 결정계수에 집중하지 않고 통제변수나 도구변수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함

83) 영양섭취 부족자 분류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또는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분류’임. 에너지 섭취량의 필요 추정량은 한국인 평균 에너지 섭취량(kcal/일) 및 에너지 필요 추정량(‘20년 기준) 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에너지 섭취량 부족자를 선택함.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상의 데이터에서 평균 미만인 경우를 선택함.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는 5년 단위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하고 있음(2020년 최근 자료), 질병관리청(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

84) 분석모형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치의 검정을 위해 Wald 검정을 수행하였음. Wald 검정의 경우 해당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함. 검정 결과 Wald 통계량은 1,758.90으로 매우 높고, p-value가 0.0000으로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추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모집단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추정치의 유효성은 검증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측면에서 개별 변수들의 VIF(분산팽창계수)가 5이하이며, 평균 VIF는 3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설명변수들의 평균 한계효과를 추출하였음
-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보다 중졸 이상자에서 결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에 비해 20대~40대의 결식률이 높고, 50대 이상은 낮아짐
- 소득분위 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이 낮아짐

부표-12 1일 1회 이상 결식 유무 -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관계분석 결과

Variable			coef. (robust S.E.)	dY/dX (평균한계효과)	P-Value
개 인 별 수 준	교육수준 (Base: 초졸 이하)	중졸	0.528(0.068)***	0.116	0.000
		고졸	0.423(0.069)***	0.092	0.000
		대졸이상	0.221(0.075)***	0.046	0.003
	나이 (Base: 20대 미만)	20대	1.365(0.090)***	0.328	0.000
		30대	0.822(0.088)***	0.198	0.000
		40대	0.359(0.084)***	0.083	0.000
		50대	-0.189(0.080)**	-0.040	0.018
		60대	-0.653(0.073)***	-0.125	0.000
		70대 이상	-0.870(0.070)***	-0.157	0.000
	성별(Base: 남성)	여성	0.116(0.035)***	0.025	0.001
	소득수준 (Base: 하위 수준)	중하 수준	-0.251(0.049)***	-0.057	0.000
		중상 수준	-0.336(0.049)***	-0.076	0.000
상위 수준		-0.399(0.051)***	-0.089	0.000	
시 도 별 수 준	log(로컬푸드 직매장(개))		-0.053(0.031)*	-0.012	0.090
	log(도시농업 텃밭(개))		-0.040(0.018)**	-0.009	0.027
	log(학생 1인당 학교급식경비(천원))		-0.685(0.098)***	-0.150	0.000
	log(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		0.025(0.038)	0.005	0.519
	log(식생활교육기관(개))		0.036(0.041)	0.008	0.383
	log(친환경농업 인증면적(ha))		0.016(0.014)	0.004	0.256
	log(푸드뱅크 기부자 1인당 배분금액(원))		0.002(0.077)	0.000	0.984
constant(상수항)			4.083(1.399)***	-	
Observation			16,863		
Wald chi2			1,758.90		
Prob > chi2			0.0000		
Pseudo R2			0.0937		
Log pseudolikelihood			-9,810.9589		

- 주 1. 분석모형에서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가정(robust)하여 분석
 2. 각 변수의 dY/dX 는 더미변수들의 기준(base level)에 따른 이산변화(discrete change)임
 3. 시도별 수준 설명변수는 정규성 높이기 위해 log 적용(데이터 간 편차 줄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줄여 정규성이 높아짐)
 4.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먹거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수, 도시농업 텃밭 수, 학생 1인당 학교급식경비가 증가하면 결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호조건으로 살펴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도시농업 텃밭 수, 학생 1인당 학교급식경비가 높으면 결식률을 줄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며, 학교급식경비의 영향이 상당히 높고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남

(2) ‘영양섭취 부족 유무’와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의 관계

- ‘영양섭취 부족’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부호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추정하고 결과 분석을 실시함⁸⁵⁾

부표-13 영양섭취 부족 유무 -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관계분석 결과

Variable			coef. (robust S.E.)	dY/dX (평균한계효과)	P-Value
개 인 별 수 준	교육수준 (Base: 초졸 이하)	중졸	-0.039(0.069)	-0.006	0.569
		고졸	-0.274(0.070)***	-0.040	0.000
		대졸이상	-0.482(0.077)***	-0.065	0.000
	나이 (Base: 20대 미만)	20대	0.541(0.098)***	0.072	0.000
		30대	0.373(0.099)***	0.047	0.000
		40대	0.477(0.092)***	0.062	0.000
		50대	0.103(0.088)	0.012	0.243
		60대	0.164(0.074)**	0.019	0.026
		70대 이상	0.647(0.065)***	0.090	0.000
	성별(Base: 남성)	여성	0.570(0.040)***	0.077	0.000
	소득수준 (Base: 하위 수준)	중하 수준	-0.256(0.051)***	-0.038	0.000
중상 수준		-0.338(0.052)***	-0.049	0.000	
상위 수준		-0.456(0.055)***	-0.064	0.000	
시 도 별 수 준	log(로컬푸드 직매장(개))		0.007(0.035)	0.001	0.842
	log(도시농업 텃밭(개))		0.028(0.019)	0.004	0.126
	log(학생 1인당 학교급식경비(천원))		0.141(0.107)	0.019	0.187
	log(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		-0.127(0.041)***	-0.017	0.002
	log(식생활교육기관(개))		-0.084(0.043)*	-0.011	0.053
	log(친환경농업 인증면적(ha))		0.007(0.016)	0.001	0.662
	log(푸드뱅크 기부자 1인당 배분금액(원))		0.076(0.079)	0.010	0.332
constant(상수항)			-3.450(1.445)***	-	
Observation			20,211		
Wald chi2			600.33		
Prob > chi2			0.0000		
Pseudo R2			0.0333		
Log pseudolikelihood			-8,974.6007		

주 1. 분석모형에서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가정(robust)하여 분석

Variable	coef. (robust S.E.)	$\frac{dY}{dX}$ (평균한계효과)	P-Value
----------	------------------------	-----------------------------	---------

2. 각 변수의 dY/dX 는 더미변수들의 기준(base level)에 따른 이산변화(discrete change)임

3. 시도별 수준 설명변수는 정규성 높이기 위해 log 적용(데이터 간 편차 줄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줄여 정규성이 높아짐)

4.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보다 중졸 이상자에서 영양섭취부족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에 비해 50대를 제외한 20대~70대의 영양섭취부족자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소득분위 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섭취부족자율이 낮아짐
- 먹거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 교육기관이 증가하면 영양섭취 부족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와 시사점⁸⁶⁾

-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먹거리 취약성 개선’에 기대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사업과 활동 ‘자원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행동행위 기준) ‘먹거리 결식률’에 대해서는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중 ‘학생 1인당 학교급식경비,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수, 도시농업 텃밭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식률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적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생산·교육’ 측면에서 도시농업 텃밭, ‘소비 측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 학교급식경비가 결식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영양관리 기준) ‘영양섭취 부족자율’에 대해서는 지역먹거리계획 자원 중 ‘식생활 교육기관 개소 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양섭취 부족자율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먹거리 가치사슬 단계적으로는 먹거리 ‘교육’ 측면에서 식생활 교육기관, ‘소비’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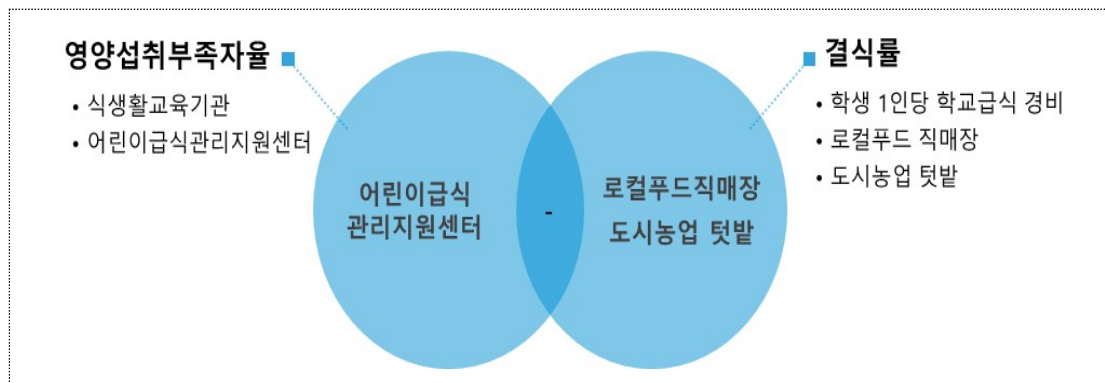
85) 분석모형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치의 검정을 위해 Wald 검정을 수행하였음. Wald 검정의 경우 해당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함. 검정 결과 Wald 통계량은 600.33으로 매우 높고, p-value가 0.0000으로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추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모집단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추정치의 유효성은 검정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측면에서 개별 변수들의 VIF(분산팽창계수)가 50이하이며, 평균 VIF는 3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86) 이 연구에서 적용한 먹거리 취약성 관계분석의 한계점은 다음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섭취 부족자율을 낮추는데 있어 지역먹거리계획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제공주체에 대한 지원’과 ‘먹거리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이 지역사회의 ‘먹거리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판단할 수 있음

부도-2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의 먹거리 취약성 개선효과 시사점



* 자료 : 연구진 작성

□ 분석의 한계점

- 이 연구의 분석에 있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에 대한 내용은 원 자료와 연동이 되는 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통계 수치를 차용한 점에서 표본의 편의(bias)가 있음
 - 예컨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개인 단위의 데이터이지만 지역먹거리계획 자원의 경우 시도별 데이터로 결합을 하는데 있어 다소 과잉해석의 우려가 있음
- 접근성이 비교적 높고 구독 가능한 데이터만을 활용한 점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 구독 가능한 데이터만 활용이 되어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수, 도시농업 텃밭 수의 경우 2019년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2021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영양섭취 부족 유무가 종속변수인 모형만 로짓모형 상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사후검정결과에서 나타나 다소 해석에 있어 추정치의 과잉추정이 예상됨
 - 로짓모형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후검정인 Pearson의 적합도 검정,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모두 해당 로짓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여 적합성 측면

에서 문제점이 있음

- 이 연구의 분석은 그동안 지역먹거리계획이 수행되면서 얻은 성과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의 개선과제로서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나 통계청 등 공식적 조사기관이 시행하고 여러 통계조사에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태와 정책효과의 정밀함과 성과분석 관리체계가 정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통계조사의 확장성이 요구됨
 - 예컨대, 사회조사에서 건강 부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데 있어 먹거리와 관련된 ‘식생활 만족도’, ‘건강 먹거리 접근성’, ‘결식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음

부표-14 통계청, 「사회조사」 먹거리 관련 통계 추가 제안(안)

II 건강 부문

건강 평가

4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건강 관리

5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1. 아침 식사	2. 적정 수면(6~8시간)	3. 규칙적 운동	4. 정기 건강 검진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참고

- '3.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 (단, 부정기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걷기 등은 제외)
- '4. 정기 건강 검진'은 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경우로, 0~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도 해당됨. (직장 건강 검진, 학생 건강 검진 포함)

➡ 리커트 5점 척도의 형태로 식생활 만족도와 같은 먹거리 관련 만족도 일부를 추가할 수 있음

➡ 아침식사 결식에 대한 것 보다는 전반적인 결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

➡ '건강 식생활 실천 유무'와 같은 개념의 질문을 추가

* 자료 : 통계청(2002), 「사회조사」 조사표(가구원)에서 작성하여 제안

- 설문 형식은 비교적 부담 없이 일반적인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설문 대상자들의 혼동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관련 있는 분야와 연계되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요구됨
-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사는 일반적인 교육, 보건 및 의료, 주거 및 교통, 환경, 여가 및 문화, 안전 등에 대한 항목을 질의하고 있으나, 광역 시·도 단위의 특성질문과 기초 시·군·구 단위 특성질문이 추가로 있어 특성질문으로서 지역먹거

리계획에 부합하는 통계항목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부표-15 전주시 '사회조사' 질문항목 검토(안) (예시)

분야	조사지표	
도 특성 (11개)	삶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 충분도, 경제활동 여부 및 일자리 만족도, 코로나 시대 우울증, 코로나 시대 사회 관계 변화 등	사회적 거리, 좋은 시민 자질, 시민참여활동, 지향하는 가치, 인구증가 정책, 도민 정보화 역량 능력 등
시 특성 (9개)	판소리,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전주시 문화정책 인지도 및 정책효과,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물품서비스, 공동체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활동 등	(신중년) 구직 경험 및 활동 (신중년) 구직활동 경로 (신중년) 재취업 희망 (신중년) 교육 훈련 참여

▶ 도 특성 내지 시 특성질문에 '먹거리 거버넌스 활동 참여 의사', '건강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돌봄에 대한 인식'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자료 : 전주시(2021)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작성하여 제안

- 국민건강영양조사 상에서 영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생활조사, 식품안정성조사, 식품섭취조사로 구분되는데 이에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지표와 함께 식생활교육, 먹거리 돌봄, 접근성 등에 대한 질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성과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임

부표-16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질의 항목 검토

조사구분	조사구분	해당 연령	조사항목
영양	식생활조사	만1세 이상	끼니별 식사 빈도, 끼니별 동반식사 여부 및 동반대상, 외식 빈도, 채소류/해조류/버섯류 섭취빈도, 과일 섭취빈도, 식이보충제 복용경험, 식이보충제 복용 내용
		만6-29세	음료 섭취빈도 및 1회 섭취량
		초등학생 이상	영양표시 인지·이용·영향 여부 및 관심항목,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
		만1-3세	출생체중, 수유 방법 및 기간, 이유식, 일반우유, 영아기 식이보충제 섭취 정보
	식품안전성조사	식생활관리자	가구의 식품안전성 확보
	식품섭취조사	만1세 이상	조사1일전 섭취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
		조리자	조사1일전 섭취한 음식 중 직접 조리한 음식에 대한 재료식품 및 재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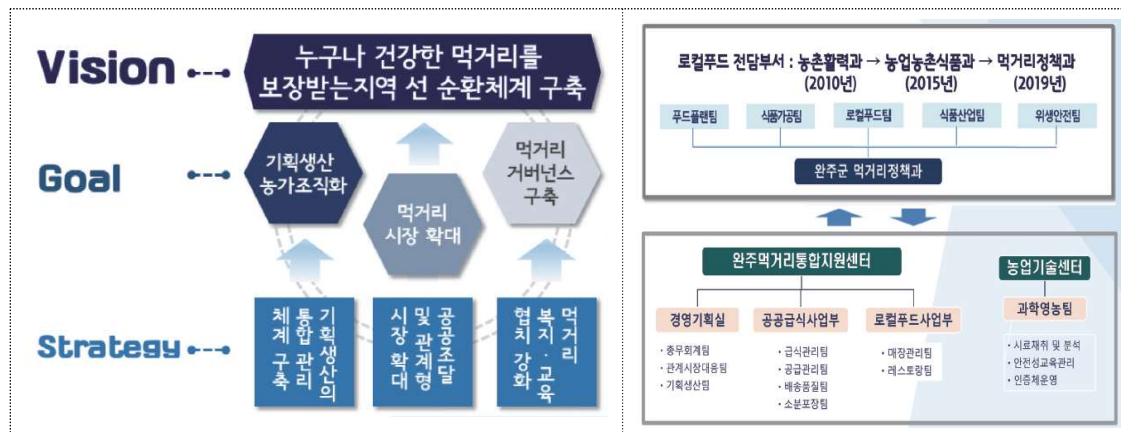
* 자료 : 질병관리청(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활성화 사례지역’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⁸⁷⁾

□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 도시와 농촌,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자족도시를 목표로 로컬푸드와 마을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력도시를 표방하고 있음
 - 교통·물류의 요충지(IC 6개소 경유), 탄소산업과 자동차·기계·부품소재산업의 중심지(320만평 산업단지), 생태관광휴양과 녹색전원도시의 특성을 지님
-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2개 이행과제, 34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임⁸⁸⁾
- 로컬푸드 담당업무는 먹거리정책과(2019년) 5개팀(푸드플랜·식품가공·식품산업·위생안전)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부도-3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전략 및 역할분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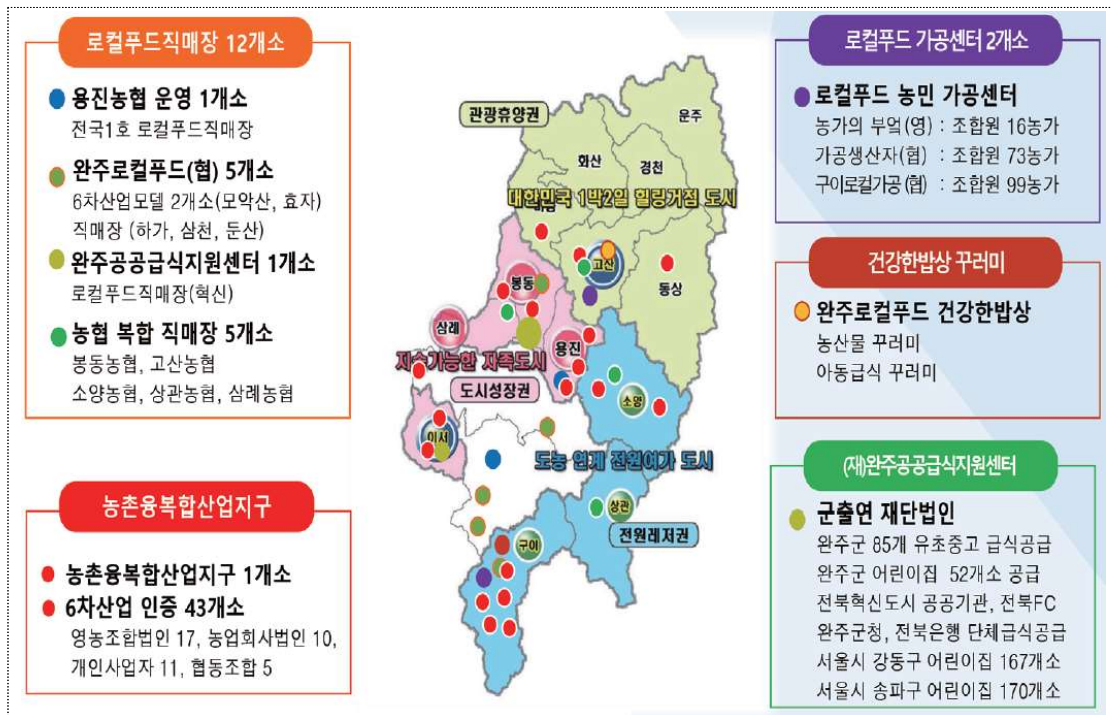
-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0.10.)를 시작으로 공공급식 지원, 로컬푸드 인증, 식생활교육,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제정함

87)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2022 지역먹거리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식'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지역 4개 시·군의 내용

88) 10,284농가 중 경지면적 1ha 미만 농가가 42%이며, 0.5ha 미만 농가도 25% 었음 (2016년 기준)

-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서에 관한 조례('11.2),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12.12),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13.3),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13.4),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13.6),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17.9),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19.12),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19.12)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로컬푸드직매장 12개소, 로컬푸드 가공센터 2개소,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1개소, 건강한밥상 꾸러미 1개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 6차산업 인증 43개소 등을 구축하여 협업하고 있음
- 농산물 꾸러미사업 : '10년부터 로컬푸드를 꾸러미로 구성하여 가정에 배송
- 로컬푸드 직매장 : '12년 전국 최초로 개장하여 현재 12개소를 운영 중임(지역농협 6, 생산자협동조합 5, 재단 1), 참여농가 1,800여명, 연매출 613억원('21) 규모
- 로컬푸드 농민 가공센터 2개소 거점('12년~), 전문 가공센터 5개소('17년~), 로컬푸드 가정간편식 HMR 사업('22년~) 등 추진
-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 군 출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13년), 학교급식, 도농상생공공급식, 공공급식·복지급식 등 지역산 식재료 공급

부도-4 완주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가입('17.9) 및 거버넌스 부문 수상('18.9.4), 국제식량 농업기구(FAO)에 로컬푸드 정책사례가 소개('18.9)된 바 있음
- '완주군민 먹거리 현장'을 선포('18.11.15)하고, 정부지원 복지급식을 보조금 대신 지역 농산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읍면단위 먹거리체계 구축 시범운영으로 지역의 먹거리 불평등 문제와 소농의 농산물 판로문제를 조직하여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농업 활성화 제고에 노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한 지역생산-지역소비 실현으로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과 먹거리 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음
 - 먹거리 거버넌스: 완주군 먹거리 위원회, 먹거리교육 협의체, 로컬푸드 실무협의회
 - 먹거리 시민교육: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 군민대상 식농교육 프로그램 등
- 로컬푸드 관련 사업에 1,800여 농가가 참여해 연 73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소농·가족농의 소득증대를 통한 재춘탈농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 등), 귀농·귀촌 활성화('14년 898세대 → '21년 3,644세대) 등에 기여
 - 지역먹거리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마을공동체 기업, 지역공동체 기업, 농촌 두레농장, 농식품 사업단, 가공센터 등) 육성 및 운영을 활성화
- 향후 실질 참여농가 3,000여 농가, 연 1,000억원 소득 창출, 관계시장에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을 현재 81%에서 90%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갈 계획임
 - 먹거리를 통한 생산적 복지 증진: 고령농과 귀농·귀촌자 참여 확대, 어르신과 영유아 등 복지급식 확대, 먹거리 빈곤층 세밀한 공급경로 구축 등
 - 일자리 확대: 로컬푸드 200명, 공공·학교급식센터 50명, 농민가공 및 지역가공 공동체 300명, 농촌체험관광·도농교류·문화예술 50명, 청년·귀농귀촌 취창업 200명 등

□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인구감소, 저출산과 고령화(고령화율 37.1%, 가임여성비율 13.0%)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
- 민선 8기 핵심 농정으로 푸드플랜을 선정, 5대 분야(공공형 운영체계, 소비시장 확대, 먹거리 시설기반, 사회적경제 육성, 연중기획생산체계), 10개 중점과제를 추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2019년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하여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푸드플랜과 마을공동체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2020년 7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설립으로 실행력을 확보
 - 지역활성화재단은 현장의 조직화 및 실행, 행정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의 모든 수혜가 농민과 농민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추진
 - 농촌활력과를 중심으로 11개 분서, 20개팀에 분산되어 있는 푸드플랜 관련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부군수 주재)
-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로 청양군 먹거리위원회(50명)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전한 먹거리 분과(생산자 소득 보장), 공공 먹거리 분과(청양 토탈케어 시스템화), 행복한 먹거리 분과(식문화 조성) 등 운영
- 핵심 기반시설로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하였으며, 관련 시설 집적화로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2018~2022년, 161억원 투입)
 -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전처리센터, 산채가공센터, 구기자산지유통센터, 친환경가공센터, 푸드플랜 홍보교육관 등 조성
- 학교급식을 넘어 취약계층 복지급식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해 보편적 먹거리 권리 보장에 노력 중임

- 학교급식 32개소(3,739명) , 관내 공공급식 68개소(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청양요양원, 애경산업, 청양통합돌봄센터 등), 관외 공공급식 3개소 식재료 공급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매출의 90% 환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
- 직매장 1개소(누적 매출액 62억원, '22.10 기준), 농가레스토랑 1개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추진

부도-6 청양군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지원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군수품질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추진
 - 군수품질인증제 5단계 15실천과제 시스템 시행(품질인증 포장재, 농산물작업대 등 지원),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잔류농약 463종 및 중금속 1,200건 검사)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청양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운영(푸드플랜 출하농업인 대상, 기준가격대비 시장가격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 농식품 가공의 부가가치가 농가에 귀결되고, 다양한 먹거리 사회적경제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39개 품목,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위탁운영, 조합원 32명

- 특화가공센터 : 118개 품목, 농산물 전문 가공 BI롬 운영 및 전문창업 육성 등
 - 사회적농장 2개소, 농산가공품 출하조직 및 가공센터 활용 전문인력 육성 등 추진
- 향후 2030년까지 연 매출 540억원, 월 소득 150만원 3천 농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실현을 목표로 의료-먹거리-사회복지(돌봄)을 연계한 복지 급식의 통합체계 확립
 - 수요에 부응한 통합적 기획생산체계 및 관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농업소득 확보에 주력(통합적 기획생산관리체계 확립, 지역 내·외 관계시장 확대 등)

부도-7 청양군 지역먹거리계획 향후 과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화성시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 진전으로 동서 지역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농촌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행방안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 의미를 두고 있음
- 화성시의 지역먹거리계획은 2012년 학교급식 자체운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2014년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7년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푸드플랜 2030 계획’을 수립하였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내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농협의 솥인솥 매장도 3개소가 운영 중

- 2018년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먹거리 공동체를 향한 푸드플랜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 식품소배 기반 가공육성 사업, 안전성 분석실 등 총 5개 세부사업을 실행

부도-8 화성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2019년에는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프라이 박스(Fri-Box)’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과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2021년부터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및 사용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2차 지역먹거리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공공급식 지원 조례, 먹거리 기본조례,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 조례’ 등을 제정하였음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8년 전담부서(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였고, 2016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 지역먹거리계획 거버넌스 기구로 ‘먹거리위원회’를 6개 분야(생산, 식품안전, 가공·유통, 공공급식·식생활교육·홍보, 먹거리복지·상생, 환경)로 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의 기반이 되는 학교·공공급식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252개소에 연간 1,020톤의 지역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관내 농산물 비율은 55.5% 수준, 2021년 기준)
-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직접 운영로컬푸드 직매장은 7개소로 출하 생산자는 995농가(‘21.12. 기준)임 (봉담점, 능동점, 휴개소점, 금곡·동화점, 동탄중앙점, 동탄호수공

원점)

-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소득 창출을 위해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농민가 공장(건식제조실, 습식제조실, 반찬제조실 등)을 갖추어 관내 농가의 가공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 화성시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동서 간 양극화 격차해소를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지역먹거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부도-9 화성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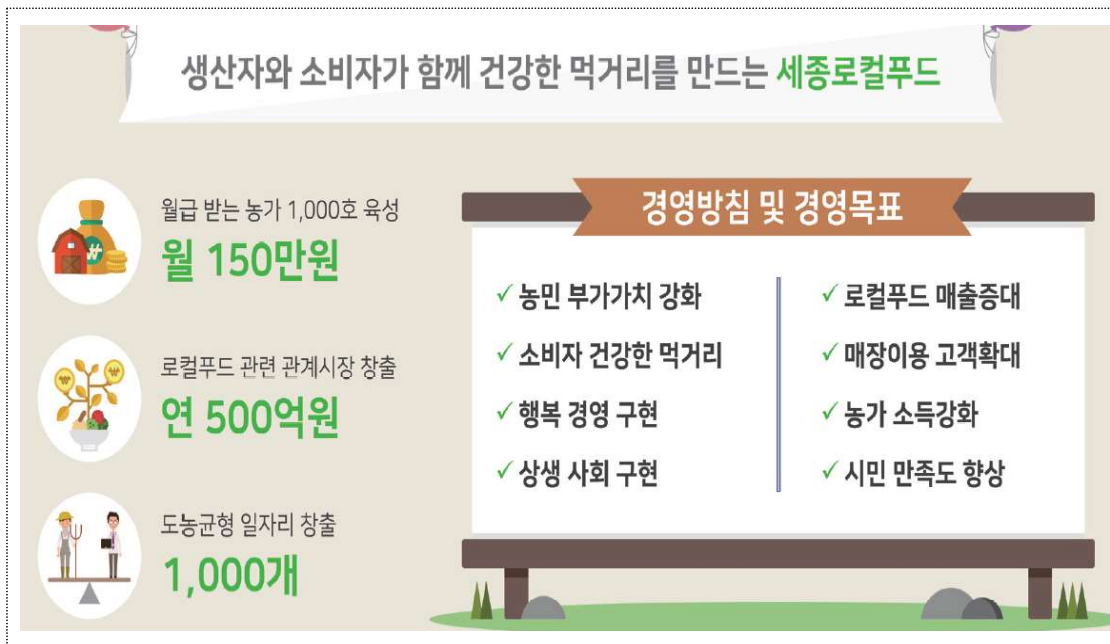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 세종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하나의 행정망으로 연결되어 로컬푸드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농촌-원주민 + 도시-이주민 간의 상생)
- 세종시의 농업인구는 15,348명으로 농업경영체는 12,698호이며, 경지면적은 7,358ha인데, 쌀·배·딸기·머루포도·복숭아·오이 등이 주요 농작물임
- 세종시가 지역먹거리계획을 본격 시행하기 앞서 생산자들은 2014년 이전부터 ‘농민 직거래 장터’를 정부 청사, 생태너털, 아파트 단지, 노상 등에서 운영해 왔음
- 세종시는 로컬푸드 정책을 본격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3섹터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를 2014년 설립하였음 (출자금 : 시-10억원, 농협 2.4억원, 축협 1.5억원, SK 1억원, 생산자법인 0.3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호점과 파머스마켓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도담점, 아름점, 새롭점, 소담점, 도토리파크 파머스마켓)
- 세종시의 지역먹거리계획은 ‘생산자아 소비자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세종로컬푸드’로 정하고 로컬푸드 관계시장 연 500억원, 월 150만원 소득 농가 1천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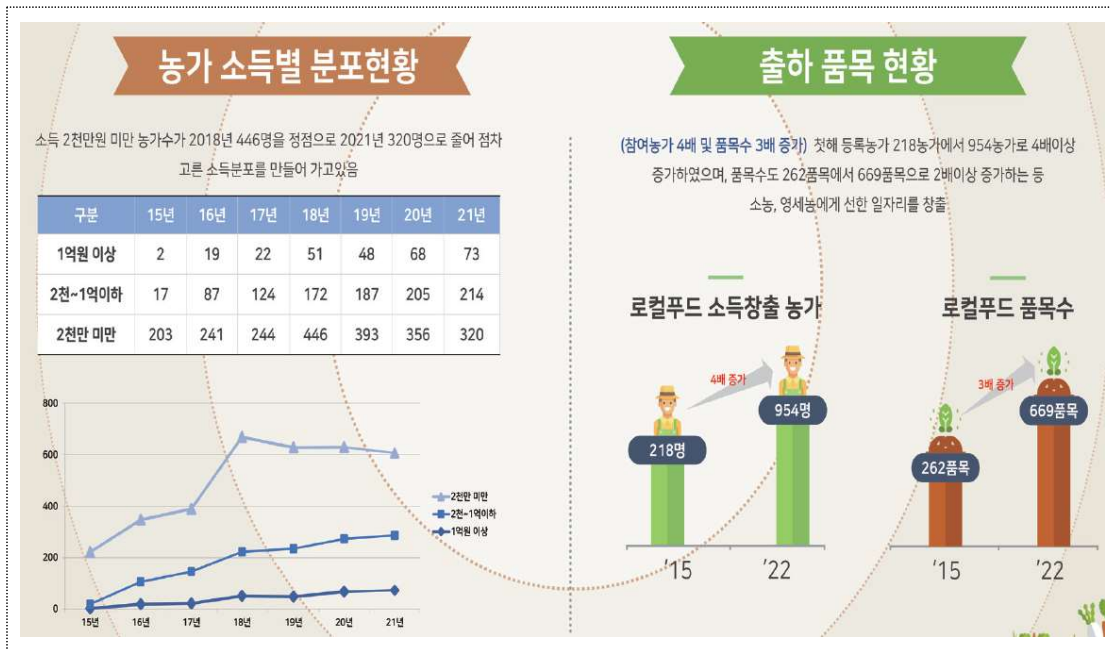
부도-10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주요한 특징으로는 ‘싱싱문화관’을 활성화하여 로컬푸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이 아닌 ‘먹거리’를 통한 도농 소통과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싱싱밥상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공유부엌, 레시피 개발, 제철 즉석식품 판매 등
 - 요리교실 : 전문셰프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
 - 세미나장 : 벤치마킹 교육, 메뉴개발 및 실습 공간 제공
- 세종시의 ‘싱싱장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연간 363.1억원(‘21년), 일평균 구매자 3,721명(‘21년), 소비자 회원 58,827명(‘21년) 등임
- 지역먹거리를 출하하는 생산자는 4배 이상 증가(954명)하였고, 로컬푸드 품목수도 3배(669품목)이나 늘었는데, 농가소득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부도-11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내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세종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주요 인프라는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꼽을 수 있음
 - 공공급식지원센터 : 2020년 개장하여 관내 165개교 중 142개교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청사 구내식당에도 식재료를 공급
 -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 2022년 개장하였는데, 파크 내 ‘파머스마켓’은 개장 100일만에 1.2억원 매출과 5만명이 방문
-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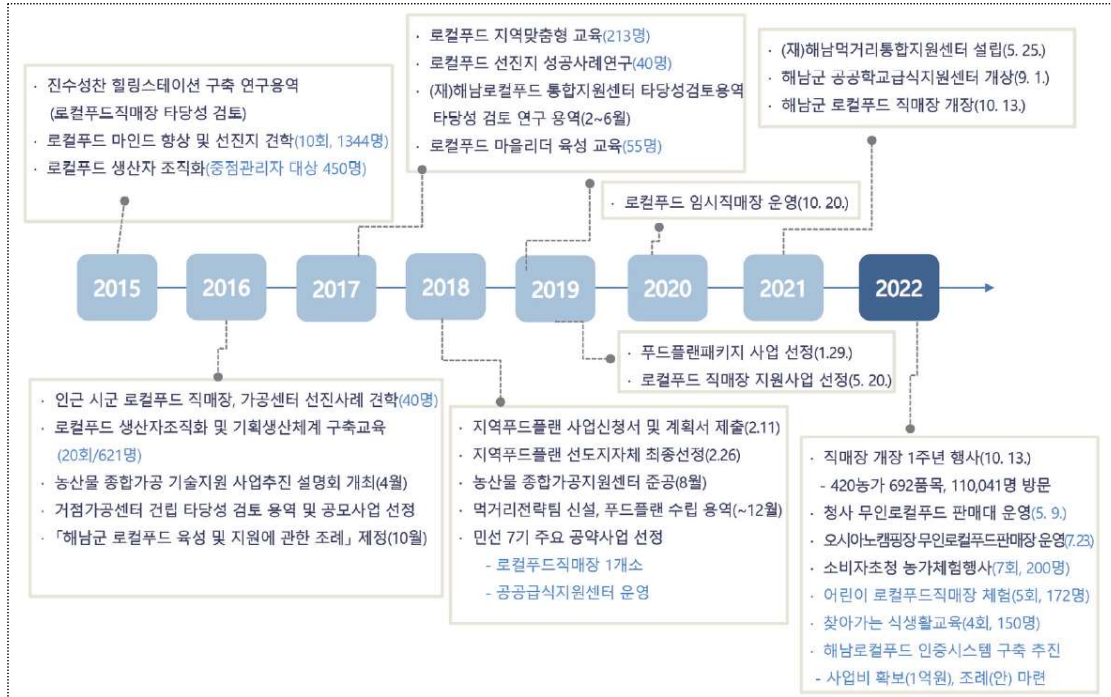
□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현황

- 해남군은 경지면적이 전국 1위(33,623ha),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5,156ha), 쌀 재배면적 전국 1위(21,170ha), 배추·고구마·마늘 등 주산지 임
- 해남군은 대농 중심의 농정을 소농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의 주요한 배경임⁸⁹⁾
- 2013년 처음 시도해보는 소농을 위한 정책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도입하였고,

89) 10,284농가 중 경지면적 1ha 미만 농가가 42%이며, 0.5ha 미만 농가도 25% 었음 (2016년 기준)

2015년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부도-12 해남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추진경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16.10.)’,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18.12.),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19.5.), 먹거리 기본조례(’19.7.),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21.3.)’ 등을 제정함
- 해남군의 지역먹거리 계획은 ‘안전, 상생, 건강, 평등, 협치’ 등 5개 영역에 10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됨
- 지역먹거리계획의 핵심전략으로 로컬푸드 직매장(’21.10~)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21.9.)를 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420 농가, 692개 품목, 692건의 안전성 검사 시행
 -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79개 학교·보육시설에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주체로, 기획생산 연중공급과 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해남군의 지역먹거리계획은 ‘①로컬푸드 기반다지기, ②동네방네 로컬푸드 접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 로컬푸드 기반다지기 : 생산농가 조직화(온/오프라인 교육), 소비촉진행사(소비자 농가체험), 기획생산체계 구축(소규모 2중 비닐하우스 103동 보급),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21~’22)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 동네방네 로컬푸드 접하기 : 군청사 로컬푸드 개장(무인 매장), 캠핑장 로컬푸드(오시아노캠핑장 로컬푸드 매대), 찾아가는 로컬푸드(직거래 행사), ESG 착한 포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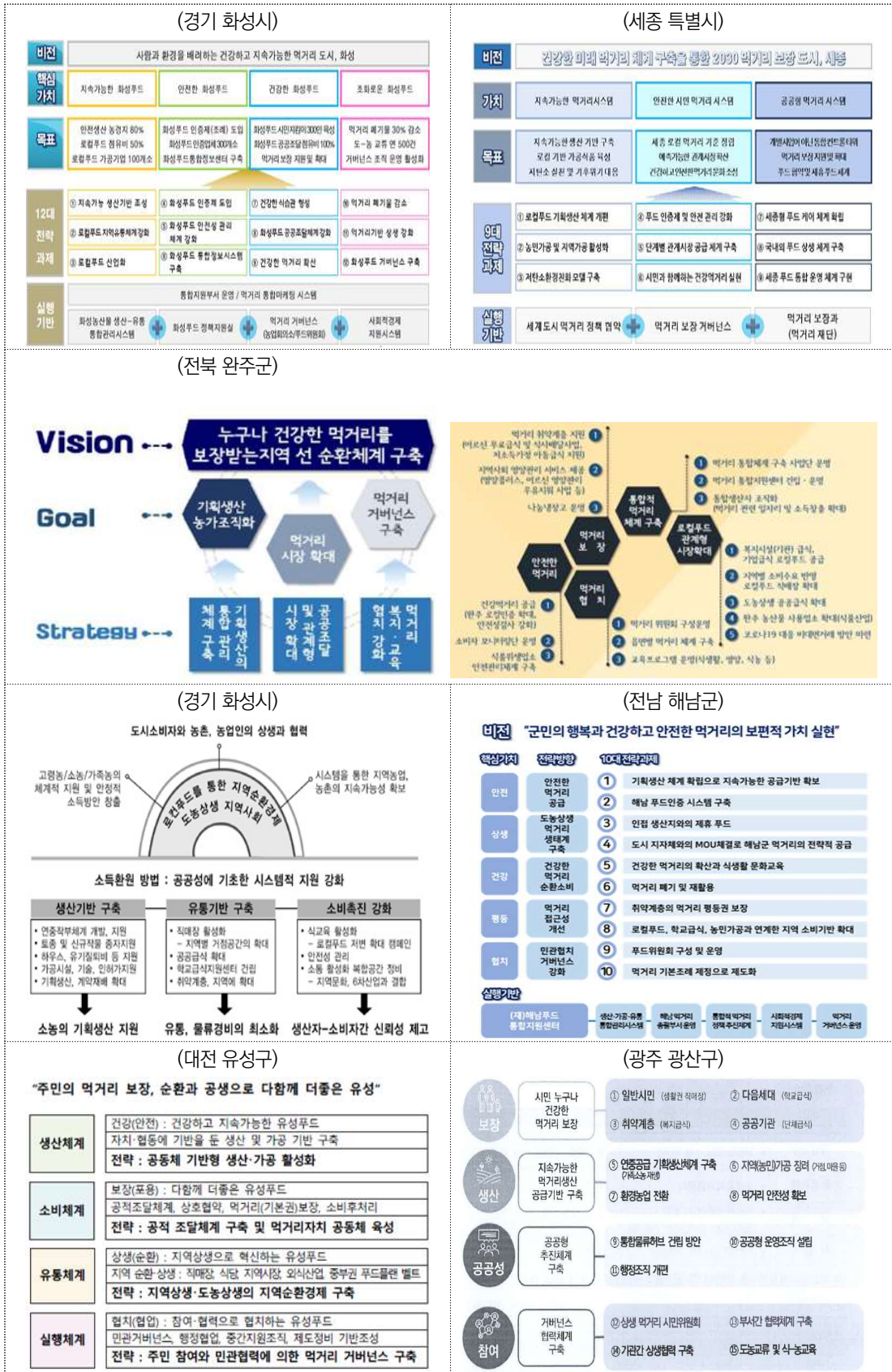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경을 생각하는 로컬푸드)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서 인증하는 ‘해남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을 ‘23년 구축할 예정임

부표-17 활성화 사례지역의 지역먹거리계획 전략체계





**지역먹거리계획
시행효과 분석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